

Designing New Asia

새로운 아시아 설계

JEJU FORUM 2014
FOR PEACE & PROSPERITY

새로운 아시아 설계 Designing New Asia

새로운 아시아 설계

인쇄 2014년 9월 1일
발행 2014년 9월 1일
발행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등록 제 652-2008-00002호
주소 697-85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전화 [82-64] 735-6531
팩스 [82-64] 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Copyright © 2014 by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ISBN 978-89-93764-07-9 93340

· 이 책의 국내외 필자들의 소속 및 직책은 본 포럼의 개최 시점(2014년 5월)과 이 책 발행 시점 사이의 기간 차이 때문에 일부 필자들의 경우 변경이 있을 수 있는바, 포럼 개최 당시의 직책과 직위를 기준으로 명기하였다.

디자인 서울셀렉션 www.seoulselection.com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결과자료집]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2014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새로운 아시아 설계”를 주제로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지역 내 영토 분쟁, 군비경쟁으로 아시아의 지역 갈등이 고조된 엄중한 시기에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성장의 동력으로 부상한 아시아는 21세기를 맞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높아졌으나 정치 안보적 갈등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의 국내외 참석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화합,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 이러한 아시아 패러독스를 국가 및 지역 간 공조와 파트너십으로 극복하고, 새롭고 다양한 역내 질서를 추구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 이익의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번 포럼은 전 세계 58개국 3,734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수를 기록하면서 규모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종합포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64개의 세션에서 외교·안보, 경제·경영, 문화, 여성,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는 특별히 한·중·일 3국 기업인들의 간담회와 한·중·일·미 차세대 지도자들 간의 별도 세션 또한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동북아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의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도 아시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의제를 준비하여, 제주포럼이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더욱 깊이 있는 소통과 담론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 제9회 제주포럼 결과자료집 발간을 통해 제주포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참여기관, 후원기관의 관계자분들과 국내외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8월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제주평화연구원장 문 태 영

발간사

제1장 새로운 아시아 설계

- [개회사] 우근민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
-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 前 외교부 장관 14
홍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 16
- [축사]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 18
- [기조연설]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19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 前 중국 외교부 장관 26
-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설계 30
- [만찬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40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45

제2장 신뢰정치와 동아시아 평화

- 동북아 신(新) 안보 체제 구축 52
- DMZ세계평화공원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 59
- 동아시아의 기회 그리고 동아시아의 위기 63
-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신뢰정치의 재조명과 전망 68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접근: 한·중 협력과 GTI 사례 74
- 아·태 지역의 전자정부 발전 동향과 신(新) 아시아 설계 80
-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87
- 동북아의 역사화해와 평화 구축의 과제 92
-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97

- 신(新) 아시아 실현을 위한 지역 협력과 중견국 외교 101
- [외교관라운드테이블] 신뢰정치와 한반도: 주한 주요국 대사들로부터 듣는다 107
- 한·중·일 협력과 한국의 ODA 정책 115
- 동북아 화해와 통합: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18
-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협력 123
-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영토 관련 주요 조항의 재검토 127
- 고려인 이주 150년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131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의의와 적용 대상 136
- 동아시아 지정학의 부활: 세력 충돌의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139
- 2차 대전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미해결 사항 및 잔존 문제 144
- 아시아의 평화 문제: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 148

제3장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

- [특별세션 II] 기업가 정신과 여성 리더십 154
- SK 사례를 통해서 본 CSR과 스포츠 158
- 글로벌 기업의 실크로드: 한국, 중국, 유럽을 잇는 마케팅 전략 164
- 다국적 기업과 공공외교 169
- 아시아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 발전 전략 173
- 한·중 간 물류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180
-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아시아의 미래 184
- 세계화와 불평등 188
- 지역 간 국제 경제 교류와 첨단 벤처기업의 성공 전략 191
- CBD 교류를 통한 지방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198
-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한 유라시아 구상 202

비즈니스 재창조, 위대한 성장 207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 212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최신 운용 전략 및 자산 시장 전망 217

[한·중·일 경영자 교류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한·중·일 기업의 협력 224

제4장 문화교류와 새로운 아시아 정체성

[특별세션 I] 불가사의한 나라: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한국의 역할 230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본 세계 속의 한국 교육 235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학 교육의 역할 238

글로벌 교육과 제주 244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제주 몽생이 세계를 날다 249

글로벌 힐링 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 253

창조경제 시대, 문화 콘텐츠 융성을 통해 제주를 리디자인 하다 257

문화 ODA의 동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263

한·중·일 '삼포세대'의 희망 찾기 271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글로벌 영리더들의 도전과 협력 276

제5장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여성 리더십

미래시대 여성의 역할 284

여성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287

새로운 아시아와 글로벌 하모니 291

제6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발전 달성: 물·식량·에너지 연계성 296

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303

동북아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제13차 환경정책포럼 309

기후·기상 빅데이터, 가치를 말한다 313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영향 317

저탄소 성장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 한·중·일 도시 간 협력 가능성 324

제7장 동아시아 지방 협력 네트워크

제주의 탄소 없는 섬 구축 전략: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의 혁신적 사업 모델 330

관광과 문화, 치유산업으로서 말 관련 산업 육성 전략 3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미래사업 방향과 전략 341

행복한 제주평화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은? 345

동중국해의 국제 해양 연구 협력 349

남·동중국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352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경영 및 투자 유치 방안 356

제주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방향과 전략 360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가능성과 미래 369

제1장

새로운 아시아 설계



개회사

우근민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우근민 도지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정·재계 지도자와 석학, 전문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시느라 먼 길을 와주신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님, 前 중국 외교부장을 지내시고 현재 중국 공공외교협회를 맡고 계신 리자오싱 회장님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국내 귀빈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계신 각국의 대사님을 비롯한 외교관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주포럼은 지난 2001년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적 첫발을 뗐습니다. 첫째 9개국 350명 규모였던 참가국과 참가자수는 그간 14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올해는 50여 개국 3,700여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윌리엄 페리 前 미 국방장관, 피델 라모스 前 필리핀 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존 하워드 前 호주 수상, 아로요 前 필리핀 대통령,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넴,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등 제주포럼에 다녀가신 해외 저명인사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김대중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을 비롯하여 다수의 역대 국무총리들이 참석하여 제주포럼을 빛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이끌어주신 덕분에 이제 제주포럼은 아시아 협력과 공존,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한 주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대내외적인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소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국제적 금융위기는 상존하는 위협 요소이며, 일부 국가의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역사관은 주변국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 핵실험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정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범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국가 간, 지역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공조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이 같은 문제들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경제

없는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유례없는 참사를 겪으면서, 자본의 탐욕이 낳은 생명 경시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전과 평화, 생명 존중을 위한 희망적 제안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더욱이 제9회 제주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입니다.

저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를 위한 열쇠는, 위기에는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기회에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세계적 보물섬 제주에서 지내시는 동안 편안하고 아름다운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 前 외교부 장관

제주포럼의 공동주최기관의 하나인 동아시아재단을 대표하여 이번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님, 그리고 리자오싱 前 중국 외교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아시아재단은, '인간과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번영과 신뢰 구축'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그 주요 사업으로 저희 재단은 제3회 제주평화포럼부터 참여해왔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공통되는 이슈를 다루는 국제관계 평론지 Global Asia 를 연 4회에 걸쳐 출간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한국의 대내외 정책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동아시아재단 온라인 정책논쟁을 국·영문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이슈 전문가와 일반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EAF 세미나, Global Asia가 다루는 현안들을 주제로 자발적인 토론 및 국제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생 학술 단체 글로벌아시아리더십포럼 후원 등 역내 협력과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 창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주제인 '새로운 아시아 설계'가 담고 있는 담론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 통합 및 협력 구상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하는 경제동반자 협정 등을 둘러싼 논의들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 및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주변 및 관련 국가들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립의 역사가 낳은 지정학적 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새로운 아시아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대화를 통해 역사적 갈등을 뛰어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동 가치를 제시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포럼에 함께 해 주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지성인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참가자,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주최, 주관 및 후원 기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영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홍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

우근민 제주도지사님, 줄리아 길라드 前 총리님, 리자오싱 前 외교부장님, 살람 파야드 前 총리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로 충격과 실의에 빠진 제주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중앙일보는 매년 과학·사회·문화 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으로 미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유민 흥진기 창조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사회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제주올레의 성공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장과 앞마당을 내주신 제주도민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눔이야말로 ‘평화의 섬 제주’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일보의 제주포럼 참여는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동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를 하게 돼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14년 전 시작된 제주포럼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존 하워드 호주 前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마하티르 前 말레이시아 총리, 피델 라모스 前 필리핀 대통령,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 등 세계의 지도자와 석학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혜와 탁견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같은 빠른 성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치밀한 준비 등이 이뤄낸 성과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동북아의 위기가 교차하는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북에서는 집권 3년째인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 상에서 탄도미사일과 로켓을 잇달아 발사하고,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 지역의 해상 포격 훈련도 모자라 4차 핵실험까지 내세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보수우익 세력을 앞세워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과 역사 왜곡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서쪽의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외교·안보 판도의 새 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쪽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간 해양·영토 분쟁은 마치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을 연상시킵니다.

올해 제주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안보 지도와 공동번영의 틀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한 통찰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

여러분께 팔레스타인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강력한 의지로 우리의 자유, 존엄,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오랫동안 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했으나 최근 3년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의 경우,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이 나뉘어 있습니다. 나는 이에 반대하며 안정과 민주주의는 모두 이룰 수 있고,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만찬에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긴장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이는 아랍 및 다른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간 대화는 제주포럼을 비롯한 여러 포럼을 통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자간 대화는 불안정한 요소에 대응하는 기제입니다. 기존의 국제사회가 그런 아키텍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세계 질서는 변화하고 있지만, 이 질서 즉, 신세계 질서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세계에서 아키텍처와 현재 힘의 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세계적인 단위 질서의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 리더들이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통일적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롭고,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번영의 세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기조연설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해 저를 금년 제주포럼으로 초청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님과 문태영 집행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퇴임 후 처음으로 받은 초청이자 매우 반가운 초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국민에게 이 아름다운 섬, 제주 바다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어린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나 비통한 일입니다. 전 세계가 그 사건에 슬퍼했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삼켰던 슬픔에 함께 애통해 했습니다. 고통과 분노는 그 사고의 희생자들이 기억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사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전세계가 여러분의 슬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좋은 친구입니다. 양국은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호주의 총리로서 저는 한국에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중 2011년에는 한국과 호주의 외교 수교 50주년 및 가평전투 60주년을 맞아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호주는 18,000여 명의 지원군을 파병했고, 34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그 참혹했던 전쟁터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와 함께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후 한국의 번영을 보고 놀랐고, 그 모습에 저도 기뻐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를 멍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행동은 유대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의 동맹과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외무부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호 2+2 회의를 열어 양국 간 안보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제 외교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2년 째 활동하고 있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한국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또한 탄탄한 무역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호주의 세 번째 최대 수출국이며, 네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양국의 연간 무역량은 약 300억 달러입니다. 양국은 몇 달 전에 관세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고, 이로써 향후 15년간 50억 달러의 무역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6,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이 호주의 대학에 다니는 등 양국의 인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호주의 총리로서 저는 호주의 아시아를 향한 마음을 확신합니다. 2012년 8월, 저는 포괄적인 전략 백서인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the White Paper on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를 발행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백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호주]는 광범위한 의미의 안보를 추구한다. 공격이나 강압으로부터 호주를 지키는 것, 빠르게 성장하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정치적 안보, 이 지역의 성장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수급에 관한 안보, 개인적인 인간 안보, 전 지구적인 온난화와 새로운 환경적 문제에 따른 자연 재해에 대한 안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백서에는 “한국은 호주의 안보와 환경을 위한 훌륭한 동맹국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N과 G20,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서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한국과의 공고한 결속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포괄적인 국가적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빼고서라도 저는 한국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두 번째 인데, 조만간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성 국가 지도자가 몇 안 되는 세상이라,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에 방문하는 것은 저에게 항상 기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회담은 즐거웠고, 박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GPE(교육분야 세계협력)의장으로서 박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수 천만 명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그와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회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인 이슈와 우리를 더 나은,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미래로 이끌어줄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여러 지정학적 문제 중, 저는 오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변화의 가능성, 중국 성장의 중요성, 아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참여와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우려하게 하며,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위험하고, 변덕스러운 인물입니다. 국민을 잔인하게 대하고, 반대하는 인물은 처형하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그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정권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경계하며, 단호하게 대하는 것뿐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양국과 동맹국인 미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대화, 조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지만, 북한 내부의 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금세기의 사건들이 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다고 하는 정권이라도 돌발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과 소위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강력한 민주화 시위 이후 생긴 권력의 공백이 얼마나 메우기가 힘든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탈북자 박연미씨의 기고문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박연미씨는 북한의 비공식적 경제활동 덕분에 시장의 힘을 이해하는 젊은 세대를 '암시장 세대'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젊은 세대가 암시장과 비정부 기구를 통해 세상과 접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북한을 넘어 세상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점차 바깥 세상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현 정권에 도전하기까지의 여정은 크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열망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변화의 원천은 현 정권의 붕괴, 또는 그와는 다른 보다 나은 방법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통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될 것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곳 한국에서 꿈꾸고 대화로 준비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는 매일 북한에 대한 외교와 대처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식량 원조 등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나은 행동을 보이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던 중국의 참여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해 전 세계가 취해야 할 다양한 전략적 접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세기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제 생각에 중국의

상승하는 지위와 번영은 실로 놀랍고, 환영할 일입니다. 영국의 산업화는 경제 규모가 4배로 성장하는데 1830년에서 1900년까지 70여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매 8년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제조국이자 수출국이며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입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볼 때 2050년이 되면 중국은 미국의 경제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변화와 인적 자원의 변화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을 절대적 빈곤에 빠뜨리고도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중산층은 수 년 안에 북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중산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에는 아시아의 변화에 대한 호주의 관점이 아래와 같이 분명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국민과 호주를 포함한 이 지역에 가져다 줄 경제적·사회적 이득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적 체계를 더욱 깊고 공고히 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국이 신흥 경제국과 현대 세계를 대변하도록 하는 국제 기구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성장과 관심영역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럽고,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주변 국가에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군사력 현대화의 속도와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적 협력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중국과의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원한다. 우리는 중국과 믿을 수 있는 경제 파트너, 지역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의 하나, 선량한 세계 시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 되었다. 이 관점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중국과 그 지역 전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은 중국 정부의 자원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호주를 포함한 전 지구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반중국 거리 시위가 긴장의 증거이며, 다양한 외교 분야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불안감도 긴장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자간 외교적 대화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간 포럼으로 긴장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미국과 함께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통찰력있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남중국해 외에도 어려운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일본의 민족주의와 중국의 세력이 북쪽에 있는 섬들에서 충돌하여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영토분쟁에 대해 격앙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판을 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토분쟁을 해소해 나갈 방안을 찾는 것도 이곳에서 대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미국은 이런 문제에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각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다가오는 미래에 지역 문제에 대한 긴장의 수위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과 미국 양국은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갈등을 피하기 원한다. 종종 과소평가된 적도 있지만, 양국은 참여의 정도와 구조, 그들의 전략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또 양국은 서로 깊게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지역의 전략적 변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 세계에 관심을 더 가지면서 양국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경쟁적인 요소를 품게 될 것이다. 중국이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세계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세기 이상 미국이 지배해 오던 국방문제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중국 간 협력의 결과로 생기는 이득과 자연적인 경쟁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관점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력해야 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긴밀하고, 순조롭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일본 간의 계속되는 긴장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양국 간에 뿌리 깊은 고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점령에 대한 기억과 한국 국민, 특히 여성에게 범했던 일본의 과오는 양국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69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세계대전 중의 전쟁 범죄는 한쪽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즉 한쪽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전쟁이 준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 때문에 호주 군인들이 지독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과거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희생자가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안보를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살며, 오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계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을 보면 감격할 것 입니다. 이 회의에서 제가 언급한 전략적 문제인 북한의 문제, 중국의 성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전략과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 역시 우리 회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G20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렸을 때입니다. 다음 정상회의는 호주에서 열립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 경제를 강하게 하고,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자리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APEC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와 ASEAN과 우리의 관계는 협력과 상업을 위한 강력한 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지정학적인 면에서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식량 안보와 해외투자, 이민, 교육, 주식시장 구조, 금융 규제, 에너지 정책, 환경적 표준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지역주의를 개발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번영과 평화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 이것이 변화의 큰 그림입니다. 통합된 금융과 무역, 사람과 사람간의 유대가 이 지역의 긴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곳 제주에서 3일 동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호주와 한국이 이 지역의 긍정적인 역학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호주는 서구 국가에 속하지만, 아시아와 깊고 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호주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이며, 호의적인 자세로 이웃 국가와 함께 하고 싶고,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 지역과 경제적으로 통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호주와 FTA를 맺고 있고, ASEAN, 중국, 일본과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어쩌면, 가끔 활기가 약간 지나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활기 있는 민주 국가입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정에 고속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기술력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현재 경제적,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의 영역에서도 키웁시다.

몇 주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언급했던 이 지역의 긴장상태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 지역의 긴장은 모두 관리가 가능하고, 해소될 수 있다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호의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수와 오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향후 수년 간 긴장이 계속될 경우 생기는 손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잘할 수 있지만,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식은 과거의 역사와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20세기의 유산을 잠시 옆에 놓아두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前 중국 외교부 장관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리는 제 9회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공적으로 이 포럼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 세월호 희생자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희생자의 가족과 부상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한국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 실종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과 함께 슬픔을 마음껏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로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한류 바람까지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문화면에서 항상 앞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은 어려움을 국가 거버넌스 역량을 더 키우는 기회로 전환하고, 아시아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까 두렵습니다. ‘아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또 “새로운 아시아”에서는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할까?’

우리가 많이 보고 느낀 바와 같이, 국제 정세의 빠른 변화와 국제 경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시아의 지위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는 세계경제 규모의 3분의1을 차지합니다. 세계 총GDP의 3분의1을 차지하며, 4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안정보다 더 큰 이익은 없고, 혼란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 아시아가 성취한 큰 진전은 탈냉전시대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얻은 성취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국가간 협력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통합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자유무역지대와 국가간 연결지점, 다른 중요한 지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긴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적인 아시아 국가들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의 관심사로 묶인 지역입니다. 평화와 발전은 오늘날 아시아의

주요 관심사이며, 향후 몇 년간 아시아의 동향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독특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아시아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고, 어두운 역사의 그늘이 현재의 갈등과 뒤얽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과 정책 제안이 서로 충돌합니다. 눈부신 변화 속에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사이버 안보, 에너지·식량 안보와 같은 현대 안보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며, 집단 간 긴장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의 지도자는 역사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드러내 놓고 탈냉전시대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여 아시아 국가 간의 긴장을 부추깁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아시아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평화와 발전이 있고 협력하는 새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중국의 강하고 번창하며, 활기를 되찾으려는 ‘차이니스 드림’은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2차 한강의 기적과 아시아 다른 국가 국민의 멋진 꿈과 동시에 이를 수 있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을 적절히 융합하면 다채롭고, 화려한 ‘아시안 드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동상이몽이 아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커창 총리가 아시아 보아오포럼에서 공동의 관심사가 있고, 운명을 같이하며, 공동의 책임을 지닌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아시아인이 기대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의 경향을 따라야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 너머를 봐야 하고, 지역의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을 이루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공동으로 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지킨다는 태도로 대화와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깊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체계, 규모, 영향력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국가 간 영토분쟁, 역사적인 문제 등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갖게 된 원한, 냉전시대의 잔재와 복합적으로 얽혀 국가 간에 심각한 신뢰 결핍을 만들었습니다. 상호 신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 없이 어떻게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대화와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루며, 다른 국가의 걱정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며,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과 의견 불일치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우리는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신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우리는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룬다는 마음가짐으로 협력하고, 경제적 유대를 깊게 하고, 끈끈한 무역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통합은 아시아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제통합 면에서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대화상대국(10+1),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10+3)의 협력 체계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한-중-일 FTA를 놓고 한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비전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바다 실�크로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과 역내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아시아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정과 교류를 환영하는 자세로 문화적·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이웃 국민과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두 나라 국민의 우정이 두 나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국가 간 진지한 인적 교류가 없다면, 국가 간 협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문화와 감정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교류를 늘리고, 지방정부, 기업과 일반 대중을 아시아의 역내 협력에 참여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특히 젊은이들이 아시아 역내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이득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아시아를 지지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발전은 아시아지역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웃국가와 친밀하게 지내고, 동반자가 되기 위한 외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웃국가와 "친밀성, 정직성, 번영 공유, 포괄적인 연대"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하게 중국 영토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명료한 정책도 따를 것 입니다.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의 활동은 주권과 사법권에 따른 타당한 것이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활동에 관련국이 지나친 해석이나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평화적이고, 번영하며 열린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속적인 정치적 상호 신뢰를 통해 아시아에 평화와 안정, 평온이 찾아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아시아의 분쟁지대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관련 당사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6자 회담이 하루 속히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변화와 개발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바입니다. 꿈은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집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열려 있기 때문에, 비아시아국이 아시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독립적이기에, 우리는 아시아 내에서 군사블록을 만들거나 군사적 동맹을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합니다.

2007년 제주를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역사에 깊게 감동 받아서, 역사에게 전하는 시를 한편 지었습니다.

“놀라운 생명체, 젊어서 너는 바다와 하늘에 빛을 뿌리고, 늙어서는 웃으며 불을 꺼안네
(연료로 사용된다는 뜻). 다음해 봄이 되어 당당하게 솟아나기까지 겨우내 인내하여
기다린다네.”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는 동안 우리는 분명 많은 어려움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봄 바람 불 때 다시 솟아나는 역사처럼 새로운 아시아는 실현될 것입니다.

제주는 여자, 돌, 바람이 많은 '삼다도'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포럼이 경험의 공유, 협력, 상생의 업적이 많은 '삼다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럼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을 공유해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포럼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설계

이 세션에서는 개최식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구상과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아시아'의 비전이 갖는 함의와 '새로운 아시아의 설계'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회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
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토론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
UN 사무총장 특사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 前 중국 외교부 장관

정리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세계지도자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새로운 아시아의 설계가 시작된다는 주제를 받고 이번 회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상호 존중', '화해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길라드 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린다. 기조연설에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안보 체제와 아시아의 전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아태 지역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가?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둘째, 기조연설에서 한·일 간 불편한 관계를 언급했는데, 과거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인은 과거가 미래를 향한 거울이라고 본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가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아태 지역의 미래 속에 한국의 통일은 언제쯤이라고 예측하는가? 그리고 호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첫 질문에 답하자면, 나는 이 지역에 관해 낙관한다. 우리 스스로 낙관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본다. 20~30년 후의 우리 미래는, 진정한 경제 통합이 이뤄지고 재화와 자본이 진정하게 자유 이동되는 세상이 될 것으로 본다. 인적 교류는 확대될 것이며, 한국과 호주의 차세대 젊은이들은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호주의 시민이 제주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제주의 시민이 호수에 자유롭게 오며 공동체 정신이 더 도모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나는 한·일 간의 긴장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이 있지 않다. 다만, 호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그때의 전쟁 포로들이 관련 소설을 쓰기도 한다. 그때의 역사를 돌아보며 희생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나쁜 경험이 오늘날 일본과의 포괄적 관계에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 이것은 정치지도자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양국의 국민도 희망한다고 본다.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의 방향을 잡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본다. 세 번째,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서는 나도 잘 모른다. 파야드 前 총리께서 아랍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는데,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것은 예상 불가능하게 급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 통일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모든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리자오싱 前 외교부 장관은 부강한 중국의 꿈이 아시아의 꿈이 된다고 했다. 또한 비(非)아시아 국가의 건설적 역할은 원하지만, 간섭은 거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형 대국 관계를 통해 중·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 前 중국 외교부 장관: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보다, 중국은 '부상'이 아닌 '진보'하고 있다고 본다. 즉, 과거 100년 전 중국과는 지금 아주 다르다는 관점에서 진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의 부상을 살펴보면, 서구의 부상은 많은 경우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하며 부상한 것이다. 중국의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뺏겼으나 1999년에야 되찾았다. 영국은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가져갔으나 150년 만에 되찾았다. 서구의 부상은 이런 식이었다. 1895년 일본은 대만을 가져갔고, 난사군도, дя오위다오도 가져갔다. 한반도 역시 1910년 식민지화되었다.

일본의 부상은 이런 방식으로 규모를 키운 것이었다. 즉, 식민지를 착취하고 수탈하여 커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탈리아와 함께 호주를 침략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처럼 침략과 침공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평화적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댐방울과 지혜로, 그리고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주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발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땅을 한 뼘도 빼앗지 않았다. 평화는 중국이 사랑하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과 진보는 평화로운 것이다. 우리의 발전은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100년 전 서양과 우리는 다르다.

내가 미국에서 6년간 살면서 느낀 건데, 미국인 친구들은 우수했으며 존경할 만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온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국의 아시아 회귀'는 이상한 말로 생각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떠난 적이 없지 않은가? 따라서 재균형(rebalancing)은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께서 주신 질문에 대답하자면 우선, UN 헌장의 기본에 따라 발전하면 된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과 우호협력 속에 발전하려 한다. UN 헌장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 특히 UN 헌장 제2조 7항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내부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평화 공존 5개 원칙에 따라 선린우호 관계, 평등, 호혜, 우호 등을 추구한다. 중·미 관계는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정신에 따라 이뤄지며,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므로, 대만에 무기를 파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분열주의자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스님을 만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올바른 말, 현실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고 본다. 팔레스타인은 UN 헌장을 지키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이 UN 회원국이 될 때 미국이 반대한 예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난사군도도 UN 해양법 공약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제주포럼을 통해 전 세계가 민주적이 되기를 바란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중국은 영토와 주권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등과 영토 문제가 있는데 평화적 모색은 어떻게 하려는가? 다른 아시아 이웃 나라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가?

[답변]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前 중국 외교부 장관: 남중국해에는 51개의 섬이 있다. 수면 위의 작은 섬은 대개 500제곱미터 이하이다. 하나의 열도라기보다는 섬과 열도가 연결된 형태이다. 주권은 중국에 있으며 우리가 행사한다. 베트남과 필리핀과의 분쟁은 UN 헌장에 따라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베트남과는 우호적인 협상을 원한다.

베트남은 중국의 지속적인 우방이며,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들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공통 경험이 있으며 미국은 필리핀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 좋은 관계인 것으로 안다. 영토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필리핀과의 같은 문제를 오랜 친구로서 대화로 해결하고자 한다. 아시안 국가와 남중국해 공동성명을 이끈 경험이 있으며 우리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큰 나라라도 역외 국가가 끼어들면 안 된다.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국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불공정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UN 헌장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남중국해 문제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항해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항해는 자유롭게 이뤄진다. 그러나 항해의 자유를 빌미로 간섭하면 불공정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평화로운 외교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삼자의 개입은 방지해야 한다. 외교관으로서의 원리와 사람으로서의 원리는 같다고 본다. 모든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제삼자의 개입이다. 아시아의 국민도 이런 포럼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키우며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안정이 온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한승수 前 총리께 묻는다. 아시아는 크게 변화하는 중이다. 경제, 정권 변화,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고 있지만, 또한 어려움도 동시에 있다. 에너지 부족, 환경 오염, 고령 사회 등등. 이에 대해 유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 前 총리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또한 협력과 평화, 공동체 정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UN 사무총장 특사: 처음 이 포럼이 발족할 때의 명칭은 '제주평화포럼'이었다. 변명은 평화 없이 불가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주포럼은 꼭 필요하다.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대 구상, 유럽연합(EU) 같은 구상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평화를 위한 구상이다. 다행히 몇 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으나, 유럽 통합 같은 화해나 평화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빌딩 블록'방식이 필요하다. 하나의 아시아를 추구하는데, 아시아는 전 세계 GDP의 3분의 1, 한·중·일은 21%(2012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는 전 세계 무역량의 18%에 다다른 수치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어서, 예컨대 중국은 이산화탄소 대규모 배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인도, 한국 등이 부분별 방식을 엮어 신아시아를 만든다면 흥미로운 공동체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다. EU도 처음부터 잘된 것은 아니었다. 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어 이를 통해 원자재를 관리했고, 그 이후에 로마조약이 체결되었다. 아시아의 그랜드 디자인은 '빌딩 블록'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등을 빌딩 블록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역내 아시아 국가 중 FTA 체결은 절반이 넘었다. 자유무역 속에서 역내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은 경제 공동체의 기반이므로 중요하다. 또한 고령화 문제나 에너지 문제 등의 공동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에너지는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들에 국가간 힘을 모아 책임있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FTA를 언급했는데, 한국, 중국, 호주 등이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를 논의 중이다. 지역의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 호주, 남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다자간 규정을 창조해가고 있다. 한국, 중국 간 별도의 FTA가 준비 중이기도 하다. 다양한 FTA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UN 사무총장 특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통한 다자간 무역 질서가 최선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된다. 양자 간 FTA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TPP 등이 중간 과정이라고 본다. 서너 국가들이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양자 간 협정보다 낫다. 최선은 다자간, 그 다음은 역내 다자간, 마지막은 양자 간이라고 본다. TPP, RCEP은 전 세계 무역을 더 자유롭게 하는 데 중요한 기제이지만, 다자간 무역 협상이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강조한다. 지금의 역내 무역은 차선책일 뿐이라고 본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길라드 前 총리에게 질문한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제 중 재생에너지의 활용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 원료도 수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 문제를 질문하고자 한다. 호주는 해초, 평원, 경관 등이 유명하다. 호주는 환경보호에 앞서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청정 환경을 위한 호주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변]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환경은 인류를 위한 토대이다. 기후 변화에 관해 충분히 논의되는지 의문이 든다. 먼저 국내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탄소 배출권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다. 즉,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환경에 대한 과세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다자간 노력을 이야기했다. 호주에서는 크레이크 장관이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 호주의 광물 자원 수출은 석탄에서 가스로 바뀔 것으로 본다. 가스는 청정한 원료이고, 진정한 친 재생에너지로 옮기기 전의 단계로 천연가스가 중요하다고 본다. 태양열, 풍력, 지열 등에 풍부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주는 여기서 경쟁 우위에 있다.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UN 사무총장 특사: 환경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이다. 교토 프로토콜이 2012년 만료된 후 다음 프로토콜이 없다. 반기문 UN 총장이 기후 변화 정상회담을 소집했는데,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자간 거버넌스가 공식적으로 없지만, 중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으므로 9월에 열리는 회담이 중요하다. 리마에서 열리는 회의와 내년엔 열리는 파리의회의 역시 중요하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다자간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한 前 총리께서 수자원 관리에 대해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UN 사무총장 특사: 물은 생명이다. UN 차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UN사무총장 자문위에서 발언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에 따르면, 물 문제 때문에 10년 이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새천년 밀레니엄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는 물이 중요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중요해졌다. 10억 이상의 사람이 물 부족현상에 시달린다. 물부족은 UN 사무총장 자문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아시아의 경우는 어떤가?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UN 사무총장 특사: 중국 역시 심각한 물 문제가 있으며, 중국도 많은 노력 중이다. 물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태풍같이 물과 관련한 재난이 많다. 베트남, 필리핀, 한국 등에 큰 태풍이 온다. 우리는 정치가들이 이 같은 재해에 관심이 없다고 본다. 사후 조치에만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재난 예방과 같은 사전조치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한·중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는가? 특히 북한의 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까 중국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반도 평화 통일에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前 중국 외교부 장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성공적이었다. 중국인들도 환영했다.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인해 존경을 받았다. 또한, 많은 한국인이 한자를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시진핑의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가장 좋은 시기에 방문하는 것으로 본다. 외교관으로서 1992년 수교회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8월 24일은 한·중 수교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빨리 발전했다.

한국과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한·중 양국은 최고의 파트너이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중 중국인이 제일 많다. 여기 도지사님도 계시지만, 작년엔 온 중국인이 180만 명이다. 양국 간 116편의 항공편이 왕래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겠는가? 우리는 세계 대규모 교류를 진행 중이다. 한국 유학생이 중국에 온 유학생 중 가장 많다. 역사 교류 역시 유구하다. 최고 고위층의 방문을 통해 우호가 깊어질 것으로 보며,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답하자면, 분명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해야 한다. 극단적, 위협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면 안 된다. 서로가 신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6자회담의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 평화 등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UN 사무총장 특사: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난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춘천에 착륙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중국-한국 간 공식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前 중국 외교부 장관: 지금 비정부 간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중국의 주·현·성 등이 한국의 군·시 등과 150여 개 교류 관계를 맺었다. 우리 기업들도 그렇다. 이러한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기여이다. 중국인들은 겸손한 편인데, 지금 이 순간만 다르게 말하자면, 중국과 한국의 우호 전통이 발전될 것이고, 다른 나라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역사처럼 양자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본다.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청중의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두 개만 받도록 하겠다.

[청중 질문] 베트남에서 온 청중: 평화와 비극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싶다. 기조연설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슬픔을 이야기한 것이 기억난다. 최근 베트남에서 무장하지 않은 어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어느 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 큰 나라의 무장한 선박의 사람들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중 질문] 닝포에서 온 인터넷 매체 기자: 우리는 '한중지역협력위원회'와 좋은 관계에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6만 개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중국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답변]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前 중국 외교부 장관: 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호찌민, 하노이 등을 방문했다. 베트남과 중국 국민 간의 우정과 좋은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양 국민은 평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하노이의 많은 노인이 1950년대에

중국인이 서방의 한 식민주의 국가의 침략을 중국이 막아줬음을 고마워하고 있다. 1974년, 더 큰 나라를 쫓아낼 때도 중국이 도와준 데 감사하는 것을 봤다. 양자 간의 국가 관계는 민의에 기초하므로 굳건하다고 본다. 난사군도 문제는 있지만, 사실을 존중하고 역사적 사실, 현재의 사실을 존중하면 된다고 본다. 난사군도를 잘 보면 거의 중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중국이 먼저 발견했고, 관리했고, 중국 황제가 명명했다. 국제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역외의 대국이 개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과거에 식민 국가들로부터 멸시받은 경험이 있다. 우리 개발도상국들은 이웃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역외 국가들의 힘을 막아야 한다. 그들의 비건설적인 행위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개방적인 아시아여야 하고, 역외 국가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건설적인 방안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오늘의 논의를 통해 ‘아시아의 패러독스’를 ‘아시아의 파라다이스’로 만들기를 기원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한반도 비핵화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극단적 위협의 자제와 6자회담 재개가 매우 필요함
- 기후 변화에 관한 다자간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유럽식의 통합은 아시아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교육 등 분야별 ‘빌딩 블록’ 방식의 통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 통합을 위해 중간 단계로 지역 내 무역협정(TPP, RCEP)을 추진할 필요 있음. 그러나 최종 목표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야 함
- 제주포럼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 필요

만찬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님, 한승수 총리님, 리자오싱 前 중국 외교부장님, 공로명 장관님, 홍석현 회장님, 문태영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201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계기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행사 조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문태영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아시아 설계(Designing New Asia)'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금번 포럼은 특별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들과 엄중한 과제들에 비추어, 포럼 기획자들께서는 오늘날의 아시아를 낡은 아시아로 생각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 즉, 새로운 아시아로 대체되거나, 적어도 교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진단은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를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는 '세계 성장의 동력'으로 별칭되었으며, 지난 20여 년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아시아의 세기', '태평양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는 본인이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현상 즉,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적 갈등은 고조되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이와 같은 희망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정학의 복귀'라는 말이 이곳 아시아에서도 적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면한 과제들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미래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께서 저 아래 남쪽의 호주로부터 제주도까지 비행하는 경로를 따라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나흘 전,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중국 전투기와 일본 정찰기가 겨우 30미터를 사이에 두고 부딪힐 뻔했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양국 관계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의 선박들이 1979년 중월전쟁 이후 거의 보지

못했던 물리적인 충돌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누구도 상상치 못할 형태의" 4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위협에 더하여, 지난주에는 NLL 이남 우리 수역에 있는 해군 초계함을 향해 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동북아에서는 역사수정주의로 인한 긴장 고조가 영토갈등과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한편, 잘못된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평화헌법 재해석 움직임에 대해 이웃 국가들은 물론 일본 국민까지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대립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역 통합 및 협력을 둘러싼 경쟁은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를 배척하는 대립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들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해묵은 또는 새로운 곤장 문제들이 튀어나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아시아의 이미 복합적인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 다루어지거나, 방지되지 않는다면, 역내 정세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찬을 즐기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너무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오늘날의 아시아와는 매우 다른 아시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역동적이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등 역내 통합 움직임이 태동하면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다시 한 번 역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진보와 퇴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부상하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강한 러시아, 핵무기에 집착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 그리고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 같이, 각국이 모두 새롭고 다양한 역내 질서를 추구한다는 데에서 그 해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본인의 진단이 맞다면, 올바른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내일 여러분이 주로 다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신 본인은 금번 회의 주제 속에 있는 "설계"라는 단어와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동적이고 낡은 방식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역내 모든 이해당사자가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비록 각자의 꿈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미국이 ‘태평양의 꿈’을 추구한다면, 중국은 ‘중국몽’을 꿈꾸고 있고,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그들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라는 한국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보다 커다란 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의 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통합 과정도 슈망 선언과 로마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 된 유럽’, ‘평화로운 유럽’, ‘번영하는 유럽’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도 동서 진영 간 주권 평등, 무력행사 자제, 인권 존중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를 위해 본인은 새로운 아시아의 3가지 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화로운 아시아’입니다. 세력 균형에 따른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 특정국의 이해보다 모두의 공동 이익을 존중하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와 규범에 입각한 평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평화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번영하는 아시아’입니다. 역내 경제가 완전히 통합되고 창의성이 공유되며,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 사람과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보하는 아시아’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아시아,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아시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뉴욕에서 본인과 대화를 나눈 키신저 박사는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만족보다는 균형 잡힌 불만족”을 추구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조언은 현실 정치의 세계 속에 있는 국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내일 있을 우리의 논의에도 도움이 되는 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유네스코 헌장은 인간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 헌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평화 수호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중심에 국가가 있든 인간이 있든, 우리는 전통적 양자 관계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상위(high) 및 하위정치(low politics) 모두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긴장된 정치·안보 정세 아래에서는, 지역 또는 소지역 차원의 신뢰 구축조치 또는 신뢰안보 구축조치를 통해 고조되는 긴장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바다, 하늘, 우주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특히 역내 국가들의 경제활동 및 안보에 핵심적인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역안보라는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아시아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지금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과 비핵화된 북한 중에서 어떤 북한과 마주치게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역 통합 노력과 연계될 때에 탄력을 받습니다. 아시아는 이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 FTA, ASEAN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지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 노력을 평화 구축 노력과 더불어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분단 70년을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이어, 최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3대 원칙, 즉 인도주의, 공동 번영, 그리고 통합의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전환시키고자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대륙으로 전환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지역을 넘어 협력과 통합을 이루려는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신뢰까지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Connecting the dots”라는 말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하나하나의 노력이 당장 가시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는 헛된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갈 의지가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지정학의 회귀(return of politics)’를 예상하는 모든 비관론자들에게 아시아의 미래는 밝으며,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찬사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존경하는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님, 리자오싱 前 중국 외교부장님, 그리고 제주포럼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를 거듭해 발전해가고 있는 제주포럼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세계 가운데 우수한 지역 다자협력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동북아 평화 협력’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의 변화와 과제

오늘날 아시아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아시아의 위상은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세계 평화와 번영의 유지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21세기 국제사회의 질서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그리고 아시아 경제의 번영을 뒷받침한 것은 △전후 글로벌 질서의 유지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 발전, 그리고 △개방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진보인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유지·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위해 각국이, 그리고 역내 각계 지도자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새로운 아시아 설계’(Designing New Asia)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제주포럼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틀

오늘날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정치·안보 현실은 때로 역내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는 뒷받침이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역내 질서를 관리해온 메커니즘으로 역내 국가 간 쌍무적 관계가 있고, 이 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지역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안보 및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다자 협력 메커니즘이 기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와 같은 대륙국가 중심의 지역협력 움직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요국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양자적 접근과 협력에 더하여 아시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변화하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특히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가능케 하는 다자협력의 메커니즘을 더욱 효율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가 직면한 장벽들을 넘고, 역내 국가 간 효과적인 상생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는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장벽과 도전 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아시아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대결적 상황인 바,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충돌과 패권경쟁의 본격화로 보는 시각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건설적으로 협조해 나갈 당위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바로 이러한 협조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결적인 패권경쟁의 장벽을 극복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이 상생과 공영의 틀을 만들어 갈 때, 그리고 한국과 일본, ASEAN, 러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를 기초로 협력해 나갈 때, '새로운 아시아' 설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영토 분쟁과 이에 따른 무력 충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증폭과 대립은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넘어야 할 분쟁의 장벽입니다.

영토가 국가 이익의 제로섬적인 핵심 근간을 구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당사국들 모두 만족할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갈등의 해결은 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분명 앞으로의 합리적 해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장벽은 시급한 역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지역적 차원의 개별 이슈 선상에도 놓여 있습니다.

작년 EAS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식량안보 증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제고 및 원전 안전의 증진 필요 등 교류·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안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세 가지 도전

아시아의 당면한 이러한 장벽들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핵심 지역인 동북아에서 구체적인 상황의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북아 국가 간의 평화 협력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또 세계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북아에서 지역적 평화안정과 협력의 확실한 틀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 북핵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발전과 핵무기 개발의 병진노선은 결코 달성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 포기라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북한 국제적 제재 속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노력 등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내용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간 갈등을 종식하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북아의 평화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 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듯이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인식 공유는 바로 올바른 공동의 역사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차는 갈등과 불신의 근원이며, 이는 결코 발전적 미래를 위한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나누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키워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혜안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동북아에서의 군비확장과 군사적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무력 충돌의 긴장감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쌍무적인 안보 대화는 물론 역내 다자안보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심도 깊고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분쟁 해결 자체는 대개 양자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자안보 메커니즘은 잠재적인 분쟁과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선, 역내 국가들 간의 연성 이슈, 예를 들어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핵 안전, 질병 대응, 자연적·인적 재난에의 공동 대응 등과 같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대화를 촉진하여,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협력, 나아가 다자안보 대화 메커니즘의 구축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이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역내 국가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 간 대화는 물론 각종 포럼과 회의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도자부터의 top-down 및 실무정책입안자들의 bottom-up 과정을 포함해서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가는 여행자의 여정도 결국 내딛는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포럼이 그 귀중한 출발점(starting point)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그 어느 때 보다도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국제사회 질서 확립과정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장된 위치에 상응하는 기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장벽들을 넘고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과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협력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추진하며, 역내 국가 간 다자안보 대화를 위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그리고 북한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차원의 협력의 시대를 내다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와 맞물려 추진돼 나갈 때, 수년 내에 북핵 해결과 동북아 안보·평화에 큰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한국이 이 시점에서 새로운 아시아 설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 모인 것도 창의적인 구상과 열정으로 아시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해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회의가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포럼이 끝까지 잘 치러져 큰 성과를 이뤄내어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 귀중한 연설의 기회를 주신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만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장

신뢰정치와 동아시아 평화



...layered and complex diplomatic challenges
...essed through a simple equation

Major Challenges

- The Rise of China
- Historical Revisionism in Japan
- The Return of Russia
- Anachronistic North Korea

EJU FORUM 2014

SHIN Hee-Su

Mafael ROLF

SHIN Hee-Su

CHO In-uk

CHO In-uk

동북아 신(新) 안보 체제 구축

동아시아재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테러, 조직범죄, 전염성 질환 및 환경 악화 등 초국가적 안보 위협은 동북아 국가 모두의 집단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 각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통해 '협력적 안보'라는 개념을 실천에 옮겨온 데 반해, 동북아 지역은 그 실제 없이 논의만 계속하는 실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 프로세스'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비슷하게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 특히 북한까지도 참여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결성을 구상한 것이다. 본 세션에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상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발표 및 토론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

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

연구원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

공사

정리

신윤희 동아시아재단 간사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로 북한을 꼽았다. 그 유일한 문제 해결책으로 6자회담의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중국도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6자회담을 와인으로 비유하며,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식초로 변질하여 마실 수 없는 상황임을 꼬집었다. 따라서 새로운 와인이 필요한데 그 형태는 조약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용 면에 있어서는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란 핵 문제(6+1) 해결 과정과 비슷한 포괄적 조약으로 합의를

먼저 도출한 다음, 시행 관련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헬싱키 협약과도 유사하며, 기존의 틀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동북아 지역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리더십 평가와 관련,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과거의 동맹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동맹 덕분에 지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물류, 서비스, 인적 자원의 흐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동북아 지역을 두고 국가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전략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위해 무엇보다 아시아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각기 다른 링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경제 협력 체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제는 소프트 파워가 아닌 하드 파워로, 돈은 군사력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안보체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훌륭한 기존 포럼을 활용하여 진정한 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가 직면한 문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하에는 안보 딜레마가 없는데 이는 프랑스와 독일,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들 국가는 두 국가 중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해도 상대 국가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반면 그는 현재 중국을 두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진입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경우, 자유 경제 질서를 유지하지만, 최근 보수주의가 힘을 얻고 있어 제국주의가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동북아는 경제적 변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신뢰 외교 정책은 잘 실행되지만 한다면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이 큰 전쟁 없이 50년 동안 평화의 번영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지역의 평화는 동맹에 의한 억지력과 핵 억지력에 기반을 둔 것임을 주장하며, 억지력에 의한 평화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전쟁보다 약한 단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한국과 북한이 한 국가인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인지를 정의해야 하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구르, 티베트 등의 문제로 명확한 국가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안보 문제는 결국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안보 문제에 있어 경제 협력이 도움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드워드 동과는 다소 다른 의견으로, 문제 해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북아 안보 협력의 위협 요인 평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동맹국인 일본이 전근대적 국가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한·중·일 3국 모두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문화에 대한 긍지가 강해 각 국가가 강력한 국가를 추구할 여지가 있지만, 이 지역에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리더십과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여행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과거와 달리 많은 수의 한국인과 중국인이 다양한 해외 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자유주의 국가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했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중국의 부상이 과거 중국 제국으로의 회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만일 중국이 제국이 된다면,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첫 번째는 제국이 소프트한 이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중국이 국경 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신 야만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신 야만인이란 중국의 관점에서 본 문명 세력을 의미한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구축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국가 구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민에 근거한 문명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에 근거한 민족국가라고 한다. 현 상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민족국가에서 문명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로서의 역사는 짧아 아직 완전한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헌법에는 문명에 의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국가의 실행을 보면 한민족에 의한 국가로 민족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안보 문제를 탈안보화한 후 접근해야 문제 해결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북한이 안보상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은 핵에 중점을 두고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향후 15~20년 동안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면 100~200개의 핵무기와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즉, 핵무기는 북한이 가진 유일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동북아 지역에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 모든 경우의 수에 북한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 내다봤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미래 경로를 바꿀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으로는 신뢰 외교,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생태 다양성 사업, 신뢰 회복을 위한 DMZ세계평화공원 추진 등이 있다. 이는 하드 이슈와 소프트 이슈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이에 반해 평화 병진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화공원을 통한 접근 방식은 시작하기도 전에 거절된 것이므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록 중국이 권위적인 체제를 지녔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성도 내포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화, 민주화된다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미 관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미국은 G2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중국은 최근 그 표현을 자주 쓴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각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도 우호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여전히 미국을 가장 강력한 국가라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총 GDP가 높은 것일 뿐 1인당 GDP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극 체제에 대한 인식은 일면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중국이 세계 질서의 일원이 될 수는 있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이익과 공공 이익을 분리해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항상 자국의 이익과 공공 이익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리더일 수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지역적 이슈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 평가했다.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담화 재개와 관련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는 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대화 재개를 망설인다는 것이다. 결국 그 바탕이 넘어온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스스로 전략적 정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가능성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 도미노 발언을 두고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는 그 위협에 대응해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핵 무기화가 진행되면 북한과 한국은 상호 파괴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지역의 핵 무기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보유가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마다 지역에서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억제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만약 핵이 확산된다면 그 원인이 북한의 핵 보유에 있지는 않을 것이며, 핵확산은 안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알라가파 연구원의 전반적인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경우 특수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을 설득,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5~20년 내의 동북아 지역의 핵 문제에 대한 예측은 선불리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결국 북한이 핵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한국과 일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부상과 향후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고찰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미국의 경우, 현재 동맹 체제와 안보 인프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미국을 헤게모니 파워로 보고 있기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 안보 체제 강화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덧붙여 안보 체제가 강대국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비록 권위적인 정부일지라도 질서를 가지고 자유주의 및 국제 질서에 순응한다면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경우, 강요보다는 사회화와 학습을 통해 다자주의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중국의 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많은 프로세스에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상하이, 서울, 도쿄 등의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며, 이런 도시화의 리스크들은 후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런 리스크 해결에는 지역 거버넌스, 국가 정부,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그 힘의 균형이 점차 국가에서 시민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평화적인 발전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도 추구하는 바임을 지적했다. 안보 체제에 관해서는, 현재의 군사력 동맹이 앞으로 몇십 년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꼽는 지역 협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동북아 지역 협력만으로는 평화를 구축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아세안(ASEAN)이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포용해 앞으로 더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MZ세계평화공원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

코리아DMZ협의회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필요성,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국내외적 차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지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북한이 동 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도록 촉구했다. DMZ세계평화공원이 현 정부의 역점 국정 과제인 만큼 이러한 내용으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제주포럼 공식만찬에서 “DMZ세계평화공원”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공식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

이춘호 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

정희성 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

발표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

토론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창환 강원대 DMZ Help 센터 교수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압둘라흐만 알하비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외교관

채은미 서양화가 · 작가

최덕만 세계평화공원추진 국민연합 회장

양대중 원광대학교 교수

정리

오지영 코리아DMZ협의회 사무국장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 DMZ세계평화공원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사회의 공동 번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덕만 세계평화공원 추진 국민연합 회장: 남북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DMZ세계평화공원을 현실화할 수 있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압둘라흐만 알하비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외교관: DMZ세계평화공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동시에 자국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겠다. 이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영역에서 많은 이슈가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군사 지역에서의 환경 안정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DMZ가 가진 생태적인 가치를 복합적으로 그려보아야 한다. Big Picture를 그려보기를 제안한다. 외국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UN 산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실제적인 시간 단축과 실행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이 세계무대로 나오게끔 하는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실향민, 접경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북한이 같이 참여할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일 대박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긍정적 인식을 위해서는 교육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두 가지 의미를 지닌 DMZ세계평화공원의 첫 번째 의미는 상징성이다. 작은 지역에서 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상징성의 의미이다. 두 번째는 하나의 프로젝트로서의 의미이다. 과거의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까지 단절된 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와 동참이 필요한데, 상징과 사업의 차원에서 각각 전략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정교하게 끌어올릴 것인지와 사업의 측면에서 하나의 완결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진 그림이 필요하다. 실제 행동과 참여로 이어지기까지 이해 당사국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DMZ의 건설 방식이 관건이다. 남한에만 제한할 것인지 남북을 통과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북한은 분단을 선호한다. 안보와 평화의 논리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즈니스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북한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해안에 대관광단지지를 건설하고 있다. 정전 체제는 복구할 수 없다. 북한 측의 보이콧으로 멈춘 협력 체계를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한다면 세계평화공원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김창환 강원대 DMZ Help 센터 교수: DMZ와 Peace의 조합이 친숙하다. DMZ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박근혜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비무장지대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지역인 DMZ에서 평화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DANCE MUSIC ZONE'으로 만들자는 게 제안이다.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업무로 북한을 상대함에도 이런 느낌인데, 국민에게는 더욱 공감대가 없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세금에 대한 부담감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DMZ세계평화공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체험하고 분단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는 계기가 될 만한 장소와 체험의 장이 필요하다. 남한 주민에게도 북한 주민에게도 서로의 이념을 체험하고 그것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남북통일의 피가 돌게 되는 모세혈관과 같은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능력과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다.

양대중 원광대학교 교수: DMZ세계평화공원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실현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2002년 월드컵 때 독일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벤트를 한 경험이 있다. 그러한 경험을 살펴볼 때, DMZ세계평화공원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재고해보겠고, DMZ세계평화공원이 실제로 가능한 데에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채은미 서양화가·작가: 안찬일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북한의 관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서양화가·작가로서 DMZ를 위해 어떤 점을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보통 사람은 DMZ세계평화공원을 잘 모를 수 있다. 우선 이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아시아의 기회 그리고 동아시아의 위기

제주평화연구원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말은 30년이 지난 상투적 표현이 되었다. 중국과 인도의 부상, 미국의 재부상, 그리고 일본의 역할 강화와 같이 국제질서가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아시아는 세계의 공장, 성장의 엔진, 냉전의 군사 대결, 새로운 영토 분쟁과 같이 기회와 위기가 산재해 있다. 21세기 아시아가 직면한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DMZ세계평화공원을 위한 북한의 협조와 더불어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지를 얻어낼 필요가 있음
- 북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기획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 남북한의 국토 균형 발전과 동북아 차원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슈임
- DMZ세계평화공원은 분단과 분리를 넘어 공동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남북한 인력이 시작부터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자산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
- DMZ세계평화공원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교육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와 건전한 인식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사회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카이 지안 복단대학교 교수
크리스 라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극동국립대학교 교수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리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아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논의가 진행된 지 20년도 넘었다. 아시아의 세기는 왔는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왜 아직 오지 못했고, 온다면 언제쯤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카이 지안 복단대학교 교수: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말한다. 누가 아시아를 대표하고 리드하고 있는가? 동북아시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다.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 도전과 외부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외부적 위협의 핵심이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아시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너무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는 문화적 정체성의 부족, 상호 소통의 부족, 고령화, 부패의 문제, 인간 권리의 부실, 환경문제의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 중국은 거대한 내부 시장과 외교 역량으로 '아시아의 세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크리스 라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 패러독스가 문제다. 아시아는 경쟁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어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의도에 대한 의심, 상호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곤란은 다른 국가에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 북한의 핵 개발로 한국이 위협에 처했지만, 일본은 이 기회를 재무장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국의 관계 정상화에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외교가 오해와 갈등,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의 세기'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극동국립대학교 교수: 2008년 경제 위기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은 부상하고, 러시아도 재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새로운 안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미국 중심의 서구와 동유럽, 그리고 중국 중심의 아시아라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해상과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중적으로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 유라시아에서 이중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국제 정세(코소보, 시리아, 크림 사태)를 보면 현재의 국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21세기는 다 중심 세기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주요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이 상황은 아시아 국가에 유리한 조건이고, '아시아의 세기'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아시아의 시대는 아시아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만들 수 없다. 유라시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유라시아가 협력하는 협력체가 필요하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일본은 최근 주변국인 한국, 중국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일본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일부에서는 안보 측면에서 일본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공존해왔다. 관련국 간의 위기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관련국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중국의 위협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더욱 관심이 있다. 일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정책으로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편을 가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중·일 3자 협력을 통해 모두가 승자가 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중·일 3자가 모두 함께 하는 3국 정상 회담, FTA, 환경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협력구상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3국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시아의 세기에 대한 카이 지안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다.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현재는 중국의 세기가 오고 있다는 말인 것 같다. 경제 번영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다.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새로운 거버넌스로 '아시아의 세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질문] 기디온 라흐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수석논설위원: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지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중국일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이 가지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답변] 카이 지안 복단대학교 교수: 중국은 G2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은 패권국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일본에서는 미국이 중국이 제기한 신형 대국 관계를 수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 두려움이 일본 스스로 자체적인 힘을 기르게 하고 있다. 미·일 동맹을 중요시하겠지만, 미·중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질서가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긍정적이다.

[질문] 이종헌 한중일협력사무국: 4년 전 한·중·일 정상회담이 제주에 모여서 비전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4년이 지난 지금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또 무엇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인가?

[답변] 크리스 라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동북아시아에서는 분쟁과 갈등의 현실주의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전근대, 근대, 후기 근대적 요인이 모두 섞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래를 바라보는 협력이 필요하다.

[질문] 기디온 라흐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수석논설위원: 미국과 중국에 기회와 도전은 무엇인가?

[답변]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은 일본보다 더 신중하고 복잡하다. 한국의 통일, 안보, 그리고 경제 요인을 볼 때,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필요하다. 한국이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의 재무장화도 문제다. 미·일 동맹의 방기의 위협을 너무 과장해서 재균비화에 집중하고 있다.

[질문] 정성공 경기향만공사: 북한 요인이 동아시아 위협의 핵심이다. 최근의 도발과 핵 실험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답변]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년 동안 각국 지도자의 선호가 바뀌었다.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 대학교 교수: 중국의 부상, 한국의 지위 상승. 그러나 일본은 쇠락했다. 이런 세력 변화가 요인인 것 같다. 북한 핵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동의한다.

크리스 라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미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을 방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림반도, 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군사력에서 2자리 수 증가를 계속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들이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외부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극동국립대학교 교수: G2+ α 가 가장 합당한 정세 분석인 것 같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에서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G2+ α ’라는 개념이 합당함.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지도국으로 등장하고 있음
-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함
-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지속보다는 중국과 협력 등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희망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를 선호하지만,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 요구에 미국이 부응하는 듯한 양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자유주의 또는 제도주의적 시각을 통한 협력의 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아시아의 부상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 있음
- 동아시아는 국가 차원의 장애물—민족주의, 영토 문제, 역사 문제 등—이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우선할 필요가 있음
- 양자 관계에 기초를 둔 동아시아의 협력 관례를 다자협력의 프레임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음. 신뢰를 기반으로 ‘Concert of Asia’를 만들어야 함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신뢰정치의 재조명과 전망

동아시아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핵심 정책으로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압박과 대화 유도를 병행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작년 개성공단 위기를 넘기고 이산가족 상봉을 치렀지만, 아직도 북한은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세션은 현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정책 추진 실무자 중 한 사람인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포함한 4개국의 관점에서 본 정책의 비전과 실행 방안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사회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발표

진찬룡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

기디온 라흐만 파이낸셜 타임즈 선임 칼럼니스트

전성훈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정리

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출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전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기존의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적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은 정책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서야 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놓여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신뢰정치란 무엇인가?

전성훈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은 신뢰정치를 구성하는 기본 전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 태세와 외교적 관점에서 국정 철학을 펼쳐 나가는 신뢰 외교가 포함된다. 동북아 지역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양자 간의 협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역설적으로 영토 문제 등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성훈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외교를 주창하면서 사용한 <논어> 속의 사자성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하면서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제시하는 방법'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녹아들어 있다. 국제 상식과 규범하에 원자력, 사이버 보안 등 공동 이익이 결부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예민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유라시아로 넓혀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이다.

전성훈 비서관은 신뢰정치의 큰 특색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남북통일 문제를 다루는 정책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남북 간 '신뢰'이다. 신뢰를 쌓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7·4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 사항을 지켜가는 것을 시작으로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기본 정신을 토대로 쉬운 것부터 합의·이행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균형'이다. 전 비서관은 안보에 치중하여 대화를 소홀히 하고, 반대로 대화에만 치중하여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역대 정부들을 교훈 삼아, 튼튼한 안보와 남북 대화가 축을 이루는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지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관계, 신뢰정치 성패에 중요한 변수

진찬룡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신뢰정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중국 내 주류 언론에서도 신뢰정치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대북 접근법이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언젠가는 일어날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는 장기적인 사안이라는 것이 중국 내의 지배적인 시각’이라면서 남북 간의 불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딛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반도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현재 양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신뢰 구축이란 남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긴밀히 모색해야 할 부분임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 혹은 미·중 대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진찬룡 교수는 중국의 역내 리더십, 군 현대화 문제, 옛 해상강국의 지위 회복이라는 중국의 야심, 사이버 첩보,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 상황 등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여러 장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유학파가 엘리트 집단의 주류로서 중국의 대미 정책 결정에 대한 입김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 들어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인민의 발언권이 늘어나면서 국내 정치에서 대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이는 곧 중국의 대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더해 미·중 양국 정치권에서의 어리석은 발언과 행동도 계속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신뢰 구축에 바탕을 둔 외교를 북한만이 아닌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 외교란 근본적인 불신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에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언급하면서 신뢰외교 정책은 사람에 기반을 둔 교류에 토대를 두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의 지역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 바로 인적 교류이며, 그 실질적인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기는 어렵지만 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조했다. 소에야 교수는 또한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의 선호도가 김정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의 국가 이미지 또한 북한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머물렀다면서, 중국과의 협력, 비핵화 및 대북 문제, 통일 프로세스 등에 대한 한·일 간 입장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을 북한과 유사한 부류로 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후 북한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소에야 교수는 국내 정치에 얽매어 있는 김정은의 상황을 보여주고, 북한이 일본과 납치 피해자 협상에 나서는 것도 북한의 고립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북의 핵 포기는 비현실적

기디온 라흐만 파이낸셜 타임즈 선임 칼럼니스트는 신뢰정치에서 신뢰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란 관계를 시작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노력한 결과로써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라는 커다란 난제가 신뢰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기디온 라흐만은 핵무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류와는 상관없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끊임없는 동인을 대내외적으로 부여받고 있다고 봤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몰락,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유혹을 떨칠 수 없게 만드는 좋은 이유다. 1990년대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협약을 통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의 입장에서 정권 유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전통적 관점의 억지 수단 그 이상이다. 만약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리비아를 상대로 나토(NATO)가 군사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이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궁극적인 무기이며 자국의 생존 담보물이다.

급변하는 각국 대내외 사정 고려해야

진찬룡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 내 대미정책에 대한 의견 일치가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향후 대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더는 유일 독재 체제가 아니며 이러한 새로운 중국의 모습에 세계가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변화의 규모는 정책 엘리트 계층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거세게 일고 있고 그 단적인 예로 최근 몇 년간 중국 인민들의 북한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성훈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은 대북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한국 정부의 5·24 제재 조치 해제 조건은 일관적이라고 답했다. 즉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엄벌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비서관은 이러한 일관된 정책 방향이 신뢰정치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적 딜레마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비정부기구나 시민사회단체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북·일 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전성훈 비서관은 일본 학계 및 국내 정치적으로 북·일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만, 북핵 포기 사안 등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엇박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북·일 대화를 진행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신뢰정치에 기반을 두어 아베 총리가 지금의 한·일, 중·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에, 일본 국내 정치의 정책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현 상황을 해석했다. 우선 일본은 지금의 중·일, 한·중 관계를 통해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스스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됐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한국을 일부 예외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소에야 교수의 의견이다. 일본이 북한과 납치자 문제를 협상하려는 것도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에게 중요한 우선 과제가 납치자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소에야 교수는 다만 일·북 간의 납치자 협상이 큰 비전을 담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완화와 같은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국교 정상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과 함께 중·러 간 대규모 천연가스 딜(deal)이 성사되고 양국은 해상 훈련도 합의했다. 이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미·일 간의 서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소에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주목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지정학적 맥락이 깔린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제재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소에야 교수는 미국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상에 주목하면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한 관계 형성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에야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행보가 전략적 동맹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기디온 라흐만 파이낸셜 타임즈 선임 칼럼니스트는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의 입지는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유약한 대응을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립 과정에서 일부 금융 제재 외에 어떠한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정치가 가야 할 길은?

진찬룡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신뢰정치를 진전시킬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주문했다. 소에야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에 내재한 민족성, 국가 정체성, 역사를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과 정서적 격차를 넘어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공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러한 공감이 부족하고 특히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의 공감 부족과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사회 및 학생 단체 등 아래로부터의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디온 라흐만 칼럼니스트는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통한 경제 개혁이며, 한국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비서관은 북핵 및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여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강조했다.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접근

한·중 협력과 GTI 사례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최근 동북아시아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반면 이러한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경제협력도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인데 동북아시아 광역경제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물류 및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다자간 경제협력 모델이다. 이 계획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남북간의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 과거 유엔개발계획이 제시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

신정승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장동명 라오닝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주셴핑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연구위원

정리

임상은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문제점과 성과

주셴핑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막대한 협력의 잠재성이 존재함에도 계획의 추진 현황이 뒤쳐진 이유는 먼저 참여국들의 가장 낙후한 지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발전에 대한 전략적 설계 역시 부재한 것도 문제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 주도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이 발휘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견과 지역 간 경제 격차 역시 계획 추진의 장애 요소이다. 반면, 성과도 있었는데, 동북아 각국 사이에서 지속해서 역할을 발휘해온 협력 기제는 두만강 협력 기제뿐이다. 또한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이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자 간에 협력이 심화하고 다자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연구위원: 이전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에 참여한 국가들의 경제적 능력과 의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당시 북한, 러시아, 중국은 20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적극적인 의지도 없었다. 반면 여력이 있던 한국은 순수한 경제적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북한의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참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악화는 한국의 투자 가능성을 무력화시켰다. 결국, 계획 자체가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중국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적인 이유 및 추진 현황

장동명 라오닝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큰 혜택을 보지 못했던 지역의 발전에 신경 쓰고 있다. 과거 공업 단지였던 동북 지역 역시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하고 있다. 2003년 10월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전략'을 발표한 이래 2009년부터는 창지투 지역을 거점으로 두만강 초국경 자유무역단지를 건설, 발전시켜 나가면서 초국경 협력을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경제 산업 구조조정, 교통 물류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참여 방식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은 국제기구보다는 중국의 개발 계획에 편승하여 두만강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구도에서 GTI를 탈퇴했다고 볼 수 있다.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가 그 사례이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이후 상황이 변하였다. GTI가 역할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틀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은 5·24조치로 북한의 두만강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며, 또 GTI 가입국이 아닌 북한에 GTI 차원에서의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신탁기금과 분담금 형태로 GTI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관련국의 공동 관심사인 교통 인프라 구축, 역내 관광 활성화, 무역 및 투자 협력 체계 구축, 역내 에너지 및 환경 협력, 농업 부문 협력 등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전망

주셴핑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협력 상생이야말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의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관점을 피력한 적이 있다. 중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 한반도 동해 지역을 포함한 두만강 지역에서 주변국과 호혜 공영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나진-하산 물류 사업, 한반도 관통 가스관 설치, 철도 건설 등의 전망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2006년 러시아는 한국 기업에 나진-하산 간 교통 물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2008년 4월 북한과 양자 간 나진-하산 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3호 부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나진-하산 간 철도 복구 및 나진항 제3부두 현대화에 따른 양국 기업 간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합의되었으며, 한국의 3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의 외채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북·러 간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나진-하산 철도 사업을 계기로 남·북·러 3자 간 철도, 가스, 전력망을 연계하는 새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참여 가능성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연구위원: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지배 지역이라 역사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GTI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요국들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예외적인 국가이고,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일본의 참여가 쉽지 않다. 그러나 GTI가 성공할 경우 경제적 파장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동북아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대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성택 축출 이후 북·중 간 경제협력 전망

장동명 라오닝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북·중 경제 협력은 양국의 발전 전략을 위한 필요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양국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인물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중 삼각 협력 전망

주셴핑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현재 두만강 지역 각국과 북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북·중이 협력하는 나진선봉경제지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 간 역시 개성공단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북한 경제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외 협력에 대한 북한 각급 관리의 의지를 끌어올리고, 북한의 경영, 관리 모델과 사고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는 장차 두만강 지역의 다자간 협력에 대한 북한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다.

남·북·중 삼각 협력에서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

장동명 라오닝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교통 물류 분야의 협력은 관련국 모두의 윈-윈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물류 협력은 향후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발전의 돌파구로써 아주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과 남북 양국 간 긴밀한 교역 관계로 향후 협력의 가능성도 상당하다.

나진선봉지역과 황금평 개발 전망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북·중 간 두 지역 사업의 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나진 지역은 무역 지대로 선정된 반면, 황금평은 경제 지대로 되어 있다. 나진 지역은 중국·러시아와 육상, 해상으로 모두 연결된 지대적 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황금평 경제 지대는 신의주와 단둥이 인접해 있는 지대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북한 측은 황금평과 나진 지역의 동시 사업 진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나진 지역을 우선 추진하며 황금평을 차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교량, 도로, 항만 등 북한 두만강 지역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 화물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을 경유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이 한국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다자간 협력 틀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신의주를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민간 및 공기업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국 간의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나진-하산 교통 물류 협력 사업 모델과 같은 북·중 경제 협력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중국 측 지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황금평, 위화도 사업은 소규모 경제 개발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중 3자 간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요망 사항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연구위원: 첫째, 두만강 개발 계획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요인을 더욱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의 개방과 변화, 그리고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각종 한·중 간 프로그램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 3성의 지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GTI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추진 의지 및 경제 능력 증가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있음. 우리가 이를 북한의 변화 유도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통일 한국 기반 조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관여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5·24조치)를 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GTI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우세한 북한과 충분한 자본을 갖춘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임. 북한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TI의 경제성을 증진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함.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업 협력, 국제 운송 회랑 건설, 지식 공유 프로그램, 제도 및 기술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이번 시진핑 주석 방한 시, 한반도 및 동북아 공동 발전 비전과 연계하여 GTI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을 경유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은 한국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음.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이 관심을 두는 황금평 개발에 중국의 지원을 설득하고 남·북·중 3자 협력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중국이 강조하는 '운명공동체' 시각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상호 공감을 표할 수 있을 것임

아·태 지역의 전자정부 발전 동향과 신(新) 아시아 설계

유엔거버넌스센터

2008년 이후 격년으로 UN 회원국 19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UN 전자정부 평가(전자정부 발전지수=온라인 서비스지수+통신인프라 지수+인적자원 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전자정부 발전 동향 및 과제를 분석했다. 또한 이에 대한 학계 전문가 및 정부인사들의 토론을 통해 전자정부 및 공공행정에 관련된 신(新) 아시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

김판석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야오 케핑 유엔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전문가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국장

토론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리우 미시아 중국 거버넌스 아카데미 전자정부연구센터 부교수

전수진 중앙일보 기자

투메나스트 에르덴볼드 몽골 정보통신부 정책과장

정리

김진아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팀장

UN 전자정부 평가 보고서: 아·태 지역의 발전 동향

야오 케핑 유엔 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전문가: UN 전자정부 평가 보고서는 193개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 및 시민 참여의 효율성, 효과, 투명성, 책임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공공 부문을 변형 및 개혁하는 것에 관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UN 회원국의 전자정부 발전에 관한 기준 역할과 더불어 공공 서비스 전달의 전반적 향상과 디지털 격차의 감소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을 이끄는 유용한 도구로 채택되었다.

전자정부 평가 보고서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를 통해 국가 간 순위를 기록하며, 이는 회원국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ICT를 사용하려 하는 의지 및 능력을 측정하는 종합지표다. EGDI는 온라인 서비스 지표 3분의 1, 전기 통신 기반 시설 지표

3분의 1, 인적 자원 지표 3분의 1을 모두 더한 값이다. UN은 회원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자정부 발전 4단계(착수, 발전, 전자 거래, 통합 처리)에 해당하는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진 평가 질문지를 배포한다. 질문지는 연 2회 전문가 및 관계자의 검토를 받아 새로운 동향과 정책 관심사를 포착하고 환경을 변화시킨다.

또한, 보고서는 전자정부 자가평가 툴 키트(Toolkit)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들이 UN 전자정부 체계 및 방법론을 기반으로 자가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상호 도구 세트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전자정부의 발전과 영향을 더 깊게 이해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가 제공하는 또 다른 툴 키트로는 전자참여 준비를 위한 측정 및 평가 툴(METEP)이 있다. 이는 전자참여 기술 및 우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공공 정책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강화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전자 환경을 촉진하는 전자정부가 기본 온라인 서비스로 추가되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전자 참여 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공공 문제에서 투명성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가 웹사이트에 대한 열린 정부의 데이터 이니셔티브가 장려되었다. 모바일 기기, 무선 기술 및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 지구적 연결성을 높이고 지리 및 불균형한 사회 기반 시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아·태 지역의 전자정부 발전

아·태 지역의 온라인 실태 및 발전 정도는 다양하다.

- (1)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우수한 수준이며, 여기에는 우수한 전자정부 리더십, 폭넓은 전자 참여 정책, 광범위한 전자 서비스 및 정부 데이터 공개 포털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다.
- (2) 서아시아/걸프협력회의(GCC): 6개 국가(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에서 뚜렷한 개선이 보이고 있다. GCC 국가들은 전자정부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협력 및 조정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예로 GCC 전자정부 위원회 및 GCC 전자정부 회의가 있다.

- (3) 남아시아: 스리랑카와 몰디브를 필두로 전자정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각 국가 정부는 전자정부 개발 및 마스터플랜 계획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네팔, 파키스탄이 있다.
- (4) 동남아시아: 발전 정도가 불균형하다. 싱가포르가 전자정부 발전의 선두국가인 반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전자정부를 개발 의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5) 중앙아시아: ICT 기반시설, 온라인 상태 및 전자 서비스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예외 국가로 카자흐스탄이 있다.
- (6)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가 선봉에 있는 반면, 다른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피지 제외)은 전 세계 순위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 전자정부 포털은 전체론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전자 서비스를 A부터 Z까지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뉴질랜드의 윈스톱 포털은 서로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이 포함된 '전(全) 정부' 접근법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전자정부 이용 촉진 조치

소셜 미디어는 점점 높아지는 발전 가능성과 함께 현재의 서비스 채널에서 그만의 뚜렷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용자 활용을 제고하려는 전자정부 정책은 '사람들이 전자정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라는 간단한 질문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사용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감독 및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정책에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정부 홍보 및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 또한 중요하며,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파트너와의 협력을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증가시키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촉매제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추가 논의 문제

- (1) 통합 전자정부 전략의 개발 및 이행
- (2) 클라우드 컴퓨팅
- (3) 보안 및 재난 위험 관리 사업의 연속성 또는 비상 계획

- (4) 개방 데이터 및 빅 데이터
- (5) 시민 만족도 측정
- (6) 모바일 앱 개발
- (7)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과의 접촉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성공 요인 및 향후 계획

박재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국장: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행정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개념은 ICT가 발전하면서 함께 발전,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서류 준비 및 보고와 같은 행정 업무의 전산화가 주요 이슈였다면, 1990년대에는 주민등록, 부동산, 세관 및 통계와 같은 업무가 전산화되었다. 2010년에는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련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요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시민이 경제 활동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로써 전자정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에 정보화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예산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정부 부처를 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부처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한 프로젝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및 운영하는 정보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및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세워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그리고 정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모범 사례

- (1) 첫 번째 사례는 전체 정부기관의 서버,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통합 전산센터(GIDC)의 설립이다. GIDC는 우선 서버 및 기타 하드웨어를 한곳에 집결시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나아가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발전했다.
- (2)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서비스 '민원24'로, 세금 납부 및 주민등록 서비스를 포함하여 한 해 6,873만 6,000건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세 번째 사례는 시민 참여 포털로 이를 통해 시민은 정책 제안 및 참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4) 네 번째 사례는 데이터를 공개하여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2013년 16%였던 공공 데이터 공개율은 2016년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민이 정부 공개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사용자 수는 무려 763%까지 증가했다.
- (5) 다섯 번째 사례는 정보화 교육, PC 배급 및 정보 마을 프로젝트 등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활동이다. 우리는 장애인, 노년층, 결혼 이민자 등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PC 배급, 무선 전화 요금 지원, 정보 마을 프로젝트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 (6) 여섯 번째 사례는 다채널 서비스 제공이다. 서비스 센터 외에 시민은 웹사이트, 콜센터, 모바일 앱,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은 '정부 1.0'에서 '정부 2.0'으로 그리고, 현재 '정부 3.0'으로 발전하는 정부 기능의 진화를 이끌기도 한다. 정부 3.0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방, 공유,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며, 주요 행동 계획은 투명하고 능력을 갖춘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 3.0을 통해 우리는 정부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일반 대중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행복을 존중하는 행정부로 거듭나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정부 3.0은 지식으로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경제 활동 성적도 함께 개선하고 있다.

데이터 공유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프로젝트도 활발히 실행되는 중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가 각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성공 요인

- (1)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중장기 계획,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 (2)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
- (3) IT 거버넌스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 제정 및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의 활동
- (4) 공무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공무원 교육 및 트레이닝 실행

- (5) 정부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특수 기관 설치
- (6) 한국인의 역동성 및 창의성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한국 전자정부의 기술적 시스템은 비교적 훌륭히 수립되었으나 공공 부문과 민간 사이의 지식 공유 및 협력 또한 그 선례를 따라야 한다. 서비스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 참여의 투명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리우 미시아 중국 거버넌스아카데미 전자정부연구센터 부교수: 현재 중국 정부는 행정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기관 및 민간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각기 다른 정부 기관에 중복 투자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정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를 개발 및 평가하는 데 소비자의 관점 또한 고려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투메나스트 에르덴볼드 몽골 정보통신부 정책과장: 몽골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높은 이동 전화 보급률,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 정부 부처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등이 있다.

전수진 중앙일보 기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은 사람들의 일상에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ICT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예방, 관리 및 복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문] 한국 전자정부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각기 다른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이 부족하고 의사 결정권자의 전문성 문제가 있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특성 때문에 종종 전자정부의 기술적 측면을 외주 업체의 전문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일관성을 잃게 된다.

[답변] 한국 정부는 각기 다른 운영 체제로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의사 결정 능력은 의사 결정권자의 전문성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질문] 전자정부의 발전은 국가의 행정 관리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UN이 전자정부 개발 방향 및 전략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각 국가 정부에 대해 UN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우선 UN 전자정부 평가보고서는 국가 정부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고, 매년 보고서 출간 이후 회원국은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요청한다. 또한 보고서 순위를 통해 각 국가가 전자정부 발전에 더욱 힘쓰고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전자정부 전략 수립 및 개발에 있어 민간 협력과 시민들의 참여 제고 필요
-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자정부 개발 및 활용에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시민 교육 강화 또한 필요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널리 확산시키는 효과 기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외교부

오늘날 동북아 지역은 경제력, 인구, 기술 정보력을 바탕으로 나라 간 교류와 협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과도한 경쟁과 견제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긴장과 갈등요인도 커지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는 바로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뢰위기 상황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이러한 신뢰외교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신뢰위기에 직면한 동북아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여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하에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논의해 보았다.

사회

김성한 외교부 前 차관

발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수 하오 중국외교대학 교수

토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 연구실장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리

문제필 외교부 외무사무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 협력의 구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자 대화 프로세스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등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국은 물론 동 구상에 관심이 있는 역외국도 협력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신뢰 구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연합(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다자 및 지역 협력 기구의 옵서버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동 구상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 동 구상에 대한 북한의 참여는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구상은 정태적, 고정적 개념이 아니며, 관심 있는 국가가

모두 참여하여 'co-ownership'을 가지고, 'co-work'로써 만들어가는 진화하는 개념이다. 또한 동구상은 과거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과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다자 협력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출범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사, 영토 및 해양 안보에 기인하는 갈등 요소가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 추구, 북한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 증대,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맞물린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다자 안보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두 번째, 실용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동북아 다자 안보 구상은 대개 하향식 방식이었으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분야별 구체 협력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 프로세스에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틀을 결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개방적인 구상이라는 점이다. 어떤 국가·협력기구든 관심 있는 의제를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상으로 'multi-stakeholder partnership'을 추구하는 21세기 다자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양자·다자 외교 계기에 동 구상을 제시하고, 작년 말부터 일본, 미국, 중국에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동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 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스 페이스 등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 중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의제별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EU,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이러한 모멘텀에 기반을 두어 '동북아 평화 협력 포럼/회의'라는 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관련한 입장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동 구상이 한·미 동맹과 양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개념적으로 동 구상이 한·미 동맹과 양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둘째, 동북아에서 국제 규범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의제와 관련해서 미국으로서는 원자력 안전이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이며, 에너지 안보와 테러 대처도 가능한 분야라고 본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한 도전 요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동북아라는 소지역(sub-region) 단위의 메커니즘이 동아시아나 아시아·태평양과 같은 지역(region) 단위의 메커니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중국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반동맹 접근을 주창하는데,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이러한 접근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다자 협력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어떻게 결집하는가이다.

수 하오 중국외교대학교 교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동북아에서 권력 정치(power politics), 이데올로기 정치(ideology politics)를 넘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적인 구상이라고 평가된다. CICA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인들이(by Asian people) 아시아의 방식으로(in Asian way) 아시아가 직면한 안보적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아시아 패러독스의 근원인 권력 정치와 이데올로기 정치는 아시아 전통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지역이 당면한 안보 문제를 풀어갈 아시아의 논리(Asian logic)와 아시아의 방식을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도 이러한 아시아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은 아시아의 공동체 전통에 기반을 두고 아시아에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차원에서 CICA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안보 레짐 구상을 제시하였다. 동 구상은 포괄적이고, 협력적이며, 공동의, 지속 가능한 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보아오 포럼에서 공동의 운명, 공동의 이익, 공동의 책임을 지향하는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나의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한 몸과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서구 특히, 미국이 추구해온 권력정치 혹은 이데올로기 정치와 대비되는 아시아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문명의 정치(civilization politics)라 할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한·미 동맹 및 자유주의적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중국의 구상이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려는 구상이라면, 이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유럽 다자간 신뢰 구축의 경우 현상 유지에 기초하였으나, 현재 동북아에는 현상 변경을 꾀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만큼, 유럽의 성공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미국의 동맹 구도를 과거 권력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의

산물로 본 수하오 교수의 발표와 관련) 중국 측이 언급한 동맹과 다자 협력 간 대립 구도는 사실 냉전기의 특정한 위협을 염두에 둔 동맹을 상정한 것이다. 냉전 이후 동맹은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10월 동북아 평화 협력 포럼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첫째,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모든 역내 국가가 공감하고, 둘째,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미국의 재균형 정책뿐 아니라 역내 안정과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통일 담론이 활발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통일 기반 조성과의 연결고리를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경제·사회 등 연성 이슈에서 정치·군사 등 경성 이슈로 협력을 확산시키겠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나, 실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동 구상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질문]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Global Asia 편집인: 미국 중심의 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 안보와 중국이 주장하는 공동 안보라는 두 패러다임 간 대립 속에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나, 실제 내용은 공동 안보에 가까워 보인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이러한 양 패러다임의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비전통 연성 안보 의제에서 중점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제는 아시아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문제 영역이 아니고, 이미 한·중·일 협력과 같이 기존 협력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답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역내 국가 모두와 함께 만들어 가는 ‘co-work’, ‘co-architecture’인 프로세스라고 봐야 한다. 또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의 중점 추진 영역 역시 협력의 관행 축적을 시작하기에 더욱 용이한 의제를 선정한 것이며, 점차 다른 이슈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제별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중·일 협력 등 기존 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이제 1년

남짓 추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질문] 수하오 교수는 CICA에서 중국이 제시한 신안보개념이 아시아의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안보개념은 과거 중화사상, 조공 질서 같은 것인가? 그리고 지역 질서를 한 몸으로 보는 유기체적 사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몸에서 중요한 심장은 중국이요, 덜 중요한 신장은 다른 나라로 보는 차등적인 시각도 가능한 것 아닌가?

[답변] 수 하오 중국외교대학 교수: 신안보개념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비전에 가까우며, 콘셉트를 명확화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 지역 질서를 한 몸으로 보는 유기적 시각은 나의 특수한 관점으로, 과거 이데올로기 정치, 권력 정치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이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비전통 연성 안보 의제 협력뿐 아니라, 정치적 의지 결집을 통한 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도 함께 장기 과제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안보개념 간 대립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한·미 동맹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질서에 기반을 두면서도 역내 질서 안정 및 북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이 중시하는 부분을 아울러 수용함으로써 미·중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다자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동북아의 역사화해와 평화 구축의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최근 지정학적 부상만큼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역사갈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세기 동북아 지역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지속된 역사갈등은 최근 증폭되는 양상 속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역사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한 역사화해와 평화 구축의 과제를 조감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사회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발표 및 토론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

나가하라 요코 교토대학 교수

쑨 거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윤병남 서강대학교 교수

정리

우성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 화해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어렵다. 화해를 위해 국내의 의지가 중요하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화해도 독일 엘리트들의 제안이 확대된 것이다. 내부 화해가 중요하다. 한국은 북한의 엘리트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 다음 한국은 일본과의 화해를 리드해야 한다. 한국은 항상 작은 국가로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겠지만, 다문화적인 가교 역할을 할 때 한국이 빛났다. 한국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하라 요코 교토대학 교수: 동아시아 식민지를 비교역사학에서 다루고자 한다. 위안부 역사 인식이 불거지는데, 한·일 혹은

중·일 싸움으로 보지 말고 세계사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전쟁과 식민 통치 역사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식민 통치 시기의 경우, 당시 범죄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남리비아 사람들이 독일에 학살당했고, 후에 독일에 사과를 요구했으며 독일은 사과했다. 독일군이 해골을 반환하기도 했다.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지금 살아 있지 않지만 과거 노예로 삼은 행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과거사 청산 주제가 세계적으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식민 통치에 대해 일본이 배운 것이다. 최근 일본 학자들이 일본군의 동학군 대량 학살과 의화단 살해 행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요컨대 전쟁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식민 통치를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이다.

쑨 거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오늘날 아시아 국가를 둘러싼 지역 분쟁은 바로 자원 부족이 핵심이다. 어떻게 아시아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관해, 자원 공동 연구를 의논할 수 있다. 일본의 평화 헌법은 동아시아 국민이 연대해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문화적 연대를 이룰 때 평화 세계가 가능할 것이다.

윤병남 서강대학교 교수: 과거가 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가. 근대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는 식민 통치를 겪었다. 즉 동아시아의 정체성이 반영된 것이다. 한·중·일 역사화해에 대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한·중·일의 각계각층의 교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하기보다 민간 차원의 작은 노력이라 해도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 먼저 발표자별 간단한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첫째, 위안부란 용어는 큰 결례이다. '이른바 위안부'라고 하면 좋겠다. 사실은 성 노예이다. 위안이라는 말은 모독이다. 둘째, 쑨 거 교수는 일부 중국 젊은 층이 일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언급했는데, 교육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화해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는 영토 분쟁과 관련한 것으로, 결국은 자원 전쟁인데, 일본이 센카쿠에 대해서는 실효 지배를 운운하고 한국의 독도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공동으로 자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왜 일본은 평화 헌법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가. 유일하게 평화헌법을 지닌 나라로서 자부심 필요하다.

윤병남 서강대학교 교수: 페니히 교수의 코멘트에 대해 토론하고 질문한다. 화해는 일반적인 액션이 아니라 상호적이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과정에서 용서할 준비가 필요하다. 질문은 한국의 경우 이웃 국가인 일본에 강점당했는데, 아프리카와 남미·유럽 등 식민 통치 사례와 한국 사례의 비교가 가능한가? 즉 유럽의 경우, 먼 나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은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 식민 통치받은 나라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 썬 거 교수님은 동아시아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시아의 경험으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 있다. 새로운 연대를 구상한다면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 유럽 식민주의와 한국 식민주의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유럽은 전 세계를 식민지화 했다. 독일과 폴란드 관계는 일본과 좀 다르다. 독일이 폴란드의 일부를 100년간 점령했다. 1965년부터 폴란드 주교들이 서독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메시지 보냈다. 즉 피해 측의 용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시 세대가 움직여야 하고 지속해야 한다. 독일은 식민지배국의 법적인 승계자로 과거 독일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독일이 전 독일 제국의 승계자라면 나미비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엘리트층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치 지도층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화혁명은 동독에서 일어났고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이 유혈 상태를 상상했지만, 당시 촛불을 켜다. 동독 지도자들이 모든 사태를 준비했지만, 촛불은 준비 못했다. 즉 긍정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는 덩샤오핑, 김대중 등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미디어도 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주포럼 같은 교류가 중요하다.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썬 거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두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국제 관계는 국내 사회관계와 정치 관계의 전환된 표현이다. 국제 관계가 잘 해결되려면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 평화적인 연대 모델은 지금까지는 국가 단위로 했다. 각각 사회마다 있다. 민중 간의 연대를 생각하면 그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다. 화해의 완성, 민간 차원의 생활에서부터 무엇이 화해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나가하라 요코 교토대학 교수: 베르너 페니히 교수의 답변에 대한 의견이다.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 일본은 독일에 많이 배웠다. 많은 나라에 효과가 큰 사례인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나치범과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에 대한 청산이다. 즉, 식민 청산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나미비아의 요구에 대해 독일은 매우 놀란 것이다. 독일의 과거사 대응은 식민 통치 당시의 범죄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왜 평화헌법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가인데,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유는 국수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썬 거 교수가 얘기한 중국 젊은이들이 용서 안 하는 것 모두 역사 교육과 관계가 있다. 즉 광범위한 세계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병남 서강대학교 교수: 동북아시아에서의 국가 간 관계를 전망하면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다. 학생들의 경우, 5년 전에는 일본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갔으나, 지금은 안 가거나 1명이 간다. 도교를 방문하면 많은 한인 상가가 문을 닫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영향받고 있다. 이런 작은 문제가 양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한다.

[질문] 한국인 청중: 항상 3개국이 역사적으로 갈등을 겪은 것은 아니다. 정치적 지도부가 관계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2015년은 중요한 해로 해방 70주년, 한일협정 50년이다. 정치부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여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질문] 일본 소메이 고바야시 교수: 역사 인식은 공유가 가능한가?

[답변]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 독일의 경험을 말하자면, 역사 경험은 결론적으로 공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왜 다른 쪽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상호 이해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프랑스와 화해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프랑스와 화해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프랑스도 과거 식민통치를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독일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나미비아도 독일에 사죄를 요구하는 등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즉 소리 내는 것과 소리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 자원 등 현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각 정치 체제가 기여할 바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동북아시아 문화와 국가 간 공통점에 집중해야 하며 차이점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동아시아는 남과 북을 예를 들면 한국어 등 공통점을 근간으로 협력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각 유관부처에서 남북학술 교류 진행 시 한·일 역사화해를 위한 남북 지식층의 역할이 의제 가운데 다뤄질 수 있도록 건의
-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 개최 시, 한·중·일 지식층의 역할 논의
- 동아시아에서 가장 처음 편찬된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재 및 세계사 교재에 화해 교육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확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각국 정상회의 시 건의
-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관련, 독일을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독일이 먼저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사죄할 수 있는지 독일학계와 일본학계가 함께 검토하고 가능하면 국제사회에 여론 조성
-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해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시민 단체가 연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본질적인 마음의 화해를 강조.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화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
- 영토 분쟁으로 잃는 경제 손실보다 분쟁 지역의 자원 및 환경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얻는 경제 이익을 추구하도록 각국 전문가의 언론 기고 유도
- 일본의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단기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
- 한·중·일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홈스테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중·일 협력 사무국 등과 논의
- 동북아 화해를 위해 동아시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집중하고, 남북도 공통점을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 강대국 사이에 한국이 평화 화해의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기적 체계적 방안 수립
- 2015년 해방 70주년과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주도로 동아시아 정치지도부가 공동으로 미래 지향적 동아시아 평화 구축 관련 회의 개최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동아시아재단

작년 12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성택 처형 이후 집권 3년째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은 겉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병진정책'은 북한 내 경제개발의 성격과 정도 및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점들을 제기한다. 북한은 과연 핵무기 개발과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 평양의 새로운 파워 엘리트 집단은 누구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미래는 무엇인지 등,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알아보았다.

사회

존 딜리러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조교수

발표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교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좌교수

진장이 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 학과 국제정치학 교수

정리

김형준 동아시아재단 · 글로벌 아시아 펠로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실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교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 북한은 30여 년 전 파키스탄처럼 소규모 신흥 핵보유국의 위치에 올랐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2020년까지 35~8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정과 최소 동북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또한 보유 중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한층 진보한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중국이 외교적인 압력을 가해 핵실험을 중단시키더라도 기술 역량의 발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미국이 북한보다 월등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 자체에 중대한 함의가 있고, 주변국이 북한의 선제 타격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관련

기술을 언제든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평안북도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의 최신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실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책

진 징이 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학과 국제정치학 교수: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령 유일 지도 체제의 확립과 보위이며, 북한의 모든 행위는 정권 보위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된다.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와 군사 발전의 이른바 ‘병진’을 통한 강성대국의 건설인데, 경제 건설의 중요한 부분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체제 보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 개혁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 김정은은 김정일 생전 20년간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했던 북미 관계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남북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북미 관계에 진전이 많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추후 행보에 중요한 세 가지 대외 변수는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상정, 한미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나, 셋 모두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흡수통일 정책 표명인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대박 담론 등에 실망한 북한은 남한과의 협력 또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북한은 정권 보위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에 실패하여 당분간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유지하며 한·미 공동의 북한 내 급변 사태 촉진 기조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 내의 사회적인 변화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좌교수: 급작스러운 붕괴와 흡수 통일을 경험한 동독 출신으로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평양에 가보면 20년 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오늘날 평양에는 휴대전화기와 태블릿 컴퓨터를 보유하고, 외식을 즐기며 과시성 소비를 마다치 않는 신중산층이 생겨났다. 한편 부의 양극화 또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에 전에 없던 사회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김정은의 지도력에 관한 확실한 점은 그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그러나 개혁 개방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앞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이러한 결단을 내린다면 김정은의 북한은 덩샤오핑의 중국이나 박정희의 한국 중간쯤 되는 개발 모델을 택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 경제의 발전 상황과 병진정책의 타당성 평가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북한의 최우선 경제 문제였던 식량 수급은 90년대 이후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며, 이는 박봉주 내각이 주도한 개혁인 포진 담당제의 성공과 비료 생산성의 향상에 기인한다. 물가와 환율 역시 안정세이며, 북한의 경제적인 상태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의 병진정책 성공 여부는 북한의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남북 관계, 북·중 관계 등의 대외 환경에 의해 제한된다. 대외적인 군사 긴장이 유지될 경우 북한은 병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자원 배분을 줄이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핵무장이 재래식 분쟁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좌교수: 북한의 병진정책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도 경제와 군사를 필요에 따라 달리 강조하는 유동적인 노선을 취해 왔다. 김정은 집권 후 증가한 대형 건설사업(스키장 건설 등) 지출이 막대한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북핵 문제와 남·북·미·중의 4자 관계

진 징이 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학과 국제정치학 교수: 북·중 관계는 핵 문제로 냉각되었으나, 중국의 전통적인 친북한 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오랜 ‘핵 게임’에 기인하며, 북핵 문제의 해결에 중국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큰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것은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핵 문제의 발단은 북·미 간의 갈등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택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재촉하게 되는 북·중 갈등으로 비화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북 관계 역할을 미뤄서는 안 되며, 특히 한국이 미국에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에 북핵이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 평등한 관계로 북한을 대하며 성의를 보여야 신뢰가 생길 것이다. 김정일이 한미 군사훈련 중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약자이자 빈자의 입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한미 군사훈련 등을 통해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동시에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신(新) 아시아 실현을 위한 지역 협력과 중견국 외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교역 및 인적 교류를 비롯한 경제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적 자원과 첨단 기술, 고유문화와 같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패러독스에서 벗어나 이 지역의 발전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신 아시아 실현을 위한 지역협력과 중견국 외교' 세션에서는 △동아시아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의 촉진자·매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중견국의 지역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북한 비핵화 이전에 안보 위협 중식이 선행되어야 함
-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보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 한국 정부의 흡수 통일 의사 표명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약자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평등하고 성의 있는 대북 관계 추진이 절실함

사회

이동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교수

패널

이와타니 시게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진찬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 학부 교수

신성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 부장

피터 트러스웰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

강선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교수

정리

황선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와타니 시게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한·중·일 3국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에서 매우 낮은 협력 수준을 보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상하는 국가들과 전통적 강국들 사이의 세력 변화 속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영토 문제·역사 인식 차이·민족주의 부상 등이 협력의 지속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중·일 3국이 새로운 아시아 구현을 위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과 유사한 동북아 지역에 맞는 신뢰구축조치(CBMs)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3국 간 청년층·언론인·역사교사 등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역사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 사회 문화적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중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한국이 OSCE와 같은 협력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찬룡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현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급국가인 일본, EU,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 발전이 둔화하고 있으며 소득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국내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불균형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견 국가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대외전략을 보면, 중견국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국은 강대국, EU, 개도국, 다자 협력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자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터키 같은 국가들과는 협력해 나갈 여지를 갖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호주 같은 아시아 내 많은 중견국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견 국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역의 안정성을 위해 중견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중견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중견국들이 모든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 중 어느 한 국가와 갈등 관계에 놓인다면, 중간자의 역할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중견국들이 지역 차원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글로벌 차원으로 시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견국 협력체(MIKTA,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같은 협의체를 통해 중견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 부장: 현재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아시아 패러독스로 표현되고 있다. 협력이 활성화한 경제 분야와 달리 정치·안보적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 협력과 신뢰 외교를 통해 이와 같은 불균형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기후 변화 등 해결 가능성이 높은 연성 이슈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평화를 위한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단계적으로 협력을 발전시킨 결과, 현재의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협력체가 구축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역시 현재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 틀 내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45년 아인슈타인이 세계 평화를 위해 거대 단일 정부를 제안했던 것과 같이 평화로운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유럽과 같이 더욱 큰 다자적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MIKTA 같은 협의체에 참여 경험은 다자협력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은 약 10년 후에는 통일을 완성하고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반도의 통일은 새로운 아시아 건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터 트러스웰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 호주의 입장에서 아시아는 경제 교역뿐만 아니라 안보, 해상로 등 다각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한국과는 교역 규모, 2+2 협력, FTA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호주는 중견국 외교 차원에서도 협력하고 있는데, 중견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중견 국가(Middle Powers), 건설적 국가(Constructive Powers)와 같이 다양하지만, 혼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어도 모이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MIKTA는 2013년 9월 UN총회를 계기로 출범해 현재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는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점을 지닌 국가들의 비공식 협의체로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 결국에는 정치·안보 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MIKTA 차원에서도 경제 이슈를 더욱 깊게 다루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견국 외교는 동아시아의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동아시아 관계에서 MIKTA의 기여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함께 역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양자 관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 다자 관계가 양자 관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역시 중요한 흐름이다. 정기적으로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상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중견국 외교는 다자 협력의 틀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MIKTA 국가 중 아시아 국가인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통상, 금융, 기후 변화, 재난 구호, 에너지와 같은 초국가적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습관을 정착시키는 촉매제로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협력이 전통적 안보 위협을 전면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역내 국가 간 상호 이해를 통해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MIKTA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양 경제협력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G20 틀 내에서도 G7과 브릭스(BRICS) 국가 간 중간자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자적 역할은 다시 동북아 안정으로 환원되어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리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특징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전략적 강점을 찾을 때 아시아가 글로벌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MIKTA와 같이 역 내외를 아우르는 중견국 협력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안정과 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김연정 존스홉킨스대 학생: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답변] 이동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었을 때 한국은 중견국으로서의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이 과도한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변국들에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중견국을 위한 최상의 환경은 국가 간 관계가 협력적일 때인지, 아니면 적대적일 때인지, 혹은 혼합적 상황인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답변] 피터 트러스웰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 중견국은 우선 공통의 쟁점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이 중요하다. 협력적 환경이 구성되었던 캄보디아와 동티모르에서 중견국의 기여가 컸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경험만을 갖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국제 환경이 무척 협력적이면 중간자의 역할이 불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대립적이어도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중견국들은 이슈별로 접근해야 역할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 동티모르 대사관 직원: 중견국들은 지역과 이슈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견국 간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답변] 강선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MIKTA는 지역 기구도 배타적 블록도 아니며 참여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국들이 이슈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는다면 좋겠지만,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외교관라운드테이블

신뢰정치와 한반도: 주한 주요국 대사들로부터 듣는다

제주평화연구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정치는,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새롭고 중요한 시도이다. 이 세션은 주요 국가 대사들로부터 지난 1년 남짓 박근혜 정부의 신뢰정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신뢰정치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여론 주도층의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인식 차이 특히 역사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혀 나가는 한편, 유럽의 OSCE와 같은 아시아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해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배양·유지해야 함
- 동아시아 미래 비전 창출을 위해서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나, 지리적 배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강점을 찾아 글로벌 번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주변국으로부터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근간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므로, 이를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 협력체 구축으로 발전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다자 협력 틀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습관과 협력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이므로, 더 적극적으로 MIKTA에 참여해 인도네시아, 터키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의 촉매자, 건설적 기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사회

신희석 아시아태평양정책연구원 이사장

기조연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토론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도고 가즈히코 일본 시즈오카현 대외관계 보좌관

정리

김태현 동아시아재단 펠로우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한국 외교는 냉전 이래 가장 복잡한 상황 속에 존재한다. 냉전기에는 진영 논리만 따르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한 문제에도 다양한 솔루션과 고차원적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 외교가 당면한 문제들은 첫째 중국의 부상, 둘째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셋째 러시아의 강성화와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2대 경제국이며,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했다. 이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도광양晦(韜光養晦)가 유소작위(有所作爲)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하여 시진핑은 ‘새로운 강대국 관계’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지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도모하고, CICA를 아시아의 중요한 안보 체제로

만들려 하며, 러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의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중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이며, 중요한 무역 상대이자 중요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와 시진핑 모두와 관계를 증진했고 한·미, 한·중 관계가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강해졌다. 물론 한·미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를 위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갖는 어려움이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충돌하는지 조화되는지가 한국의 대외정책을 정하는 핵심일 것이다.

둘째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이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역사를 다시 쓰고 전후 질서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기에 매우 큰 문제다. 한 독일인은 독일의 정상 상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 역설한 바 있다. 일본도 진심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비로소 정상이 될 수 있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먼저 이웃국가들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약화시킨다. 헤이그 핵안보정상회담 때의 한·미·일 삼국정상회담이 있었고, 지난 4월 아시아 순방 당시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했으나 아직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미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로 이 지역에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이 국장급 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은 일본의 진지한 태도를 바라며 선의를 가지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 문제. 신 지도부가 양국에 출범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다. 2차례에 걸친 한·러 정상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 그리고 푸틴의 구상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우려가 존재한다.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 받을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러시아는 신뢰정치 추구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파트너이다. 대외정책이 덜 적대적이길 기대하고 우크라이나 선거가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단결된 목소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추가 핵실험, 탄도 미사일 발사의 우려가 있다. 윤병세 장관은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발 시 유엔안보리 및 개별 국가의 제재가 실현될 것이다. 냉전 붕괴 20년인 지금 한반도가

다시 전환점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말했고 드레스덴에서 평화 통일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동아시아의 질서는 복잡하다. 민족주의와 권력 정치가 부상하고 있다. 유럽의 19세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는 이 지역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번영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번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다. 박 대통령의 신뢰 정책을 통해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달성해야 한다.

신뢰정치의 두 가지 방향은 첫 번째,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한 평화통일이며, 두 번째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통한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결이다. 먼저 연성 문제에서 시작해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위의 네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통일을 이룩하길 기대한다. 드레스덴에서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북한은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 하고 거절하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야 하며 우리는 계속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루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독일 정부와 독일 국민은 박근혜의 신뢰정치를 반기고 있다. 신뢰정치가 새로운 남북 관계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신뢰 정책은 독일의 동방정책(오스트 폴리틱)과 비슷하다. 60년대 동방정책의 결과처럼 남북한이 화해를 이뤘다면 좋겠다.

독일의 경우, 다자 협력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자간 프로세스의 출발점은 소련에서 신유럽 안보 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토대로 동유럽과 서유럽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런 의지를 동아시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뢰정치가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서독과 동독, 양자 관계를 보면 정권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무역을 했다. 동독은 소련이 지지하기 때문에 정권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북한은 붕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가 어렵다. 이에 대해 동독의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새로운 남북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드레스덴 연설의 철학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남북 주민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일회적인 것이 아닌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핵심이라 생각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경제 제재를 볼 때 긴밀한 상호 작용이 굉장히 어렵다. 또 북한 정권의 반응을 보면 체제 전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정권 교체도 흡수도 아닌, 순수한 관계 발전이라는 것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독일이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황은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문제이다. 첫 번째로 북한의 핵실험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0km 내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시베리아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준다.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 발전을 통한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

두 번째로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으며 북한의 모든 안보리 결의안 준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을 촉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이 군사동맹 강화나 구축에 이용되는 것은 반대한다.

세 번째로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강압적 해결은 반대한다. 아시아에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 새로운 안보 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갈등은 외교적이고 정치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의 이해를 존중해야 한다. 안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로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한반도 관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의심이 없으며, 러시아는 한반도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통일을 지지한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7,500만 명의 통일 국가는 이웃 국가인 러시아에게 바람직하다. 러시아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의도도 없고, 통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의향이 없다. 하지만 방관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3자 간 경제 프로젝트의 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하나는 트랜스 시베리아 횡단, 한반도 횡단 철도 관련이며, 두 번째는 천연가스 공급이며, 마지막은 극동 지역에서 한반도로의 전력 공급이다. 이에 대해 남북 모두가 지지한 바 있다. 모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며 한반도의 안정, 남북 관계 개선, 북한의 개방에도 기여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

도고 가즈히코 일본 시즈오카현 대외관계 보좌관: 아베 총리는 전후주의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수동적 평화주의, 전후 민주주의, 지난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상징적인 문제는 위안부, 야스쿠니 문제 등이 있다. 이들은 국내 심리와, 국제 심리 문제가 얽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방문은 외교적 재앙을 가져왔다. 중국의 강경론자에게는 일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고, 한국인과 미국인은 분노했다. 이후 고노 담화 수정의 의지를 보였고, 미국이 개입해 고노 담화 수정을 철회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스쿠니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천황도 야스쿠니에 안 간다. 다른 국가 정상도 방문할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

한·일 문제에서 양자가 모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인의 일반 정서는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높다. 한국이 민주화, 경제적 성장, 문화적 성장을 이룩했다고 본다. 성공하면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양쪽이 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어제 일본과 북한이 합의했다. 놀라운 일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사 착수만으로도 제재가 해제된다. 이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신뢰가 박근혜 대통령이 갖는 대북 정책과 유사하다. 대북 정책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일본의 대북 정책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서로 공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정책으로의 전이를 기대한다.

[질문] 수하오 중국외교대학교 교수: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한·중을 포함한 한반도의 다른 관계들이 한데 아우러져서 새로운 아시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관계도 중요한 것 아닌가? 지금 한국은 신뢰정치로 장기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답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도 중요하며, 경제 분야에서 지난 몇 년간 성장해왔다. 다른 분야에서의 관계 성숙도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당분간 근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의 병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중 관계가 강화되면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화에 관한 모든 기여를 기대한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동북아 평화 안정은 러시아 외교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푸틴

대통령의 동방 정책은 그 일환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 적도 있다. 3자 경제 협력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질문]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5.24조치와 같은 제재조치가 남북 간 벽을 단아놓은 것 같다. 나진-하산프로젝트가 이런 장벽에 봉착하였다. 조정되지 않으면 진전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한 생각이 궁금하다.

[답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나진-하산프로젝트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UN 제재와 무관하다. 드레스덴 제안에 3대 제안 있다. 경제 제재 조치와 상관없이 시행 가능하다. 북한의 진실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질문] 윤서영 JTBC 기자: 한반도 신뢰정치에서 주변 국가와의 공존은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과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합의라는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지, 공조 체제 균열이 아닌지 궁금하다.

[답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기에 북·일 간 합의 텍스트를 추후에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다.

도고 가즈히코 일본 시즈오카현 대외관계 보좌관: 북·일 간 대화 선언은 UN 결의안 위반이 아니다. 양자 제재의 해제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제재 해제가 결의안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 지난 독일 통일의 마지막 2년을 보면, 대사님 말씀과는 다른 적극적인 정권 교체 접근 방식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동북아와 유럽은 다르다. 독일은 큰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또 소련은 쇠퇴하고 있었으나, 지금 중국은 부상하고 있다. 상당히 다른 환경이다. 독일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답변]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동독이 통일을 결정한 것이고, 서독이 결정하지 않았다. 서독의 콜 총리는 10대 강령 발표했는데, 여기엔 통일이 없었다. 동독 의회에서 총선을 통해

통일을 결의한 것이다. 서독은 정권 교체를 의제로 내놓지 않았고, 면밀한 협력, 인적 교류를 통한 화해가 서독의 입장이었다.

[질문] 카네기재단 소속 연구자: 동방 정책의 통일에 대한 영향이 궁금하다.

[답변]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동방 정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리드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독일의 새로운 안보에 대한 구상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개진했다. 물론 미국과 나토가 있었지만, 부족하다 생각하고 독일이 스스로 추진해서 성과를 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한·일 관계에서 양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경색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낙관하고 있다. 탈북여성이 말하길 주체사상은 이미 죽었으며, 장마당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장마당 세대가 북한을 밑에서부터 바뀌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보고 한반도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것을 알았다. 나도 외교부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신뢰정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독일은 20년에 걸쳐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신뢰정치를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모든 분이 신뢰 구축 프로세스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야말로 매년 냉전의 잔재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모든 노력을 모아서 신뢰정치, 신뢰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과제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핵무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열정적으로 한 걸음 나갈 필요가 있다.

도고 가즈히코 일본 시즈오카현 대외관계 보좌관: 러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크림 반도는 러시아에게 의미가 크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나 우크라이나를 하나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을 기대한다. 아시아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와 크림의 모든 일은 전체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에 중·러 정상 간 합의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앞으로 일·러 관계의 개선도 기대한다.

한·중·일 협력과 한국의 ODA 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동아시아 평화 질서 구축에 있어서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구축하는 등 3자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세션은 한국 ODA 정책의 발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한 3국 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한반도가 직면한 네 가지 어려움을 냉전식 진영 논리가 아닌 신뢰 구축을 통한 상생적 외교를 통해 극복해 나아가야 함.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을 달성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상생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음. 이를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속과 동북아 지역 내 안보 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며 한국의 주도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함
-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나 양국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동북아 지역 내 신뢰 외교 파트너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화시켜 나아가야 함
- 북한이 현재 가진 신뢰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독의 실제 경험을 설득력 있게 전해야 할 것이며, 비록 현재 성과가 없더라도 신뢰정치를 지속해 나아가야 함

개회사 및 사회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기조연설

두정수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발표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용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손희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석준 동아대학교 교수

정리

박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은 2000년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한 이래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ODA 총액이 7억 3,101만 달러에서 2013년 18억 901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의 ODA 추진 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정점으로 외교부(무상원조, 40%)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유상원조, 60%)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유기적 협의체계(18개 부처)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EDCF법, KOICA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3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70%를 차지하는 양자 원조와 30%를 차지하는 다자 원조로 이뤄져 있으나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계획에서 양자, 다자 비중을 30 대 70

비중으로 바꿀 것이다. 다자 원조는 취약국, 인도 지원, 민관 협력, 다자 협력, 난민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 G20 개발그룹회의(DWG), UN 개발기구와 연계하여 글로벌 아젠다 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ODA를 통한 기반 조성 및 연계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등 주요 UN개발기구와 협력 강화 등 대북한 국제 개발 협력 추진 기반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ODA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1.5트랙 접근을 바탕으로 대북 협력, 환경, 아시아 번영 확산, 재난 대응, 동북아 평화 구상을 주된 협력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중·일 ODA는 상호 상이한 개발 목표 및 정책으로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은 한·중·일 ODA협력을 위해 재난 대응,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에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공동의 이익, 비정치적, 점진적 추진, 다층적 접근(정부 간, 비정부 간 등)이 바람직하다.

유용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중·일 3국의 국제적 위상은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은 역사 및 영토 문제, 안보질서 문제로 인한 갈등 요인이 상존하나, 3국은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2011년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설치한 바 있다. TCS는 지역 평화와 복리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대단히 높아 UN 분담금(2013년) 총예산의 18%, 평화유지군 분담금 총예산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외 원조를 점차 늘려 189억 달러 규모(2013년)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은 정부 및 민간 부문 협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한국 방문객 비중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58.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TCS는 정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17개 분야, 58개 정부 간 협의회를 토대로 하고 있다. 현재 TCS는 3국 간 의사소통과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손혁상 경희대학교 교수: 발표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한·중·일 3국은 이질성이 대단히 크다. 역사, 국력 등의 차이가 대단히 큰데 협력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3국의 전략적 관계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있으나 관계의 보완성을 지니는 것이 개발 협력이며, 대단히 유용하다. 3국이 각기 다른 특수성 모델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한국은 재난뿐 아니라 분쟁국(post-Conflict) 재건 및 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도 협력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임석준 동아대학교 교수: 한국의 개발공헌지수(CDI)는 OECD 국가 27개국 중 27위, 일본은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상호 독자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 지역 대학생 봉사단 파견 등 민간 차원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 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3자 협력은 양자 협력과 다자 협력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중·일 사이에서 양자 협력은 국력 규모에서 효율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3자 협력이 효과적이다.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최근 동북아 정치 역학은 북·일 관계의 변화 등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치를 제기하면서 일본을 제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ODA 협력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한국의 외교적 득실을 보다 철저히 계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역할을 좀 더 유인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한국의 ODA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 규모의 확대, 효과성 제고, 투명성 확보, 파트너십, 정책 능력 제고, 집행 능력 제고, 현장화 강화
- 한·중·일 개발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일 정책협의회, 한·중 정책대화를 축으로 한·중·일 TCS 기능 효율화
- 한·중·일 ODA의 중점은 재난 대응, 환경 협력이 중요하며,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도 기여할 것임
- TCS의 발전 과제는 첫째, 갈등 사안인 역사, 영토, 한·미·일 동맹과 중국 간의 대항 구조, 중국의 항공 방호 구역 설정 극복, 둘째, 국민의 이해 제고와 지지 기반 강화 필요, 셋째, 한·중·일 협력 체계에 몽골, 북한 등 참여국 확대, 넷째,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협력체와의 연계성 확보 필요

동북아 화해와 통합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동 세션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주요학자들이 모여 동북아 지역 통합 흐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한편, 역사 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동북아 화해와 통합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회

신기욱 스탠포드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

토론

부핑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역사연구소 교수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하타노 스미오 쓰쿠바대학 명예 교수

정리

코야마 케이코 TCS 연구원

부핑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역사연구소 교수: 한·중·일 3국 공동 역사교과서 등 3국 역사학자들의 긍정적인 노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학자들이 공동 역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술 연구에서 가장 큰 원칙은 단번에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역사 이슈에서 각기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학자들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근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의 본질과 같은 근본적 이슈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역사적 이슈는 정치 외교, 국민 정서, 학술 연구 세 가지 측면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격변하는 정치 이슈와 국민 정서로 인해 학술 연구의 결과는 정치 외교의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각국 국민 사이에 정서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가 극적인 변화를 겪는 지금은 19세기

중반과 달리 동아시아 각국이 평화 공동체를 건설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한·중·일 사이에 빚어지는 높은 긴장감의 원인으로 다음 네 가지 전선을 들 수 있다. 1) 전략 이행과 연관된 지정학적 분쟁, 2) 일본 정부의 역사수정주의로 인한 역사적 분쟁, 3) 영토 분쟁으로 인한 충돌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 분쟁, 4) 내셔널리즘의 창궐로 인한 정서적 분쟁 등이다.

지정학적 충돌과 관련해서 중국·미국 정부 간 전략적 균형으로 3국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만, 3국이 지역 통합을 더욱 원활히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전략적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본 관점의 역사수정주의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수정주의는 일본의 평화헌법 문제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한국 또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편,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분쟁, 한·일 간의 독도/다케시마 분쟁 등 육상 및 해상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국 간에 대륙붕 공동 개발이나 임시 어업협정 등 윈-윈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 영토 분쟁에 대처할 지역 내 협조 프레임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충돌에 관련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내셔널리즘에 기대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증오와 의혹의 악순환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타노 스미오 쓰쿠바대학 명예교수: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통합에 대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학술적 차원의 논쟁이 소위 '역사에 관한 국내 문제(Domestic historical issues)'라 불리는 각국의 국가적 차원의 논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 일본이 근대 일본의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토대로 역사적 논평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논점은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관련성이다. 3국 사이의 역사 연구에 차이가 있다. 일본은 역사를 학술 주제로 생각하여 역사 교육이 정부의 견해를 표방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정의롭게 훈육하는 도덕 수양의 도구라는 생각한다. 세 번째로,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에 관한 문서들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제안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화해를 촉구하기 위해 외부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미국 등 제3국의 학자들이 참여하기를 권고하며,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이 지역 화해에 기반이 될 것이다.

[질문] 제주대학교 소속: 태평양 전쟁의 원인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관점에 대하여 3국 사이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가?

[답변] 부평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역사연구소 교수: 중·일 공동 역사 연구에 관련하여 우리는 16개 주제를 세워놓았다. 중국과 일본의 발견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쉬운 것이다. 곧 이에 대한 단행본들을 출간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다면 참조해 주기 바란다.

[질문] 제주대학교 소속: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 해상관련, 법적 문제나 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답변] 하타노 스미오 쓰쿠바대학 명예교수: 태평양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 연구를 통해 중국 문제가 미일전쟁과 중일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즉, 무력 충돌로 이어진 1930년대의 분쟁이 태평양전쟁의 주요 원인이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 중이던 1945년에 일본이 이 도서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편입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합병한 것은 합법적이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이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연관지어 생각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 센카쿠 문제는 해당 영토의 법적 소유권 문제를 넘어 이러한 이슈에 연결된 역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역사적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는가에 따라 일본, 중국, 한국 사이에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 전쟁의 책임과 역사의 큰 흐름을 중시한다면, 이 영토 문제는 다른 역사적 이슈와 떨어뜨려 놓고 보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측면을 우선한다. 우리는 역사를 학문으로 바라보며 정부의 포지션은 영토 문제를 역사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질문] 연세대학교 소속: 좋은 역사는 질문에 열려 있다. 좋은 역사는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다. 좋은 역사는 또한 국가적 실수나 사고방식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 역사가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 일본 역사가들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중국 역사가들은 또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역사이다. 어떻게 이들 모두를 역사학적 컨센서스라는 단일한 최종 형태에 동의하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이러한 딜레마가 평상시의 연구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 여겨진다.

[답변] 부평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역사연구소 교수: 나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하나의 관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관점을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의 단일한 관점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전쟁의 본질, 식민 통치의 본질, 사과가 요구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등 이러한 근본적 이슈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근본적 이슈들에 대한 폭넓은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공동 연구를 할 뿐이며 단 하나의 관점만 찾는 것은 아니다.

[질문] 미국 대사관 소속: 동북아 3국과 다르게, 우리 교육부에는 교과서 승인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는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 생각한다. 하타노 교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었다. 나는 미국 교과서를 통해 동아시아 역사를 배웠다. 미국이나 유럽 학자들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를 고려해주면 좋겠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일본의 중요 담화 중 하나인 미야자와 담화라고 생각한다. 미야자와 담화를 통해 일본이 주변 국가들이 자국 역사를 저술하는 관점을 고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야자와 담화가 담고 있는 철학처럼 동북아 3국 모두가 이웃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는 없겠는가?

[답변]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나쁜 사실은 나쁜 법을 만든다. 나는 역사도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에는 3국 간에 불행한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불행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이해의 문제를 겪고 있다. 각기 다른 관점이 있다. 사실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이 다른 이해를 이끌어낸다.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미국 정부에 3국의 공동 역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화해와 통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합의된 관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3국 간의 화해는 몹시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공통의 관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에 이러한 전례가 있다. 동아시아 3국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질문] 일본 대학원생: 공동 교과서에 대한 질문이다. 공동 교과서 편찬에 성공한 독일과 프랑스를 봤을 때, 공동 교과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는가? 우리가 역사에 대하여 하나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동 역사 교과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하타노 스미오 쓰쿠바대학 명예교수: 내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1945년부터 외교 관계가 정상화된 시점까지의 역사 연구이다. 이는 곧 한·일 간에는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시기를, 중·일 간에는 1945년부터 1972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와 자료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우리는 3국 공동 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역사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학술 연구 결과는 정치 외교의 가이드라인과 각국 국민 사이의 정서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근간이 될 수 있음
- 지정학적 분쟁과 맞서기 위해 3국이 지역 통합 촉진에 적합한 더 나은 전략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해양 분쟁에 맞서기 위해, 대륙붕 공동 연구 또는 임시 어업협정 등 당사국들에 윈-윈 협상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정서적 분쟁과 관련해, 정치 지도자들은 내셔널리즘에 기대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야 함. 더하여 언론은 과장 또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증오와 의혹의 악순환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일본은 근대 일본의 전쟁과 식민 통치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 논평을 내놓을 필요가 있음
- 동북아 각국의 근현대사 관련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함
- 우리는 미국 등 제3국 학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하여야 함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협력

한국외교협회/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 협력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대 한국 및 대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동북아 협력은 정체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미·중 관계도 평탄하지만은 않다. 2015년에는 ASEAN Community가 발족할 예정으로 지역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한편 정치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의 미래를 전망하고 동아시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
이선진 前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토론
쌍하라 나 아우타야 꾀꾸똌 주한 태국 대사
도고 가즈히코 일본 시즈오카현 대외관계 보좌관
김경근 외교협회 부회장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이서향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리
마크 살바도르 이슬라 한-아세안센터 연구원

쌍하라 나 아우타야 꾀꾸똌 주한 태국 대사는 아세안(ASEAN) 공동체를 이루는 세 가지 주요 기둥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ASEAN 경제 공동체로, 경제적 번영을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끄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 ASEAN 정치·안보 공동체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과 대화 파트너에게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존 및 신규 안보 문제를 논하고 신뢰를 제고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 공동체로, ASEAN 국가 간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도모한다. 쌍하라 대사는 ASEAN 공동체가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5년이라는 목표 연도는 공동체의 성패를 판단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더욱 성숙된 ASEAN 공동체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ASEAN 공동체의 목표와 열망을 달성하는 데 있어 ASEAN 연계를 위한 주요 사항을 강조하며, ASEAN 대화 파트너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이에 덧붙여 신군부의 지휘하에 있는 태국의 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며 국가 질서가 지난 수개월 전보다 상황이 훨씬 호전되었다고 확신했다.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ASEAN 경제 공동체 발족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ASEAN 경제 공동체가 ASEAN 지역뿐 아니라 그 너머 지역에도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공동체는 계획대로 2015년에 첫발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중요성 못지않게 ASEAN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ASEAN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책임을 갖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문화적 공동체가 실현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 여성 역량 강화, 사회 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이루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문화적 공동체는 ASEAN의 정체성 및 정신을 세우는 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그는 ASEAN 경제 공동체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해 향후 미칠 영향을 논했고, ASEAN과 한국 간 관계의 중요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 가져올 이익과 기회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적 연계성을 제고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청년 세대 간 유대감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현재 발생하는 영토 및 해상 분쟁에 관해 포괄적이고 유용한 설명을 제공했다. 아시아 일부 국가와 연관된 해상 분쟁의 종류와 배경 및 원인을 설명하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기존 협력을 강조하고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진다면 영토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들이 단순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협력과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고 가즈히코 일본 시즈오카현 대외관계 보좌관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원칙을 공유했다. 그는 영토에 관한 세력 주장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 권력층은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당사자국 간의 물리적 분쟁을 피하고 지역 안정을 피하기 위해서 신뢰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국과 일본의

주요 영토 문제인 센카쿠 열도를 예로 들었다. 동시에 1978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설명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양국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논란이 되는 영토에 관해 대화를 개진했음을 설명했다.

김경근 외교협회 부회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더불어 전반적인 지역 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ASEAN+3는 서로 중첩되는 이슈를 갖고 있지만, 재난 관리, 금융 위기 관리 등 일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ASEAN 회원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더불어 동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파트너십에 관해 논했다. 김 부회장은 지역 협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ASEAN+3가 첫발을 떼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문] 중국외교학원 학생: ASEAN+3의 기능과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도고 가즈히코 보좌관: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용한 장치이다.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더욱 협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질문] 동티모르 대사: 세계화 및 통합의 시대에 왜 민족주의와 정체성 정치가 부상하는가? 새로운 역학 관계가 동아시아의 향후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답변] 이서항 교수: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와 정체성 정치가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인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경제적 이유인데, 개방 정치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영토 관련 주요 조항의 재검토

대한국제법학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ASEAN 공동체 및 중심 특징에 관한 인식 제고

- ASEAN 회원국의 국민과 더불어 대화 파트너는 ASEAN 공동체와 그 기반을 이루는 세 가지 중요 기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모두가 함께 ASEAN 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공동체가 가져다줄 이익을 활용해야 함. 인적 교류 및 연계성 또한 강조되어야 할 점임

ASEAN 연계성의 난제 해결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 ASEAN은 공동 번영 및 진보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로, ASEAN 회원국과 대화 파트너는 ASEAN 연계성이 마땅히 고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청년층의 역량 강화

- 미래의 리더로서 청년층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 번영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향후 연대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서로 소통하고 각국의 문화 및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마련되어야 함.

ASEAN 국가 및 한·중·일 3국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ASEAN 국가 및 한·중·일 3국에 관한 이슈는 다른 포럼 및 기구에서 여러 차례 다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포럼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동일한 이슈에 관해 각기 다른 포럼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함.

대화를 통한 평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더욱 많은 플랫폼 제공

- 동북아시아 지역의 분쟁은 다른 무엇보다도 역사적 배경, 민족주의적 입장 및 외부 방해 세력으로 인해 모호해진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분쟁을 겪는 국가 간에 신뢰를 쌓는 기초 단계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개방적인 토론과 실제 문제에 관한 인식으로 이어질 것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70년이 지났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2차 대전 종결 및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관련 국가 간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2차 대전 종결의 국제법적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주요 조항—특히 영토 관련 주요 조항—을 재검토하고 그 법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 및 발표

이창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존 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교수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정리

정세중 대한국제법학회 간사

존 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교수: 국제법상 국가가 영토를 영유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역사적 권원, 인접성, 선점, 할양 등이다. 한국이 참고할 만한 다양한 국제 판례 사례가 있는데, 팔마스 섬 사건을 비롯하여 ‘자국민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실효적 지배’로 인정한 Eastern Greenland 사건 등이다.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한국에 더 유리해 보인다.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라서 선점했다고 하는데, 무주지의 근거는 찾기 힘들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카이로 선언(일본이 태평양 섬으로부터 무관하다는 규정), 포츠담 선언(일본의 주권이 특정 섬에 제한된다는 규정)의 연관성도 살펴봐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언상 독도가 포함되지 않아, 그 규정이 열거 사항인지, 단순 예시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약 준비 과정과 다른 나라의 해석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국이 아닌데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생겨난다. 독도가 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장이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역사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일본에 너그러운 측면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은 일본을 우방국으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센카쿠 열도와 비교하면 독도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 않다. 센카쿠도 독도와 같이 무주지 주장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이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도 문제를 다룰 때, 한국과 일본은 1. 역사적 권원 2. 1905년 일본 점령의 유효성 3.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관점이 다르다. 여기에는 법적, 정치적 주장이 혼재되어 구분하기 힘들다. 국제법과 국제정치 영역이 근본적으로 그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영역은 그 관점에서 상충 중첩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영토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강한 제약’이 아닌 ‘유연한 평화’ 정책을 취함으로써 쌍무적 군사 관계 성격이 된 점, 둘째, 일본이 침략으로 획득한 섬의 범위가 넓어서, 그 영토 권원을 짧은 시간에 정하기는 어려웠던 점, 셋째, 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맥락에서, 당시 여러 동맹 세력이 존재하여 일본 영토에 포함되는 ‘작은 규모 섬’들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다.

국제 분쟁 해결 방법은 정치적, 또는 법률적 해결 방식이 있다. 법률적 해결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상정 자체가 불가하다. 정치적, 외교적 해결책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영유권 이슈는 당분간 현상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북아 영토 분쟁 양상은 비슷하다. 형식상 양자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관련되어 다자적 성격을 띤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ICJ 판례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다. 독도 문제도 이 조약에 기반을 뒀다 하더라도, 식민지 시대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독도의 역사적 권원과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 1952년 발표

이후 한국이 어떻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는지 등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이창위 교수께 질문 드린다. 국제법과 국제관계 연관성에 동의하지만, 독도와 다오위다오 쟁점 비교 과정에서 한·일 어업협정, 일본·대만 어업협정, 대만과의 협정도 포함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또 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은 승전국인지, 패전국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미에서 희생자인가?

한편, 1905년 포츠머스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할에 회의적이다. 미래 미국의 역할이 커지길 기대한다.

[질문]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위 교수께 질문한다. 국제 판결의 경계 획정 관련 최근 경향이 독도 문제에 시사하는 점은?

[답변]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양경계 획정 관련 사례들도 한국·일본 정부 간 적용에 차이는 없을 것이다. 울릉도와 오키 섬의 중간선을 그으면 독도가 한국 쪽에 위치하는데, 이것이 아마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한국이 희생자라는 건, 식민지 지배의 희생자라는 의미다. 대만이, 중국과 일본 어업협정 당사자라는 물음에는, 어업협정이 대만에 명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만·일본 협정을 체결하여 해결하고 있다.

[질문]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는 동아시아에 질서를 부여하므로 그 자체는 놀랍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나홍주: 러스크 서한은 거부된 것으로 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통합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되듯, 독도의 한국 주권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다고 본다.

[질문]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존 유 교수께 질문 드린다. 한국인들은 예외 없이

이 독도 쟁점이 식민지 시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영토 범위를 규정한 미국 측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영토 분쟁 쟁점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 프로세스 등은 아직 덜 확립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한국에 어떠한 함의 사항이 있는가?

[답변] 존 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교수: 조약은 기본적으로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게다가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서둘러 만든 측면이 있다. 의도적인 미해결 상태가 불만족스럽지만, 한국전쟁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조약은 무엇보다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틀을 제공한다.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질문]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미국의 입장은 모호함으로 일관했다. 센카쿠, 독도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가?

[답변] 존 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교수: 무주지 이론은 기본적으로 대륙 발견 시 적용되어 온 논리다. 이미 전부터 주변에 주권 국가가 존재하였는데, 아시아에서 무주지 이론이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한국 측이라면 그렇게 접근해보겠다. ICJ가 영토 분쟁을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무언가 역할을 한다면, 동맹 강화 목적에서일 것이며, 미국으로서도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토 포기 사항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1항은 독도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를 배제한다고도 보기 힘들
-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독도 문제는 물론 해양 경계 획정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임

고려인 이주 150년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재외동포재단

금년은 고려인 이주 1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18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는 고려인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이들과 함께 역내 평화와 한민족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고려인 이주 150년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였다.

사회
이규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발표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토론
김종한 외교부 재외동포과 과장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초빙교수
임재완 전남대학교 교수
김승력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전대완 외교부 본부대사
정리
김진규 고려대학교 교수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글로벌 코리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만 우리 한민족의 이산과 분산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글로벌리즘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하여 한민족 네트워크나 우리 안의 다문화사회 및 복잡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 통합과 통일시대를 바라보며 새롭게 등장하는 북한 이주민들의 상황과 거주 양상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재외동포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가 다분히 피상적이고 소수 전문가 그룹에 의한 상투적인 연구 결과의 반복 등은 이제는 극복되어야 하며, 현장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에 재단의 지원이 집중되었으면 한다.

김중환 외교부 재외동포과 과장: 정부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말하고자 한다. 2010년 <고려인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려인 동포사회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러시아 내 무국적 고려인 문제나 국내 거주 고려인의 열악한 거주 환경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약화된 한민족 정체성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고려인 사회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모국과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다각화하며,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의 지원 강화와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의 취업 여건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문가라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 양쪽에서 마치 '졸탁동시(啐啄同時)'처럼 서로에 대한 쌍방향 관심의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 한·러 관계나 고려인 사회 문제 관련 전문가들만의 논의나 의견 수렴이 아닌 소통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외동포 정책이 절실하며, 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장기적 비전의 수립과 공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초빙교수: 고려인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탈향, 이주, 강제 이주, 징용 등의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고려인과 재외동포 문제를 바라봐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고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재러 동포 등과 같은 단어로 대체해야 함을 주장한다. 21세기 글로벌리즘과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나 중앙아시아계 러시아인의 국내 결혼 이주와 그 자녀 문제, 혹은 한국계 러시아인 음유시인 울리 김과 고려인 출신 벨라루스 반정부 청년운동가 안드레이 김, 한국인 작가 이광수와 고려인 작가 계봉우의 정의 문제 등 20세기의 정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모순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새로운 평가와 이미지의 형성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대완 외교부 본부대사: 평생을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CIS지역 공관에서 근무하면서 고려인 동포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가운데 느낀 바가 많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동포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가 20만 명에서 거의 15만 명까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려인 동포사회의 축소 또는 붕괴 현상을 막으려면 현지의 고려인과 국내에서 건너간 '신고려인', 그리고 현지 민족이 3각으로 협력하여 한국국제학교를 설립하여 후대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일대 개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럴 가능성과 토양이 충분히 준비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국제학교의 성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주재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고려인 동포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네트워킹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다. 고려인 1세대의 모국 방문 추진, 우리 한복 문화의 보급과 지원, 신·구 고려인 운동회 개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면 분명히 서로 간의 이질감 극복과 정체성 회복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임채완 전남대학교 교수: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광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고려인 동포사회의 발전 방향을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제도적, 법적 지원의 필요성과 그 실태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재단과 정부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겪은 상위 법령의 부재에서 비롯한 문제와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사회를 돕는 방안이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중앙아시아 거주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 정책과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 정책의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법과 제도의 제정 및 시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귀환동포 지원법>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고려인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 제도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여 귀환 동포가 국내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삶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김승력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사회의 현실과 그들의 고단한 삶의 여건을 고려인지원 시민단체 '너머'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은

대부분 H2(방문취업)이나 F4(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3D 산업현장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 노동하고 있다. 이 비자의 현실적 제약과 독소조항 때문에 많은 고려인이 만료기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돌아갈 곳 없이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유 왕래 허가와 영주권 취득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언어와 경제, 정체성 문제로 고통받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라는 이중의 부정적 자기 정체성에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려인지원특별법과 귀환동포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하여 단계적인 자유 왕래의 허가와 실질적인 노동권의 보장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민관합동 고려인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귀환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정착과 체류를 도와야 할 것이다.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재외동포 문제는 정부나 재단이 전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을 다루는 문제이기에 섬세하고 따뜻하게 접근해야 한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고려인이라는 명칭을 21세기 상황에 맞게 새롭게 생각해보고, 재러 동포나 재러 한인 등으로 재정립하자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재단에서도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린다. 추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오늘 다하지 못한 청중의 질의와 응답을 비롯한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고려인의 날' 제정, '고려인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올해 9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사할린 한인 동포 영주귀국 사업 이후의 제반 문제점 해결과 사할린 한인 동포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
-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의 비자 문제 해결과 모국 자유 왕래 및 모국에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요구됨
- 국내의 다른 국가 이민자와 고려인 귀환 동포와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공존 전략 수립 및 한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교육이 절실함
- 재외동포 연구자와 재외동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재외동포 지도자 간의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여 역량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전체가 모이는 대회나 포럼을 조직하고 시행할 것을 건의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의의와 적용 대상

대한국제법학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의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양국 간 서로 다른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개별적 청구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최근 한국과 중국의 국내 법원에서 2차 대전 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국내 소송이 제기되어 다시 한 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국제적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회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발표

찰스 노키 미국 메인 로스쿨 교수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토론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박현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겸임교수

정리

정세종 대한국제법학회 간사

찰스 노키 미국 메인 로스쿨 교수: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에도 강제노동 보상, 위안부 보상 문제 등 각종 청구권 관련 문제가 남아 있다.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법적 수단이 무슨 소용인가? 청구권 협정 2조 1항에서는 국민의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조약 용어, 준비 문서 등 검토가 필요하다. 단지 텍스트만 보고 협정의 맥락을 읽지 않는다면,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최대한 당사자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개인적인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문화재 반환 문제도 청구권 문제로써 다뤄져야 한다.

청구권 제기는 금전 보상 요구가 아닌, 인간 존엄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한 예로, '위안부'라는 말보다 '성 노예'라는 말을 써야 한다. 이 말은 인류에 대한 범죄 목록이나 각종 조약, 의정서, 협약에 나온다. UN 인권이사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UN에 전시 성 노예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양자 간 문제가 아니다.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일본 정부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한다. 위안부 문제가 UN 인권이사회에 처음 상정되고, 미국에는 기림비가 건립될 것이다. 미 하원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 규범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새로운 아시아 설계를 위해 당사국 간 공동 이해를 설정하여 2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행한 과거의 짐을 짊어진 동아시아는 위안부, 난징 학살 전후 보상 문제, 사죄 요구, 문화재 반환, 독도, 센카쿠,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유연화 평화(soft peace)를 추구하였으며, 일본에는 관대한 조약이었다. 그와 함께 청구권 협정 문언 2조 1항에 '국민 간'이 포함되어 해석상 청구권 존재 여부를 두고 문제가 되었다.

2005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위안부·사할린·피폭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종결되었다고 하였다.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청구권 협약 제3조에 따라 정부가 분쟁 해결에 나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위헌이라고 했다. 나아가 2012년 한국대법원은 강제 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약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지, 아니면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적 포퓰리즘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적 접근만이 타당한지 또한 논의해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바탕 아래 국내 정치적 활용을 자제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도 필요하다.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너그러운 조항이라는 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 과거 역사를 평가의 차이라고 본다. 한국인은 일본 측 주요 인사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전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청구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 양국 간 더 우호 관계를 추구하고 법적 해결 방식을 넘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박현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역사적·정치적·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다. 우선,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밝힌 무라야마 담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1995년 일본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 둘째, 청구권 협약 2조 해석 문제의 충돌에 관해 근원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1965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 양 당사자에게 수용 가능할까? 도쿄 전법재판의 관대한 처벌, 전쟁 범죄 면죄부는 어쩌면 경제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었을까.

[질문] 도쿄 가즈히코 일본 시즈오카현 대외관계 보좌관·前 주 네덜란드 일본 대사: 발표자들이 고노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다.

[답변]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성을 띠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다루면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언급될 것이다.

[질문] 신성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장: 일본 대법원과 한국 대법원 판결이 충돌하는데, 국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해줄 가능성은 있는가? 또한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성은 없는가?

[답변] 찰스 노키 미국 메인 로스쿨 교수: 양국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과거 UN 인권위원회 맥두걸 보고서 사례 등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하여 UN 체제하에서 공식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한일 청구권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국제 사회 인권 문제로서 접근해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한일 청구권 협약에 따른 법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 방향 탐색이 필요

동아시아 지정학의 부활

세력 충돌의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2008년 촉발되어 전 세계를 휩쓴 금융 위기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의 군비 확산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 내 힘의 분배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가 간 군비 증강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일본의 정상국가화 등 동아시아 지역 내의 지정학적 사고의 부활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도 불러일으켰다. 본 세션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세계적 전문가 4인이 동아시아의 지정학 담론을 논쟁하였다.

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켄트 켈더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 연구센터 교수

정재호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윌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교 국제관계 및 인문학과 석좌교수·편집인

정리

김형준 동아시아재단 글로벌 아시아 펠로우

지정학의 의미와 부활 여부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정학은 나치 독일이 유럽 대륙을 침략할 때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인데, 나치 독일 팽창주의와의 연관성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정학적인 논의가 없었으나 최근에 다시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윌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교 국제관계 및 인문학과 석좌교수·편집인: 지정학에 대한 언급이 요새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세기의 경험처럼 지정학으로 인해 세계가 전쟁으로 치달을 것은 아니나 국제 정치에서 지정학의 역할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재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 미중관계프로그램 소장 ·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냉전 시대에는 양극체제가 각국의 개별적 행동을 억제했으나 냉전 종결 이후 지정학적인 경쟁이 재개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독자적인 행보로 지정학적인 담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정학과 상호의존론의 대립 혹은 공존

켄트 켈더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교수: 19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 군사 분쟁이 없었다는 역사를 보면 상호의존적인 역학이 이미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본다.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는 냉전 때와는 달리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고 강대국 간의 상호의존성이 향상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각국의 비정부단체에 의해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부분도 있다.

윌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교 국제관계 및 인문학과 석좌교수 · 편집인: 상호의존성과 상호협력은 순진하거나 이상주의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경제는 현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충분히 뿌리내렸기 때문에 중국이 현 체제를 훼손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베스트셀러를 보면 당시에도 유럽 강대국들의 경제 의존성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경제 통합이 진행되는 동시에 강대국 간의 라이벌 구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론 하나만으로 평화를 낙관할 수는 없다.

부상하는 중국의 대외정책 의도와 전략

윌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교 국제관계 및 인문학과 석좌교수 · 편집인: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 정면충돌을 택하는 대신에 사이버전 등 현 국제 체제를 저해할 비전통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재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 미중관계프로그램 소장 ·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중국이 분명한 대전략을 보유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특히 경제, 기술 등 복잡다단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영토 분쟁만 놓고 중국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도광양晦(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등 많은 전략적인 담론이 존재하나 이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켄트 켈더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교수: 미국은 11개 항모전단을 운용 중이나 중국은 최근에 첫 번째 항모를 시범 운용했다. 중국 위협론자들은 이러한 양국 간의 격차를 간과하는 것 같다.

일본의 전략과 아베 총리의 의도

켄트 켈더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교수: 일본의 현 상황은 1930년대와는 다르다. 정치 체제가 다르고 대공황 또한 없으며 군사력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정상국가화 행보의 시초인 센카쿠/다오위다오의 국유화가 아베 집권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아베는 총리 취임 초기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러시아, ASEAN 등 중국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지정학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비정부단체들이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로 아베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아베가 과거사나 영토 분쟁을 이슈화하면 할수록 스스로 패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인 추세에 대한 미국의 대응

윌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교 국제관계 및 인문학과 석좌교수 · 편집인: 미국이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국제 관계이며, 달리 말하자면 전 세계의 유럽연합(EU) 화를 원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참여해지는 국가 간의 지정학적인 대결을 원치 않으나, 20세기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도 안 된다는 점도 배웠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체제를 아시아에 정착시키면서 융기하는 중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주변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켄트 켈더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교수: 오바마 정부는 지정학적 이슈에 둔감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국제 정치에서 시장경제와 여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 미중관계프로그램 소장 ·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의 핵심은 재균형이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줄이지 않으면서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 부분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스스로를 국제 체제의 중심이라고 믿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장기적으로 평화적일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현재 사이버전과 우주전 등에서 격한 군사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령화가 동아시아 지정학에 끼치는 영향

켄트 켈더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교수: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중국에서도 조만간 고령화가 시작될 것이다. 고령화가 이들 국가 간의 경쟁을 더디게 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월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교 국제관계 및 인문학과 석좌교수 · 편집인: 무기 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현대전에서는 소총을 메고 전장에 뛰어든 젊은이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을 지원함으로써 실리콘밸리를 탄생시킨 사례를 교본 삼아 일본 군수산업의 첨단화와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중·일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재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 미중관계프로그램 소장 ·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본의 고령화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오래 살아남아 후세에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일 경쟁 완화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에서 우익 교과서 도입 비율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라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정학적 중요성

월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교 국제관계 및 인문학과 석좌교수 · 편집인: 지정학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중요한 실마리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하면 북핵이 야기한 일본의 무장과 그에 대한 중국, 한국의 대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천을 차단할 수 있다.

켄트 켈더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교수: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역할 또한 기대된다. 아베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북한과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러한 조짐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지정학적인 사고와 민족주의적인 감정의 부활을 경계해야 함
- 시민사회가 신중하고 상호협조적인 대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해야 함

2차 대전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미해결 사항 및 잔존 문제

대한국제법학회

2차 대전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과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종국적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현안을 검토하고 이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과 외국의 경험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해결 상황으로 남아 있는 현안들에 대한 종국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발표

로날드 베타우어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 객원학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조정현 국립외교원 조교수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대대학
교수

정리

정세종 대한국제법학회 간사

로날드 베타우어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 객원학자: 국제법상, 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청구권을 한 국가가 대신 행사하는 이른바 외교적 보호는, 오로지 그 국민의 소속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실제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또한 그 상대 국가는 타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결을 협상할 수도 있다. 여러 청구권이 얽혀 있을 때는 일괄 타결도 가능하다. 또는 특별협정으로 분쟁 해결 기구로 넘길 수도 있다.

미국법의 경우, 개인 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국민 청구권을 조약을 통해서나, 정부의 영향력으로 해결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다.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는 홀로코스트 소송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역 등을 한 피해자가 (미국 국민으로서) 독일 기업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독일 정부와 기업은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협상에는 정부, 민간 변호사, 기업, 시민 단체가 참여하였다. 청구권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해결 의지가 있다면, 기존 규범적 틀 밖에서 얼마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0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공동성명을 냈고, 이는 식민지 책임과 전후 보상 문제를 다루는 양자 간 토론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후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 나아가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식민 지배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상충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줄곧 식민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조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식민지 시기 청구권 문제도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되었다고 한다. 일본 법원은 2000년 이후 정치화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책임에 관한 사항은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은, 공동성명에도 드러나듯, 역사 회복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양국 지식인의 공동성명은 아시아판 2001년 더반 선언을 연상케 한다. 식민통치 폭력을 넘어서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질문] 조정현 국립외교원 조교수: 베타우어에게 질문한다. 국제법 맥락에서 미국에서 외교적 보호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줬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다. 또한, 홀로코스트 사례는 외교적 보호권의 범주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또한, 모호한 해석이나 정치적 악용 우려는 있겠지만, 새로운 해결책으로써 통상적 법적 틀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 해결에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다만, 한국민의 감정에서 볼 때, 협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 일본에서 응하지 않을 텐데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가?

[답변] 로날드 베타우어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 객원학자: 한국 판결에 대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 정부가 금지하고 있다면 외교적 보호에 미래는 없다. 국제법이 잘 돼도 국내법이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시사점은, 한국은 국내 소송으로 압박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뭉쳐서 다른 방식으로 압력을 넣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질문]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외교적 보호권이 개인 보호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국제법상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국가가 폭넓은 재량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지 결정한다. 보상 문제를 1965년 교섭 과정에서 논의했지만, 위안부 보상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2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은 의미가 있다. 한편, 심각한 인권 침해로 제소받은 국가는 면제받지 못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국내적으로만 국가 책임 면제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법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며, 충분한 해결에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답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아마 대법원은 강제징용 때와 같은 결정 내릴 것이다

[질문] 김부찬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에 따라, 미국 법원이 보편관할권으로써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의 법적 구제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답변] 로날드 베타우어 미국 조지 워싱턴 로스쿨 객원학자: 판례 추세는, 외국인불법행위법은 협소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미국 법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질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홀로코스트 사건은 한국 식민지 사건과 다른 맥락 아닌가?

[답변] 로날드 베타우어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 객원학자: 물론 다르다. 한·일 간 문제에 곧바로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문제도 다양한 측면이 있으므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2차 세계대전 후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외교/사법적 해결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함
-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다양한 노력이 전후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시아의 평화 문제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

일본 타마대학교/인간개발연구원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외교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떼어놓고 한 분야만 들여다보려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다면적인 양상과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로서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경제의 질서를 중심부터 흔들고 있다. 2015년이면 정상화 50년을 맞는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모델로서, 또한 경제협력과 안보 공조 차원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일 / 중·일 등 동북아의 대립구도는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면서 아시아 정세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위기에 빠진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해안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발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문부과학성 장관

토론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쿄토쿠 테쓰로 일본BE연구소 소장

가와이 아유무 (주)ONEWORLD 회장

정리

류하진 크레온 창의콘텐츠그룹 대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는 요즘 아시아 물결이 일고 있다. 미국과 함께 일본이 세계 질서를 이끌었다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관계와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에 관해 토론하겠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문부과학성 장관: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양국의 관계는 동아시아와 안전을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특히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한·일 관계는 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 집중화를 완화하면서 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데 핵심적이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한·일 관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시모무라 장관님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한·일 관계에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양국 간에 신뢰자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국가 간에 완전한 화해를 하고, 동질성을 높이고 이질성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분업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신뢰자산 구축이 시급하므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국들이 서로 갈등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중·소국들의 갈등은 더 심해진다. 양국이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정서적으로 양국이 진심으로 협심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제력과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국을 바라보는 데도 여유를 가지고 포용하면서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그 밖에도 동아시아 변영의 젓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서태평양 지역의 자유항로 확보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쿄토쿠 테쓰로 일본BE연구소 소장: 한·일 관계는 시차가 없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한·일 관계는 아시아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이슈를 떠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에는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이면서 광범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가와이 아유무 (주)ONEWORLD 회장: 아주 오래전에는 국가라는 단위가 없었다.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오히려 혈연이 더 중요했다. 이제 단순한 국가적 개념 차원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양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일본의 경제력과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강하다. 이러한 저력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의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참석자 발언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 있듯이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한·중·일은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의로 흐를 수 있다. 정치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중·일 FTA가 조속히 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탄: 한·중·일의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일 관계, 한·일 관계가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다루어진다. 최근에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렵지만, 시모무라 장관이 참여하는 교육, 환경, 스포츠, 과학 등의 교류 차원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모든 관계가 악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다케 요시키 Aflac Japan 최고고문: 중국, 한국, 일본은 아시아의 삼 형제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혈연관계라는 것은 대단한데, 실제 일본을 구성하는 많은 유전자는 한국인이나 중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다. 언어나 습관은 시대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있다면 더욱 성숙한 한·일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타마대학 교수: 현재 타마대학은 성균관대학교와 3년제 학생 교류를 하고 있다. 주로 한·중·일의 경영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다급해하고, 힘들어했지만 공부하며 배워갈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젊은이들의 지혜, 그러한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준다면 한·일 관계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교육을 비롯한 문화교류 확대,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 아시아는 2015년에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예정인데,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일본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과 중국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경제 발전을 달성해온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는 중국의 팽창 정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중국의 성장에 균형을 맞추고 견제할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아시아 평화에도 중요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신뢰자산 구축을 위해 완전한 화해, 동질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분업체계 완성 등이 절실함
- 대승적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력과 소프트파워를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함
- 양국 간에 포럼이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교육, 문화, 체육, 과학, 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중요함
- 한·일 관계는 아시아 내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고 견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함. 그것이 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함

제3장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



DISCUSSION

Carly FIORINA
Former President, Hewlett-Packard

Yoonsun CHO
Minist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JEJU FORUM

FORUM

JEJU FORUM

JEJU FORUM

Carly Fiorina

JEJU FORUM

특별세션 II

기업가 정신과 여성 리더십

한경비즈니스/제주평화연구원

칼리 피오리나 前 휴렛팩커드(HP) 회장은 미국 20대 기업 최초의 여성 CEO로 컴팩과 합병을 주도해 HP를 IT 업계 선두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1위에 6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HP 은퇴 후 세계 최대 현물 자산 단체인 Good360을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2009년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의원에 도전하기도 했다. 여성 인재 육성과 혁신, 기업가 정신,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칼리 피오리나 前 회장과 한국 여성 리더의 대담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여성 리더십'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사회
장혜원 동시통역사
발표
칼리 피오리나 前 HP 회장
대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정리
장승규 한경비즈니스 부장

칼리 피오리나 前 HP 회장: 리더란 모든 일의 순서를 바꾸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일깨워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리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사람은 안정을 추구해 변화에 저항하려고 하지만, 리더는 신속한 판단으로 무언가가 바뀔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 혁신 실패의 사례로 코닥을 들 수 있다. 비록 100년 역사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리더는 모호한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논란이 일었던 HP의 컴팩 인수는 모든 이의 이해를 받지는 못했지만 리더십이 발휘된 빠른 결정이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물꼬를 더 개발해 주는 사람이다.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소의 비서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하던 나에게 회사 상사가 "타이핑이나 전화받는 것 대신 일을 제대로 배워 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했고, 이 일을 계기로 비즈니스 세계에 정식으로 입문하게 됐다. 타인의 잠재성을 열어주고, 이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리더다. 성공한 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전통과 혁신,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 주주와 고객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인 만큼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도 리더십을 통해 가능하다.

[질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 차원에서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그럼에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것 같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답변] 칼리 피오리나 前 HP 회장: 한마디로 '리스크 테이킹'이다. 실수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우리 사회는 '기업가 정신은 원하지만, 실수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위대한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은 '실패란 없다. 다만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다.

우리가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선 가끔은 실수도 하고 넘어져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리더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실패는 치명적인 게 아니라고, 리스크를 얼마든지 짊어져도 된다고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질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당신은 통신이나 컴퓨터 등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나도 남자들이 대다수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여성이라서 중요한 일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여성이 남성 동료나 보스들과 소통하는 법이 있다.

[답변] 칼리 피오리나 前 HP 회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조직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동료들과 원만하게 잘 지냈음을 의미한다. 회사 내에서의 훌륭한 결과는 한 개인의 활약만으론 한계가 있다. 팀워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만약 어떤 조직 내에서 홍일점이라면 남자 동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도 예전에 통신 기업인 AT&T에 입사했을 때 동료들

대부분이 남자였고, 처음 고객을 만나러 간 곳은 야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춤을 추는 스트립 클럽이라 당황했던 적이 있다. 오히려 남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 스마트하다는 것은 여성이 가진 잠재력이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의 회사나 국가가 성공하길 원한다면 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또한, 여성을 너무 다른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여성도 사회생활에 용기를 갖고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질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 리더십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변] 칼리 피오리나 前 HP 회장: 우선 리더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 타인의 잠재력을 육성하는 사람, 미래의 비전을 구성원과 나누는 사람이다. 이러한 리더의 자질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다. 하지만 여성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긴 하다. 여성은 다른 사람과 협업하려고 노력한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한다. 이걸 여성의 본능이 아닐까 싶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기업에서는 날마다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때 팀워크가 중요하고 여성 리더십의 장점이 발휘된다고 본다.

[질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당신은 몇 해 전 상원의원에도 출마했다. 재계에서 정계로 커리어 전환을 시도한 이유는?

[답변] 칼리 피오리나 前 HP 회장: 알다시피 정치인들의 결정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은 시민의 정부라고 생각한다. 민간 부문의 인사들이 공직에서 일하고 다시 돌아가 민간에서 일하는 전통을 가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정치를 전업으로 삼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의 결정이 경제에 어떤 힘을 행사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는 한 시민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미국의 통치와 사회적 이슈에 참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고 싶어 정계에 진출하고자 했다.

[질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많은 국제기구가 여성 고용을 늘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나?

[답변] 칼리 피오리나 前 HP 회장: 물론이다. 현재 이는 전 세계적 이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일본의 경제를 더 육성하기 위해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는 많은 경제 데이터로도 증명됐고, 지난 40년간 경험해 오기도 했다. 만약 여성이 빈곤 퇴치에 참여하면,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문맹률도 해소되고 질병도 퇴치될 것이다. 여성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모든 부문에서 좋아질 것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미국 기업 전체의 CEO 중 여성은 고작 3%다.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은 아직 너무나 멀다. 남성과 여성 둘 다 이 점을 깨달을 때가 변화의 시점이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함

SK 사례를 통해서 본 CSR과 스포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CSR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권과 노동 탄압으로 많이 비판받는 기업들이 오히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을 들어 CSR을 폄하하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자 역시 이러한 CSR 활동들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제는 CSR 활동이 환경, 언론, 그리고 체육 등의 분야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SK 사례를 통해서 스포츠 분야에 CSR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CSR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
김기탁 배재대학교 교수
토론
백기복 국민대학교 교수
강영순 제주대학교 교수
조동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동남 제주 유나이티드 경영지원 실장
정리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기탁 배재대학교 교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 관계자와 사회 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 행위의 규범적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CSR과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CSR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CSR은 ① 성숙한 문명의 지표로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의 의무이며, ②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익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수단이 될 수 있으며, ③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미래에는 사회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CSR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CSR은 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저해하며, ②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 자체가 사회 공헌 활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③ CSR이 지나치면 기업 존속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책임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 지배력이 강해지면 다원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CSR의 범위 중에서 자선적 책임은 단순한 기업 이익의 기부와 전략적 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뉜다. 전략적 사회 공헌 활동에는 자원봉사, 기부 협찬, 그리고 공익사업이 있다. 자원봉사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의료 활동 등의 전문 서비스, 자문위원 활동 등 기업 혹은 기업 내 소규모 자원봉사 조직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기부 협찬은 기부금, 성금, 무상교육, 불우이웃돕기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자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끝으로 공익사업에는 문화예술 지원, 체육 진흥, 교육학술 지원, 지역사회 개발, 환경보호 등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공익사업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에는 스포츠, 체육 활동을 중심으로 한 CSR 활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SK의 사례 역시 이것의 일환이다.

CSR은 기업의 재무 성과, 종업원들의 조직 몰입,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평판, 로열티, 브랜드 태도, 브랜드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연구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그것의 순수성 및 동기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SK의 스포츠 CSR 사례

오늘 발표의 사례 기업인 SK가 벌이는 스포츠 CSR 활동은 SK 스포츠단을 중심으로 하는 구단 운영 및 후원, 계열사별 스포츠 콘텐츠 활용 CSR, SK 산하 스포츠 조직의 CSR 활동 등이 있다. 구단 운영, 스포츠 조직 및 선수 후원, 대회 운영 등 SK 스포츠단의 활동이 단순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공공재 성격의 스포츠를 활성화한다는 의미, 혹은 ‘스포츠를 통해 감동을 나누고 팬과 함께 행복을 키워나갑니다’는 SK 스포츠단의 핵심 이념에서 상당 부분 사회공헌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구단을 비롯한 스포츠 조직의 CSR 활동은 해당 스포츠 조직의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모기업 및 그룹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례1] SK텔레콤 오픈 골프대회

- 서귀포시 기적의 도서관 도서 기증 프로그램: 본선에 진출한 60위권 선수들이 기록한 버디와 이글 수만큼의 도서(852권, 8,000여만 원 상당) 기증

[사례2] SK와이번스

- 사랑의 홈런 프로그램: 와이번스 소속 최정 선수의 홈런 수만큼 저소득층 난치환자에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2013년 28명 혜택)
- 라오스 야구전도사: 라오스의 한 야구단 구단주를 맡은 이만수 감독을 통해 야구 불모지 지원
- 야구 꿈나무 장학금 조성 사업
- 행복 더하기 야구단: 다문화 야구단을 창단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 지원

[사례3] 제주 유나이티드 FC

- 행복나눔 행복날개 캠페인: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는 홈경기 승리 시 자신과 협약을 맺은 후원사(18업체)가 제공한 후원품(현물, 현금, 상품권, 기타 재능기부 등)을 경기 후 소외/다문화/독거노인 계층에 직접 찾아가서 전달
- 올해 제주도 내 SK주유소 및 충전소와 연계하여 5만 원 이상 주유 및 충전 고객에게 홈경기 관람 교환권을 제공
- 홈경기 시 받은 교환권과 영수증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홈경기 관람 티켓을 제공
- 교환한 영수증은 영수증당 0.5의 보일러용 등유로 적립되어 연말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CSR의 한계 대두

그러나 최근 CSR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① 전국화, 국제화, 세계화된 현대의 기업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넓어지고 있으며, ② 급격히 변화하는 불확실한 환경적, 정치적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었고, ③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목표와 기업 활동의 제약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⑤ 기업의 경제성과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CSV(공유가치 창출)의 대두

CSR에 대한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최근 들어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를 중심으로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CSV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선 활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공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이 사회의 요구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함을 원칙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SK의 CSV 사례

[사례1] SK텔레콤의 사회 공헌은 지난해 ‘행복동행’ 선언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공유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ICT를 도입하고 있다. 인천 신기시장도 이 같은 SK텔레콤의 ICT 솔루션으로 시장 자체 멤버십을 활성화했고, 지역 프로야구단인 SK와이번스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매출 증가를 이끌어냈다.

[사례2]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SK텔레콤의 역량이 결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도 성공 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이래, 1기 9팀이 사업화에 성공해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했고, 지난 3월 선정된 2기 13팀도 창업 과정 전반에 걸친 SK텔레콤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기복 국민대학교 교수: 기업마다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SK그룹은 <장학퀴즈>를 시작으로 예전부터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 영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SR 대두의 역사적 배경

CSR은 기업이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차원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기업이 우리 사회에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은 6,000년 인류 역사 중에서 200년밖에 되지 않는 최근의 현상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의 발생, 환경 파괴, 비리의 온상, 상업주의, 노동 착취 등 부정적인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본주의 4.0, 동반 성장의 개념이 나온 것이다. 기업을 통한 사회적 부의 창출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하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기업적인 정서에 대해 기업에서도 최근 들어 CSR, CSV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기업들에서 전개하고 있는 스포츠를 통한 CSR, CSV도 이러한 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SR에 대한 평가: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 필요

SK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스포츠를 통한 CSR을 잘 하고 있으나, SK를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가보다는 어떻게 투자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CSR 활동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우며 많은 희망을 주는가, 꿈을 주고 있는가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SR을 하지 않는 다국적 기업, 대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 기업이 CSR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SR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CSR을 평가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가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강영순 제주대학교 교수: 기업의 CSR은 소비자의 의식에서 출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생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면서 최근 들어 CSR과 CS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업이 CSR, CSV와 같은 윤리적 활동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의식이 중요하다.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CSR 활동 필요

SK 그룹의 여러 기업이 다양한 CSR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CSR 활동을 펼침으로써 SK그룹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 전사적으로 특정 지역(예를 들면 제주도)에 CSR, CSV 활동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조동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 기업의 이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내는 것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CSV는 사회공헌활동 부서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산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남 제주 유나이티드 경영지원 실장: 많은 스포츠클럽이 다양한 CSR 활동을 하고 있으나, 오늘 발표를 통해 단발적인 CSR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CSR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동감한다. 또 CSV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제주 유나이티드는 축구를 관람하러

온 관중을 대상으로 축구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며 CSV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공동의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스포츠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함: 기업 소유 프로구단을 비롯한 스포츠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과 더불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이 요구됨
- 공유가치 창출의 개념이 기존의 단순 기부 활동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의미는 아님. 기업의 역량 내에서 기존의 활동을 유지/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업 성장과 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의 추가적인 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글로벌 기업의 실�크로드

한국, 중국, 유럽을 잇는 마케팅 전략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블랙야크

1973년 '동진'사를 시작으로 41주년을 맞이한 블랙야크는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998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유럽, 미국 등 아웃도어 본거지로의 진출을 가시화하여 '2020년 글로벌 No.1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블랙야크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좌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강태선 (주)블랙야크 회장

토론
김주남 (사)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리
구자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강태선 (주)블랙야크 회장: 4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한 경우는 별로 없다. 해외로의 진출이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단순히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는 쉽지 않다. 아시아 브랜드가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는 데는 진입 장벽이 많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블랙야크는 NAU International Inc. 라는 미국 기업을 인수했다. 단순한 전략적 제휴가 아니라 기업 전체를 M&A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NAU를 M&A한 이유는 처음 미국에 블랙야크의 진출을 시작하려 했으나, 시장 조사 결과 미국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아시아 브랜드를 거부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섬유는 더욱 그렇다. 안 되겠다 싶어 유럽에

먼저 진출하기로 했다. 유럽은 여러 국가가 있어 한 국가에서 실패해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 유럽에 진출했다. 이후 지인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2년 동안 시장 조사를 통해 NAU라는 회사를 찾았고, M&A 작업을 1년 동안 진행했다.

세계적으로 아웃도어 시장은 60조 규모이다. 우리나라만 아웃도어가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폭이 조금 더 크다. 미국은 11조~12조 규모이다. 이는 등산화를 제외한 것이다. 유럽은 9조 정도이며, 중국은 2.5조, 일본은 2조이다. 한국은 2013년 기준 6조 9,000억 원이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 시장은 이미 성숙기이며, 최근 30% 성장률과 비교하면 성장이 점차 둔화하고, 올해는 10%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2014년에는 8조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블랙야크가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블랙야크의 동력은 스포츠, 골프, 캐주얼, 키즈와 같은 브랜드 확장을 빠르게 진행한 데 있다. 또한 여성층, 젊은 층, 키즈층을 중심으로 고객을 재정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쇠퇴기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아웃도어의 기능성과 블랙야크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품질과 상품은 좋은데 시장이 없었던 기존 국내 스포츠 브랜드의 한계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은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결국, 첫 번째로 먼저 진출한 곳은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도 어려운 시장임은 틀림없었다. 10년 동안 시장에 조기 진입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11년째 접어들면서 10년 동안 투자한 것에 대해 중국에서 인정받았다. 중국에서 살아남은 것은 정통 아웃도어이며, 한국적 디자인과 소재를 바탕으로 제품을 대중화하며 차별화한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즉, 기존 시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시장을 리드하고 유행을 만드는 전략을 수립했다.

중국 진출 성공 사례

1998년 시장을 선점하고 또한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우수한 기술력을 형성했다.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학습했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현지 시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기술은 한국, 영업이나 관리는 모두 중국 현지 인력을 채용했다. 즉,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적용한 것이다. 마케팅 전략으로는 '블랙야크가 만리장성을

지킨다'라는 광고를 시작했으며, 중국에서의 반응은 블랙야크가 뭘데 만리장성을 지키냐며 다소 냉소적이었다. 이후 동반자적 관계를 보이기 위해 '블랙야크도 만리장성을 지키다'로 변경했다. 환경 보호 운동을 하여 만리장성 초입에 500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했고, 만리장성 달리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했다.

이후 네팔에 1호점을 오픈했다. 전 세계에서 산에 다니는 사람은 네팔에 온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블랙야크의 제품을 테스트할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 처음 목적은 판매가 아니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유럽에 진출하여 전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 중 최초로 60개 업체만 참석 가능한 프리미엄 브랜드 전시관 Vision Hall에 입성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 터키, 스위스에서는 성과가 좋았다.

이제 유럽을 거쳐 NAU를 인수하여 미국에 진출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현지인을 채용하였고, 상주하는 한국인 인력은 단 한 명이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이며, 내년부터는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이러한 시장의 확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네팔 현지에 병원을 건립하여 블랙야크 소비자의 행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미션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은 아름답고 지구는 깨끗하게 해야 하며,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 만족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3R(Responsibility)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3R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모든 사람에게 블랙야크를 소유하는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김주남 (사)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 실크로드를 중국에서 만든 유럽과의 무역을 위한 길이다. 최근 실크로드는 경제 벨트 형성을 위한 전략적 루트가 되었고, 실크로드의 경제 벨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현상에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이 만들어놓은 실크로드에 참여해야 한다. 중동·유럽 협력회의에 올라가야 하며, 이란-이라크-터키-시리아를 통합한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대비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블랙야크는 실크로드 상에는 매장이 없다. 이제는 실크로드의 개척자 블랙야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중앙아시아 산악 국가를 모두 포괄하는 거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야크는 CSR 측면에서 탁월했고, 향후 CSV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베푸는 활동을 넘어선 가치 기반의 사회적 공익성을 확장하면 좋겠다.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블랙야크가 해외진출하는 데 있어 경쟁 우위를 중심으로 토론하겠다.

블랙야크의 디자인과 다른 브랜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블랙야크의 디자인은 절개를 직선으로 하며 원색을 쓰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곡선의 디자인과 다른 브랜드에서 쓰지 않는 독특한 색상을 쓴다. 즉, 야크의 형상을 디자인 콘셉트로 개념화하였다. 블랙야크는 기술과 디자인을 완벽히 연결해서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다. 둘째, 해외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과 스펙을 통해 진출한 것이 블랙야크의 경쟁 우위이다.

[질문] 문영섭 제주수산물 가공/유통: 증문에 블랙야크 연수원을 짓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와 이외의 CSR 활동을 제주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연수원 설립은 진행하고 있다. 많이 늦어지고 있으나 늦어지는 이유는 허가 과정에서 환경, 문화재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다. 지역 분들과 관계 기관의 이해 차이를 극복 중이다. 올해 안에는 착공될 것이다. 제주도 고향의 봉사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하겠다.

[질문] 코디랜드 대표: 중국의 환경 전략 및 프로세스를 잘 구축하였는데, 중국 기관과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국에서 관시(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기업은 관시만 중시하면 망한다. 관시보다는 소비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욱 좋다. 그렇다고 관시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관시는 소정의 역할을 해야지, 그것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질문] 이신선 사무총장: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님께 질문한다. 나눔재단하면 교육적인 가치가 강조된 듯한데 보이는 이미지를 교육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는가?

[답변]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교육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쉬면 직원들에게 밀린다. 끊임없이 공부한다. 블랙야크 나눔재단은 글자 그대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교육 부분은 블랙야크 강태선 장학재단이 별도로 하고 있다. 또 하나, 진짜 교육 사업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볼 생각이다.

조동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해외에 가서 성공하려면 해외 기업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한다. 독점 우위 혹은 경쟁 우위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선진국 학자가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면, 후진국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이론을 블랙야크를 통해 재해석해야 한다. 블랙야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면서 경쟁 우위를 갖게 된 훌륭한 기업이다. 해외 경험이 없는 블랙야크가 해외로 나감으로써 경쟁력이 생긴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CSR에서 CSV로의 전환이다. 기업이 판매하고 생산하는 제품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CSV이다. 공유가치 창조는 매출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여가 되어야 하며, 블랙야크의 전체 매출이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블랙야크는 중국의 실크로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장
- 단순히 베푸는 활동인 CSR을 넘어서 CSV를 통해 사회적 공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

다국적 기업과 공공외교

한중지역경제협회

글로벌 경제 배경에서 기업의 다국적 경영은 상업활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와 이익과 연계되는 정치적 사회 행위이자 공공외교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다국적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기관인 한중지역경제협회와 중국공공외교사업의 추진자인 차하얼학회는, 본 세션의 공동운명을 통해 한·중 양국 기업의 다국적 경영전략과 한·중 공공외교서비스를 실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발표
커인빈 차하얼학회 비서장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토론
송영화 중국 공공외교협회 비서장
쑨홍메이 안홍루이예과기유한공사 부사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선양 차하얼학회 연구원
송기출 국제문화교류원 원장

정리
채하연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송영화 중국 공공외교협회 비서장: 차하얼학회를 소개하는 것이 공공외교의 주요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본 학회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차하얼학회는 중국 대외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중국 외교 정책에 관한 연구는 물론 중국의 국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방안들도 연구하고 있다. 차하얼학회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문화적 공공외교이다. 주중 외국 대사관에서 자국 문화 활동을 하는 것에 협력하고, 상대 국가에 중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상대국 국민이 중국 문화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년 7월 중·한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를 정례화하여 매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이 국제 활동에서

어떠한 공공외교 경험을 갖고 있는지 습득하여 한·중 양국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커인빈 차하얼학회 비서장: SK그룹은 일찍이 'China insid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SK그룹의 공공외교에는 다음과 같은 3대 목표와 유형이 있다.

첫째, 경영 목표형 측면으로, 다국적기업은 태생적으로 공공외교 기능을 지니고 있다. 경영자가 이 점을 인식하면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둘째, 사회 책임형 측면으로, 기업은 사회 조직이기에, 진출한 국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SK는 중국학자들의 한국 연수 지원, 국제포럼 개최, 중국 SK장학퀴즈 프로그램, 11개 중국 대학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국가 이미지형 측면으로, 한·중 15주년 기념 '감동중국, 한국행' 행사를 후원함으로써 한국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회적 책임(CSR) 활동 성과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공공외교는 마치 쌍둥이같이 동일한 지향점을 갖는 밀접한 관계이다. CSR의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비영리 활동이다. 공공외교라는 큰 테두리 내에 CSR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외교와 CSR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CSR 활동은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국가 이미지는 기업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사회과학원 기업사회책임연구센터의 <기업CSR보고서 2013>을 보면 외국 투자 기업 상위 20위 내에 우리나라 기업 세 곳(삼성, 포스코, LG화학)이 포함되어 있다. 3사의 평균 점수는 40.3으로 대만 38.0, 일본 25.5, 미국 14.0보다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CSR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CSR은 상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맞추어 활동 내용도 변화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종전의 단순 빈곤층 지원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 노동 인권, 환경 보호, 제품 안전, 공익 서비스 등으로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내의 욕구와 수요가 향상됨에 따라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중국 내 CSR 활동에도 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의 CSR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정부와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CSR을 활발히 하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 SK하이닉스, CJ, 아시아나 등을 들 수 있다. 삼성의 CSR은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삼성은 2012년 CSR 원년을 선포하고 '희망소학', 장학금 지급, 대학생들의 서부 지역 농촌 활동 지원, 스마트 스쿨, Solve for Tomorrow 등 중국인의 감동을 자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지역 중심의 CSR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CJ는 문화 방면에 치중한 CSR 활동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지속 가능한 CSR, 창조적 CSR, 찾아가는 CSR을 표방하고 있다.

토론

쑨홍메이 안홍루이예과기유한공사 부사장: 국가와 기업의 공공외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상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국가의 외교 활동이 다국적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국가 이미지를 반영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다국적기업이 가져야 할 성공 전략 가운데 하나는 현지화다. 현지화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나라 문화에 스스로 동화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공공외교의 기본 전략은 다른 나라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역사,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감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이미지 또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즉, 다국적기업의 성공 전략은 먼저 남을 제대로 아는 데 있고, 공공외교의 기본 전략은 자신을 남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 단체와 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성공 전략과 공공외교의 기본 전략을 함께 구사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선양 차하얼학회 연구원: 공공외교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하버드대와 유펜의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공공외교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송기출 국제문화교류원 원장: 차하얼학회는 SK그룹의 중국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불교 경서 환수에 기여하는 등 민간 공공외교 연구 단체로서 공공외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외교는 인도적 상호교류와 친교를 바탕으로 하는 연성 외교를

의미한다. 공공외교의 핵심 요소로는 감성, 평화, 소통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때때로 개인이나 국가 간의 충돌을 일으키므로 감성적 접근은 이성적 접근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공공외교는 인간의 본능인 평화를 추구한다. 공공외교는 공감을 위한 인간 본능이다. 소통은 공감의 근본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청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그들이 인성을 배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청년 문화 교류를 통해 오천 년 역사를 향상해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최근 다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기업들의 공공외교 기능이 중시되고 있음을 조명함
- 공공외교와 공정 거래로 기업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업들의 공공외교가 중첩되거나 기업 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Control Tower 개설이 요구됨
-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공동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함
- 한·중 기업들의 공공외교 활동을 부각시켜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해외 유명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기업 공공외교 활동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대학 내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기업 공공외교 활동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기업 간에 공유하여 후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어야 함

아시아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 발전 전략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한국경영자총협회

아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투자 기업 수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의 대규모 파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외국 투자 기업의 노무 관리 기본 방향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아시아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 발전 전략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아시아 진출 기업 현황

최근 아시아 진출 기업은 임금 인상 시위(캄보디아 최저 임금 인상 시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임금 인상 파업)와 상승하는 최저 임금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진출한 가장 주요한 이유가 낮은 임금이었으나 최근 들어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분규로, 이제 낮은 임금은 동남아 진출의 메리트가 되지 못하다.

한국의 노동 환경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은 정부의 노사 관계에 대한 원칙적 대응 등으로 노사 관계는 안정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투쟁적 노동 운동에 대한 반감으로 노조 조직률은 감소 추세에

사회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토론

이원진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남재철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구자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리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노사 분규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사 분규 장기화의 원인은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와 무관한 외부 세력의 적극적인 개입,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개입, 개별 사업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의 노사 분규화(정리해고, 사내 하도급 등)를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통상 임금, 근로 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새로운 노사 관계 현안이 이슈화됨으로써 노사 갈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노사 분규의 주요 원인 및 개선 방안

노사 분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언어, 문화, 관습,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을 활용한 노무 관리, 일상적인 고충·불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별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시나 중화 사상 같은 각 민족, 국가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 노동법, 규제, 관행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노동부, 대사관을 통해 노동법 노무 관리에 대한 자료를 숙지하고, 지역 내 진출 기업 간의 상시로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노사 분규는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만약 분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사 분규가 발생하기 전 예방 조치로는 근로자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무 관리의 현지화, 현지 노동환경 변화 및 전망에 따른 준비, 노무 관리를 위한 전문 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노사 분규 발생 시 초기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 및 대사관의 협조, 노사 분규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득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바람직한 노무 관리 방안

바람직한 노무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노무 관리는 노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 노무시스템 구축, 현장 관리자에 대한 인사 노무 역량 강화, 근로자들의 합리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인사 노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사 노무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에 대한 인사 노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원 고충에 대한 일차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근로자들의 합리적 노사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

1976년 다국적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통해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지키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4장「고용 및 노사관계」를 통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강제근로 폐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 금지 등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에 진출하는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한 편이다. 앞으로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검토와 더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동남아 진출 기업의 사람 경영 모델: K-WAY 한국형 경영 모델의 확장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형 경영 모델

한국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후 10년간의 구조 조정과 경영 혁신을 통하여 생존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2008년 금융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 기업이 위축될 때, 2009년 GDP 0.2% 성장, 2010년 6.1% 성장의 기적과 사상 최고의 경영 성적을 견인하며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한 삼성·현대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강력한 기업이 정신으로 무장한 오너 경영자/전문 경영인 CEO/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그리고 이에 부응한 강력한 팔로워십(followership)의 에너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화를 이루어낸 한국형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요체를 찾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뛰어넘어, 21세기를 관통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공 요소를 찾는 것이 한국형 경영 모델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차별화하려면 한국인의 강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경영 모델의 요체는 신바람, 스피드와 응용력 등 한국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한국형 경영의 필요성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구축한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과제이다.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경쟁 전략 및 마케팅 전략 등은 한국 기업 고유의 과제는 아니다. 지배 구조, 조직과 인사 관리의 설계, 현장 관리, 의사소통 등 사람의 요소가 큰 영향력이 있는 경영의 실행 영역에서 한국인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설계하고 정착시켜, 한국 기업 고유의 차별적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과거의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 전략을 뛰어넘는 창조적 선도자(creative first mover)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은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원형을 개발하여 본국에서 성공을 체험하고 이를 정교하게 매뉴얼화한 다음 지역적으로 동일한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식에 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글로벌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구성원과 소비자에 의한 문화적 특성이 점점 두드러지는 복합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하게 공통적인 부분과 현지 최적화 대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 모델이 획일적인 글로벌 경영 모델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아 진출 기업의 사람 경영 모델

동남아 진출 기업의 사람 경영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가치관과 비전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마음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조직의 구조와 크기, 위계질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현지인들의 의식 특성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 문화와 관련하여 인간 요소와 업무(성과) 요소의 배분, 부모형 리더십, 사기 진작 방안, 정보 공개와 의사소통,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목표 관리와 관련하여 목표의 설정과 기간 설정, 성과 공개, 확인과 배분 기준 준수, 성과 달성 시 축하 의식 등을 통하여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지인의 의식 특성에 최적화된 생산 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으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재 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학습 욕구와 성취 욕구를 지원하고, 핵심 인재

채용과 육성 및 충성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급제, 보상 관리와 관련하여 기본급, 능력급, 성과급 간의 조화를 이루고, 전체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인재의 보상 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관련하여 현지 인력과 핵심 인재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진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아시아 진출 기업의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남아 진출 기업들의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대학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소통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경영자의 시각과 근로자의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서로 이해해야 한다. 기업은 장기적인 비전과 성과에 관심이 높지만, 근로자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노사 문제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만약 노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남재철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동남아 진출 기업의 노사 관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진출국의 지리, 위도, 기온을 통해 그 나라 국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노사 문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열대 지역 노동자는 저축하려는 욕구가 적다. 따라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노동자를 동기화시키는 것은 효과가 작다. 반면에 온대 지역 노동자는 겨울을 대비하는 국민성이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자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진출국의 역사적인 배경과 과거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필리핀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 70~80년대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는 외화를 벌기 위해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이미 해외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현재 동남아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서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구자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해외 진출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기업에서 발전적인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상, 방법, 시간의 3가지 요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노사 문제, 갈등, 분규의 대상을 정의할 때, 노동자와 CEO 둘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노동자의 가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에 대하여 기업이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리하느냐가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제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문제 해결 방식뿐만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혁신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다수 기업은 당장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 제주도 소재 기업 영업직 직장인: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내에서는 파업이 없는 도요타가 동남아에서는 분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에서 성공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가? 셋째, 제주도에 동남아 노동자가 많은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외국 기업에 대해 기대치가 높은 측면이 있었다. 외국계 회사는 복리 후생이 국내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고, 임금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따라서 동남아에서도 도요타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에 실망한 근로자들의 분규가 있었다고 추측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한국에서 노사관계를 잘하던 기업은 밖에서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안에서 잘하는 기업은 밖에서도 잘한다.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사람을 단순히 '노동인'으로 다루는 한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기업의 경영 성과는 시장보다는 노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함
-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 1) 최고 경영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함: 노사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함
 - 2) 합리적인 인사노무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3) 현지화(localization)가 필요함: 동남아 각국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노무관리가 되어야 함

한·중 간 물류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한중지역경제협회

가격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중국 내수 소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미 한국기업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류경쟁력이 특히 중요한바, 한국기업의 대중국 물류 전략과 한·중간 물류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내수시장의 급성장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물류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회
쉬아신 중국 국제재선 마케팅 총감
발표
양샤오 중국교통물류협회 비서장
양석준 상명대학교 교수
토론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위엔 구어핑 상해운송화공물류발전 유한공사 사장
박종선 청도 前 청도 총영사
리진원 북경차이니스 문화발전센터 주임
강청공 심천화양연화광고회사 회장
정리
채하연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양샤오 중국교통물류협회 비서장: 시진핑 주석은 육상과 해상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상하자고 제안하였고, 아시아 국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물류 환경의 발전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물류 시장은 낙후되어 있으나 도시산업 발달과 주민 소득 증가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물류 자원의 분산, 정보화 부진 등으로 물류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 생활의 편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 배송 산업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우수한 물류 산업이 탄생하였는데, 이들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국제물류주간은 중국교통물류협회가 해당 지방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주요한 행사이다. 중국의 도시와 기업이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물류 논의의 플랫폼이다. 이 기간에는

박람회, 시상식, 우수 상품 전시, 최신 서비스 소개, '중국물류관리행'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이들을 통해 건강한 물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11차 중국국제물류주간 행사는 11월에 구이양(貴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석준 상명대학교 교수: 신선식품 물류 유통의 진화 과정과 현황을 한·중이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신선식품 유통 과정은 소농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한국 정부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물류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물류 조직은 소비지에서 원하는 대로 따르며, 또한 수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품을 최적화하면서 생산 소비 전체 시스템 역시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물류는 규모화, 조직화, 공동화로 진전되는 특성이 있으며, 영세 유통 구조에서 기업형 유통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IT 산업 발전과 물류 관리 환경 변화와 함께, 한국의 신선식품 물류는 출하 물류의 시대 → 종합 물류의 시대 → 부가가치 창출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물류의 가치 사슬을 관리하고 통합적 측면에서 비용 감소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등으로 산지 유통인들의 물류 역할이 변화·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신선식품의 물류 유통을 위해 안전농식품물류센터를 비롯하여 5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물류 시스템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화하고 있다. 물류 시스템은 저장 방법을 통해 농산물 판매시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용도를 제안하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며,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박 포장 상자를 도입함으로써 운반과 적재를 쉽게 하고 수박의 용도를 선물용으로 확장한다거나, 또는 식당에 단순히 식자재 납품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조리 교육,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물류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평택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연안산업벨트와 최단 거리인 지리적 이점과 카페리(car ferry) 라인 개설 등 한·중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활동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평택항은 부두 시설 증설과 신규 여객터미널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전 세계 10개 항구 중 9개가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평택항은 그 중심에 있다. 또한, 평택항은 한국 수도권의 인구, 경제의 중심지이며, 아산만 깊숙이 위치하여 기후 변화 등에 안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공 등 내륙 교통의 중심지이다. 향후 TCT,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등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평택항은 철재, 자동차, 컨테이너, 여객 등 종합적으로 물류를 취급하고 있으며, 10개 노선의 컨테이너 전용 항로를 운영하고, 컨버전스 항만 트렌드에 부응하여 한·중 카페리도 운영하고 있다.

위엔 구어핑 상해운송화공물류발전유한공사 사장: 중국에서 화학제품 및 유해 물품 운송 수요가 매우 높으므로, 중국 내 ISO Tank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위험 화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사고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ISO Tank를 선택해야 한다. ISO Tank는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 친환경성 등 4대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SNW는 위험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종합물류회사로, 전자 밀폐 환송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박종선 前 청도 총영사: 최근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한·중 무역의 활력도 감퇴하고 있는데, 물류와 유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의 신모델을 탐색해야 한다. 물류 산업과 기타 산업은 상호 융합하여 상승효과를 냄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하게 된다. 따라서 물류 산업의 현대화로 물류 기업과 화물주 간의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고, 일선 전문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발전을 위해 세계 물류 중심을 만들고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와 교육 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신속하고 맹렬한 정신과 중국인들의 대륙적 기질에 바탕을 둔 전통적 상업관을 상호 융합하여, 선진적인 물류 산업 기지를 건설하고, 아시아 및 세계 물류 중심을 건설하여 한·중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중국 서비스 산업의 장벽이 매우 높아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리진원 북경차이니스 문화발전센터 주임: 예전의 물류는 사람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사람이 물류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물류 산업 분야에서도 한·중 간에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경청공 심천화양연화광고회사 회장: 중국 물류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연동성은 부족하였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으나 한국 정부 측의 규제로 인해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되기를 바란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물류 산업과 유통망의 안전 점검과 재난 재해 대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 물류 기업과 화물주 간의 불평등 관계 개선 및 갑의 횡포 근절 노력이 필요함
-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은 가격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고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함
- 항만 물류의 경우, 연계 운송 수단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설계와 지원이 필요함
- 특수 물류 방면의 노하우가 부족한 중국 물류 시장 등 해외 시장에 우리 선진 물류 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구 개설이 요구됨
- 부가가치 창출형 물류 전략을 위한 아이디어뱅크의 설립과 운용이 요구됨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아시아의 미래

유엔글로벌콤팩트

급변하는 전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점차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으며, 기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주체로 부상하는 아시아 기업들의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며, 아시아의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이 윤리 경영과 청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경영 전략에 내재화시켜서 위기관리 능력을 증진해야 한다. ‘반부패’를 주제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아시아의 미래” 세션에서는 기업이 윤리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며, 아시아의 미래와 번영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조연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표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

좌장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토론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리

김민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매니저

반부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경제와 금융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경제적 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최근 ‘반부패 라운드’를 강화하는 국제 사회의 동향에 따라 기업들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윤리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는 각 나라와 소속 기업,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 모든 구성원의 동참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는 종래 공공 부문 중심의 반부패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불공정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직자들이 청탁이나 금품 등을 매개로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도 공직 부패 중심에서 민간 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윤리와 청렴 문화를 정착 및 확산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이 우리에게 더욱 청렴하고 윤리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바, 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과 윤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동참한다면, 아시아 각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더욱 높아져 지속 가능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반부패에 대한 기업 차원의 노력 사례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 지속 가능성이 지금과 같이 화두가 되기 오래전부터, 지멘스의 창업자 베르너 폰 지멘스는 “나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겠다(I won't sell the future for short-term profit.)”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167년간 이는 지멘스의 가치 및 행동강령이 되었다.

지멘스 준법 프로그램은 예방, 발견, 대응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별 준법 감시인이 국내 법규를 반영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방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적발된 혹은 보고된 위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한다.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현재 지멘스는 이 단계를 넘어, 중간 관리자들이 준법과 청렴한 사업을 위해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한 한국 지멘스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내외적 공동 노력에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윤 추구가 우선시 되었던 우리 사회는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법 및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 청탁 및

인사권, 인맥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부패 행위를 적발할 시 처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주체인 시민이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뇌물 제공을 비롯한 부패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본인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요소이자 원조의 효과를 절감시켜 전 세계 빈곤 퇴치 개선을 저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의 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여러 기업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통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인 특성, 집단 특성, 성과 시스템 특성 중, 개인 특성이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뒤이어 성과 시스템의 부작용, 단기 매출, 그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순으로 꼽혔다.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개인 특성은 개인의 도덕성 결핍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조직 내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에서부터 오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기업의 부패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 조직원 모두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부패 방지 정책은 신념과 이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본성에 기원을 두고 개발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가 발전하여 글로벌 정치, 공무원, 기업인, 로비스트 등 다양한 역할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패의 방법에 맞춰 꾸준히 발전되어야 한다.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되는 것이므로 개인뿐만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함께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60년대 미국이 <뇌물 및 이해 충돌 방지법>으로 부패가 개선되었듯이 우리나라 또한 현재 부패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 및 가이드라인 활용을 비롯하여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을 입법화시켜 부패 방지 노력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김영란법)>과 같은 부패 방지를 위한 법 및 제도 등이 조속히 제정 및 활성화되어야 함
- 부패 행위를 적발할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처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기관이 필요함
- 이 사회의 주체인 시민이 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함

세계화와 불평등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세계화는 전후 세계 질서를 형성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다. 경제 분야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국제적 교역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국가 간 혹은 개인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끼친 영향은 여전히 큰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본 회의에서는 아시아 각국이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화가 역내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논의하였다. 또한, 전략적 판단에 의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경계함과 동시에, 보다 번영된 아시아를 위해 어떤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기조연설

라이너 아담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동아시아 지역본부장

축사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사회

스텔라 킴보 필리핀대학교 교수

발표

당 후이 동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토론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세타풋 수티와르트-나루에퓏 태국 미래재단 이사장

피터 왕 홍콩 라이언락연구소 이사

정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서울사무소 대표

라이너 아담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동아시아 지역본부장: 라이너 아담 본부장에 따르면, 자유주의의 근본 가치는 자유 그 자체에 있다. 그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글로벌 부자세를 제안한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를 언급하며, 이를 '로빈 후드 세금'이라 비판했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롤프 마파엘 대사는 본 세션의 주제가 국내외의 두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하 라운드를 마무리하여 더 많은 국가가 세계 경제에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후이 동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세계화는 다양한 세계관,

상품, 사상 및 기타 문화 측면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계 통합의 과정이다. 사회에는 열악한 학교 상황, 미혼모, 탈산업화, 가난한 청년층의 빠뜨려진 행동 등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동시에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세계의 노동력에 편입함으로써 수억의 개발도상국 국민이 열악한 생활과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화로 엄청난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더욱 자유로운 시장과 더 넓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세계 빈곤층의 절대 수치는 1950년대 이후 증가를 멈췄고, 최근 몇십 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신흥 국가들의 빠른 성장 덕분이다. 사람들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사회적 사다리를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 이어졌고 국가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했다. 불평등을 가난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되며, 사회의 목표가 불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가 경제가 거대 금융회사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재정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목도했듯이 성공의 사유화 및 실패의 사회화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세타풋 수티와르트-나루에퓏 태국 미래재단 이사장: 세계화의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보는 것만큼 적합한 예는 없다. 불평등은 세계화와 미미한 정도로 관계가 있거나 전혀 관계가 없다. 소득 차이는 대개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다.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큰 문제는 '정의'와 관련한 문제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에서는 매우 규제가 심한 분야나 비거래 부문에 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야를 더 큰 경쟁에 노출한다면 세계화를 통해 보다 평등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불평등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일은 부패 척결과 시장 자유화, 법치 강화 등이다.

피터 왕 홍콩 라이언락연구소 이사: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낭설에 불과하다. 지난 60년 간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개인 간 불평등을 바라본 국제적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다. 세계화 덕분에 아시아의 호랑이 국가들,

브릭스(BRICs), 아세안(ASEAN) 같은 개발도상국이 선진 7개국(G7) 등 경제가 비교적 침체한 국가에 비해 훨씬 빨리 성장, 회복할 수 있었다. 한편,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40년 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을 사라지게 하려는 노력을 거두라는 점, 두 번째는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전 불평등의 원인에 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주의 정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수 및 처벌이 존재하는 진정한 자본주의 체제 또는 경제를 유지하라는 점이다.

[질문] 스틸라 킴보 필리핀대학교 교수: 각 연설자의 국가에서는 세계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답변] 최병일 교수: 한국의 노동 시장이 매우 제한적이며, 노사 간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규모가 더 크다. 세계화는 오랫동안 경제적 성공의 엔진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인다.

당 후이 동 차관: 국민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 키워드는 '포용성'인데, 이는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이 외에 우수 거버넌스 및 투명성 또한 중요한 키워드이다.

세타뒫 수티와르트-나루에뒫 이사장: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또한 태국 국회의원들의 경제 상황이 그들이 대변하는 일반 국민의 경제 상황보다 훨씬 좋다는 점이 안타깝다.

피터 웡 이사: 국가에서 시장 규제 수를 줄여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글로벌 경제 시대에 보다 많은 국가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하개발라운드가 마무리되어야 함
- 정치권은 경제가 거대 금융기관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더욱 폭넓은 경쟁을 위해서는 심한 규제하에 있는 비거래 부문을 개방해야 함
-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은 부패 척결, 시장 자유화 및 법치 강화 등임

지역 간 국제 경제 교류와 첨단 벤처기업의 성공 전략

일본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인간개발연구원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는 성공사례로 꼽히는 일본 최대의 벤처기업 육성 기관이다. 일본의 연구개발 성과가 집적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연구기관과 기업과 교류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사례와 접목시켜 아시아권에서의 지역 국제 교류로서 배울 점과 더 글로벌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벤처생태계의 멘토인 우찌다 히로히사 대표와 함께 아시아라는 체제 안에서 일본 기업의 혁신과 벤처의 성공 철학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았다.

사회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 정보학부 교수

발표

우찌다 히로히사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사장

토론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다케 요시키 Aflac Japan 최고 고문

정리

호경아 인간개발연구원 팀장

우찌다 히로히사 일본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 사장: 일본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독자적인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했으며, 지식을 베이스로 한 연구 개발이 필요했고, 혁신하지 않으면 더는 생존할 수 없었다.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KSP)가 있는 가나가와 현은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는 부지를 조성하고 국가 특구로 지정했다. 세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KSP 내에는 벤처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다. KSP의 새로운 비전은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만들어 벤처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여러 벤처기업끼리 만나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SP의 큰 특징은 스스로 성장시키면서 펀드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 층과 여성들도 사회에 기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에서 벤처기업이 성장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KSP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접목해 세계에서도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일본의 산업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지원책을 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여성 지원이다.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 기업이 육성, 외국인 노동자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미래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다. 글로벌 다양화는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일본 지역에서 글로벌의 거점이 바로 사이언스 파크이다. 이른바 글로벌화에 있어 혁명이다. 기업 경영자의 멘토로서 수많은 경영자를 배출하고 지원하는 오다케 요시키 Aflac Japan 최고 고문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오다케 요시키 Aflac Japan 최고 고문: 오늘은 두 가지 초점을 이야기하겠다. 리사이클을 통해 또다시 자원을 발굴해 세상을 위해 쓸 수 있다. 나는 농촌에서 자랐는데 농촌이야말로 자원의 보고이다. 오늘날 일본 농업이 완전히 추락했다. 그것은 농민들이 노력을 소홀히 했던 면도 있었겠지만, 일본 농업 자체가 너무 과보호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능력을 발굴하지 못했고,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키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만드는 것과 연계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 수평 연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의 토양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토양이다. 거듭 반복해서 말하면 토양이 좋은 이러한 농촌은 자원의 보고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공헌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농업을 어떻게 첨단화할 것인가 하는 시사점을 얻었다.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들어보겠다.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다케 요시키 고문 말씀처럼 우리

농업이 자원의 보고이다. 이제 농업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옛날엔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농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먹거리도 고기능성 식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 단계 변화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 시절,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만들었다. 정부에서 모태 펀드를 조성해 농식품 관련 투자 조합을 결성하면 50%를 지원하게 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농식품 산업을 만들어 보고자 추진했다. 현재 투자 조합이 십여 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막 출발하여 아직까진 미진하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서 2002년 IT산업에 굉장한 투자 붐이 일어났다. IT투자 붐 같은 것이 바이오산업에서 일어났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찌다 선생이 KSP를 설명했는데, 한국에서도 정부의 이런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례를 소개하겠다.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농식품 벤처 산업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경남 지역 전체로 퍼졌다. 10여 년 전 몇몇 농민이 주체가 되어 농업벤처협회라는 식품 산업을 시작했다. 진주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진주바이오21센터를 만들었다.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대학교수, 전문기관, 정부기관 등이 직접 입주해 그곳에 입주한 기업들을 직접 컨설팅해주고 민원을 해결했다. 20여 기업이 입학, 입주하고 일정 기간 후 졸업시키는 제도를 시행했다.

진주바이오벨리, 생물 산업 단지로 이전해서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10여 년 진행하였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장성 도라지를 예로 들면, 도라지에 인삼보다 더 많은 사포닌과 더 좋은 성분을 갖도록 가공하는 기업이다. 또 즙으로 짜서 주스 형태로 판매하는 것에 한 단계 발전해서 술, 차도 만들어 팔았다. 한 단계 더 높여 사포닌 성분을 추출해서 고기능 식품을 만드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벤처시를 진주시가 조성해 농업인들이 직접 식품 가공 분야에서 넓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140 기업이 활동하는데, 그중 젊은 기업을 조성하여 클럽 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학계의 특별한 거점, 허브를 조성해준 결과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찌다 선생의 말씀처럼 세계적인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한·일 FTA가 하루빨리 체결되어야 한다. 한·일 FTA가 추진된다면, 어려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중·일이 지역 간

하나의 공동체로서 단단한 결합체 역할을 해야 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 나라의 역할이 증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질문]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우찌다 사장에게 질문하겠다.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벤처사업에서 일본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 주기 바란다.

[답변] 우찌다 히로히사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사장: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 시장만 바라봐 왔다. 여전히 의식이 내부로 향해 있다. 젊은이들도 외국에서 무언가를 하기 싫어하고 내부적으로만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외부로 계속해서 나가고 외부에서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우진 교수의 말처럼 일본 의식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나는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내 수업에 안 들어와도 좋으니 자꾸 나가보라고 권유한다. 일본인 의식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 중 하나이다.

[질문]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오다케 회장이 일본인의 의식을 보았을 때 어떠한지 말해 주기 바란다.

[답변] 오다케 요시키 Aflac Japan 최고 고문: 우찌다 선생이 말한 그대로이다. 일본인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비판받거나 억눌리는 경우가 있다. 나 역시 회사를 창업했을 때 많은 비난을 받았다. 칭찬받는 것은 아직 일본에 정착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으며 또한 좀처럼 응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제약도 크다. 이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일본에 주어진 과제이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은 사실은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성공한 경우이다. 마음의 힘이라고 할까? 의욕, 성취감 이러한 부분은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배워야 할 점이다. 일본인은 굉장히 강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약하다. 어릴 적 나 또한 일본이 싫어서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일본으로 다시 온 건 결국 일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애국심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필요하다. 경쟁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질문]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한국은 벤처 정신이 넘치고 좋은 정책과 시사점 있다고 했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나 문제점이 있는지 듣고 싶다.

[답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국은 개인적인 의욕이 강하다. 도전 의식이 강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심사숙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에 부족한 면이 있다. 지속적인 면과 전반적으로 섬세하게 하는 것이 부족하다.

농업은 단순히 땅을 흘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해야 한다. 벤처를 어디서 하든지 간에 과학적이어야 하고, 기술·지식 기반이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최근에는 각 분야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도 융합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상호 협력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다. 각 분야에서 이제는 융합하지 않으면 핸디캡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각 분야의 융합을 위해 더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질문]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농업벤처의 특이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어떤 사람이 벤처를 한다고 했을 때 절차나 단계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서비스, 제조, 농업 분야든 모두 벤처를 하려면 기술과 경영을 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경영이라는 것은 시장을 파악하고 미래 시장을 예견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나 부분에서는 다를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내용 면에서는 농업 부분이나 식품 부분은 다르다고 본다. 농식품 부분에서의 벤처 결실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정부·학계·관계기관에서 특별히 협력해서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질문]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우찌다 교수가 말했던 키워드 중 글로벌 다양성이라는 말의 반대가 융합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융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단체전에 강한 일본이 유의해야 할 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우찌다 히로히사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사장: 나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자리를 바꿨다. 나는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미국으로 나가기 준비했다. 해외에 나가면 일본에 돌아와 취직을 못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껄념치 않고 나갔다. 여러분도 일단 밖으로도 나가보길 바란다. 실패해도 괜찮다. 글로벌 플랫폼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실감하는 것이다. 머리로만 해결하려면 안 된다. 몸으로 정신으로 다음 단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다케 요시키 Aflac Japan 최고 고문: 나도 75세이긴 하지만 다양성을 상당히 존중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미국의 경우,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학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인들은 잠재능력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지만, 이런 잠재능력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나는 교육재생위원회의 일원인데 지금 일본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질문]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한·일 관계의 좋은 점과 문제점, 그리고 한·일 협력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前 농림수산물부 장관: 가족 간에도 싸우는 일이 있다. 최근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안타깝다. 우리 지도층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양쪽이 조금씩 참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까지 전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 FTA 이야기를 했지만, 한쪽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지도층이 설득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한·일 관계가 나쁘니 농식품 수입, 영화, 음악 모든 부분에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한 걸음씩 개선이 필요하다. 국경이 낮아지고 서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국가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한·중·일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유럽 이상의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으면 한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의 농식품 수입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기 바란다. 지역 협력, 앞선 노하우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미래사회는 글로벌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글로벌 다양화는 앞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질 것임
- 지역 간 국제 경제 교류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중·일이 한 공동체로서 단단한 결합체 역할을 해야 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 나라의 역할이 증진될 수 있음
- 국경이 낮아지고 상생하는 그런 국가 관계가 되어야 함. 지역 간 힘을 합쳐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성공 전략이 필요

CBD 교류를 통한 지방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한중지역경제협회

한·중간 지방 도시 외교의 핵심은 상무중심구(CBD) 교류다. CBD는 주요 사업, 지원 산업의 기능과 시설을 갖춘 현대 상업활동의 중심지이다. 시장경제 조건에서 경제의 제어 기능은 항상 거대한 비즈니스 구역의 기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늘날 CBD는 시장경제 체제의 중추적 기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한·중간 CBD 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

성상모 한국청소년연맹 한민족 청소년글로벌네트워크연구소장

발표

구어 량 중국 CBD(상무중심구) 관리위원회 부회장

전재홍 인천로봇랜드 사장

리 환화 프랑스-중국 교류촉진 회장

토론

최종찬 건설교통부 前 장관

치우 웨이칭 광둥성 천하구 정부 천하구 CBD 관리위원회 주임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정리

채하연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최종찬 건설교통부 前 장관: 한국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으나, 도시 인구 집중화로 교통 체증과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극심해진 주택난을 겪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서울 주변에만 해도 7~8개의 신도시가 형성되었는데, 반면에 구도시 중심 지역의 노후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구도시 재생 작업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도심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중앙정부는 기존의 각종 제한과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구체적인 문제들은 지방정부가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국가 간에 공유하고 상호 응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정보 교류와 경험 교환이 필요하다.

국제 첨단 비즈니스 구역

구어 량 중국 CBD(상무중심구) 관리위원회 부회장: 베이징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상무중심구) 프로젝트는 1993년에 시작되어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80% 정도가 완성되었다. 현재 베이징 CBD에는 세계적 금융기관과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의 본사들이 대거 밀집되어 베이징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베이징 CBD는 천안문과 공항, 고속도로 진출 입구 등과 가까운 입지 환경적인 경쟁력과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섯 노선의 고속도로를 포함한 넓은 도로망과 세 개의 전철망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50% 이상의 호텔, 무역센터, 한국 LG 쌍둥이빌딩 등 고급 사무 빌딩이 밀집되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 조직과 상공회의소 등 80%의 국제기구와 조직이 포진하였고, 30% 이상의 전시회와 50% 이상의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국제화된 비즈니스 지역으로 이미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3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삼성과 LG를 비롯한 75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의 2013년 납세액이 42억 위안을 차지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공헌이 두드러진다. 또한 완벽한 관리 기제를 갖추었으며, 각종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베이징 CBD 핵심 구역은 현대적 서비스가 집약된 국제 문화 교류 지역으로 고급 호텔, 상업, 문화 시설이 수반되어 있다. 각종 인프라는 물론, 국제 무역이나 고급 비즈니스를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은 Z2B 구역을 낙찰받았다. 베이징 CBD의 동부확정구역도 계획하고 있는데, 총면적이 700만㎡이며 '쌍십자' 형태로 확장될 예정이다.

베이징 CBD는 국제화와 상업 고급화를 추구한다. 이곳은 상업과 엔터테인먼트, 컨벤션이 이루어지고 공공교통 시설이 형성됨으로써, 비즈니스 CBD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친환경 저탄소 CBD로 구축될 이곳에 많은 투자와 참여를 희망한다.

전재홍 인천로봇랜드 사장(최흥규 사업개발본부장 설명): 인천로봇랜드는 종합테마파크이다. 총면적 23만 평으로 인천 청라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사업 목적은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로봇 기술의 허브로서 우리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2020년대에 세계 로봇 시장을 주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섹터는 2008년 12월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천시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로봇랜드가 인천에 위치한 이유는 인천공항에서 15분 거리이며,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또한 인천공항을 통해 비행기로 1~2시간 내로 이동 가능한 지역 내에 10억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다. 2014년 6월 청라역 개통, 지하철 7호선 연장 예정, 서울 경기 외곽순환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며, 김암 IC는 이미 개통되어 있다.

청라 지역은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업무와 주거, 문화와 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 도시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크게 로봇 산업 진흥 시설, 유원 시설(로봇 테마파크),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목표 관람객 수는 연간 280만 명이다.

치우 웨이칭 광동성 천하구 정부 천하구 CBD 관리위원회 주임: 광저우 중 티엔허 지역은 2,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액을 보유하는 큰 규모의 국제적 CBD이다. 삼성과 LG 등이 투자할 계획이어서 아시아 최고의 공장 지대가 될 것이다. 한국의 광주와는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 중 광저우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직 분업이 오히려 수평화하고 산업이 긴밀화되므로 CBD는 스스로 먼저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CBD끼리 교류 협력하며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국제 금융 지역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리 환화 프랑스-중국 교류촉진회 회장: 중국 CBD연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였다. 현대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CBD를 만들어야 한다. 최초의 CBD인 프랑스의 라데팡스가 조그만 도시이면서도 경제적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은 큰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경험을 최초로 한 프랑스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BD 국제 연맹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연맹을 통해 각국은 기존의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잠재적 폐단을 줄이고 우수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업무 환경이 바뀌는 것에 발맞추어 CBD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CBD에는 새로운 건설 개념도 도입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문화 산업과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맞추어 상호 경험을 교류하고 새로운 형태의 CBD에 대해서도 탐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비록 국토와 경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계무대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은 중국이 배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 도시 계획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자본의 세계화와 기업 조직 변화로 공업 도시는 쇠퇴하고 다목적 기업형 혁신 도시가 부상하고 있다. 지방 쇠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성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CBD는 도시 활력을 회복시키고 신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며 생활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국에는 300여 개의 CBD가 있으나, 한국에는 명동 관광특구, 강남 로데오, 인천 송도 지구 등 소수만 형성되어 있다. 지역 경제와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중 간 CBD 교류가 매우 절실하다. 한·중 CBD 교류는 한중 경제 교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해외 CBD 성공 사례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조직적 연구 시스템 필요
- CBD 설계 단계에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콘셉트를 선정함으로써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것임
- 낙후 도시에 지역 특색을 살린 CBD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지방 자치 단체의 관심이 요구됨
- CBD에 수반되는 교통 체증, 야간 공동화 현상 등의 극복 방안 수립 필요
- 한·중 자매도시 간의 CBD 지역 내 상호 특혜 제공 등 도시 활성화 노력이 요구됨
- CBD 내 건물, 시설물, 각종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해 예방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CBD를 설정하거나 구도심 재생 사업을 할 경우에는 친환경 설계는 물론, 벽화 작업, 꽃밭 가구 기와 같은 '범죄 예방 디자인'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한 유라시아 구상

동아시아재단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의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를 하나로 엮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창한 바 있다. 해당 구상에는 남북한의 철도망을 통해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제안과 에너지 협력을 증진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유라시아 진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혜택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와 맞물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 간의 관계 안정과 협력이 없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본 세션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 통합의 비전과 과제를 4개국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회
박수현 경희대학교 교수

발표
알렉세이 V. 쿠즈네초프 세계
경제와 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청 사오허 중국인민대학교 국제
학원 부교수

김태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교수

켄트 켈더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 · 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정리
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유라시아 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러시아는 연방 국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구소련 연방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자주권을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 국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양하다.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내전 상황에 처해 있고, 몰도바 및 그루지야(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코카서스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벗어나 유럽 친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반면, 이른바 ‘파이크스탄’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자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 유럽연합,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바, 브레진스키가 처음 도입한 개념인 지정학적 다원주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유라시아 통합과 평화 구축, 남북한 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결,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구상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유라시아 구상의 지정학적 함의

유라시아 지역의 변화 양상은 여러 분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켈트 켈더 박사는 우선 중국의 근대화가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가파른 성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에 있어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협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것이며, 송유관 연결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8년부터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구소련 연방 붕괴로 이어진 사건도 주변 정세 변화에 역사적으로나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구소련 연방 붕괴 후 중앙아시아 외 주변 지역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켄트 켈더 박사는 에너지 의존도 심화와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안보 전략상의 측면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라시아 지역 진출에 있어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중국 등과의 이해관계 및 의견 불일치 문제 때문에 향후 민감한 지역적 이슈들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미 대륙에서의 셰일 가스 발굴로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에너지 수급에서 협력 관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초점을 맞추는 인프라 구축이 광범위한 지역 협력 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 교류와 더불어 좀 더 발전된 시장 중심의 질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라시아 통합—러시아의 비전과 전략

유라시아 협력에 있어 주요 국가인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른바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상을 실행해 가는 데 있어 내수 시장

확장과 관세 동맹 실현을 통해 첫 단추를 끼울 계획이다.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소장은 러시아가 유럽연합(EU)과 협력을 추진했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을 확립하지 못했고, 그 대안으로 통합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업, 화학 산업 등 인프라 산업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상이 제시되었다고 그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쿠즈네초프 소장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밝혔는데, 첫째로 지역 협력 프로젝트 이념을 내세운다는 점과, 둘째로 인프라 부문에 초점을 맞춘 점을 들었다. 여러 중진 국가가 모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 추구를 통해 합의를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과, 중진국과 후진국의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개발을 거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접경 국가들과의 이견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쿠즈네초프 박사는 러시아는 아직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맹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등 지역 국가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 러시아와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한편, 러시아가 에너지를 지렛대 삼아 외교적으로 이용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쿠즈네초프 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유럽에게 책임을 물었다. 물론 러시아의 거대 에너지 회사인 가스프롬이 국영기업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에너지 수급을 위한 인프라의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가 제값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행동 또한 이 문제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유라시아 비전

또 하나의 주요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유라시아 협력 구상에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유라시아라는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개념으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까지 개입된다면 안보 관계에서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샤오허 교수는 학자들의 견해차로 유라시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유라시아 협력 구상보다 규모가 작은 동북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중국 FTA 체결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유라시아 협력의

성공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협력과는 별도로 중국은 세계 제1경제권이라는 입지를 활용한 이른바 '원로드 원벨트'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원로드 원벨트' 정책은 옛 중국 실크로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과거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란을 통해 유럽까지 가는 통로였던 실크로드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중국의 주도하에 철도, 도로 시스템의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초기 개념 단계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육상 실크로드의 해상으로의 확장을 꿈꾸는 해상 실크로드 구상도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고, 남지나해를 통해 인도양까지 연결하려면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어려움이다.

청샤오허 교수는 또한 중국의 경제 산업 부문에서 큰 역할을 맡은 동북 3성 지역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경제 협력을 위해서도 이 지역의 재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한 2018년까지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송유관 및 가스관 설치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 내 경제 특구 설립의 구상,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노력을 통해, 다른 기타 경제 협력체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 - 비전과 전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한 당사국인 한국의 구상은 3가지 차원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지리경제학적 측면으로, 1997년 이래 하향세를 걷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통합된 유라시아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른바 유라시아 통로(corridor)로서 에너지, 수송, 물류 분야 등 지리경제학적 수요를 맞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는 안보 측면이다. 유라시아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가장 심각한 북한 문제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리 전략 측면으로 현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김태환 교수는 한국이 봉착한 두 가지 난제를 제시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상황이 그 중 하나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강화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 지향 국가로, G20 국가 중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량으로 전체 1위이다. 또한 2003년 이래로 중국은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로 부상하였고 전체 수출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역내

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종속성을 피하고 일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난제는 북핵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5·24조치 이후 남북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만이 겨우 맥을 이어갔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와 핵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북핵 문제의 불모가 되어 버린 한국 정부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상한 전략적, 외교적 출구 전략이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완전히 새로운 구상은 아니었다. 이미 메드베데프, 푸틴 정부와 유라시아 진출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시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김태환 교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해당 구상이 지닌 차별성을 강조했다. 우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공동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으로, 한국의 독자적 이익이 아니라, 다자 이익과 국제 협력, 공동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포괄적 안보협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범지역적 경제 통합과 다자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한국이 중재 국가로서 다자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미시적으로는 북한을 관문 지역으로 하여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을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역할을 이행한다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매번 생각에만 그치고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태환 교수는 이에 대해, 진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과 진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사업 진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이미 민간 기업들이 진출한 바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철수했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타당성 없는 사업에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다. 북한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을 통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의 남북 관계로는 북한이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없다.

비즈니스 재창조, 위대한 성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세기는 우리 사회와 기업들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위대한 성장을 주제로 CEO들의 비즈니스 재창조에 대한 해답을 공유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업 성장을 이루어 창조적 모델을 만들 것인지, 21세기 기업은 어떤 창조성을 요구하는지, 위대한 성장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 및 발표

최은수 MBN 경제부장

발표

문국현 한솔섬유 대표이사

윤성태 휴온스 대표이사

김철웅 에코마케팅 대표

정리

최은수 MBN 경제부장

창조경제

최은수 MBN 경제부장: 창조경제란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이었다. 어떻게 하면 질적 도약을 할 것이냐 이것이 창조적 역량이다. 창조 경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을 같이하고 있다. 9만 년 동안의 수렵채취 활동(사람)에서 1만 년 동안의 농경사회(토지, 노동, 자본), 산업화 시대(노동, 자본)를 거쳐 불과 30년 전에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지식 정보화(지식) 혁명이 일어났다. 앞으로의 시대는 감성-경험의 시대(창조성)로 아날로그 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서 지능이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인가 리더들이 가지고 갈 중요한 과제다.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Uniqueness(남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Excellence(남보다 앞서는 것), Next-Future(미래·변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변화를 거부한 기업은 도태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실업률과 빈부 격차로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를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 대변혁)라고 하는데, 세상이 지금 대변화의 끝에 있다. 그 변화를 잘 이끌 수 있으려면 창조적 역량이 필요하다. 창조적 아이디어, 남이 실천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고 20~21세기 산업을 컨버전스 시켜 한국에 없던 산업을 만들어야 위대한 성장을 이끌어낸다.

창조경제를 이끄는 데는 다섯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Two-way(Feedback) System, 쌍방향 소통으로, 수직적 관계(수직사회)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수평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평사회는 부드러움과 유연성, 설명과 설득, 바텀업, 창조적 역량, 겸손, 권력의 분산, 협업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Push형 사회를 Pull형 사회로 바꾸어내는 Demander-based System이다. 그동안 탑다운 방식의 지시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고객의 니즈를 당겨서 구체화하는 Pull형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나이키의 경우처럼 자신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에 맞는 신발을 맞춤형으로 주문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형적인 Pull형 사례다. 20세기는 이성의 시대였다. 모든 경제 개념이 합리적인 패턴에 따라 경제를 전망했는데 21세기에는 이성의 법칙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Heart Storming 감성의 리더십을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경제의 세 번째 패러다임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컴퓨터를 고르는 기준은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Heart Storming을 적용한 브랜드,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으로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 네 번째 패러다임은 사람이 일하는 시대(People Working)가 아닌 사람이 일하지 않은 시대(Avatar Working)이다. Avatar Working은 기업이 일하지 않고 협력업체, 시스템, 돈, 고객 등이 직접 일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 뱅킹과 같이 기업은 프로세스만 구축하고, 고객이 직접 조회, 이체를 실행하는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 패러다임은 초연결성 사회(hyper-connectivity)로 이동하는 패러다임이다. 기존의 방송·신문과 같은 전통 미디어는 전파가 해당 국가와 주변국에 그치지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SNS는 전 세계인을 연결하고 있다. 정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연결하는, 그야말로 초연결성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사례를 발표한다.

Creating Shared Vision & Value

문국현 한솔섬유 대표이사: 과거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 폐수 방출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생겨 결국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실패한 사회였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의 성장을 거두지 못한 반면, 독일은 사람을 중요시하고,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30% 줄이는 방안 등으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람 중심적이고 고객 중심, 고객과 기업의 관계를 좁히는 데 힘써, 2,400억 달러의 중국보다도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사람을 해고하고 재모집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을 평생 학습하도록 하여 주류로 만드는 것이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 중심, 고객 중심으로 나아갔다.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객을 알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는 연구개발과 마케팅이 21세기의 경쟁력이라 보고, 독일은 조직 혁신과 고객에 대한 정보 혁신,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유한킴벌리는 1988년~1995년에 노사 분규가 심했던 회사였으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직장으로 만들면서 근로자 이직률 1% 이하, 생산성은 3배, 품질은 6시그마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이뤄냈는데, 스피드 투 마켓(ICT 기술을 포함한 신뢰 기술을 결합시킨 모델)으로 견고하게 이끌어 나가고 평생 학습 체제를 기업 내에 심어 창조적 역량을 이끌어냈으며,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만들어냈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창조 체제, 창조적 파괴를 끊임없이 전 직원, 전 협력업체들이 하나감으로써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고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닌 개개인들의 꿈, 지역 사회의 꿈, 지구촌 시민 사회의 꿈이 일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유 가치 창출 경제가 필요하다.

Creative Economy of Huons

윤성태 휴온스 대표이사: 인류 건강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인 휴온스는 전문의약품만 취급하는 다른 제약회사와는 달리 비급여 의약품(비만), 수출, 수탁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14년 동안 매출을 30배 성장시킬 수 있었다.

휴온스는 적자 회사를 인수하여 흑자 전환시켜 앰폴 바이알, 카트리지-유리용기를 제작하는 (주)휴베나, 세척 살균 소독제를 만드는 휴니즈, 성형제제를 만드는 휴메딕스와 같은 자사 계열사로 M&A하여 기업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고, 고기술시설(High-Tech Facility)을

가지고 일양약품,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아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일동제약 등 수탁 생산하여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깨지고 다칠 위험성이 있는 유리용기 대신 안전하고 다루기 쉬운 플라스틱 케이스, 일회용 플라스틱 무방부제 점안제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고, 수입품인 국소 마취제를 국산화하여 국내 50%를 점유하는 등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 제품 차별화에 힘쓰고 있다.

국내 유일의 종합헬스케어그룹이 되기 위해 200억을 들여 중국 진출 준비 중이고, 점안제(인공눈물) 시장의 미래를 보고 수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개발(필러, 더마샤인, 원심분리기), Botox Similar, 천연물 신약 등 미래 의약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R&D 비용을 연간 7% 지출할 계획이다.

휴온스는 위와 같이 창조경제의 세 가지 컨셉(Uniqueness, Excellence, Next · Future)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이끄는 다섯 가지 패러다임 중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탄없는 대화와 해결 방법을 모색, 정보 공개를 통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인재 경영을 하는 등 Two-way 소통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997년 국소마취제를 시작으로 1998년 플라스틱 주사제, 2003년 웰빙의약품, 2013년 천연물 신약 개발 등 Pull 경영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고객만족을 위해 변신하고 있다.

김철웅 에코마케팅 대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대부분의 대행사는 화려하고 멋있는 크리에이티브에만 집중하고 광고주를 만족시키기 위한 접대에,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한 리베이트를 제한한다. 또 단기 실적을 위해 대형 광고회사의 하청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고 사업의 본질은 광고를 의뢰하는 고객의 매출 극대화인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미비한 상황이다.

에코마케팅은 업의 본질(매출 극대화)을 파악하여 유니크니스(Uniqueness)를 잘 이용해 경영에 활용하였다. 에코마케팅 초기 창업 당시 200개가 넘는 동종업계 회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남아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 고객들의 니즈(매출 극대화)를 충족시켜 굳이 영업하지 않고, 접대하지 않고, 광고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알아서 고객이 찾는 기업이 되었다. 게다가 에코마케팅은 조직 전체가 가장 최고의 속도를 내는 방법으로 아우토반 인사법칙을 만들어 모든 직원이 자기 역량의 200%를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입사 일에 따라 직급이 달라지지 않고 능력이 발휘된 직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고액 연봉, 명품 가방, 명품 정장, 명품 만년필, 명함지갑,

BMW&Benz 등 제공)를 함으로써 최고의 인재로 최고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인사 구조를 만들었다.

신생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보고 사업의 본질을 찾아내어 집중하고, 아우토반 인사법칙과 같이 직원들이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국가가 성장하려면 기업들의 창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이번 세션에서는 1 등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떤 창조성이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계기가 됐으며, 결국 창조적 역량을 분출시킬 인재 육성, 창조적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됨
- 정부는 창조성이 분출될 수 있도록 '창조 생태계' 조성이 시급
-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진 20세기형 정책과 제도를 21세기형으로 리모델링해야 함
- 산업 간 통합과 융합을 통해 신산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시급함
- 창조도시, 창조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

동아시아재단

지난 30여 년간 인구 증가와 함께 건실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아시아는 무역, 금융, 투자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을 서서히 증대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ASEAN과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룹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지역 경제 협력 그룹의 대립 구도 부상과 그것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발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왕 용 북경대학교 국제정치경제 연구센터 소장

야마시타 카주히토 캐논 글로벌 연구소 연구부장

정리

신윤희 동아시아재단 간사

일본의 시각에서 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야마시타 카주히토 캐논 글로벌연구소 연구부장은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데 있어 농업 방면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농민은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일본 의회의 농업 부문 위원회에서도 쌀, 밀, 설탕, 고기, 유제품을 협상 제외품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TPP 협상에서 농업 관세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일본 정부는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을 기회로 쌀, 밀, 설탕에 한해 현재 관세율을 유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일본은 관세율 쿼터 안에서 저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품을 조정할 수 있다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일본이 육류 관세율을 상당 수준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협약은 일본 양돈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사실 정부는 직접 보조금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므로 개방 때문에 개별 농민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거의 없다. 반발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단체의 수익도 줄어드는 농업협동조합(농협)으로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농협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야마시타 부장은 TPP 협상에 대한 어려움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덧붙여 야마시타 부장은 TPP 협상이 이뤄질 호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은 독특하게 의회 내 미국무역대표부가 무역 관련 내용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타결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현재 미 의회 내 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현 상황은 TPP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야마시타 부장은 양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선거가 끝나는 2015년이야말로 협상을 타결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TPP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왕 용 북경대학교 국제정치연구센터 소장은 TPP 구상이 처음 중국에 제안되었을 때, 중국 내 반응은 회의적이었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의 하나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의 대화와 같은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후, TPP에 대한 중국의 이해는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왕용 교수는 작년에 이뤄진 지도부의 개편이 국내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국 내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TPP 가입을 통해 중국 내 급진적 개혁 추진에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TPP 자체 기준이 너무 높기 설정되어 있어 실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 내 국유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마지막으로 왕 용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TPP를 비준시킬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오바마가 신속승인절차(TPA)에서 TPP를 승인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가정 하에, 야마시타 부장과 동일하게 중간 선거가 지난 2015년이 TPP를 비준시킬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국의 TPP 가입 여부, 그리고 가입 시점에 대한 논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TPP 가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여부가 아닌 가입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아시아 서플라이 체인에 한국이 끼지 못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미·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 한·일 FTA 선점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안덕근 교수는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를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TPP 참여를 통해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북 관계 및 아시아 안보 외교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념과 문제점

왕 용 북경대학교 국제정치연구센터 소장은 RCEP은 동아시아에 있어 중요한 전개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심의 TPP와 달리 RCEP는 리드하는 국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왕 용 교수는 RCEP는 각국이 함께 주도하여 지역의 협력을 도모하는 합의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왕 교수는 2015년 말까지 협상에 대한 타결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RCEP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RCEP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약소한 국가들로, 이들만으로는 지역 협력 디딤돌을 만들기에 그 동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에 대한 전망

사회자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궁극적으로 RCEP도 문제없이 타결되리라 내다봤다. 한국의 TPP 참여 시기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통상정책에 있어 미·중 간 균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FTA를 크게 칠레, 싱가포르·미국, 그리고 중국·싱가포르, 칠레와 같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의 FTA, 미국·요르단, 이스라엘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FTA, 마지막으로 미국·한국 간의 FTA처럼 경제적, 정치적 목적이 혼합된 경우로 분류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 FTA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미·중 관계 대립에서 오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 혼합형으로, 빠른 타결을 예측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중 FTA 관련, 10년 전과 비교해 국내 여론의 많은 변화를 언급했다. 그가 꼽은 긍정적 여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흑자 국가는 중국으로, 그동안 중국을 공장지로 활용했다면 FTA 체결 이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그간 걸림돌이었던 농업 분야의 경우, 보호 항목 10%를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국민의 거부감이 적다. 둘째, 기존 FTA의 성공 경험이 상당한 학습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시장 개입에 따른 PA를 다루는 정부 조직,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기에 산업은 물론 정치계에서도 큰 반발이 없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이 조기 타결, 시행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안 교수의 의견이다. 특히 그는 오는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한·중 FTA의 가시적 성과가 있으리라 전망하며 한·중 FTA 체결 이후 자연스레 TPP 문제가 새롭게 부상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왕 용 북경대 교수는 한·중 FTA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 역시 안 교수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한·중 FTA 협상 가속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그는 FTA 관련 정치적 요인을 매우 중시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전환기에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같은 일부 산업은 경쟁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업종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련 대상 간의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해 균형 있는 FTA 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중 교육 중요성을 언급하며, 긍정적 역할을 기대했다.

한·중·일 FTA

야마시타 카주히토 캐논 글로벌연구소 연구부장은 자신의 유럽 일본공사 경험을 예로 들며 유럽 통합의 배경에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 요인이 컸다며, 정치적인 이유가 FTA 체결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중·일 FTA 관련해서는, 만약 체결된다면 3국 모두 RCEP 가입국이기에 때문에 RCEP 추진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 내다봤다. 나아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데 TPP, RCEP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FTA,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전해 우리 스스로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독일의 경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도 서로 용서하고 유럽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이를 거울 삼아 반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 이 지역 간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왕 용 북경대학교 국제정치연구센터 소장은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물론 동시에 정치적으로 우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중·일 3국에는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지도자들이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협상이든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국내 및 국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호 신뢰 부족을 꼽았다. 또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야마시타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는 심층적, 치밀한 경제 협력 규칙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중·일 3국 FTA 체결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곧 한·중 FTA가 체결될 것이고, 이어서 미국, 일본 중심의 TPP가 체결된다면 한·중-미·일 간 전략 관계가 더 벌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TPP 체결 이후, 연이어 백그라운드에서 한·일 FTA가 이루어진다면 한·중·일 FTA 역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 예상했다.

또한, 그는 역사를 모두 용서하고 경제 통합을 이룬 유럽에 반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한·중·일 3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풀기 위한 학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의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오히려 국제적인 학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최신 운용 전략 및 자산 시장 전망

한경비즈니스

국내 증시에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특히 헤지펀드 등 새로운 투자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노하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 운용사들의 투자 노하우와 올해 주식 및 채권 등 자산 시장 전망을 들어보았다.

사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발표

김동일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대표

안홍익 트러스트자산운용 팀장

심효섭 KB자산운용 주식운용 팀장

김광현 한국경제신문 부장

토론

채준규 국민연금 주식운용실 팀장

박용성 트리니티투자자문 상무

정리

이홍표 한경비즈니스 기자

심효섭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 팀장: KB자산운용은 중·장기 성과가 좋은 운용사다. 중·장기 성과가 좋기 위해서는 운용 철학을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여러 자산 운용사가 운용 철학을 강조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자산운용은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노력이 KB자산운용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물론 단점도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KB자산운용의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한다.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는 경우가 많다.

KB자산운용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또 구조적으로 업황이 상승하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즉 투자 포인트는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시장 지배력, 기업의 신성장

엔진,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등 네 가지다. KB자산운용은 이 기준을 가지고 투자해, 코웨이·아모레퍼시픽·한글과컴퓨터·한진칼·GS홈쇼핑 등의 장점을 발굴했고, 대규모로 투자해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 높은 점수를 주는 기업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를 좋은 기업으로 꼽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또 반도체 업황이 상승하면서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다. 또 네이버에도 관심이 있다. 네이버는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깔끔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이익 추정을 쉽게 만드는 장점도 있다.

펀드매니저는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아모레퍼시픽에 투자했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 증권사의 화장품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직원들을 인터뷰했다.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방문판매 직원들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얼마 후 이 애널리스트는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줬다. 면세점이나 백화점 판매가 늘면서 방문판매 직원들의 재고까지 해소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아모레퍼시픽에 투자하는 데 좋은 지표가 돼 줬다.

한국의 여러 애널리스트에게 바라는 점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다. 사실 최근 들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매니저들이 늘어났다. 또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장기투자하는 기관들도 주식시장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애널리스트가 알려주는 기업의 분기별 실적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펀드매니저는 산업과 기업의 큰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에 더 관심이 간다. 특히 대다수 애널리스트와 반대되는 의견도 꼭 참고한다. 반대 의견은 펀드매니저가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업 사이클을 겪어 본 중견 애널리스트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오랜 업력에서 나오는 심층적 분석은 펀드매니저들에게 매우 고마운 자료이다.

안홍익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팀 팀장: 독립계 자산 운용사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운용 철학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의 철학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주식을 ▷내재 가치 이하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 리스크는 '자산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펀더멘털의 변화'라고 정의한다. 이 때문에 한 번 선택해 투자한 종목은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운용 철학의 유지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 회사 내 한두 개 펀드의 성과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펀드 성과를 평균한 지표가 있다. 200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평균 성과가 시장을 밀든 적이 없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은 투자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장기적 방향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코스피 시가 총액에서 각각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게 요동쳤다. 2001년 기준으로 통신업은 코스피의 18%나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 통신업의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은행 역시 꾸준하게 비중이 줄고 있다. 또 철강은 2007년께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줄어들었고, 반도체는 같은 기간 비중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결국 개별 기업 역시 이 같은 큰 틀에서 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들어 정유 업종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각광받았던 정유업은 1990년대 들어 쇠퇴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중국 수출을 통해 부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정유 산업이 포화 상태에 돌입했다. 이제 중국은 정유 제품을 직접 수출까지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정유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다.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한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리포트는 복잡한 말보다 '중국 정유업의 수출입 추이'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됐다. 건설이나 조선 등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건설은 실제 중동 국가들의 플랜트 발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선은 에너지 업체들의 해양 플랜트나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결국 투자 판단은 펀드매니저의 몫이라고 본다. 투자 판단을 애널리스트에게 맡기는 펀드매니저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즉 애널리스트는 펀드매니저가 큰 흐름을 볼 수 인사이트를 주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다. 몇 년 전 트러스트자산운용은 한 대형 태양광 회사에 대규모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지를 치기 직전 투자금을 회수했다. 계기는 유럽의 한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2010년 태양광 모듈은 전년보다 무려 7배나 많이 팔렸다. 대다수 애널리스트는 이를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 애널리스트는 이유를 이탈리아의 '살바 알코아법'에서 찾았다. 이 법은 간단하다.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이 시기에 많이 늘린 후, 1~2년 후부터 대폭 줄인다는 내용이다. 즉 이탈리아 기업 및 국민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 패널 설치에 나섰고 그 후에는 설치를 멈췄다. 이는 세계

태양광 업체의 매출을 급속하게 늘리는 계기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 펀드매니저들은 '활발한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줄이고 있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기업의 실적이나 정보보다 큰 틀의 아이디어를 주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

김동일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대표: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트는 9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운용사다. 프랭클린템플턴의 글로벌 채권 전략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소개한다.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자산시장의 화두는 미국중앙은행(Fed)의 양적 완화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중앙은행(BOJ)이 꾸준히 돈을 풀 것이므로, 세계의 유동성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국채는 꾸준히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즉 이제 채무를 늘려 성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신흥국은 아직 성장 잠재력이 크다. 또 국가 채무 비율 역시 선진국에 비해 낮다. 이와 함께 지난 금융 위기 이후 외화 보유액도 탄탄히 쌓아놓았다. 웬만한 악재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중 한국 국채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멕시코 국채 역시 투자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가장 주목하는 상품이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의 수출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중국인의 소비와 인프라 투자가 받쳐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채권 투자의 키포인트는 '통화'다. 현재 세계 국채는 모두 저금리다. 일례로 필리핀의 3년 만기 국채는 2% 수준이다. 당연히 선진국은 더 낮다. 이 때문에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통화가치의 변동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비교적 탄탄한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매우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트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서 각국에 리서치 인력을 두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리서치 인력을 되도록 현지인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그래야 현지의 네트워크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리서치 인력이 자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애널리스트들끼리 더 친해져야 좋은 정보가 생산되기 때문이다.

김광현 한국경제신문 부장: 최근 IT 분야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겠다. 요즘 가장 화제의 인물은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다. 마윈은 중국의 아파트에서 창업할 때부터 실리콘밸리를 노렸다. 특히 쇼맨십이 있다. '첫째는 고객이고, 둘째는 직원이고, 셋째는 투자자다.'라는 말을 투자자들에게 서슴없이 한다. 알리바바는 최근 기업공개를 통해 172조 원 규모로 상장됐다. 네이버가 25조 원 수준이다.

최근 구글은 무인운전차를 내놨다. 무인운전차는 2030년께 상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은 '사물인터넷'의 일환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테슬라의 회장 엘론 머스크도 화제의 인물이다. 남아공 출신인 엘론 머스크는 천재라는 말이 어울린다.페이팔을 팔아 2,000억 원을 벌었는데, 이를 모두 태양광, 전기차, 우주선 회사에 투자했다. 망할 뻔도 했지만 최근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매우 크게 오르고 있다. 그는 '화성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큰 꿈을 꾸는 사람이다.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국으로 돌아가 보자. 이미 중국의 IT 규모는 미국과 비슷해졌다. 10대 인터넷 업체 중 4개가 중국이다. 아울러 PC 1위는 중국의 레노버다. 레노버는 곧 스마트폰에서도 3위가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미국과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 예전 같으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무섭다.

한편 어제 NBC에서 에드워드 스노든이 '모든 정보기관은 스마트폰을 감청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사이버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채준규 국민연금 주식운용실 팀장: 국민연금은 대형주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행지표'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 부동산이 화두다. 미국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은행 간의 신용금리가 금융위기의 선행지표가 됐다. 반면 유럽 재정위기

역시 은행 간의 신용금리로 이를 예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흔들린다면, 어떤 선행지표를 가지고 평가할지 알려 달라.

박용성 트리니티투자자문 상무: 투자자문사는 바텀업과 탑다운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주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낳게 한다. 최근 가장 주목하는 트렌드는 '거버넌스'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회사임에도 오너들의 거버넌스에 의해 그 회사의 진가가 숨어 있는 경향이 컸다. 이제부터 이를 뜯어보는 작업을 많이 하려 한다.

[질문]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그간 증권업은 양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최근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줄어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답변] 안홍익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팀 팀장: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를 통한 거품이 생겼다. 최근의 상황은 거품이 빠지는 단계라고 본다.

[질문]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앞으로는 어떤 금융상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보는가?

[답변] 김동일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대표: 기존의 뮤추얼 펀드보다는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이 부각될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 역시 뮤추얼 펀드의 성장세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프랭클린템플턴 역시 다양한 대체투자 회사를 인수 중이다.

[질문] 윤지호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센터장: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변] 심호섭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모두 마찬가지다. 결국 회사 간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회사 간의 우열을 만들 것이며, 몇몇 회사가 도태하면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애널리스트들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는 '차별화'를 찾아야 함
- 역발상으로 지금 금융투자업이 처한 상황은 긍정적일 수도 있음
-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분석 및 투자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음

한·중·일 경영자 교류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한·중·일 기업의 협력

아시아 3국은 최근 정치적 긴장감 속에 가깝고도 먼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리더가 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3국의 융합은 경제 문화적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미래보고서가 많다. 9회를 맞는 제주포럼은 중국과 일본의 정기방문단이 참여하여 3국 협력의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다양한 회의와 국제적인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시대의 경영리더들의 비즈니스를 돕고 있다. 아시아 3국의 경영자 교류회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한·중·일 기업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교(aSSIST), 한중지역경제협회,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3국 방문단 대표들의 발표와 함께, 3개국 참가자들이 서로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사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발표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한솔섬유 대표이사

야오 하이타오 북경 조우추취시스템 유한공사 회장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창업자

정리
류하진 크레온 창의콘텐츠그룹/대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중국은 인구 면에서 그리고 최근 경제력 관점에서도 G2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현재 한·중·일 3국은 영토 분쟁을 비롯한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새로운 아시아 설계를 위한 한·중·일, 3국 기업의 협력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기로 한다.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한솔섬유 대표이사: 21세기는 기업과 시민이 협력하는 시대이다. 세계는 지금 자본 중심의 기업에서 인간 중심의 기업 형태로 점점 더 바뀌어 가고 있다.

Stockholders 중심의 기업 형태에서 Stakeholders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기업은 지식의 집합소이다. 지식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식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세계 기구로 성장 발전한 단체이다. 동북아 시대의 아시아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한·중·일 기업인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는 아시아 협력기구가 필요하다. 기업의 가장 큰 덕목은 행동하는 것이다. 시대적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본다.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창업자: 일본은 현재 '히트아일랜드(도시고온화)',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다. 경제 발전에 힘입어 최근 한·중·일 모든 국가에서 겪는 문제 중 환경 문제 같은 것은 일본이 먼저 많은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한다면 중국과 한국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는 800년을 주기로 하여 동서양 문명의 주도권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2001년부터는 아시아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한·중·일 3국의 역할은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태생적으로 한국과 중국과는 떼어낼 수 없는 DNA와 같은 근원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의 협력은 중요하며 또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이 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한다.

야오 하이타오 북경 조우추취시스템 유한공사 회장: 중국은 개혁 개방을 추진한 지 약 35년이 되었다. 앞으로도 경제 개혁 개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기업과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국가기관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국도 작은 정부, 큰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협회연합(ICOC)'이라는 단체를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한다.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일 기업 간 정기모임의 메커니즘을 확립한다든지, 컨퍼런스, 포럼 및 기타 활동을 위한 '기업가 협력(alliance) 진흥회'의 발족 등 국가나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많은 역할을 ICOC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한솔섬유 대표이사: 중국에서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거두는 세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지출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매출의 1%라도 기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창업자: 일본 상공회의소에 글로벌협회연합(ICOC)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 장만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위해 한국이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야오 하이타오 북경 조우추취시스템 유한공사 회장: 일본 오타케 선생께서 한·중·일 상공회의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중국은 경제 부분에서 아직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정부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강하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해 민간 기업의 발전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라오스 신수도 개발에 중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런 노력도 아시아 국가에서의 중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도 라오스 개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청중 발언] 장태평 前 농림수산부장관: 한·중·일은 문화, 역사, 풍토나 심지어는 인종 면에서까지 유사한 점이 많고, 그 밖의 많은 이유로 꼭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3국 모두 국가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인 논리로는 당분간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 내다본다. 3국의 협력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경제적 협력을 위한 기준과 규칙이 필요한 때이다. 정치와 분리해서 경제적으로 3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이 FTA를 통한 경제 협력을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청중 발언] 테쓰오 교도쿠 일본 BE연구소 소장: 세계의 평화와 번영은 아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의 3국인 한·중·일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본다.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한솔섬유 대표이사: 기성세대는 분명 한계가 있다. 20대, 10대를 교육하기 위한 기금을 모아서 원아시아(One Asia)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일 기업인들에게 민간 차원에서 젊은 아시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기금 마련을 제안하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시대적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한·중·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
- 경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현재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 등은 일본의 경우 훨씬 더 오래전부터 경험하였기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이런 경험들을 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공유한다면 아시아 평화에 번영에 분명 도움이 될 것
- 기업과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글로벌협회연합(ICOC)'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중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

제4장

문화교류와 새로운 아시아 정체성



특별세션 I

불가사의한 나라: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한국의 역할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발전을 이룬 나라이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달성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상위에 속하는 경제력을 가진 모범국가가 되었다. 특별세션에서는 한국의 경이적인 발전에 내재한 잠재력은 무엇이며, 한국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작가, 다니엘 튜더를 통해 들어 보았다.

사회

강지영 JTBC 아나운서

발표

다니엘 튜더 작가·사업가·
前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정리

강찬구 동아아시아재단 간사

‘선진국’ 병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많은 한국 사람에게 한국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한국인이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고 가짜 선진국이라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교수로 있는 내 친구가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슬픈 기분이 들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나와야 할 표현은 자괴감이 아니라 끔찍하다, 유감스럽다, 애도를 표한다 등이 적절할 것인데 말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후진국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을 바라보노라면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느라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많은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성급함만 앞선 듯하다. 목표 달성에 대한 과욕으로 다른 나라와 자신을 계속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집착하는 선진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부자인 나라? 인프라가 발전한 나라? 아니다. 선진국이란 국민 개개인을 동등하게 대하고 성공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국가를 뜻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선진국이라 자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즉, 선진국과 후진국을 분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을 스스로 선진국이 아니라고 한탄하며 서방을 따라 잡으려는 경쟁심리가 팽배해 있고, 이 때문에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생략하는 지름길을 추구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안전이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화두로 한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 ‘괜찮아’의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세월호 사건은 기업과 정부 당국이 안전 문제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번 사건의 밑바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리더십 부재나 기업의 탐욕 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제도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다.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세월호 사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도 정작 내 친구는 9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것이 안전 의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안전시설 없이 방치된 도로 위 공사 현장, 뒷좌석 안전벨트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택시에,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폭주하는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분들에게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기 일쑤다. 바로 ‘괜찮아’ 의식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마초적인 정서가 묻어나는 한국의 ‘괜찮아’의식에 본인도 종종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비해 본인의 모국인 영국의 안전 보건 규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모든 것이 엄격한 규제 및 법의 틀 안에 존재한다. 짜증 날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지키는 데는 정서적인 부분이 작용한다. 음주운전을 생각해보자. 음주운전은 위험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음주운전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에 대해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정서는 뿌리박힌 한국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3, 40년 전의 영국도 음주운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공공 캠페인과 공익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괜찮아’문화가 문제이다. 이제는 ‘안 괜찮아’캠페인이 필요할 때다. 안전을 중시하고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대중들은 분노해야 하며, 이로써 안전을 무시한 행위가 사회적인 수치심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경우,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는 이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가 많다. 세월호를 예로 들면, 낡은 중고 선박 구입, 무단 개조, 적정 화물 기준 초과 적재, 경험 없는 비정규직 고용 등이 문제였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안전을 업신여기는 행동은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하는 버스 기사,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배달기사 등이 모두 돈을 아끼기 위한 고용주들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최근 국회 감사를 통해 드러난 안전규칙 위반 건수는 7,000건 이상이었고,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29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한국의 13분의 1 수준이다. 엄격한 법률 적용 덕분이다. 최근 발생한 종합터미널 화재,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제2롯데월드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100개 이상의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 수치심을 느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이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구속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권력층들을 상대할 때는 더 그렇다.

규제 당국과 규제 대상 사이의 친밀한 관계도 문제이다. 기자로 있으면서 금융규제 당국과 은행장 모임을 가보면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다. 밀렵꾼과 이를 감시하는 사람 사이가 이렇게 친해도 될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를 영어로 Financial Service Commission이라고 한단다. 혹자는 여기서 Service란 금융업계에 대한 봉사라고 농담조로 표현하기도 한다. 당연히 틀린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금융권이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큰 어려움 없이 벗어날 수 있었던 한국도 메가

뱅크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메가 뱅크들을 과연 누가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과 규제 당국 간의 친근한 관계가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이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인지 실질적인 책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러났던 정치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한국 내의 정치인에 대한 기준은 학벌, 재력 등에 많이 좌우되는 듯하다. 많이 배우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예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에 모인 분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 후 면담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국회의원 구성 비율을 보면 기업인이나 사회활동가 출신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법조인, 교수, 직업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 중 다수는 말만 아름답고 진심은 부족할 수 있다.

분노하고 행동하라

세월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해경 선발 자격 요건 중 대졸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은 4.0점인데 비해 수영 능력에 주는 가산점은 2.5점이다. 한국의 대학, 엘리트 교육 강조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해경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격 요건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이 절망하고, 비판하고, 분노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런 분노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은 변화에 능숙하다. 남아선호사상의 역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화 등이 이를 증명한다.

세월호 사건은 한국이 안고 있는 안전 부실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분노를 끌어올리고, 엄격한 규칙 적용과 더불어 안전 규제를 무시하는 행태는 엄벌에 처하고, 만천하에 공개하여, 사회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한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사악한 고리를 끊기 위해 해외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전반적인 안전 기준 및 장치를 대폭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완전하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김영란 법’의 추진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국민적 분노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단합시키고 조직화해야 한다. 여기서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의

도입이다.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사진을 찍어 이를 공개하고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법적 처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안전을 무시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맨체스터 출신의 한 친구는 한국 음식을 워낙 좋아해 삼겹살 식당을 현지에 내고 싶어 했다. 삼겹살 식당은 개방형 그릴이 필수여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설비 도입을 도와주려 했지만, 친구로부터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영국의 법이 허용하지 않는단다. 영국의 보건 안전 규칙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한국은 간혹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이를 막으려면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분노를 참지 마라. 하지만 분노에는 초점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한국에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통해 본 세계 속의 한국 교육

중앙일보

한국은 OECD가 2000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OECD 국가 15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읽기·수학·과학)을 평가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래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12년 평가에서는 수학·과학·읽기 등 모든 학업성취도 항목에서 65국 중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PISA 평가 항목 일부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 주입식 교육 등 한국 교육의 부정적 이미지와 상반되는 추이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평등성 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문제 해결력 등이 그것이다. 본 세션에서는 특파원 출신 국내외 기자와 함께, 해외 사례와 PISA 결과를 토대로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았다. 또 PISA 결과가 단순한 순위를 넘어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사회

민경석 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마틴 패클러 뉴욕타임스 도쿄지국장

박소영 중앙일보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파트·글로벌협력팀장

천명 중국국제방송 서울지국장

다니엘 류더 前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정리

정고은나래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 대리

마틴 패클러 뉴욕타임스 도쿄지국장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행복도는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과 비슷한 교육 시스템을 가진 일본의 경우, 85.4%에 달하는 학생이 행복하다고 답한 것을 들며 엄격하고 치열한 시험제도 때문에 학생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반적 추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행복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결석률이 28%에 달하는 것을 보면 학교에 안 가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예로 한국 학생들이 문제 해결 시 얼마나 마음을 여는지를 보는 사고 유연성에서는 마이너스대 성적을 받았지만 수학 성취도에서는 1등을 기록한 사례를 제시했다. 패클러 지국장은 PISA의 전반적인 결과에서 국가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언론에

비치는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PISA가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인지, 기준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시스템이 사회와 연관이 있다며 교육을 바꾸고 싶을 때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교육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바라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페클러 지국장은 교육의 목적은 국가 발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진단했다. 산업화 중이라면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그 수준을 넘으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너무 순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잠깐 멈추고 교육의 목적이 뭘지 생각해볼 때라고 제안했다.

박소영 중앙일보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파트·글로벌협력팀장은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고른 커리큘럼에 따라 숙달된 스킬로 가르치는 것이 그 이유다. 또 봉사 활동이나 특별 활동 등 다양한 외부 커리큘럼이 갖춰져 있고 수행평가처럼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많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문제 해결력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이런 교육 시스템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한국 교육이 PISA 맞춤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도 최근 순위가 떨어지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결국 PISA 결과가 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교육 정책을 돌아보게 하는 도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겠냐고 답했다.

박 팀장은 외국인들이 한국 교육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처럼 자원과 인구가 부족한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로 두각을 나타내는 수밖에 없기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모들의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 팀장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는 없기에 한계 안에서 최소한의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긍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롭게 상황을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천명 중국국제방송 서울지국장은 PISA 성적이 잘 나온 상하이나 홍콩, 베이징의 학생들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도시에 살고 있다며 이들이 국가 전체의 교육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경제력과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천 지국장은 교육이라는 자원은 한정적이나, 그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라며, 학업에 대한 압력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PISA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지식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며, 시험이 압력이 아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니엘 튜더 前 이코노미스트 한국특파원은 PISA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거나 교육 예산을 늘릴 때 PISA 결과를 앞세워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10대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던 할아버지로부터 문학 박사가 쓴 것보다 더 멋진 편지를 받은 기억을 소개하며, 과연 PISA가 보편적인 학습능력을 대변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PISA에서 한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각종 테스트에서 결과가 잘 나오도록 맞춤 교육을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튜더 前 특파원은 한국의 기업이 정신이나 영화, 음악 등을 보면 창의력이 많다고 느끼곤 하는데 이런 힘이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정량보다 정성적 지표, 즉 그 내용이 중요하다며 시험보다는 인격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문]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우리 사회가 고학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뛰어들 수 있게 마이스터고 등 전문 직업인을 육성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학생들이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답변] 민경석 세종대학교 교수: 지난해 학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갔다. 그러나 직업 10개 중 8개가 대학 학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고등학교 과정에 분야를 나눈 것이 마이스터고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건전한 시민으로 사는 길이 마련될 때,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 교육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교육 정책과 사회 시스템은 유기적인 흐름 안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함
- PISA 성적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학 교육의 역할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확대되고 있다. 역사성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나 배타적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주의는 해묵은 갈등을 배태하는 요소이다. 또 동·남중국해의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육·해·공에서 한·중·일과 ASEAN 국가들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증폭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통합을 향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까지 저해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해소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국가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다.

- 사회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 기조연설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 발표
고이데 미노루 일본 소카대학교 교수
- 자오 후지 중공중앙당교 교수
- 그란트 맥갈 시드니대학교 교수
- 강근형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
- 정리
고경민 제주대 학술연구교수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은 한·중·일 갈등의 트라이앵글 구조로 인해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가 여전히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국가끼리 분쟁에 직면해 있고,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의 선포를 둘러싼 갈등까지 가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향진 총장은 동아시아 갈등 관리 여부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향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허향진 총장은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이미 오랫동안 악순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더욱 악화하였으며,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현 정세를 진단했다. 그중에서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 가지 역할을 제안했다.

허향진 총장에 따르면, 첫째로 필요한 역할은 갈등 해소를 위한 학문적 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오늘날 동아시아 갈등의 이념적·정서적 토대인 과잉 민족주의(ultra-nationalism) 또는 배타적 민족주의(chauvinistic nationalism)의 유산을 성찰하고 건전한 열린 민족주의(open or internationalized nationalism)의 지향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시한 역할은 교육 내용의 평화 지향성이다. 역사적 갈등과 투쟁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역사적 화해와 상생, 교류와 협력을 대학 교육의 중심 주제로 다루어 나간다면, 갈등 지향적 관계보다 평화 지향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교육적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 'One Asia'의 비전을 제안했다. '하나의 아시아'는 미래 아시아의 비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은 국경을 뛰어넘는 지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공헌하는 아름다운 상생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데 미노루 일본 소카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교육 행정과 교육자로서의 실제의 현장 경험에 근거해 동아시아 갈등 해결을 위한 일본 대학 교육의 6가지 잠재적 기능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기능은 자신의 국가와 다른 국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주는 '교환학생제도'를 언급했다. 동아시아 대학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특히 일본 대학 교육에서 중요하다. 교차 문화 경험의 기회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동일한 무리에 둘러싸인 소수자로서의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능은 언어 교육으로서 영어의 채택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대학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소통과 교육을 위한 일차적 언어로 영어를 채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대학 간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접할 수 있게 하여 교육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동아시아 언어의 교차 학습 기능이다. 일차적 소통의 매개체로서 영어가

중요하지만, 여타 국가의 언어를 교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이해를 위해 중요하다.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처럼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대체로 대학에서 접하게 된다.

네 번째 기능은 공통의 사회 쟁점과 문제의 발생이다. 한·중·일은 점진적으로 유사한 국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은 집단적이고 협동적인 협력을 하는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동아시아 국가 간 교양교육의 동시 부상을 들 수 있다. 소카대학 국제교양학부의 교수진은 교양교육을 완전히 영어로 진행하거나 혹은 많은 부분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대학 간의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표준화는 이들 국가 간의 장기적인 이해를 위한 또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넘어선 평화의 이상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국경을 초월한 어떤 이상을 지향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보편적 이상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동아시아 협력 대학들과 함께 실행하는 소카대학의 교환 프로그램은 대학의 근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자오 후지 중공중앙당교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남북한 및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가치를 재해석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자오 후지 교수는 가치 공유, 상호 인정, 행위 예측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유럽연합을 가능케 했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동북아시아의 가치 파편화를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자유주의, 신좌파, 민주사회주의, 신유학파 등 4대 유파가 공존하며, 한국은 전통적 유교 가치와 서양 가치, 즉 동서 가치가 융합과 갈등하는 상황이고, 일본은 신도교, 유교, 불교, 자유주의 등 동서 가치가 혼재하며, 북한은 흑백논리가 극단화된 선군정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정치적 가치의 충돌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의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자오 후지 교수는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국가 대 국민, 정부 대 기업, 중앙 대 지방의 분야에서 권력/권리의 재분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정치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파악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의 서구 중심주의 비판, 일본에서의 공공 철학과 전통으로의 회귀 주장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지도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경륜과 경험의 부족, 그로 인한 권위의 부족 등으로 여타의 동북아 국가들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가치가 전환기에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으며, 특히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유교 등과 같은 가치 공유의 가능성을 대학 교육을 통한 연구 교류 및 네트워크의 구축 등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역할과 관련해서 자오 후지 교수는 공공외교의 중요한 자원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란트 맥갈 시드니대학교 교수는 제주대학교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중요한 지적 기관으로서 그 역량과 많은 특성을 어떻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제주 평화의 섬 법정을 제안했다. 이 법정은 평화가 없는 곳의 평화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구상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세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법정은 권고나 설득 이상의 힘은 없는데,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환경과 섬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거주와 문화의 장소로서의 '섬'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들과 관련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모이게 할 것이다. 특히 이런 연구소는 '녹색성장'과 '원거리 여행'의 개념을 응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과 원거리 여행 연구소를 결합하는 것은 탄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과 생태계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녹색성장과 원거리 여행 회의가 2013년 벨기에에서 개최되었고, 2014년에는 호주의 멜버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맥갈 교수는 향후에 세계평화의 섬과 연관지어 제주대학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다.

셋째, 6대 문화 탐구를 7대 문화 탐구로 할 것을 제안했다.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하는 6대 문화 탐구를 넘어 제주대학교가 세계평화의 섬과 생활의 많은 미덕을 망라하는 '7대 문화 탐구'로 확장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평화의 섬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은 제주 도민의 역량, 제주대학교의 지성, 그리고 동원 가능한 여러 자원을 결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 과정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제주대학교는 함께 성장하고, 이 아름다운 장소와 기관들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더 심도 있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강근형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동북아 국가 간의 갈등의 점증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군사력 강화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 우익의 내셔널리즘 증대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이 급증했는데, ① 중·일 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갈등, ② 한·일 간 독도 문제, ③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마찰 가능성, ④ 중·베트남 간 시사(파라셀) 군도 갈등, ⑤ 중·필리핀 간 난사(스프레틀리) 군도 갈등 등이 지속되는 갈등 사안들이다.

강근형 소장은 동아시아 갈등 상황에 직면해 우선 정부 수준에서 동아시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①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와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② 한·일 관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해 응분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 레벨의 책임 인정 및 사죄와 배상이 요구된다. ③ 한·중·일 간 불행한 역사를 교훈 삼아 평화와 공영의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간 수준에서 교과서 공동 집필 추진, 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출연하는 피해자 보상 재단 조성, 교육 및 장학 기념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다. ④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동북아 해양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중재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⑤ 한·중·일 시민사회 간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중첩적 네트워크의 형성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근형 소장은 동아시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학 교육의 방향을 제안했다. 알렉산더 웬트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국가나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 공통의 문화적 가치나 정치 경제적 운명의 공유를 기초로 지역 공동체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양교육의 역할 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① 대학 교양교육은 ‘좋은 민족주의’, 즉 공존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② 대학 교양교육은 역사 문제에서도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세계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③ 대학 교양교육에서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습관, 규범들을 내면화해나가는 평화문화(peace culture)를 확산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 ④ 대학 교양교육은 개별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을 젊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학은 갈등 해소 담론의 구축, 교육 내용의 평화 지향성 추구, ‘One Asia’ 비전 추구 등을 추진해야 함
- 타국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증진, 영어 교육 채택 및 동아시아 언어의 교차 학습,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 등 한·중·일 간 평화의 증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중요
- 남·북한 및 중·일의 정치적 가치 재해석 및 대학 교육을 통한 자유주의, 공동체 주의, 유교 등 동북아 공통 가치의 공유를 향한 연구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제주대학교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핵심적 기관으로서 그 역량의 발휘를 위한 다양한 지적 연구 및 활동을 모색
- 대학 교양교육을 통한 공존적 민족주의 교육, 보편적인 역사 상식을 가진 세계 시민 양성, 평화 문화 확산 교육, 동아시아 정체성 교육 등을 추진

글로벌 교육과 제주

제주대학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교사 양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호주 캔버라대학교, 미국 웨스턴오리건대학교, 제주도교육청,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가 같이 모여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글로벌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 사회**
고경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 발표**
김익상 제주대학교 부총장
- 제프 리오단**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육대학 학장
- 마크 지로드** 미국 웨스턴오리건 대학교 교육대학 학장
- 이인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토론**
김원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 손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도시처장
- 김성백**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정리**
권상철 제주대학교 교수

김익상 제주대학교 부총장: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글로벌 교원 양성(GTU, Global Teachers University) 사업을 4개 대학에 지원하는데, 이와 별개로 제주는 2008년부터 국제교육도시로 지정되며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GTU 사업은 더욱 중요하다. 제주대학교는 글로벌과 로컬을 겸비한 교사를 양성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해외 대학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대 GTU 사업은 학생들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동시에 세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이 세션은 국제적인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는 대학과 관계 기관이 서로의 관점과 방식을 나누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제프 리오단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육대학 학장: 영국의 대학 시스템을 따라 발전시켜 온 호주는 1억 호주 달러의 재정으로

교육을 국제화하는 '신콜롬보계획(New Colombo Plan)'을 시행해 호주 학생들을 아시아 지역의 대학에서 교육 받게 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호주로 아시아 학생들을 유입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 대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했다. 교육은 호주의 4번째 거대한 산업이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가장 크다. 정부 지원으로 해외 학생 유치에 노력, 해외 캠퍼스(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동시-연계 프로그램, 해외 학습-학생 교류, 온라인 협동 과목, 해외 지역 연구 학위, 국제적 연구 협력 등이 국제화 프로그램의 사례로 추진된다.

캔버라대학교는 외국 학생이 대략 20%이며, 싱가포르와 중국에 TNE 과정을 운영 중이며, 점차 많은 학생이 학위 과정 중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경험을 쌓고 있다. 동북아시아 연구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으며, 신선한 사고와 새로운 통찰력을 강조하고 다양한 학습법과 영국, 중국 상하이, 그리고 한국에서의 TIMMS, PISA에서의 성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아 세기 백서>에 제시하고 있다.

마크 지로드 미국 웨스턴오리건대학교 교육대학 학장: 미국 웨스턴오리건대학교는 학생 6,000명, 대학원생 500명, 교수 300명, 직원 300명의 소규모 공립 대학교로, 교육대학은 특수교육, 건강과 체육교육, 교사교육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교육과 재할교육위원회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1년에 약 300명의 교육자를 배출하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다학문적인 세계 시민의 상호 의존 등을 강조해 교육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교사 수행 평가(teacher performance assessment)를 수행하는데, '교사실행샘플(teacher work sample)'이라는 2주 수업 실행 평가를 통해 수업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적절한 교수와 수정, 교사 그리고 학생의 배움이 모두 성공적인가 등을 수합해 검토한다. 즉, 교사 훈련과 성과의 산출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예비교사, 즉 교육대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공동체, 학교, 그리고 교실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업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다문화 교육 수업, 그리고 다른 교육 환경에서의 수업에 대한 고려, 이중 언어 교육 강조 등을 통해 이해와 분석 능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에 글로벌 교육이 포함되어 강조하고 있다. 웨스턴오리건대학교 학생들은 오리건 주의 중산층 출신으로, 외국 경험이 부족해 현재 베트남에서의 경험에 더하여 제주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관련 아이디어와 경험의 공유를 기대하고 있다.

이인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글로벌 교육과 제주는 어떻게 글로벌 교원을 효과적으로 준비시키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세계 대학과 제주국제교육도시 학교들과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글로벌화하는 세계에서 글로벌 역량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교원은 세계화의 사회, 문화, 정치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대학교 글로벌교원양성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2013년부터 해외 대학과 협정을 맺고 학생들에게 복수 학위 취득을 유도하고 있는데, 미국 보이시대학교에 현재 7명의 학생을 파견하였다. 이들 학생 중 일부는 해외 교사자격증 취득까지 이어져 국내 또는 해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제주도 내에서는 '브랜섬홀아시아 제주'에서 3주간의 교육 실습을 시행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며, 동시에 취업으로까지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교사 교육의 경우, 다양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과 필수 이수 과정, 등록금 등의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 또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며 동시에 글로벌 교육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는 협력이 필요하다.

김성백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캔버라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수용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으로 학생을 보내는 것, 웨스턴오리건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상적이다. 제주대학교의 현재 GTU 사업은 소수 정예의 복수 학위 추구로 여러 학생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하는, 즉 단기·중기·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화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이다. 이는 국내에서 교사를 하더라도 글로벌한 시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소수 정예의 훈련은 비용 문제가 있어, 원거리의 미국 중심에서 대상 국가도 아시아권을 포함해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손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도시 처장: GTU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일환으로 국제교육도시/영어교육도시가 2007~2008년에 걸쳐 시작되었다. 7개 학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은 글로벌 교육을 주제로 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환경이다. 국내 다른 지역의 국제학교는 입학 자격에 제약이 있지만, 제주도는 그러한 제약이 없어 유리한 조건이며, 제주대학교의 GTU 사업은 매우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 GTU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교사로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짧은

연수를 통한 영어 능력 향상은 회의적이다. 제주대학교에 영어로 수업하는 교수들을 초빙해 4년간 전체 과정을 영어로 이수하는 시도는 어떨까 제안해본다. 물론 재정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외국에 보내 연수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김원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대 GTU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 교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며, 교육부의 개혁 또한 이에 기초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교원 양성 기관의 GTU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제주도 교육청은 이러한 사업에 매우 유리한데, 스마트 교육과 자유학기제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매우 유리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자율학교에 대한 자율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 등이 필요하다.

21세기 국제 교육 역량을 배양하는 GTU 사업은 글로벌 교사의 충족 요건으로 두 국가에서 교사자격증을 얻는 것에 더하여,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 등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 인권, 환경 등 국제적 이슈에 관한 이해와 인류 보편의 목표를 다룰 수 있는 교사의 역량 또한 중요하다. 교사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글로벌 교육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도 점차 줄여나가야 글로벌 교육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범위한 성공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 학교에까지 확대되어야 진정한 성공일 것이다.

제프 리오단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육대학 학장: 첫째, 호주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PISA 등의 세계 평가에서는 한국이 우수하며, 언어 교육에서 호주의 기여가 가능하다. 둘째, 교사자격증의 차이가 언급되는데, 글로벌 기준은 교육 과정, 학생 평가를 통해 수업 내용, 학습 결과의 차이를 구분해 내는 등 글로벌 능력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크 지로드 미국 웨스턴오리건대학교 교육대학 학장: 교육의 미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제주대의 GTU 사업의 성공을 다른 대학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웨스턴오리건대학교 학생은 해외 교육 기회를 피하는데,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해외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특히 사회 과목(social studies)에서 해외 학생들과 인터넷을 통해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글로벌 교육에 대해 다양한 방식들을 오히려 배우고 간다.

이인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해외 유학보다 한국에서 교육하자는 의견에 대해 교육은 단순한 수업 이상의 상황 경험도 중요하므로, 기회가 있을 때 해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대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제주도 교육청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예산을 가진 제주도청의 노력이 더불어 중요하다. 제주도 GTU 사업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 교육청, 그리고 제주도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김익상 제주대학교 부총장: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4개 있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지만 교육청은 다른 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과 다른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여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 교사를 양성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글로벌 교육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데, 성공적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 파견을 통해 영어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길러 가는 것이 중요
- 국내에서 글로벌 교사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매개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여 큰 비용을 들여서 해외 대학에 파견하는 것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 동시에 외국 학생들을 수용하여 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늘리는 것 또한 제주대학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제주국제교육도시로서 외국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의 글로벌 교육 노력과 이들 자율성을 가진 기관과의 협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호주나 미국 등의 대학교들이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험적으로 작은 규모의 학생과 교수 교류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 나가야 할 것
- 점진적으로 규모와 빈도를 키워나가는 방식이 협력서 교환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제주 몽생이 세계를 날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제주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가 되기 위한 무대로서, 매년 제주도의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교류도시 등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청소년포럼에 참여한 제주도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얻을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앞으로 청소년포럼이 나아갈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세션을 정례화하여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한다.

사회

강석찬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 교류협력담당

좌장

오진의 한양대학교

토론

양기연 브랜썬아시아 학생

양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강희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강혜진 한양대학교 학생

현시은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

김성범 제주제일고등학교 학생

강수인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정리

김용현 제주대학교 학생

강혜진 한양대학교 학생: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2011년 103명, 2012년 107명, 2013년에는 125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원수도 증가하고 기간도 증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학기 중에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행사 기간을 방학이나 조금 여유로운 시간대로 바꾼다면 행사의 질도 높아지고 운영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박 4일에서 포럼 기간이 4박 5일로 늘어났지만, 참여자와 패널리스트들이 친분을 쌓기엔 조금 부족한 시간인 것 같다. 포럼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늘린다면 참여자와 패널리스트들이 친분을 쌓아 포럼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만들어 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이나 행사 후에 진행되는 일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SNS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기간이 길수록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참가함으로써 폭 넓은 의견 교류가 가능하고 멘토와 멘티가 형성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내실화를 중요시함으로써 많은 외부 행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양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제주도 청소년 중국어 외교관으로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알기 위해 제주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참가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만나 생각을 교류할 수 있었으며, 패널 분담을 하면서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봉사자와 참가자가 합숙하지 않아 소통의 시간이 부족했고, 포럼 과정에서 패널리스트와 청중들 사이에 소통 또한 부족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통해 제주도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수의 제주도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또 자기 생각을 발표하며 논리성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영어로 발표하기 때문에 어학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참가한 후에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갈수록 많은 국가가 참여함으로써 더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 상품 부스를 운영하여 제주국제청소년포럼과 같이 홍보한다면 이 포럼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영어 소책자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소책자도 발행해 세계의 많은 친구와 함께 공유한다면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더 세계화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희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제주포럼을 통해 WCC에서는 접해볼 수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하면서 좋았던 점은 소망나무, 만찬장 같은 작은 행사를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다. 또 밝은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 내 의견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다.

또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제주 청소년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이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그리고 요즘 국가마다 외교적 마찰 때문에 서로 감정이 격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외교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앞으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다양한 패널 토론과 문화 체험을

많이 만들어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했으면 좋겠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4일이라는 시간은 부족하기에, 포럼 기간 또한 연장해 준다면 더욱 많은 친구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양가연 브랜섬출아시아 학생: 2011년도 다섯 나라, 2013년도 아홉 나라로 참가국이 늘어나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많은 외국인 친구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Culture Night' 같은 행사를 통해 서로 춤추며 대화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상하이 유스 캠프(Shanghai Youth Camp)에서는 13박 14일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친구들과 더욱 끈끈하고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제주국제청소년포럼도 참가 일수를 늘려 외국인 친구들과 더 많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언어 탓에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Ice Breaking이나 Culture Night 파티 같은 행사를 연다면, 서로 춤추며 언어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교류를 하면서 친구들 사이는 더 돈독해질 것이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포럼에 참가했는데, 이럴 경우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 행사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으니 참가국과 인원수의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면 진정한 국제화가 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은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 각 나라의 전통 복장을 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 박물관이나 산방산 같은 문화적 체험을 통해 교류할 수 있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 중이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교류하고, 개인적으로도 메일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태프들과 외국인 친구들 사이의 교류가 많지 않아 무척 아쉬웠다. 다음 포럼에는 스태프들에게도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김성범 제주제일고등학교 학생: 3일에 걸친 제주포럼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었고 유명 인사의 연설 등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 패널리스트와 토론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끝난 후에도 SNS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나라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에 관해 토론하여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반면,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운영 도중 문화의 차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패널리스트들은 국적에 따른 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패널리스트의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학교장 추천이나 한국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포럼에 참가하는데, 이럴 경우 언어 능력이 부족해 소통의 어려움을 더 겪는 것 같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포럼 관계자 모두와 소통한다면 더 나은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될 것 같다.

강수인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이번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작년과 달리 기간이 늘어났고, 용기 만들기와 같은 제주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또 참가자 입장이 아닌 스태프 입장에서는 많은 외국인 친구를 도우며 자신감이 늘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해 아쉬웠다. 패널 주제별로 각 언어 학생 외교관이 배치된다면 더 원활한 행사 진행이 될 것이다. 방청객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주제가 된다면 더 흥미로울 것이고, 패널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방청객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참가 희망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 다음에는 더 많은 참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하면서 좋았던 점은 한 주제에 대해 많은 친구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가자, 스태프, 패널리스트 모두 같이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즐긴다면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세계로 나가려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친구와 교류해야 함
-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때문에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기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원수도 더욱 늘려 많은 제주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함
- 국제화, 세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해야 함
- 연도에 따라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의 기회가 확대되어가고 있더라도 내실화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
- 봉사자나 참가자들에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자 국간의 교류 및 이해교육이 필요함

글로벌 힐링 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힐링산업은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할 수 있는 21C 핵심 트렌드로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쾌적한 청정환경과 다양한 천연 유래 물질, 세계적인 항노화 연구개발, 기술 등을 접목하여 제주를 글로벌 힐링 관광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사회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윌리엄 앤드류스 시에라 사이언스 설립자

니시무라 노리요시 고베 슈쿠가와 가쿠인 대학 교수

김형길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김장연 서울대학병원 한국 남자간호사협회 회장

서용건 제주대학교 교수

정리

김주성 제주대학교 교수

윌리엄 앤드류스 시에라 사이언스 설립자: 나는 오늘 텔로미어(telomere)*와 텔로메라아제(telomerase)*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는 노화와 건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그 원인은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그렇다면 이 텔로미어의 줄어듦을 막을 수 없겠는가?라는 고민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에서 우리는 TAM-818이라는 물질을 만들었고, 100명을 대상으로 눈가 주름이나 탄력성 향상에 대해 검정한 결과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나는 이런 좋은 물질을 제주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엮어가고 싶다. 이것은 제주에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기회로 제주의 물에

* **텔로미어;** 염색체의 끝 부분에 위치하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것이 짧아지는데, 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함.

* **텔로메라아제;**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효소. 예를 들어 신발 끈의 가장 끝 부분 플라스틱으로, 신발 끈이 풀리지 않게 해주는 부위로 생각할 수 있음.

TAM-818을 넣어 제품화하는 것이다. 누구나 물을 먹는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기능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간 물이라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천연 물질로 황칠을 들고 싶다. 이미 37개의 물질이 발견된 황칠은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한다. 그 외 피부 치료 제품, 제주 물, 천연 식품, 유전자 치료, 암 진단과 치료법, 텔로미어 길이 측정, 텔로메라아제 혈관/조직 분석법, 애완동물 제품 및 애완동물 클로닝 등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하여 제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텔로미어 축소는 인류에 있어서 수많은 건강 위협 요인 중 가장 빠르다. 우리는 텔로미어 생물학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제주에 이 기술을 가져오고 싶다. 건강한 텔로미어를 위하여, 제주에 세계를 이끌 센터를 같이 만들어보자!

니시무라 노리요시 고베 슈쿠가와카쿠인대학 교수: 일본의 헬스 투어리즘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요법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정의, 효과, 연구회를 소개하고, 치유의 숲과 독일 및 유럽의 헬스 리조트에 대해 설명하겠다.

시나노 마을 모니터 모임을 계기로 일본에서의 산림요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산림요법은 스트레스 감소, 생리적인 휴식, 자연사 세포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 전국 57개의 숲에서 산림요법과 관련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다. 신슈, 시나노 마을의 치유 숲에서는 단전호흡, 손톱마사지요법, 수치료, 식물요법, 숲에서의 카운슬링 등 다양한 산림요법이 행해지고 있다.

치유의 숲 기업과 계약, 관련 활동 등을 동영상을 이용하여 소개하였고, 독일의 크나이프요법 및 관련 효과(질병의 감소 및 노동 불가능일 감소)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헬스 리조트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 및 제반 사항, 일본의 산림요법에 대한 인정기준법을 소개하였다.

헬스 리조트는 요양뿐만 아니라 예방을 중심으로 한 wellness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줄어들어 자비로 체류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따라서 담당자는 정보 시설이나 관광 관련업을 수탁하여 종합 관리하거나 민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형길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 힐링 플랫폼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과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및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강조하면서 힐링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힐링 산업은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할 수 있는 핵심 트렌드 키워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힐링 분야의 창업 및 인재 육성, 힐링 창조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동북아 중심 힐링 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1차년도 힐링 플랫폼 기반 구축, 2차년도 힐링 플랫폼의 활성화, 그리고 앞으로 힐링 플랫폼 확산을 통한 자립화를 꾀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하여 기업 신규 채용 771.4%, 매출 266.5%, 그리고 수출 964.3%를 달성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방송 홍보로 13.8억 원의 효과를 냈다. 하지만 참여업체의 영세성과 마케팅 능력 부족, 천연 유래 물질 힐링 서비스 제품에 대한 의학적 증재 및 과학적 모니터링 미흡, 힐링 플랫폼 확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부족, 힐링 서비스 링크 센터를 활용한 매출 실적 미흡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2차 년도에는 MICE와 연계한 힐링 플랫폼 확산, 의학적 증재를 통한 힐링 플랫폼 고도화 및 힐링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판매, 수출 및 고용 증대를 통한 산업 생태계 지원 및 자립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김장언 서울대학병원 한국 남자간호사협회 회장: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 '창의력'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요즘 산업계 전반의 화두인 '융복합산업'은 '창의력'을 근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이다.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애플의 아이폰을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따라 잡고 있다. 우리는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창의력에 더해 경쟁력도 갖추어야 함을 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사람들은 '전문화', '세분화', '차별화' 등을 이야기한다. 나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화'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도 '차별화'가 기업이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는 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위해 기업의 역량과 R&D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경쟁사보다 우위의 미세한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도 쉽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힐링 허브를 이루고자 한다. 미래학자들은 전망이 밝은 분야로 기후 에너지 산업, 약식품, 의료 바이오, 그리고 보건 복지를 들고 있다. 우리 정부, 산업계도 블루 오션으로 의료 관광, 바이오를 거론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인간 존중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질 좋은 헬스케어를 받고자 하는 대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의료 산업은 블루 오션으로 떠오른 것이다.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의료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블루 오션인 힐링 관광 산업에서 제주도가 다른 나라보다 경쟁 우위의 차별화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가? 차별화는 품질이나 기술의 실질적인 차이도 중요하지만, 인식 상의 차이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차이는 후발주자들이 금세 따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인식 상의 차이는 사람들 머릿속에 한번 각인되면 뒤집기가 쉽지 않다. 즉 차별점이 늘 획기적이며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차별점을 어떻게 의료 관광 소비자들에게 임팩트 있게 인식시킬 수 있는지를 늘 연구해야 한다. 제주가 힐링 관광 허브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쟁력 우위의 독보적인 차별화 아이템인 빌 앤드루스 박사님의 향노화 물질이라 생각한다. 앤드루스 박사님의 연구 성과를 제주도에 유치한다면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 기업이 우리나라에 탄생할 것 같다.

[질문] 서용건 제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산림요법에 대하여 소개해주셨는데, 헬스 투어리즘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답변] 니시무라 노리요시 고베 슈쿠가와가쿠인대학 교수: 자연관광은 인바운드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계치는 없다. 많은 관광객이 일본의 자연경관을 보기 위하여 찾아오며, 도쿄를 관광하려고 오는 관광객이 많은 현실이다. 본인도 세계 각국의 관광객에게 일본을 소개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각국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자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마케팅에 있어 제주의 또 다른 기회로써 TAM-818을 이용한 제주의 산업화, 나아가 제주 자생식물을 이용한 천연 제품 개발은 제주의 향노화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임
- 독일 크나이프요업의 노하우와 일본의 산림요법을 벤치마킹하여 제주 힐링 아일랜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함

창조경제 시대, 문화 콘텐츠 융성을 통해 제주를 리디자인 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이 세션에서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창조 경제 시대에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순수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와 융합하여, 1천만 관광객 돌파 이후 이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류, 캐릭터, 멀티미디어, 트렌드 등 각 분야의 콘텐츠 전문가들이 제주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추진단 정책에 실제 반영하고 나아가 제주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회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발표 및 토론

김근혜 제주 문화융성위원회 자문위원 · HLC 대표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추진단 단장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산업분과 위원장

최종일 (주)아이코닉스 대표이사 겸 프로듀서

서황욱 구글코리아 유튜브 파트 너십 총괄상무

정리

김수민 해피라이프 컴퍼니 HLC 부대표

김산 해피라이프 컴퍼니 팀장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한류, 캐릭터, 멀티미디어, 트렌드 등 각 분야의 콘텐츠 전문가들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추진단과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주도내, 도외 관점에서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제주 문화융성 추진 계획 및 발전 방안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추진단 단장: 제주도에서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문화융성추진단을 신설하였다. 문화융성이라는 기조의 국정 기조에 발 맞추고, 제주도 스스로 문화융성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유네스코 3관왕, 세계자연경관 선정 등 자연을 모티브로 관광객과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이제 잠재적인

문화유산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 문화융성추진단에서는 25개의 핵심 과제를 통하여 제주도를 '문화의 섬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 1) 문화 기반 융합산업 육성: 제주 역사와 문화의 공연과 상영, 홀로그램관 유치 등
- 2) 전통 인문 문화 진흥: 유배인의 섬 제주와 마을 스토리텔링 등
- 3) 문화 체험 향유(도민과 관광객 모두): 한 마을 한 예술 운동 등
- 4) 문화를 통한 소통과 가치 확산: 제주 고유 문화유산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위와 같은 핵심 과제로 2014년을 제주 문화융성 원년으로 하고, 4개년에 걸쳐 비전과 정책을 달성하여 2017년을 제주 문화완성의 해로 설정하였다.

제주 문화의 스토리텔링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산업분과 위원장: 제주도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 유배길 코스, 광해군 뮤지컬, 인조의 아들 소현 세자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유배길 스토리북 등, 음악회와 뮤지컬, 캠프 등의 사업으로 관광객과 수학여행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제주 해녀 밥상 스토리텔링을 통한 해녀밥상전시회를 열고, 마을 스토리텔링으로 지역에 묻혀 있는 스토리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1만 2,000여 개의 신화와 스토리가 있고, 200여 명의 유배인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랜드이다. 현재는 광해 왕의 밥상, 어승생, 한국발레화회와의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스토리텔링 사업을 위해 한국을 이끌어가는 제주 애프터 스쿨 등으로 문화 인력을 배출하길 제안한다.

Telling a Story of Jeju Today

서황욱 구글코리아 유튜브 파트너십 총괄상무: 문화란 삶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제주 변화의 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주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의 관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세화리 오일장은 도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풍경이 바뀐 곳이다. 이민자 자신이 만든 상품 팔고, 흥대 거리공연이 세화 오일장 앞에서 열린다.

또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 와랑와랑(남원)에서는 감귤 주스와 같은 제주의 특산물 제품을 판매하는데, 같은 품종의 귤도 동네와 밭마다 맛이 다르다고 한다.

'부르고뉴 와인은 페루아마다 다르다'와 같이 와인처럼 곁에 스토리를 입히면 제주의 곁을 더욱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제주의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부에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소비자들은 인터랙티브하며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 누구나 콘텐츠에 접근 가능한 시대이므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과거의 전통 제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제주 이야기의 발굴도 중요하다.

아이코닉스 지자체 연계 사례 및 글로벌 사례

최종일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주)아이코닉스 대표이사 겸 프로듀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캐릭터를 개발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뽀로로가 성공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림이 아니라 스토리이다. 스토리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청중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 지자체는 훌륭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하지만 늘 실패한다. 서울시의 해치 경우는 스토리가 없다가보다 청중이 동의하고 몰입하기가 어려운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또 콘텐츠를 개발한 이후에는 유통하고 활용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 훌륭한 콘텐츠도 잘 유통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쉽지 않다. 단기 성과에 실망하지 말고 수정 보완해 나가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것이다.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든 제품을 중·장기적으로 재가공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제주예술마당 협동조합 김영호: 제주의 스토리텔링에서 역사/환경/이주자를 제외하고 제주인의 이야기는 전혀 없는 듯하다. 제주 근현대사의 인물이나 제주인의 이야기는 없는지? 또 근현대사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례나 4·3항쟁 외에 또 다른 역사적 사실 연구는 없는지?

[답변]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위원회 문화 산업분과 위원장: 제주도 최초 순교자인 김기량과 최초의 여자교육감인 최정숙 등의 인물을 연구 중이다. 제주 근현대사와 어우러져야 할 듯하다.

[질문] 김병두 IT데일리회장: 관광객의 경우, 제주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많은데, 제주만

강조하기보다 한국적인 것을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몇 가지를 제안한다.

- 1) 제주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해 보인다.
- 2) 제주와 한국 문화 전체와의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제주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을 같이 담으면 좋을 듯하다.
- 3) IT + 문화융합 전문가를 포함하여 문화융성 추진을 제안한다.

[질문] 제주 학생: 제주는 자연 섬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유배를 강조하게 되면 유배지로 인식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것이 문화로 인식되기 위한 과정인지?

[답변]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위원회 문화 산업분과 위원장: 제주도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유배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다른 쪽도 같이 해야 한다. 전국적 도로명으로 변경하면서 민원이 많은데, 제주대학교에서 도로명을 스토리텔링 중이다.

[질문] 제주 문화포럼 前 이사장: 문화융성 정책이 성인과 문화 전문/기업체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를 누려야 할 주된 사람이 청소년과 어린이일 것이다. 따라서 초·중·고·대학생들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융성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두 가지를 제안하겠다. 문화 재능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초·중·고에서 스토리텔링/연극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교육청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 또 도내 문화 예술단체와 교원 이외 문화예술인들의 방과 후 그림 교실/연극 만화 교실 등을 지원해 재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답변] 강원대 이관열 교수: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공식적인 멘트만 한다. CNN 기자들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멋있게 한다. 이유는 책이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문화가 필요하다.

김택환 교수: 유럽인은 휴가를 갈 때 책을 10권 갖고 간다. 워런 버핏 등 기업 오너들 역시 같이 휴가 가고 싶은 사람을 연예인이 아니라 노벨문학상 작품을 쓴 사람으로 꼽는다.

[질문] 세타풋, 태국 미래재단 대표: 태국 역시 많은 역사/관광객이 있다. 정부 지원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정부 도움 없이 주민들이 리더십 갖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까?

[답변] 최종일 대표: 태국 방문 관광객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스토리 개발이 답이 아닌가 싶다.

서황욱 이사: 참여 민간인들의 이익이 명백하다면 좋겠다.

김택환 교수: 문화 산업이 되는 키워드는 유니크, 새로운 캐릭터든, 역사든, 태국의 유니크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질문]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원: 제주도 문화 이민자들이 제주도의 자연환경 생산물로 영위하는데, 제주의 전통적 요소를 가미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답변] 서황욱 이사: 제주 이민 문화는 2~3년 된 문화이다. 기존과 이민 문화가 이질적이긴 하나 변해가는 과정이다. 유배 이야기도 과거에는 거주인과 다른 문화였다. 그러나 현재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다.

[질문] 제주대학 박경숙 교수: 뽀로로 캐릭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 최종일 대표 뽀로로 이전에 여러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어린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 이미지와 한국이 보는 한국 이미지가 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다. 한국 사람은 남대문, 김치, 비빔밥이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은 전자산업, 역동적인 나라로 기억한다. 뽀로로는 청중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는 애니메이션/관광/문화 다르지 않다고 본다. 수용자들이 인정하고 동의해야 한다.

문화 ODA의 동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주한라대학교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시사점〉

- 3가지의 관점 융합: 도내의 참여 및 스토리 발굴, 도외 관점, 글로벌 관점
 - 제주도 내의 관점과 외부 및 글로벌 관점을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
- 특히, 수용자 관점의 사전 분석 필요
 - 수많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수용자 관점의 분석이 필요
 - 관광객, 도민 등의 니즈가 무엇이고 그 고객 타겟의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
 - 고객 분석 니즈에 따른 제주문화융성에 대한 포지셔닝 및 체계적 전략 필요

〈정책 제안〉

- 고객이 중심이 된 자유로운 콘텐츠 발굴, 자발적 융합 프로그램 개발
- 오감을 감동시킬 통합 마케팅 플랜 필요, 비주얼 및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적용 필요
 -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다시 제주공항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단순히 슬로건이나 홍보 이미지가 아닌, 일맥상통하는 제주만의 통합적인 콘텐츠 전달이 필요
- 컬처 플랫폼, 제주로서의 캠페인
 - 제주를 플랫폼으로 장르, 연령, 국적에 상관없는 다양한 참여 캠페인 필요
예) 호주 관광마케팅 사례 '호주 무인도의 리더가 되는 직업에 응모하기'
-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다양한 시도 필요
 - 도내 인적/문화적 인프라는 무궁무진(역사, 문화, 인물, 스토리 등)
 - 도내, 도외, 글로벌 시각을 모두 가진 리딩 컴퍼니 혹은 단체의 주도하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 & 예산 확보 필요(제주 홍보 = 대한민국 홍보의 관점)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09년), G20정상회의 개최(2010년) 등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여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 사례와 가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수요자 입장에서 본 문화 ODA, 문화 ODA에 대한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화 ODA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
한희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발표
노명우 아주대학교 교수

토론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샤비즈 엠 말리크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부공관장

강선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정리
김신효 제주한라대학교 국제자유도시센터 소장

노명우 아주대학교 교수: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규모는 현재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도 지속해서 확대되어 간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적개발원조의 질적 특징을 볼때, 아직도 많은 점에서 국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이슈는 행정적인 측면의 취약성이 아니라, 정책 기조에 담겨 있는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두 가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절대화함으로써 빠질 수 있는 '공여국 중심주의' 위험이다. 한국이 예외적인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국제 사회의 사회 경제적 맥락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맥락과 동일하지 않다. 두 번째로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부터 한국형 모델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한국의 발전을 경제적 발전으로 환원시켜, 발전이라는 목표 자체를 경제 성장과 동일시하게 되는 한계를 지닐 수도 있다.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부터 추진 방안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기도 하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민주화를 이루면서 발전한 모범 사례에 속한다. 한국의 경험은 정치 민주화, 양성평등, 보편 교육, 인권 신장, 시민 사회의 성장,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의 경험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이 또 다른 공여국 중심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유네스코의 관점과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의 접합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달리, 유네스코에 제시했던 문화와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두 가지 이유로 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은 문화와 발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유네스코의 제안이 수사적 목표에서 실제 정책상의 이슈로 전환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공여 대상국은 이 이슈를 긴급한 아젠다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문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를 직접 다루는 UN 문서는 세계문화다양성선언과 문화다양성협약 등 두 건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비준 등의 공식 절차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국제 규범은 문화다양성협약이 유일하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위협받는 문화적 다양성의 약화로 인한 폐해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이다. 한국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지위는 단순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의 기적적인 전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문화 인지적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보존과 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s)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하고 예외적 지위에 있다. 단지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적 이외의 또 다른 한국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기적 이외에 또 다른 한국의 특별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이 양적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국가들이 각자 비교우위 사업에 집중하고, 개도국 주민의 수요를 중시하는 질적인 원조 방안 모색으로 선회한다. 이는 지원 사업들이 개도국 주민의 역량 개발과 지속적인 역량 축적에 기여하지 않으면,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지원이라 해도 ‘구멍 난 항아리에 물 붓기’와 같이 경제적·정신적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ODA 사업 중 개도국 주민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등 원조의 성과 측면에서 질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영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화 영역이다. 개도국 주민의 정신·정서·정체성에 근거하여, 스스로 문화를 지키고, 표현하며, 향유하고, 창조하여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영역의 제도·행정·방법론·인력·시설·장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문화 영역 ODA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재인식되어야 한다.

본 토론자는 문화영역 ODA 사업을 ‘감성 존중과 감성 증진’에 기초해서 정의했던 2010년의 개념을 ‘정신·정서·신체적 표현과 문화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재정의하였으며, 무력감과 절망감 등 빈곤의 다차원적인 스펙트럼을 소개하여 공적 개발 원조의 제일 목적인 빈곤 퇴치의 경제적 관점을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 중이던 문화 영역의 ODA 사업 중 유네스코의 문화 영역 분류 기준과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속성인 존중성·정체성·창의성·포용성·다양성을 기준으로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한국형 ODA 모델’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인 발전 경험과 성과 등을 알리고자 한다.

국무조정실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2년에 확정한 4개 분야 159개의 ‘한국형 ODA 모델’에서 누락되어,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존재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 영역의 ODA 대표 프로그램들이 ‘한국형 ODA 모델’에 포함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한국형 ODA 모델’에 문화 영역의 ODA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면, 그에 따라 모델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의 원조 규범이 추구하는 진정성 제고 및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는 선도적 공여국이라는 정체감이 강화될 것이다.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문화 ODA의 의미에 대한 발표의 핵심은 한국의 일반적인 ODA 정책의 시행과 정책 분열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법에 있다.

오늘날, 개발을 위한 문화의 힘을 인식하면서,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의 주요 원천으로 문화 ODA의 능력 배양을 추천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문화 ODA의 확장을 ODA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더 많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ODA 플랫폼과 이 의제의 통합 시스템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주요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더 많은 재정 자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 문화 ODA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공식화했다. 또한, KOICA 문화 ODA의 특정 분야는 결과 기반의 접근 방식을 가져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교부, 문화부, KOICA 등 많은 정부 부처가 개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Main Streaming이 구축되어야 하고 공동의 비전과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체계화된 ODA 추진이 필요하다.

샤바즈 엠 말리크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부공관장: 파키스탄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약 2,600만 달러 ODA 프로젝트에 감사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교육, 보건, 농업, 임업, 어업, 어업 분야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의 삶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그 효과도 증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한국의 문화 ODA를 환영한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단계가 될 것이며, 파키스탄의 문화 향상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사람에게 한국을 홍보하고 투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국가의 문화에 대한 복원 또한 수혜국 주민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이슬라마바드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있는 탁실라의 마을이 한국 문화 ODA가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지칭하고 싶다. 그곳은 훌륭한 불교 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간다라의 주요 중심지였다.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간다라 문명은 영적 영향력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다라 문화, 예술, 교육의 요람이기도 하다.

탁실라(기원전 600년에서 기원후 500년까지)의 고고학적 유적지의 대부분은 탁실라 박물관 주변에 있다. 천 년 이상 탁실라는 학습의 중심지로 유명하게 남아 있다. 50개 이상의 고고학적 유적지가 탁실라 반경 약 30km에 흩어져 있다. 탁실라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주로 간다라 미술로 구성되어 있다. 돌, 치장 벽토(stucco), 테라코타, 은, 금, 철과 기타 귀금속들을 포함하여 4,000여 점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탁실라 박물관은 1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파키스탄

불교 조각의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컬렉션 중 하나이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불교 사리탑은 보존되어 있고 부처님의 다른 이미지와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이 모든 풍부한 문화와 역사적인 사리탑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탁실라 마을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 ODA가 이 지역에 적용되어 세계에 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프로젝트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역의 인프라 시설에는 카페, 휴게소, 포장도로 및 기타 관광지 필수 시설이 건설될 수 있고, 한국은 매우 잘 개발된 관광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이 지역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파키스탄 탁실라를 한국의 경주와 같은 도시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문화 ODA는 아주 오래된 문화유산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탁실라에서 적절히 이용될 것이다.

강선주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개발협력지원센터 소장: 대학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적 활용으로 교육 분야 ODA에서 지식기반 원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 기관이 소재한 지역 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만이 주된 것이었으나, 파트너 국가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높여주기 위해 각종 ODA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협력대상국을 참여시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우리나라 ODA 민관 협력사업(PPP)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중부 지역 6개 병원 간호사들의 모자보건과 외상간호 역량 증진 및 지역주민 보건 증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종욱 펠로우십을 이수한 베트남 의료 인력을 활용하여 대상 병원 간호사들의 자체 간호 역량을 개발해주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자 교육, 전파 교육 및 보건 증진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별 교육 담당 간호사들과 후에대학교 및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진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KOICA의 지원을 받아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및 보건으로 교과목을 1, 2학기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1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또한 하계 방학기간에 베트남 현장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후에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지 문화와 정서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전개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 ODA로써 베트남 국립후에대학교 간호대학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이 소재한 '후에 시'와 '제주시'의 가교가 되어 양 지역 사회의 문화관광 분야 개발과 일자리 창출 및 상호 이해 증진의 폭을 넓혀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 이해와 공감대 의식을 갖고 함께 상생하기 위해 ODA에 대한 감성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대학교의 역할이다. 문화는 모든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며 특히 POST-2015에서 문화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질문] 고승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1. 지방자치단체의 ODA 추진의 타당성과 적합한 아이템은 어떤 것이 있는가?
2.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문화체육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 즉 석·박사 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수여국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ODA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답변]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2012년 KOICA와 제주특별자치도는 MOU를 체결하였고 ODA 추진에 대한 협력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 현지에서 요구하고 제주 지역에 맞는 ODA를 추진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의 ODA 맥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ODA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진하면 될 것 같다.

강선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제주한라대학교가 추진하는 ODA사업인 교육부 주관 국제화선도대학 지원 사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문] 제주대학교 학생: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주도 원조사업과 KOICA 등이 주관하는 관 주도 ODA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변]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KOICA ODA사업도 관 주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KOICA도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ODA사업도 환영하지만, 현지에서 기업이 단기간 내에 기업의 홍보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민간 원조를 공적 원조에 비교하면 장점은 수여국 현지 정부나 단체가 그 성과를 보고하거나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다는 것이나, 관 주도 ODA 사업과 달리 개인이나 민간은 언제든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 주도 ODA 사업은 경직성이 있어도 지속성이 장점이다.

[질문] 한희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샤바즈 엠 말리크가 발표한 파키스탄의 경우, 문화 ODA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변]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파키스탄 현지 한국 공관이나 KOICA에 신청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연간 파키스탄에 지원하는 총 ODA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KOICA가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가별 ODA 사업을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아보면, 문화 부분은 상위 순위에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중·일 ‘삼포세대’의 희망 찾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은 한편으로 공적개발원조 체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개발 경험을 경제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한계를 노출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민주화를 이루면서 발전한 모범적인 사례에 속함. 한국의 경험은 정치적 민주화, 양성평등, 보편 교육, 인권 신장, 시민사회의 성장,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의 경험이어야 함
- 문화 영역의 ODA 대표 프로그램들이 ‘한국형 ODA 모델’에 포함된다면, 그에 따라 모델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이 추구하는 진정성 제고 및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는 선도적 공여국이라는 정체감이 강화될 것임
- ODA의 비효율성 줄이기 위해 개별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이 아니라, Main Streaming이 구축되어야 하고 공동의 비전과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체계화된 ODA 추진 필요
- 문화 ODA를 통해 파키스탄 탁실라를 한국의 경주와 같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면, 파키스탄의 문화 향상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고 투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적 활용으로 교육 분야 ODA에서 지식기반 원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파트너 기관이 소재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여국 현지 상황 파악과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석·박사 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생 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프로그램이 절실함

삼포세대는 취업을 위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오늘날의 청년들을 일컫는다. 최근의 장기 경기불황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러한 세대가 등장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아무리 세계적인 경기불황이라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동아시아의 청년들만큼 연애, 결혼, 출산을 극단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모두가 인생 안에 밟아가는 당연한 단계였던 일들이 한·중·일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연애, 결혼, 출산은 부와 지적 능력과 더불어 개인의 경쟁력을 가리키는 지표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한·중·일 청년들이 이성과의 친밀한 만남을 갖고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회적 이유와 다른 사람과의 유대 경험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지표로 여기게 된 이유에 대해 본 세션은 한·중·일 삼포세대의 상황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사회

강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발표

김홍중 서울대학교 교수

주 디 중국사회과학대학원 교수

나가타 나츠키 효고교육대학 교수

토론

이상규 서울대학교 학생 대표

평 징징 고려대학교 학생 대표

이즈오 쇼헤이 노무라증권주식회사

정리

양수영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회문화부 연구원

김홍중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이미지는 지난 3, 40년간 극적으로 변화했다. 7, 80년대 한국 청년들은 산업화, 민주화 등 국가 건설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완전 경쟁 사회 도래로 한국 사회가 구조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1980~1995년 사이에 태어난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양극화,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적인 변화보다 개인적 생존 문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삼포세대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등장했다. 결혼과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 직장 생활과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그들은 경쟁사회 속에서 그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취업을 택하는 대신, 연애와 결혼과 같은 삶의 중요한 단계들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현 청년 세대를 '생존 세대'라고 정의한다.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청년들은 미래를 비관한다. 생존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 보아도, 미래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기에 바깥세상의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 속에 갇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비관, 즉 '미래 쇼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청년 세대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주 디 중국사회과학대학원 교수: 한국 삼포세대와 비슷한 현상을 오늘날 바링허우 세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링허우는 1980년대에 태어난 중국 청년들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생겨난 빈부 격차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대이다. 이 바링허우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주거 문제를 꼽을 수 있다. 2000년대 초에 이르러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들이 빚을 지거나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집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명문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주택 구입에는 부모의 재력(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경우 집을 살 가능성 12배 증가), 결혼(기혼자의 주택 구입 가능성 13배 증가), 나이(1980년대 이전 출생자 주택 구입 가능성 11배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주택 구입의 큰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는 혼수에 주택이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청년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은 중국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나가타 나츠키 효고교육대학 교수: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출산율과 결혼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결혼이 출산을 위한 필수 과정이기에,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선 자리(마치콘) 등으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연애할 기회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오늘날 일본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에 소극적인 진정한 이유를 간과한다. 2000년대 들어 일본에는 성관계에 관심이 없거나, 성 경험이 전혀 없는 2, 30대 청년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 세대가 연애와 결혼에 소극적인 이유는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사회적 변화로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이제 남성이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어야 한다거나, 여성이 가정일과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사회 전체의 연애·결혼관은 이러한 청년 세대의 젠더 규범 변화를 따라잡을 정도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통적인 사회의 연애·결혼관의 괴리는 연애와 결혼에 수동적인 청년들의 등장과 맞닿아 있다.

이상규 서울대학교 학생 대표: 청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에 대한 실망과 무기력감, 환멸이 있어서이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모님 말씀대로 좋은 대학과 직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취업과 결혼하기 무척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이다. 부모 세대도 청년기에는 똑같이 어려웠고 그럼에도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고 비난하는 것은, 청년 세대가 어떠한 환멸과 좌절을 경험했는지 모른다는 반증일 것이다. 급격한 경쟁이 사회 전체로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경쟁하는 국면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연대가 사라지고, 경쟁 속 실패는 개인의 무능과 잘못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오늘날 삼포세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오늘날 청년 세대는 그 어느 면에서도 기성세대를 능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앞세대에 총체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순응하거나, 기생하여 살아남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애·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청년들이 현실 변화를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표출하는 소극적인 반항에 불과하다. 삼포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정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 징징 고려대학교 학생 대표: 청년이 나라의 대들보라고 하지만, 오늘날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꿈과 현실의 큰 괴리 속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 삼포세대 원인은 너무나 다양한 것 같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수입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결혼을 위해서는 집을 혼수로 꼭 장만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 중국의 1자녀 정책으로 한 부부가 네 명의 부모를 모두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 경쟁으로 인한 취업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다른 주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즈오 쇼헤이 노무라증권주식회사: 오늘날 일본 삼포세대 등장 배경에는 연애·결혼과 관련한 선택지가 많아진 사회의 도래가 한몫을 한다. 에도 시대와 같이 중매결혼이 일반적이던 시대에는 집안에서 정해진 특정 사람과 꼭 결혼해야 했지만, 그러한 규범이 해방된 사회가 되면서, 연애·결혼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생겨난 것이다. 특히 결혼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오늘날, 이러한 선택은 매우 자유로운 것이다. 또한 일본인은 운명이라는 것을 많이 신봉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러한 말에 너무 매달린 채,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점에서는 수동적으로 운명을 기다리기보다, 인터넷이나 마치콘 등을 통해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질문] 이문정: 한국의 골드미스와 비슷한 여성들이 일본이나 중국에도 있는가?

[답변] 주 디 중국사회과학대학원 교수: 중국의 바이구징이 이에 상응하는 개념 같다.

나가타 나츠키 효고교육대학 교수: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학력, 고수입 여성들은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꺼리기에, 더더욱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다.

[질문] 임세범: 삼포세대 문제의 해법으로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인가?

[답변] 이상규 서울대학교 학생 대표: 청년들의 문제 상황에 공감하고, 이것이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함께 고민해주는 것,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태도의 변화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질문] 이대중: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답변] 이상규 서울대학교 학생 대표: 어차피 지금처럼 취업난 속에 고생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고생하고 싶다. 예술가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평 징징 고려대학교 학생 대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편이다. 지금과 같이 학문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이즈오 쇼헤이 노무라증권주식회사: 10년 전이라면 첫 여자친구를 사귀는 때이다.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의 직업과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삼포세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 담론의 활성화. 제주포럼 '삼포세대' 세션과 같이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한 나라 간 비교 연구 및 소통의 장 확산. 나라마다 청년 문제의 실상이 각기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청년 문제 실상과 해법에 대한 이해가 큰 참고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한 청년, 청년 연구가,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 삼포세대가 스스로 노력하여 배우자를 찾을 다양한 기회 마련. 인터넷 미팅, 일본의 마치콘 같은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성 간의 만남이 결국은 개개인의 선택임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이러한 만남을 장려하기보다는, 청년 세대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세심한 동인들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함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글로벌 영리더들의 도전과 협력

인간개발연구원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이는 제주포럼에서 학생들의 교류로 과거를 아우르고 미래를 통합하는 건설적인 행사이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글로벌한 도전과 마인드를 심어 주는 제주포럼이 되고자 제주대학교를 비롯하여 일본 타마대학교 방문단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단이 참가, 글로벌 영리더들의 도전과 협력에 대한 대표자 발표와 참가자 전원의 토론으로 지구촌을 아우르는 우정과 친교의 장이 되었다.

사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발표

강혜희 제주대학교/한국 대표

류하진 웰즐리대학교/한국 대표

자오 카일린 동국대학교/중국 대표

요네쿠라 마사히로 타마대학교/일본 대표

일본 대표

프란체스카 라네타 조지워싱턴

대학교/미국 대표

강혜희 제주대학교/한국 대표: 수줍음을 많이 타고 긴장을 잘 하는 편이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리더로서 자질이 있나 자문할 때가 많았다. 리더라면 대중 앞에서 사회성을 발휘하면서 활발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겼다. 작년에 여러 국가에서 모이는 회의에 참가했다. 추가로 임원을 선출하는데 추천을 받았다. 스스로를 활발한 사람도 아니고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 여겼던 나를 사람들이 추천한 것에 놀랐다.

리더십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유형, 뒤에서 묵묵히 팀원들을 지지해 주는 유형 등 많은 리더들을 봤지만 각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조용히 뒤에서 팀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유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집행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내면에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리더들은 각기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좀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사회와 제주포럼 주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류하진 웰즐리대학교/한국 대표: 최근 크레온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15명의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창의력을 키우는 기능성 게임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계기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나의 꿈은 선생님이었다. 교생실습을 하던 중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다.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다가와 내가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다. 친구들 앞에서 틀린 문제를 지적하며 가르쳐 주었던 것이 아이에게는 상처였단다. 한국학생이었다면 친절하게 바로 잡아준 좋은 선생님이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과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덕분에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로, 교실 현장에서의 상황이었다. 집중력이 짧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외 활동 시간을 수시로 마련해 주었다. 너무 즐거워했고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이미 습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용히 혼자서 연습문제 풀거나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이 되었고, 이제는 놀이를 통해 많은 배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직접 겪었다. 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나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가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누구나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존경하는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업 환경에서 필요한 시대적 변화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과학과 기술이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명을 늘리고, 삶의 방식도 바꿀 수 있다. 더불어 교육방법 또한 바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육의 중요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미래 사회에는 국가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서로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끝낼까 한다. 우분투(UBUNTU)는 내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말이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과일을

나무에 매달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했더니 아이들은 모두 손을 잡고 뛰어갔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한 명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 갔니? 그러자 아이들이 '우분투!' 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분투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인 공생 리더십을 생각하게 한다. 재미, 나눔이 있고 칭찬이 있어야 하는 리더십, 뒤에서 함께하는 배려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동참하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중·일 3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란체스카 라네타 조지워싱턴대학교/미국 대표: 사회적 기업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 아시아에 대한 접근법과 사고법에 대해 배워서 너무 기쁘다. 제주에서 서로 많은 것을 교류하게 됐다. 경제와 문화를 알게 됐다. 한국 대기업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 제주포럼도 중요한 행사이다.

한국 방문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한국은 현재 25~35세의 90퍼센트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25~29세의 학사학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데 한국은 매우 높다. 소득의 분배 비율을 보고도 많은 것을 생각했다.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많은 도전 과제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점점 더 구직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경쟁도 높고 은퇴도 빠르고 노후 준비도 아주 큰 부담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노동인력이 졸업 이후에 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공통된 문제이다. 여성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여성이 대학 진학을 많이 하지만 리더로 다시 태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CJ 방문 중 사회적 공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유연한 업무시간 제도 등을 통해 결혼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익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니즈에 맞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상당히 인상 깊었다. 교육, 일자리 창출, 여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국가는 달라질 것이다. 각 국가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도전과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국가 협력을 통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자오 카일린 동국대학교/중국 대표: 중국에 이런 말이 있다. '아무리 멀어도 우정을 나누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선 한·중·일·미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였다. 비록 우리가 소속된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멀어도 상관없다. 또 광범위한 문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한 테이블의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옆 분 얼굴을 보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고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

여기 제주포럼은 자국 이슈만을 다루고자 하는 모임이 아니다. 글로벌한 아시아 이슈를 다루고 나아가 어떻게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라는 것은 모든 국가가 모여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교환학생이다. 서울에 머물면서 중국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동국대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며 역할을 맡아 신중하게 생각하며 모의 토의도 한다. 동아시아를 어떻게 평화롭게 번영하게 만들 수 있을까 회의도 한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함께할 수 있고,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한다.

요네쿠라 마사히로 타마대학교/일본 대표: 아시아 시대를 향해서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가. 4개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한·중·일의 전 세계 GDP비율은 세계 성장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하지만 한·일 관계, 한·중 관계는 정치적 문제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험악한 상황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독도 해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생각하면 쌍방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 학생들 중에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적고, 군사충들에 대해 우려하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섬을 양국의 관광지와 자연 채굴하는 공동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한·일 평화 상징하는 공동개발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미·일·중 공통 과제인 북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북한주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인 가치관은 이러한 정권을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어렵고 역사적 문제나 핵미사일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과거 한·미·일 3개국이 협조했던 사실을 보면 다시 한 번 협조해서 북한에게 노력하고 행동 등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아시아의 문제는 교류를 더욱 더 확산하고, 이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해야

한다. 문화·종교 등에 대한 이해를 더 높임으로써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생길 거라 생각한다. 경제·문화 교류는 민간기업의 역할도 크게 필요하고, 일본 기업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은 외국인 채용, 급여 평등, 외국인에 대한 평등 처우 문제 등에 소극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에 비하면 현지화 측면에서 늦어지고 있다. 과거 성공경험 때문에 세계 변화 스피드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의 경영 스타일에서 대단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의 글로벌 전략을 배워야 한다.

한국 기업은 현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블루오션 전략 실천, 현지인의 기호에 맞춘 독자적 현지화 성공 등, 일본 기업보다도 먼저 개도국의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했다. 미국 기업은 해외에 진출했을 때 현지의 우수한 인재에게 관리자 직책의 기회를 부여한다. 반면 일본은, 관리직은 현지 인재가 아니라 일본인을 채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일본은 우수한 인력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인력 측면에서 다국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미·일 3국이 정보 교류의 장을 늘려야 한다. IT선진국 한국을 배우면서 일본 제조업의 강점을 한·미와 결합하는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재 에너지 자원 대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 후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현재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것은 천연가스이다. 앞으로의 세계시장은 천연가스 중심으로 커다란 변혁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천연가스 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세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폐쇄적으로 생각되는 일본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일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 일본 방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일본인 청년들의 해외여행은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다른 언어, 특히 영어를 익혀야 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 다양한 습관을 익혀야 한다. 일본인 전체가 해외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3국의 상호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아시아를 생각하면, 서로 간의 인종과 종교 역사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김혁준 연세대 학생: 협력을 이뤄나가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협력을 위해서 국가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답변] 니클라스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생: 협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투명성과 신뢰가 담보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이 필요한데 맘을 열지 않는다면 왜 협력하는 것일까. 상대가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반드시 신뢰와 투명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협력은 필요가 없다.

제5장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여성 리더십



미래시대 여성의 역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세계경제가치가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지식재산이 미래 경제사회를 주도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한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잠재되어 있었던 여성이 창조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경제를 주도해 가는 모습을 본 세션에서 살펴보았다.

사회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발표

안경미 고씨공방 대표

김 은 아루마루 대표

김명숙 원라인센 대표

안외선 우주영재과학 대표

우계희 다나식품 대표

양효숙 (주)포디랜드 대표

정리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안경미 고씨공방 대표: 전통 사물놀이를 위한 타악기 개발과 국악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한다. 주력 상품인 상모는 세계 유일의 모자 놀이기구로, 이를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지만, 수요는 크지 않은 시장 환경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88올림픽 이후 전통악기 보급이 활성화되어 대량화 생산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나무의 고갈 문제로 원재료를 중국에서 조달하지만,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재활용 종이를 이용한 난타복의 개발 등 악기의 개량도 실행하고, 상모를 주제로 한 관광 상품 개발로 주력 상품 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발명협회를 통한 수상 경력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CSR 차원에서 사단법인 전통소리마을 국악연수원을 통해 전통 사물놀이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김 은 아루마루 대표: 아루는 낮은 곳, 마루는 높은 곳이라는 뜻의 기업으로,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교육용 교재 개발과 예술적 조형성을 이용한 미술 공예품을 직접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 고유문화 유산의 체험과 교육을 위한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미술 공예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유치원과 학교, 복지관 등에 납품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도입 및 다양한 교구를 제작한다. 남양주시 나전칠기 체험전시관에서 전통놀이 배움터를 운영하고 나전칠기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미술 전문 교육을 수행한다. 태국, 인도, 미얀마 등의 한국 전통용품 교육 등을 통해 재능 기부를 한다.

김명숙 원라인센 대표: 애완동물이 향에 예민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공 향을 넣지 않은 애완용 목욕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의 강점을 기반으로 춘하추동 샴푸 및 에센스 등의 천연 생활용품을 개발했다. 국제발명전 등에서 다양한 수상을 했으며, 바이오 신기술을 통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비전과 기업 정신을 실현 중이다. 화학 물질의 10가지 무(無)첨가 원칙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면서 여성 기업가의 미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안외선 우주영재과학 대표: 21세기는 본격적인 우주 시대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일반 생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품 개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우주 시대를 주도할 우주영재 과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의인성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재 개발과 학습 프로그램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100세 수명과 융합 시대에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인성 교육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비전, 체험, 공감, 소통 등의 자기 주도형 미래 설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계희 다나식품 대표: 꿈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재래식 생산 방식을 발전시켜 자연조미기법을 통한 수산물 가공의 경쟁력을 구축할 것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확대되면서 자연조미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특허로 출원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생산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가 경쟁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자 한다.

양효숙 (주)포디랜드 대표: 자유로운 상상, 무한한 창조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학과 과학 교육을 위한 발명 교구재를 개발하여 교육부장관상, 금상, 은상 등을 수상했다. 융합영재 창의교육을 위한 교육 기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원리에서 발명된 교구로 4D 프레임 교구 개발했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직무 연수 교육을 통해 창의교육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2008년부터 수리 과학 창의 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할 정도로 교육의 창의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공모전을 활용하여 홍보와 보급이 가능한 활로를 열고 있다. 해외 진출 전략을 통해 스웨덴 국립과학기술관에 보급하고, 유럽과 중국 등 해외에서 논문 연구, 공모전 수상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하면서 인정받게 되었다. 해외 진출에서도 여성 기업가의 섬세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성 기업가로서 2세대의 두뇌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창조경제 시대에 여성의 창의력과 미적 능력, 유연한 사고를 통한 공감능력은 큰 역할
- 국내의 여성 경제 활동은 약 50%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
- 한국은 여성 발명에 대한 본격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출원 수 28.2% 증가에 비해 여성 발명가 출원 수 122.4%로 대폭 증가
- 여성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확대는 자녀의 창의성 교육에도 영향

여성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사)전문직여성한국연맹

BPW 한국연맹(전문직여성한국연맹)의 주관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국제적인 조직인 BPW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21세기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성 리더의 역할과 여성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참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회의 핵심구성원으로서 각국 여성리더의 의견을 제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사회

이인실 BPW 한국연맹 회장

발표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 세계연맹 회장

위게트 오로르 세나 도사 BPW 세계연맹 부회장

야스민 다위치 BPW 세계연맹 사무총장

파이 자한 아라 RACH 재단 회장

니나 안 커닝햄그룹 부사장

손지애 아리랑국제방송 前 사장

정리

임수영 BPW 한국연맹 Young BPW

야스민 다위치 BPW 세계연맹 사무총장: 지난 30년 간 전문직 여성연맹 (BPW, Business & Professional Women)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PW는 오랜 역사를 지닌 비정부기구(NGO) 단체로, 100개국의 BPW 연맹이 함께 일하고 있다. BPW 세계연맹 회장으로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또 각 나라와 지역에서 BPW 멤버들이 서로 도우며 다양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할 것이다. BPW 멕시코연맹의 멤버로 있으면서 실행한 프로젝트 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앞으로 활동할 기회들을 제공해 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BPW 세계연맹에 속한 각 국가 연맹은 서로 함께 일하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BPW 독일연맹은 정부로부터 매년 15억을

지원받으며 이를 통해 독일 내에서 동일 직종 동일 임금(Equal Pay Day) 캠페인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아직도 여성 역량 강화와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많은 일이 산재해 있다. 우리는 UN과 각국에 있는 UN 에이전시와 협력하여 여성이 속한 모든 커뮤니티에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게트 오로르 세나 도사 BPW 세계연맹 부회장: BPW 세계연맹의 직전 부회장으로서 나의 비전과 삶을 나누고 싶다. BPW는 각국 여성이 함께 모여 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전문직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다양한 스킬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나는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그라스루트(grassroot) 커뮤니티 여성들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BPW와 같은 NGO 단체를 통해 아직 여성으로서 어떠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는 아프리카의 많은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고, 특히 고위 간부급 위치(decision making place)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니나 안 커닝햄그룹 부사장: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어렸을 적에 미국에 이민 간 후, 40년이 넘도록 미국에서 건축가로 활동해 왔다. Cunningham Architects 부사장이자 건축 디자이너로 롯데월드를 비롯한 삼성 에버랜드, 홍콩 디즈니랜드 등 놀이공원 건축 분야에서 현재에도 한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꿈과 비전에 대해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인생이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미국으로 떠난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게 하는 한국의 제한적인 제도들 때문이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용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 미혼 여성이자 전문직 여성으로서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바로 현재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이다. 결혼, 안정적인 직장 같은 부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부차적인 요소들이다.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도전을 하나씩 이겨 나가는 그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목표는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꿈, 자신감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손지애 아리랑국제방송 前 사장: 나는 한 가정의 엄마이자 부인으로서, 그리고 전문직 여성으로서 두 개의 길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이자 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은 대다수 여성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1980년 중반에 취직할 때만 해도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여성 대학 졸업자를 신입사원으로 모집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러한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모집되기 시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은 드디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녀 불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에 대한 문제들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다수 여성이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한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을 향한 불평등한 대우와 여성들 간의 경쟁,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제한하는 기존의 규율과 정책들로 인해 대다수 여성이 자신의 일터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30년 동안 남녀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한국 여성은 현재도 남자에 비해 가정에 대한 의무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과 비슷하지만, 30~40대가 되면 가정을 위해 상당수의 여성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국 노동인구(workforce)의 50%가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이 비율을 60~70%로 높일 경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통계로 증명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모든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신이 원할 경우, 가정 안팎에서 일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 자한 아라 RACH 재단 회장: BPW 세계연맹의 Goodwill Ambassador로서 나의 삶을 이번 자리를 통해 나누고 싶다. 나는 인도 왕실의 왕자와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인도 여성의 삶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처참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어떤 깊은 사명감을 느꼈다. 그때부터 인도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고, 다양한 자선활동을 펼쳐왔다. 1995년에는 베이징 컨퍼런스에 참석해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라는 주장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BPW와 같은 여성을 위한 NGO 단체의 도움과 활약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현재 UN 리더십 아래 여성 역량 강화(Women Empowerment Principles)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인식과 중요성에 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서 여성 역량과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 세계연맹 회장: 발표자들과 같은 롤 모델(role model)을 통해 한국과 전 세계의 젊은 여성이 여성의 역량과 지위를 향상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꿈꾸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과 열정,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쯤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지금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데, 이 리더십은 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와 조건에서 조직과 사회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 만일 우리가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결정권을 행사해야 할 위치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면, 왜 이러한 불평등이 아직도 현존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아니라면, 왜 아닌가?(If Not, Why Not?)’와 같은 생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더 이상 우리는 정책을 바꾸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정부, 각 커뮤니티와 가정에서 더 많은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안일하게 바라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주도해야 할 때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BPW 같은 NGO 단체를 통해, 아프리카 같은 그라스루트 커뮤니티부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이르기 까지 각 나라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
- UN과 각 나라 UN 에이전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해야 함
- 특히 동일 직종 동일 임금, 여성 역량 강화와 같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
- 한국 노동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더 많은 여성이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

새로운 아시아와 글로벌 하모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화·세계화와 함께 현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시대이다. 국가 간의 거리가 의미 없을 정도로 무역과 금융 등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와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익을 초월한 이익 실현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성의 회복과 지역의 독자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국가 간의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새로운 아시아를 위하여 세계화와 지역화의 공존으로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호혜 공영하며 융화와 존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글로벌 하모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아시아를 디자인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사회**
김정숙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위원장
- 축사**
황인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 발표**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 토론**
김대영 주한 미국대사관 전문위원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
권선아 아시아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박홍순 선문대학교 교수
곽영숙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리**
진금옥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한국의 여성과 글로벌리제이션의 주제로 첫째는 ‘여성의 리더십’이다. 세계의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는 예로 한국은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 내었다. 칠레의 여성 대통령은 증오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아직도 여성 비율이 15.7%밖에 안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하여 여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리더로서의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국 여성의 현재와 세계’이다. 한국 역사 속의 여성 인물들을 보면 공동체 문화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 동문을 통하여 최초 여성학교를 만들었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회 봉사자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는 남성보다 높고, 교육의 수준도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활동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양육 문제이다. 여성이 가치 창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천년의 개발 목표를 국가 문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의 기울이기'를 통하여 사회에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찾아서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 평등 의식, 돌봄 의식,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감 능력, 소통, 사랑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조화와 타협의 권위, 역동적 합의, 관용적 현실주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화합과 상생, 중재와 종합에 대한 의지를 가진 핵심 여성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

김대영 주한 미국대사관 전문위원: 안명옥 교수의 발표는 우리 외교도 다른 나라 여성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가능성이 풍부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새로운 아시아를 향해 가는 현재, 우리 한국 여성이 적극적 행위자로 자처함으로써 젠더 시각이 태생적으로 내재한 내일을 오늘부터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전담 기구인 국무부에는 세계여성문제 전담 부서가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세계여성문제 전권 대사가 있다. 이 부서는 미국 외교 정책 중 평화와 안보 구축, 경제, 정치, 여성의 지위 향상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 리더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대민 외교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다시 각국 미국 대사관에서 호스트 컨트리와 협력하여 그 국가의 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으로 구체적 액션이 취해질 수 있게 현실화하고 있다.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치 지향적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특히 여성적 가치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UN에 2015년 이후 새천년 개발 목표와 아동미래비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여성의 글로벌리제이션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미래의 변화를 위해 특히 현재 한반도 위치에서는 평화, 안정, 공정의 가치가 사회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권선아 아시아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오늘 발표를 통해서 첫째, 역사를 초월한 국내외의 성공적인 리더십 및 여성의 가치에 대한 사례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둘째, UN Millennium Summit(2000년 9월) 및 최근의 UN 고위급 패널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인의 한국적 적용은 바로 지난해 국회 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에서 수행된 연구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세계적인 이슈들이 지역화 노력의 일환인 여성아동미래비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박흥순 선문대학교 교수: 글로벌리제이션은 국제적 추세이며 현상이다. 오늘 발제를 중심으로 문제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우는가 하는 점이다.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은 가령 1) 청년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2) 기업 취업 등에서 양성평등 지표 등을 개발, 평가를 유도하고, 3) 한국의 중진국 위상에 걸맞은 아시아 연대 전략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곽영숙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여성과 연관된 지역 세계화의 주요 주제는 인권, 폭력 방지, 일과 양육, 건강, 다문화 등이며, 이와 연관된 여성 리더십이 중요하고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멘토링, 지역적 국가 간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을 바탕으로 한 국제 협력은 문화, 학문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주제들의 상당 부분은 국가 간의 갈등 등 정치 상황의 영향 하에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국가 간 군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그럼에도 국제 관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은 역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법적 제도화를 위해서 아시아권 및 범국가적 연대가 필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핵심 여성적 가치는 평등 의식, 돌봄 의식, 투명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 사업
- 가치 창출의 삶을 위한 의식 전환 교육
- 범국가적 연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제6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Key development challenges of nation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trategy linking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terms of

-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the jobs creation security and,
- The st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Carbon sobriety of the five key sectors involved in emissions or sequestration of GHG

- Energy (Infrastructures, transportation, etc.)
- Capital equipment and industrial processes
- Agriculture, (rice, etc.)
- LULUCF
- Waste management, etc.

ende

지속가능발전 달성

물·식량·에너지 연계성

외교부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3대 축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이 없이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인 물·식량·에너지의 무분별한 소비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또한 에너지 고갈 및 식량·물 부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이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한편, 물·식량·에너지는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다른 자원 생산에 이용되는 상호 연계성(nexus)으로 인해 개별적으로는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물·식량·에너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발표

알렉산더 뮐러 IASS 선임 연구원

이보 드보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토론

윤종수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소장

아므리타 골다 인도 국제관계위원회(ICRIER) 선임연구원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세계에너지협의회 공동회장

남상민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 사무소 부소장

정리

전술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이보 드보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물-식량-에너지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는 2011년 독일 본 콘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개념으로 기후 변화, 천연자원의 부족, 도시화, 세계화에 따라 물, 식량, 에너지의 발전 양상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인지한 데서 시작되었다. 넥서스 접근법은 물, 식량, 에너지 간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분야와 규모를 초월한 거버넌스 및 매니지먼트를 통합해 나가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중산층 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과 인도에서 중산층이 확대되어, 물, 식량, 에너지 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또 2030년까지 육류 소비는 4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육류 생산과 늘어난 인구에 따른 식량 생산 부담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을 촉발할 것이며,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 특히 녹색성장과 직결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는 국가적으로 마련하여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요르단의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요르단은 세계에서 4번째 물 부족 국가이며, 경제 발전에 따른 석유 수요의 증가로 GDP의 20%를 석유 수입에 지출하고 있다. 요르단은 이집트 국내 정세 불안으로 송유관 폭발이 지난 10년보다 11차례 증가하는 등 물 위기 및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심각한 국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2022년까지 증가할 물 수요의 31%까지 해수 담수화를 통해 공급하고, 천연가스(29%), 세일오일(14%), 재생에너지(10%) 및 원자력(6%) 포함하는 에너지믹스를 마련하였다.

다만, 원자력 발전 증가에 따른 발전 용수의 수요 급증, 경제 발전에 따른 생태계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으나, 물, 식량, 에너지 위기에 처한 국가의 경우 정부가 포괄적인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넥서스 입안 및 구성에 녹색성장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경제 성장의 질적 및 양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민관 협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성장 정책은 사회 경제적 진보와 생태계를 중시하며, 동시에 성장을 저해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고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를 촉진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2010년 한국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창설되어 2012년 국제기구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22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최빈국을 포함,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한국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저탄소 및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한국의 경험과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GGGI를 창설하였다.

GGGI는 현재 22개국과 34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특히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경제 발전-성장, 자생력,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과 환경 문제를 모두 다루는 기구로, 환경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 방위적 넥서스(연계성)를 추구하는 기구이다.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바, 녹색성장 정책은

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한다. 이는 다음 다섯 분야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분야. 현재 많은 국가가 에너지 가격과 공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우크라이나 송유관 공급 중단 사태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기후 변화 정책을 변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개별국가(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등으로) 에너지 자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 에너지 분쟁과 전쟁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정치적 안정성을 향상한다.

둘째, 식량. 인구가 많지만, 농지가 부족하고 풍부한 재정을 확보한 국가들은 외국의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와 같이 땅을 외국에 임대하는 것은 경제 평등을 저해하고, 불평등으로 내부 갈등을 증가시킨다.

셋째, 물. 에너지 안보와 마찬가지로, 강 등 담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강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메콩 강, 나일 강 지역 또는 중동 지역 등은 범국경적으로 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물과 식량. 또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 전체 사용량의 80%가 농업용수로 소비되는 등 물 안보가 식량 안보와 직결되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한 바, 물-식량-에너지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이 글로벌 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생태계-Ecosystem. 생태계 관리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 환경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산림을 복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 저항에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대응으로 기후 관리 능력을 상승시켜 재난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기후 변화는 물, 식량, 생태계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뮐러 IASS 선임연구원 · 전 독일 소비자보호 · 식량 · 환경부 차관: 현재 우리는 인류세(Anthropocene, 인류가 생태계를 침범하고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질 시대를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천연자원에 질적, 양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대)에 살고 있다. 만약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연과 천연자원의 가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는 현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담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기후, 생물 다양성, 그리고 식량 안보, 이

세 가지가 자주 논의된다. 그런데 이 근간에는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과 같은 각 분야에 대한 개별적 접근 방법은 이제 불충분하다.

인간의 활동으로 우리 자연과 천연자원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날이 오염되고 줄어드는 농경지만 봐도 알 수 있다. 토지가 오염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 비용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숨어 있는 손실 비용이 엄청나다.

현재 인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오염 사례를 소개하겠다.

첫째, 인류 활동은 천연자원을 오염시켰다.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 식량 생산량 증가로 이러한 상황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향후 몇백 년 동안 급속하게 팽창할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한다. 인간이 오염시킨 환경 문제는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사회 문제는 또 다시 추가적인 환경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인류 활동은 천연자원의 수요를 상승시켰다. 농업용수는 세계적으로 취수되는 물 전체의 70%를 사용한다. 또한 인구당 가용 농지가 감소할 것이다.

셋째, 넥서스는 천연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 상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 현재 물,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은 범국가적으로 공용되고 있다. 만약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경우에 체계적으로 물 관리에 공조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식량 부족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대두를 수입해왔고 매년 8,00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브라질은 주요 대두 수출국이다. 물과 식량 격차가 벌어지면 국제 평화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그렇기에 물과 식량을 비롯한 천연자원 부족 문제는 지리적 관점과 무역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는 글로벌 문제이다. 매년 많은 양의 물이 폐수로 버려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중국(1위)과 미국(2위), 다음인 세계 3위 수준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물발자국(blue water footprint, 환경적인 개념으로 생산에 필요한 물과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단위)로 환산한다면, 세계 1위이다. 즉, 우리가 식량과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물의 양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도 있고 체계적인 폐수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앞서 발표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금일 발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넥서스는 물, 식량, 에너지를 넘어 통합적인 지속 가능한 전략을 위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넥서스 전략은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천연자원은 지리·지형적 요인 및 강 유역(river basin, 강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나일 강 유역, 메콩 강 유역 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에너지와 식량은 글로벌 콘텍스트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넥서스는 학문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접근해야 하며, 분야 간의 내부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부처를 초월한 접근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드보어 GGGI 사무총장이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넥서스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넥서스의 범주와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윤중수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소장: 발표자가 언급한 대로, 늘어나는 인구와 증산층 확대로 천연자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금일 논의되는 넥서스에서 언급한 물, 식량, 에너지 세 분야 이외에 기후 변화, 질소 순환, 생물 다양성 손실 또한 세계적인 문제이다. 비료에 포함된 질소는 토지를 오염시키고 녹조를 발생시키며 해양의 산성화를 초래한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모든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정책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아직 이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부와 환경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두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넥서스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한 접근법은 아직 없다. 에너지는 산업 담당인 관계로 다른 부처에서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 한국 정부는 전형적인 개별 접근 방식으로 접근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물, 식량, 에너지 문제는 정책이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한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세계에너지협의회 공동회장: 식량, 물, 에너지 이 세 가지 요인의 연계성은 공통 문제를 지닌다. 이 문제는 안보와 가격 차원의 접근성이다. 우리는 식량과 물의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가격과 접근성 문제는 천연자원의 희소성과 연계되어 있다. (FEW(Food, Energy, Water) is few) 우리는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데, 안보, 가용성, 그리고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한 에너지 조직이다.

보통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삼중고'로 불린다. 식량과 물 문제 또한 에너지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은 복합성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기술을 통해 기회로 바꿀 수 있기도 하다. 몽골의 경우, 지방 단위로 태양열과 풍력을 활용하여 24시간 일 년 내내 날씨에 상관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관개 시설에 물을 공급하고 식량을 생산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식량, 물 세 분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몽골의 사막화 방지에도 기여하였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도 적용할 방법이다. 따라서 물-식량-에너지 넥서스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에너지 산업의 측면에서는 과학과 기술 개발을 통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남상민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동북아시아 사무소 부소장: 물, 식량, 에너지 연계성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얘기해 보겠다. 첫째로는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확보이다. 오늘날에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한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로는 생물 다양성이다. 생물 다양성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로는 재생 에너지이다. 이 연계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를 버리는 문제인데, 어떻게 에너지를 덜 버리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재생 에너지가 대안이다.

정책 통합성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개별적인 해결책이 아닌 범분야적인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마지막 대응책은 인식 제고이다. 우리가 연계성에 관해 더 나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동북아에서는 범국가적 식수 문제가 없지만, 만약 중국이 그런 문제를 겪는다면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이웃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범국경적인 식수 문제를 아시아 국가가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므리타 골다 인도 국제관계위원회(ICRIER) 선임연구원: 인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인도는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도의 관개 시설과 식량 안보 및 바이오 연료 생산성을 소개하겠다. 인도의 인구 53%가 농업에 의존하지만, 농업은 인도 GDP의 18%만을 차지한다. 인도에 'food belt'라고 불리는 지역의 관개 시설을 정부에서 개선했고, 전기 공급도 개선했다. 인도에서는 보조금 지원만으로 한계를 느꼈기에 해결책을 수요 조절에서 찾았다. 예를 들면, 지하수가 부족했는데 정부에서는 물 펌프를 하루에 몇 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농업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연료이다.

사탕수수는 인도의 주 생산 품목으로,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것에는 물도 많이 소비되었다. 그래서 사탕수수를 화학 산업, 주조 사업의 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탄올의 가격이 고정되지 않았고, 이익 배분 또한 어느 회사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넥서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국은 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야를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잘 정리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는 적절한 당사자에게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보 드보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한국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토론에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각을 한국 경제에 기반을 두어 제기해왔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점은 연계성 분야에서 환경 위기가 줄어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창조 경제를 활용해서 성장이 낮은 분야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알렉산더 윌러 IASS 선임 연구원: 넥서스는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넥서스를 이끌어 나갈 정치 지도자가 없다면 넥서스 접근법은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녹색성장 의제를 주도한 것처럼 계속 넥서스 담화의 주도국이 될 수 있다면, 한국은 더욱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통합 정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물-식량-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려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국제 사회의 빈곤 퇴치 노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 기여 측면에서도,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경제 발전과 소비 패턴 변화가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등을 야기한바, 경제 발전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는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 국제 사회에 전파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제주한라대학교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환경 오염, 생태계 교란 및 파괴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아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회
전용욱 세종대학교 부총장
발표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토론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전익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문화관광 연구원장
정리
김신효 제주한라대학교 국제자유 도시센터 소장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일부 사람들은 <타임>지가 1988년 올해의 인물이 아니라 올해의 행성을 발표하고, 그 행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어머니인 지구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파괴이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올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평창에서 개최된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일반 대중에게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국제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은 언젠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 '어떻게 한국의 DMZ를 보호하는가'는 아시아의 생물 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DMZ를 생태 평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DMZ는 정치와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생물 다양성 보전 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DMZ를 세계 환경 평화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온대 지방에 남은 거의 유일한 생태계의 보고인 DMZ 내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어 에코 투어 시티(Eco-Tour City in Air)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DMZ 생태 평화 공원의 설립에 대한 개념과 계획을 홍보할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DMZ 프로젝트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의제로 만들고, 둘째,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DMZ 보전 문제를 포함하고, 셋째, 생태, 경제, 그리고 DMZ와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남북 공동 DMZ 생태 평화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 설립된 생태 문화 연구, 교육, 전시 기관이며 본 발표자가 초대원장으로 근무하는 국립생태원은 이러한 노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동북아시아에는 여러 가지 환경 협력 메커니즘이 있다. 즉, 동북아 환경 협력회의(NEAC), 동북아소지역 환경협력 프로그램(NEASPEC), 한·중·일 3국 환경 장관회의(TEMM),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북서태평양지역 해양 연안 환경의 관리 발전에 대한 보전 계획(NOWPAP) 등이 있다. 비록 이러한 환경 협력 기구가 많은 제한이 있고 효과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보는 분명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 TEMM에서 한·중·일 10대 환경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우선 분야는 환경 교육,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황사, 오염 관리, 환경친화적 사회 및 자원 순환 사회, 전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건전한 화학 물질 관리,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환경 산업 및 기술이다. 그리고 2014년 4월 제16차 TEMM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3개국이 앞으로 5년간 우선 추진할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고, 대기 질 개선 협력이 최우선 협력 분야가 되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무역과 에너지 사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한·중·일 3국 간의 10대 환경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합의는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동북아시아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기 위한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만일 이 지역에서

성공한다면,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동북아 환경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가능하다. 우선,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전을 행동으로 전환할 프레임워크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각국의 지속가능 발전의 현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한·중·일 3국 간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각국의 환경 기관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환경 협력 이니셔티브는 덜 민감하고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동북아시아 이웃 국가들 사이의 신뢰 구축을 언급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프로세스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환경 보호, 자연재해 관리 및 원자력 안전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과 같은 아시아 녹색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가 중앙 정부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대부분의 환경 문제는 도시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녹색 도시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장: 지난해부터 많은 한국인은 심각한 미세먼지(PM) 오염의 부정적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미세먼지의 약 절반이 중국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 가장 가까운 일본 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세먼지같이 국가 간 오염 물질 처리 문제는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어간다. 한·중·일 3국의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환경 장관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의 초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지역을 넘나드는 협력과 공존의 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이 다른 국가의 환경 피해의 발생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관련 국가들 사이의 조율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와 대기오염 모니터링 원격계측시스템(TMS) 등과 같이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발한 환경 기술을 중국에 전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국가 간 오염 물질의 분산 모델링에 대한 한·중·일 3국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증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대기환경 개선 연구센터를 제주도에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제주도는 한·중·일 3국 간의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제주도 서부 지역 고산에 위치한 국가 대기 오염 측정망, 최근 서귀포로 이전한 국립기상연구소가 있으며 기상, 태풍, 대기, 온실가스 등 한·중·일 3국 환경 관련 연구와 정보 공유를 위한 최적의 연구 센터 설립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문화관광연구원 원장: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로드맵 정책 추진에 따라 제주도 내 대학들의 역할도 다양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산·학·관·연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환경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 지정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제주도민의 다양한 환경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적 환경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능동적이고 친환경적 도민 실천의식 배양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고급 환경 전문가 양성, 환경 교육 인력 양성 등 환경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범도민 녹색 생활 실천 운동' 등을 통해 도민 의식 제고와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제주도민 모두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득이 되고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질문] 고석용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제주도의 재선충병 문제도 생물종 다양성 파괴와 기후 변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작년도 제주 지역에서 6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제거하였고,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 사이클의 변화로 인한 문제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완전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답변]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생태계 파괴에 기인한 자연계의 문제를 인간의 개입으로 완전히 박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현재 보이는 문제를 완전히 박멸하려는

조치가 다른 생태계의 파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개입을 통한 완전한 박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자연과 공존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질문] 김병선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DMZ 내 공중 부양도시 건설이 정말 생태계 보전과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하면서 에코 투어 시티를 건설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계획이 될 수 있는가? 비나 눈, 햇빛 등의 투과성이 문제가 되어 지상의 생물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전해진다면 생태계의 보전이 어려울 것 같다.

[답변]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DMZ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는 고층 빌딩 건설 제한 등 남북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DMZ 내 에코 투어 시티 건설도 공간을 밀집되지 않게 계획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빗물이나 햇빛 투과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투명 바닥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일부 학자들은 DMZ 내에는 이미 군사적 목적으로 삼림 소각과 벌목이 많이 이루어져서 보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한다. 자연에 최소한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DMZ는 자연 상태를 보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질문] 국립기상연구소 과장 제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최근 발전 속도가 빠르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북아 대기환경 개선 연구센터를 제주도에 설립하자는 제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장 관광 산업 중심으로 알려진 제주도가 관광산업과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주도의 가치와 장점은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인정한 인류의 자산이라는 점이다.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기상, 태풍, 대기, 온실가스 등 한·중·일 3국 환경 관련 연구와 정보 공유를 위한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 최적의 환경 관련 연구 센터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라 사료되어 제안하였다.

동북아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제13차 환경정책포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DMZ 생태 평화 공원'의 설립에 대한 개념과 계획을 홍보할 좋은 기회
- DMZ 프로젝트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의제로 만들고,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DMZ 생태 보전 문제를 포함해야 함
- 생태, 경제, 그리고 DMZ와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남북 공동 DMZ 생태 평화연구소' 설립 필요
- DMZ 내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에코 투어 시티 건설 가능
- 한·중·일 3국 간의 10대 환경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합의는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동북아시아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기 위한 좋은 시발점
-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과 같은 아시아 녹색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동북아 국가의 환경 협력 이니셔티브는 덜 민감하고,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동북아시아 이웃 국가들 사이의 신뢰 구축을 언급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프로세스의 일부가 될 수 있음
- 한·중·일 3국 환경 관련 연구와 정보 공유를 위한 최적의 연구 센터인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연구센터'를 제주도에 설립 가능
-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로드맵의 정책적 추진에 따라 산·학·관·연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제주도 내 대학들의 역할도 다양하게 고려해볼 수 있음

2012년 조직된 학계-정부-NGO 통합 KEI “환경정책포럼”의 제13차 토론회로 개최되는 본 세션에서는 환경정보에 기반한 저탄소성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토환경정보센터의 동북아 환경 정보 허브로서의 비전을 소개했다. 정부3.0시대를 맞아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사회 각 분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금, 환경 정보, 특히 공간 환경 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 관련 정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등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의 발표로 공간정보와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회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발표

전성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보연구실 실장

김대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이미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리

이지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국토환경정보 활용과 저탄소 성장 정책

전성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보연구실 실장: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위치 기반과 관련한 환경 정보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 내 측정망 정보 등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왔다. 환경 정보를 경제 발전에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목적으로 삼아 데이터 발굴부터 구축·이용을 통해 정책 반영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구상해왔다.

환경 정보 관련 연구, 즉 생태 복지, 환경 복지, 질병 치료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태계 기능을 지표화한 후 평가하여 전국을 5등급 체계로 만들었으나,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를 가치로 환산해야 환경과 연결하여 연구할 길이 많아진다.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 가치를 1억 달러 정도로 환산했다. 남한 전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작년에는 129조였다. 기능들을 고도화, 명확화하고 정량화되다 보니 가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연구를 부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환경정보센터를 올해 4월 1일에 개소했다. 2차 년도부터 유엔환경계획의 환경 데이터 정보 공유 사이트인 유넵 라이브(UNEP Live)와 함께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정책 결정자에게 그 나라 환경 상태의 변화, 장기적 관점, 추세 등을 알려주고, 환경 재해, 재난에 대한 조기 경보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수행 중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역할에 걸맞게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정부에 제출, 국토 환경성 평가와 관련된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연구 등의 정보 및 부가가치 정보까지 포함하여 제공할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가치를 환산하는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정비되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태계 서비스 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환산하는 데 필요한 틀을 마련하고자 환경적으로 산림, 초지, 습지 등에 대해 가치 환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10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 또한 수립하고 있다.

정부3.0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 사례

김대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부3.0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정보 기술의 발전에 있다. 정부3.0은 월드와이드웹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웹3.0은 정보의 홍수를 의미한다. 정부3.0은 웹3.0을 기반으로 원하는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하겠다는 목적을 기반으로 한다.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협업 체계라 일컫는다. 큰 데이터는 나눠서 저장하는 체계로 이뤄진다. 이는 오픈 소스로 개방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 이를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데이터를 잘라서 개별 컴퓨터에 넣은 다음, 사용자가 계산하면 마스터가 이를 나눠서 계산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국토환경정보센터의 구축 목적이 조기 경보이듯, 빅데이터 역시 조기 경보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검색어 검색 빈도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빅데이터를 택시 운영 시스템 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택시 위치 정보, 기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에

택시가 안 다닌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정을 개선했다.

많은 빅데이터는 위치와 시간 정보를 기본으로 갖고 있어 위치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와 융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빅데이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의 공공 빅데이터, 민간 빅데이터가 융합되어 공간 빅데이터 체계가 만들어졌다.

공간 빅데이터는 이해와 의사소통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각화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단, 컴퓨터 협업 체계를 이용하면 나오는 자료는 그림으로 봐야 하며,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시공간패턴 분석이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은 패턴이 만들어진다. 랜덤, 집중, 분포 등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패턴을 분석하면 문제 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간 빅데이터를 국토 정책과 연계하면, 현실에 대한 실시간 이해도가 높아지며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간 빅데이터를 통해 선제 맞춤형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이미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여러 정보를 정량화하고 위치 기반으로 표현하는 연구를 소개했는데,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실제로 완전히 분리되어 정량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가지 기능으로 세분화시킬 수는 있으나,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중첩 및 중복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생태계 서비스가 갖는 가치화된 정보는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냐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된다. 공간적으로도 다른 가치 정보가 존재할 텐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시간 정보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량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민이 환경 서비스에 부여하는 가치, 인식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고려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소셜 미디어상에 존재하는 비정형 데이터에는 공간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정책이나 전문용어를 검색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부1.0은 잘 구현됐다가 정부2.0의 구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정부3.0이 나왔다. 부동산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국토 정책 외에 국가가 가진 환경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국토환경정보센터에 관해 묻겠다. 다른 부처가 독점한 데이터를 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데이터를 디자인하고 코디하는 중간

매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는가?

데이터는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환경 전반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축적이 어려울 것이다. 센터가 어느 위치까지 잘 잡아갈 수 있을지가 빅데이터의 효율적 운영의 구심점이라 생각한다. 센터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고도로 전문화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데 어떻게 센터를 이끌어갈지 궁금하다. 전 세계적으로 협업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예산 반영, 정책과의 연결 고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데이터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환경 정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경제적 가치로의 환산, 경제 발전에 지원하는 방안 모색에 가속도가 붙어야 함
- 국토환경정보센터가 UNEP-Live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정부3.0은 정보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빅데이터와 공간 정보가 잘 융합되어 선제 맞춤형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함

기후·기상 빅데이터, 가치를 말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립기상연구소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이며 데이터가 미래 경쟁 우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다가온 데이터 경제시대를 이해하고 정보 공유를 늘려 정보 고립을 극복해야 한다고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 기관은 말한다. 빅데이터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정부3.0의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관측 자료, 예보 자료, 기상 지수 등 자체 생산 자료와 수집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여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고 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에 기반한 융합기술을 통해 농업, 산림, 환경, 보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한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가치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좌장

최병철 국립기상연구소 과장

토론

남재철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강창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기광 단국대학교 교수

김성균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국장

문윤기 KTH 본부장

오택진 제주일보 논설위원

정리

김정윤 국립기상연구소 기상

연구관

최병철 국립기상연구소 과장: 이상 기후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일반 국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국민과 사회 경제적 요소에 필요한 사람들, 즉 고객 맞춤형으로 기상 기후 서비스 방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창희 제주대학교 교수: 대기과학과 관련한 빅데이터 활용에서 진단 분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품질보증(QA), 품질관리(QC)가 잘 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상 자원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유지하면서 자료를 획득하는 것으로 하는데, 정부 부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협업 체제가 잘 유지된다 하더라도

관측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앞으로 정부는 자료에 대한 오픈 플랫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는 대기/육상/해양을 연계한 입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유리하여, 향후 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구축 활용 방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주관 ABC프로젝트가 고산 관측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바가 있어 국제적으로 알려진 장점이 있기에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고산 관측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상청 데이터만으로는 대기화학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오염 데이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대기 화학 분야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빅데이터 콘텐츠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기광 단국대학교 교수: 스마트 기기에 기상 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 국민과 기업에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 계획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기상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길 바라며, 기존의 개념에 최근 이슈가 된 안전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의 예에서도 기상청의 강설 예보와 국토해양부 혹은 지자체의 건물 상태 데이터를 결합하여 예측 관련 행동 매뉴얼 혹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각 부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기상 데이터 활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상청의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기상청만의 노력으로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협업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김성균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국장: 기상청은 기상 기후 빅데이터 TF를 구성한 상태이다. 구성원들은 안행부, 미래부 등의 고위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공립 연구원의 원장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9개 분과와 1개 인프라) 에너지/교통/물류/관광 분야에 대한 작업은 이미 시작한 상태이고, 안전 분야는 방재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다.

기상 기후 데이터는 그 자체로 결과물이 될 수 없고,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 처리한 후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면, 타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자의 의사 결정 혹은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상청의 노력은 트리거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TF를 통해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상 기후 빅데이터 활용의 유용성을 알리고 향후 관련 분야가 확대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문윤기 KTH 본부장: 기존의 예보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은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구축된 빅데이터는 융합을 통해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API로 해결할 수 있다. API란 소프트웨어 간의 대화법으로, 사람이 데이터를 교환 및 저장하는 데 관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직접 공유하는 개념이다. 기상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선도할 수 있지만, 결국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오픈 API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API가 해외에선 잘 실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불편함을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상청에서도 시범 사업 등을 통해 API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기상청과 민간업체가 협력하여 먼저 서비스를 시험해 봄으로써 제공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택진 제주일보 논설위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업에는 피해지만, 관광업에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한라산이 있는 제주 지역의 특수성으로 다양한 날씨가 나타난다. 이렇듯 제주 날씨가 가지는 양면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 분야와 연관지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상 기후 빅데이터 활용으로 기상 재난을 대비하는 데 최고 가치를 유발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질문] 안전과 관련된 기상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수립된 계획과 현재 기상청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기상청은 예보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고,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영향

외교부

그간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무대응(inaction)이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action)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시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술 개발, 효과적인 국내 정책 및 글로벌 규칙(rule)의 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 기상 정책 전략 방향 제고
- 기상청 기상 기후 정보 제공 및 융·복합 기술 결합으로 새로운 신산업 서비스 창출 기여
- 기상 기후 빅데이터 활용으로 사회 경제적 효과에 기여하기 위한 융합 서비스 활성화
- 국민 맞춤형 기상 기후 서비스 제공(의료, 교통, 건설, 에너지, 농축수산업, 방재 등)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 강화로 국민 안전 복지 증진 기여

사회 및 발표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발표

리바스 바 환경개발행동 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토론

이보 드 보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김찬우 前 케냐 대사

아스파하 베예네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수석자문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정리

전술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as-Usual) 대비 30%로 세웠지만, BAU를 지속할 경우, 이 감축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풍, 가뭄, 식량 가격 상승, 허리케인 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해결책 중 하나로 석탄 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데, 이러한 주장은 청정에너지 개발 비용이 점차 저렴해져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 즉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법이다.

신기후경제(NCE, New Climate Economy)가 이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NCE는 2013년 1월 기후 변화 대응 행동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르웨이, 영국 및 스웨덴이 발주한 프로젝트로, 에너지 시스템, 금융, 거시경제 정책, 도시, 농업과 토지 이용, 혁신, 글로벌 협력, 국가 사례(에티오피아, 중국, 인도) 등의 핵심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펠리페 칼테론 前 멕시코 대통령을 비롯한 22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자문(Global Commission)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6월 말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완료되어 발주국에 회람되어 의견을 수렴한 뒤, 2014년 9월 UN기후정상회의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리바스 바 환경개발행동 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기후 변화의 경제성은 국가적정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s) 프로젝트를 적용한 세네갈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NAMAs는 경제개발 목표와 저탄소 성장을 목표로 한 UN기후변화협약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네갈의 인구는 1,200만 명이고 그중 40%가 도시에, 나머지는 농가에 거주한다. 이제껏 많은 국가가 기후 변화 협약을 시행했으나 국가 차원에서 감축한 사례, 특히 개도국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유인즉슨, NAMAs는 두 가지 요인, 즉 ① 해당 국가의 국가 경제 개발 목표와 ② 국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의 연관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고, 개도국으로서 이를 연구하기에는 어려움(기술, 예산 부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세네갈에는 기후변화위원회와 그 하부 조직으로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NAMAs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된다. 국가 개발 목표를 국가-정책-사회 등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세네갈 경제는 매우 취약했으며, 국가 개발 계획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환경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경제 개발과 환경 대응을 위해 세네갈이 중점을 둔 사업은 에너지 인프라와 운송 및 교통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농업, 쓰레기, 산업 공정 등과 비교.)

인프라 개발에 앞서 각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가능량을 가늠하기 위해 세네갈 주요 산업들을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로 NAMAs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적정 분야로 에너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세네갈의 국가 개발 계획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 대응이 국가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보 드보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NCE 보고서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협상 진전에 기여할 것이며, 연구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재 7개국이 보고서에 참여 중이고, 한국도 그중 하나다. NCE 보고서는 올해 9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주최하는 UN기후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전 세계 기후 변화의 경제성 및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핵심적인 딜레마를 이해하고, 나아가 왜 기후 변화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해줄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 도출을 목표로 한 회의였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당시 많은 국가는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기후 딜레마(기후 변화가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단기적인 희생)'를 겪고 있었는데, 코펜하겐 회의 이후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코펜하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효과적인 당사국총회를 위해서는 NCE 보고서를 활용해 단기적 희생이 장기적 경제 혜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각국에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로 NCE 보고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호연계성'에 대한 투자이다. 사업계, 정치계, 환경계 등 세 분야의 연계성이 핵심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민간 기업의 더욱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영보다는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성에 더 많이 치우쳐 있다. 사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보고 투자한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 면에서도 투자자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연금기금은 투자자들의 혁신적인 투자를 제재하는 정책적인 예다. 정부 역시 녹색화를 고무하기보다는 규제하는 쪽에 가깝다.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다. 규제보다는 정책, 투자, 사업 등 이 세 분야의 상호연계성을 잘 형성하고, 여기에 녹색화가 이루어지도록 고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김찬우 前 케냐 대사: UN기후변화협약에 나왔던 조치와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경제적인 혜택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경제 수치는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간에 상충하는 가치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협상

과정에서 많은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력 저하를 염려해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는데, 이 사실로 인해 국가들에 기후 변화 대응의 긍정적인 가치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인이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 근무했을 당시, 기후 변화 대응의 성공 사례로 한국의 폐기물 관리가 언급되었는데,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산출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의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기후 변화 대응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비전을 확대하여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사회가 따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놓았고, 이후 한국의 개발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으로 온전히 전환하였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창조경제는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 즉 녹색성장 2.0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속 가능한 개발 경로를 더욱 다양하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범지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된 문화 요소 및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차원에서 공조하는 기후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흔히 기후 변화 감축이라고 하면 설정 목표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보다는 더 부드러운 접근법(soft approach)이 필요하다. 즉 지식과 경험, 조언의 공유가 선행된다면 기후 변화 감축 과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은 여러 국가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다. 혜택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문과 더불어 지표 분석도 필요하겠다. 현재 녹색성장기구(GGGI)에서 이러한 지표 분석을 진행하는데, 더 많은 국가에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다면 기후 변화 대응의 효율성과 시너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GDP의 90%가 도시에서 창출되고, 온실가스의 70%가 도시에서 창출된다. 동시에 세계 인구 50% 정도가 도시에 거주 중인데, 이 중 아시아에 사는 인구가 50%이다. 도시는 기후 변화의 주범이고 특히 아시아의 도시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

아스파하 베에네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수석자문: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 산하의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로 겪는 피해를 줄이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GCF는 각국의 국가 발전 중 환경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CF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만 지원 가능하며, 오늘 발표한 세네갈 프로젝트 역시 GCF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다.

NCE 보고서가 기후 변화 대응 행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라면, 실질적인 연구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GCF의 역할이고 목표이다. 연구 자체만으로는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실제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발굴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GCF는 민간부문기구(PSF, Private Sector Facility)를 운영하여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분야가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난제를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난제로 자본 및 기술의 필요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투자자가 개도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GCF가 모든 일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민간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회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대응책이 어렵지만 후에 꼭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만 고려한다면, 기후 변화 투자에 매력을 못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NCE 보고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제시한 10가지 사안 중 8가지 주제를 다뤘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이 핵심 주제가 병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몇몇 사안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개별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해 산업별로 순위를 매기는 세네갈의 사례가 한국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범부처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많은 조율이 필요한데 순위 선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기후 변화 대응의 경제성에서 무엇보다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정부 및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질문]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이보 드 보어 GGGI 사무총장께 질문드립니다. GGGI는 2010년 한국 정부에 의해 출범되었는데 한국의 현황에 대해 코멘트해줄 수 있는가?

[답변] 이보 드 보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GGGI는 애초 다른 국가가 한국의 녹색성장을 배우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20개국이며 30여 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남아프리카, 세네갈 등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성이 각 국가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빈곤을 퇴치하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지금 세네갈이 실천하는 대응책을 GGGI가 협력하여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자원 조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네갈과 같은 개도국 프로젝트를 정부 부처와 조율하고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욱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질문]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리바스 바 환경개발행동 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께 질문드립니다. 앞선 발표에서 세네갈의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는데, 앞으로 세네갈의 에너지 분야에 있어 에너지 믹스(mix)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궁금하다.

[답변] 리바스 바 환경개발행동 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세네갈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가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기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범정부적이며, 민간 분야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기후 변화 제안을 비롯해 세네갈이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도 같이 다룬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를 도출해야 하며 정부, 민간 분야, 시민사회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 세네갈의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상태이며,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다면화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세부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며, 상기 과정을 거쳐 1년에 평균 3~4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다. NAMA 프로젝트 중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협의 내용에 실행되는 프로세스도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프로젝트라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단계에서 재정 및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믹스에 관해서는 석탄, 전기 등의 기존 에너지원과 태양 등의 신 에너지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모든 에너지가 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질문]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윤강현 국장, 김찬우 前 케냐 대사께 질문드립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답변]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녹색성장이 창조경제의 큰 틀 아래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잘 진행 중이다.

김찬우 前 케냐 대사: 윤강현 국장의 답변에 이어 고정 효과(fixed effect)에 대해 추가 설명하겠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시아는 현재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은 가장 빠른 산업화를 보였다.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건축물 등의 도시 시설은 10~20년 정도 노후화되었는데, 이 시설의 대부분이 방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고정효과에 묶여 있다. 그러므로 시설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저탄소 성장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

한·중·일 도시 간 협력 가능성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빠른 경제 성장에 따라 환경 문제가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의 절박한 공통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저탄소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3국의 지방정부는 2도시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세션은 이러한 각 부문의 노력을 통합하여 3국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3국의 활동적인 지방정부들과 전문가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들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한·중·일 도시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 보았다.

사회

남상민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지역사무소 부소장

발표

이시다 켄고 일본 기타큐슈시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부장

청잉준 중국 대련시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과 과장

홍명표 창원시 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 과장

토론

짜오 화이웅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순환경제발전과 박사

김지석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팀장

기시카미 미치에 이클레이 일본 사무소 사무국장

정리

마이사와 타츠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경제 연구원

이시다 켄고 일본 기타큐슈시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부장: 기타큐슈 시는 고도성장 시기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환경 국제 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2050년까지 기타큐슈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150% 감축한다는 의욕적인 비전을 내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기타큐슈시는 아시아저탄소화센터를 설립하여 환경비즈니스를 패키지와하고, 자매 도시인 인도네시아 슬라바야 시에 스마트타운 구축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 그린시티의 수출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아시아

도시들과의 공동프로젝트는 60여 개가 넘었으며, 아시아 각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오염 완화, 생활 수준 제고 및 기타큐슈 시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윈-윈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기타큐슈 시는 한·중·일 3국 협력의 틀로써 1991년부터 환황해지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2004년에는 환황해경제교류추진기구(OEAED)를 설립했다. 현재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10개 도시에서 행정과 산업계가 같이 모여 환경, 국제 비즈니스, 관광, 물류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다롄 시, 칭다오 시, 그리고 톈진 시에 기타큐슈 시가 추진하는 재활용산업 육성 사업인 '에코타운 사업'을 수출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롄 시와는 재활용산업단지 건설의 계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은 오래전부터 OEAED를 통하여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 에너지 대책, 한·중·일 순환경제 시범기지 건설 추진 등 한·중·일 도시 간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의 저탄소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홍명표 창원시균형발전국생태교통과 과장: 창원시는 대한민국 도시 중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지난 30년간 큰 발전을 통해 인구 109만 명의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에 따른 각종 도시환경의 악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환경수도 창원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추진하였다.

특히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5만 톤 감축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행 환경 개선, 전기차 보급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① 창원시는 공공자전거 '누비자'로 대표되는 각종 자전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으며, ② 도심 내 철도 폐선을 활용한 그린웨이 구축으로 새로운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다. ③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기차 선도 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창원시는 이러한 친환경 교통 정책인 생태 교통의 추진 성과를 널리 인정받아 권위 있는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그간 축적된 정책 노하우를 전파해왔으며, 앞으로도 생태 교통 분야에 대해 한·중·일 3개국의 주요 도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별 실무자회의 개최를 통한 정보

공유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성과의 홍보를 지원하여 각각의 도시에서 추진된 생태 교통 관련 성과가 한·중·일 도시 간에 널리 확산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청잉준 중국 대련시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과 과장: 저탄소성장은 경제성장의 동력이긴 하지만 세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발전 단계도 각각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원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렌 시는 저탄소성장을 위한 3국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하는 교통 허브이자 한국과 일본에 근접하다는 지정학적인 장점이다.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로서, 발달한 사회 인프라와 선진적인 환경 도시로서 축적해온 경험들이 있다.

특히 다렌 시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언급된 순환경제 시범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산업 단지는 장기적으로 순환 사회, 순환 산업, 순환 서비스, 그리고 순환 농업의 기능을 다할 것이며, 한·중·일 3국 기업들이 이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는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플랫폼으로써 여러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 산업단지는 중앙정부, 다렌 시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대조치를 받고 있으며 토지 자원과 인력 자원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항구가 있고 컨벤션 기능도 갖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활동이 해외에 널리 발신될 수 있다.

다렌 시는 순환경제 산업단지를 통해 한·중·일 3국이 저탄소성장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김지석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팀장: 저탄소 성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안 한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예측하고, 2) 확실한 저탄소 성장의 목표를 세우고, 3)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을 높이고, 4)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보급을 위해 지원하고, 5)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즉 전기자동차나 트램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중·일 도시 간에서 마라톤 파트너처럼 서로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 웹사이트를 마련하여 각 도시의 목표와 활동을 게재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동아시아 저탄소 성장을 위한 도시 협력의 가능성을 열 것이다.

짜오 화이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순환경제발전과 박사: 저탄소성장은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곳이며,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소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1) 도시에 맞는 에너지 소비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2) 교통수단과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야 하고, 3) 도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4) 도시 간의 기술 협력과 정책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시가미 미치에 이클레이 일본 사무소 사무국장: 도시 간 협력에서 중요한 절차는 1) 테마와 참여 조건을 결정한 다음에 도시의 참여를 독려하고, 2) 모인 도시들 사이에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3) 목표를 정하고, 4) 행동 계획을 세우고, 5) 목표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 공유 혹은 기술 협력을 하고, 6)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저탄소 성장을 위해 생태 교통, 에코 건물, 폐기물 재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정책 분야에서 한·중·일 3국 도시 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책 공유가 중요
- 또한 도시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을 때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뚜렷한 피해 파악을 해야 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저탄소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함
- 도시 간 협력을 할 때는 협력 의지가 있는 도시 간에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이 중요하고, 목표 달성도를 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
- 도시 간 협력이 이뤄질 공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의 역할

제7장

동아시아 지방 협력 네트워크



제주의 탄소 없는 섬 구축 전략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의 혁신적 사업 모델

제주에너지공사

최근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추진 중에 있지만 주민 수용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 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현재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탄소 없는 섬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의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아시아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좌장
한경섭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발표
오시덕 (주)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본부장

토론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
국장

박승옥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임택 (사)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김호민 제주대학교 교수

정리
조수정 제주에너지공사연구원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의 소유 형태와 사업 모델

오시덕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본부장: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풍력 분야에서 연구개발에는 실증 연구, 보급에는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제주에서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탄소 없는 섬을 만들자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을 실현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이슈이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풍력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밸런스 문제이고, 이는 사이트를 어디에 조성하고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이다.

벨(Bell)이라는 학자는 ‘Social gap’이라는 개념으로 수용성 문제를 설명했다. Social gap은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에 반해 실제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풍력산업에서의 주민 수용성 문제는 님비현상, 환경적 이슈, 이기주의라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주민 수용성 문제는 분배의 공정성, 절차의 정당성,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수용성의 문제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이란 투명한 프로세스에서 지역 주민이 풍력산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통한 결과물을 분배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풍력발전 사업에서 민간투자(Commercial, 주민 참여 0%), 주민의 일부 참여(Shared, 주민 참여 50% 이하), 공동 개발(Joint, 주민 참여 50% 이상), 주민 참여(Community, 주민 참여 100%)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주민 참여율이 높을수록 지역 수용성이 높아진다.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덴마크) 해상 풍력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3회의 공청회를 통해 단지의 배치, 설치 발전기의 수 등을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변경하였고, 그 결과 지금도 지분의 90% 이상을 주민 및 지역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다.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는 대규모 단지가 생겨나면서 주민참여형 사업 비율이 낮아졌지만, 사업 초기부터 농민 한 명이 추진하는 풍력 사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000년에는 80% 이상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주민 의견 조사에서도 주민참여형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스코틀랜드, 그리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참여형 사업일수록 수용성이 높아지고 주민은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인지, 누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지,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매우 많다. 하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이 다르므로 보상 역시 달라져야 한다. 즉, 우리 지역에 맞는 보상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산업 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보급 측면에서도 주민참여형이 효율적이며 다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등과의 융복합 사업으로 추진도 가능하다. 사업 추진의 장애라면,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것과 참여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하자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마을마다 풍력 산업에 관해 요구하는 점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주민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의 제공, 교육, 컨설팅과 함께 공동 개발에 참여하여 초기 자본을 지원하고 나아가 운영 관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국 국장: 제주도는 바람, 물 등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삼다수로 개발해왔으며, 요즘에는 용암 해수를 개발하여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육지부에 비해 뛰어난 바람 자원의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년 전부터 바람 자원을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왔으며,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장기 목표인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2,350MW의 육·해상 풍력발전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미 시범단지인 가파도에서는 풍력발전과 저장장치를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갈등과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에너지 주권이 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에너지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지방 정부에서 에너지 주권을 찾아온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만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에서도 풍력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즉, 주민 주체의 에너지 사업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풍력사업 추진의 주체인 조직을 만들고,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주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협력해야 한다.

이임택 (사)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성과 수익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풍력산업의 사업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관련 규제, 허가, 경관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가 구심점이 되어 제도를 개선하고, 단지 구축 후에는 운영 관리를 하는 등 주민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호민 제주대학교 교수: 도민의 입장에서 풍력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자와 주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발제자가 말했듯 지역마다 주민이 요구하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의 극대화와 환경의 보존, 그리고 에너지 자립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참여형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서 우선 신뢰와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민의 정서상 외부 자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풍력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주민에게 알리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역사학자, 경제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모여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설명하는 공청회를 지속해서 개최한다면 소통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질문] 한경섭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특별자치도에서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가?

[답변]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국 국장: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는 이미 풍력발전 특성화 마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직은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민이 100%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는 없지만, 주민이 토지를 제공하는 형태로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풍력은 도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출자한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으로 풍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이 사업을 통한 이익을 도민이 공유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지만, 주민 개개인이 소규모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단지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한경섭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햇빛발전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주민참여형을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면?

[답변] 박승욱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기본적으로 풍력에서 수익 창출은 기본이지만, 화석연료 고갈 문제를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점에서 도민을 에너지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 전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되던 그린홈 백만 호 사업의 경우,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오히려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협동조합, 펀드, 유한회사 형태로 시민 햇빛발전소처럼 시민 바람발전소를 추진한다면, 주민이 직접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시민 햇빛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행정 처리였다.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행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질문] 한경섭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 사업자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이임택 (사)한국풍력산업협회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농민, 어민 등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저리 대출이 필요하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도적으로 장기 저리 대출이 된다면 주민참여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형 사업이 추진되면 오히려 발전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쉬워질 것이다. 주민 수용성도 높고 제주에너지공사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는 등 환경 여건이 좋으니 신속한 추진을

기대한다.

[질문] 한경섭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가는 이득을 최대화 할 수 있을까?

[답변] 김호민 제주대학교 교수: 사업성이 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일회성의 현금이 아니라 영속성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제주도에 풍력 연관 산업이 자생하고, 기술력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도내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을 습득한다면 풍력발전기의 교체 시기가 되는 20년, 25년 후에는 도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풍력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이 경제적 편익만큼이나 하나의 성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은 주민의 불만을 적절히 해소하고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은 주민 수용성 측면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주체였던 지역주민을 공급자로 탈바꿈시킴으로써 풍력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음
- 풍력 사업에 대하여 지역마다 고려하는 점, 편익, 요구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제도나 보상책보다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발자들에게 시행하도록 해야 함
-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도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정보 제공, 초기 자본 마련을 위한 지원, 행정 처리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며, 지방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함
- 주민참여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소통'임. 하지만 무조건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의미하지는 않음. 개발자-지역주민-지자체가 상호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 나아가야 함
- 주민 수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을 도내에서도 조속히 추진하여 풍력발전 사업에 있어 개발자 및 지역주민 모두 상생(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광과 문화, 치유산업으로서 말 관련 산업 육성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본 세션에서는 오랫동안 제주민의 삶 속에 자리 잡은 가축인 제주마를 비롯하여 한라마 등 제주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갖는 말들의 가치 발견과 보급,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말을 보여 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말 보존전시관사업, 잣성(조선시대 제주 지역의 중간간 목초지에 만들어진 목장 경계용 돌담)과 목마장 관련 유적 문화상품 개발, 제주 특유의 초원 풍광을 자아내는 초지산업 등과 연계한 관광과 문화 그리고 치유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 및 발표

정승현 건국대학교 교수

발표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나항주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토론

강민수 제주대학교 교수

장덕지 제주마문화연구소장

강만의 국립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박사

고복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정리

권병연 건국대학교 연구원

정승현 건국대학교 교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인한 농축산업의 여건 변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레저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산업 규모 확대 같은 변화에 따라 말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나타났고, 그 결과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말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한국 말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견인할 거점 기지를 조기에 구축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제주도의 말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분산된 말 산업 분야별 체제 정비와 정비, 거점조련센터(조련 프로그램 운영, 농가 컨설팅 및 관리, 승용마 인증 및 경매·유통 등 담당)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말 생산-육성-조련-유통 시스템의 밸류 체인에 따라 제주와 내륙을 연계하는 동반 성장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며,

승용마 산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탐라 시대의 제주마는 과하마(果下馬)로 일컬었으며, 이후 고려 말 원의 탐라목장 설치, 조선 시대 한라산 국마장 설치, 현마공신 김만일(1550~1632), 조선 후기 10소장과 산마장 등 제주마와 제주도는 역사를 함께했다.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제주도의 말 산업을 발전시켜 가면서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화 산업으로 융합·발전해 나가야 한다.

제주의 마문화는, 테우리(목자, 牧子), 국마장 경계 돌담, 잣성(하잣성, 중잣성, 상잣성, 간장으로 구분), 제주마를 활용한 바령, 발 불리기, 마조제, 목축의례로서 백중제, 상산에 방목하기 등이 있다.

제주마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으로는 첫째, 제주 테우리 학교 개설, 동북아 말문화연구센터 개설,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말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마축제 및 테우리 축제, 마상무예 공연, 격구(擊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말고기 음식문화 보급과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제주마 박물관 건립, 제주마 유적지 관광 자원화 등이 있다.

나항주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말 산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 1차 산업으로서 생산 육성 분야와 3차 산업으로써 이용·활용 분야로 접근할 수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최근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말 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시작될 것이다. 즉, 경마 중심의 말 산업으로부터 승마 및 부대 산업으로 확대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광과 문화, 치유산업에 적합한 육성 전략이 요구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장기적 대안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휴대폰과 같은 가전제품 제조업처럼 앞으로는 하드웨어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연구의 중요성이 해당 산업에서 더욱 강조될 것인데, 이는 보이지 않는 무형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6차 산업의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물을 생산만 하던 주체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다.

문화산업으로서의 말 산업 육성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가 전통적인 동양식 승마의 메카로서의 문화적 위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엘리트 승마 위주에서 생활 레저

승마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말과 말 관련 산업의 문화 산업화를 위한 문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말 산업의 문화자본 확충을 위한 제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 고객과 30대 고객, 1인 가구를 겨냥한 말과 말 관련 산업의 문화가 가미된 디자인, 감성, 공감 마케팅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세계적인 제주도 말 축제를 신설해야 한다.

강민수 제주대학교 교수: 작년 2월 제주도청 축정과 조덕준 과장의 '관광과 말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육성전략'과 관련한 발표 이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진 교수의 발표 중 제주마 역사 연구와 말 문화 발전 방안으로 제안한 동북아 말 문화 관련 재단과 같은 기관 설립 방안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테우리 학교 또한 제주 말 역사와 전통 계승, 향도 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 산업의 구조 개편, 말 산업 인프라 확충, 관광·문화·치유산업에 맞는 육성 정책 마련, 지속 성장 가능한 장기적 대안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나항주 교수의 발표 의견은, 학계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시기적절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장덕지 제주마문화연구소장: 제주도 역사는 제주마의 역사라고 하며, 제주는 예로부터 방성(별자리 房星은 28성의 하나로, 이 별이 보이는 곳은 가축이 번창한다고 전한다. 天駟星, 馬祖)이 임하는 곳으로, 사나운 짐승들이 없어서 말 기르기에 적합한 곳으로 일컬어졌다. 현재 제주도에 제주마의 유구한 역사성을 기념하고 알리는 곳이 전혀 없다.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제주마 역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단순 레저 관광자원으로만 인식하는데, 제주도만이 가진 제주마 이야기를 발굴하고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다. 의귀리 일대에 김만일 기념물을 세워 제주마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남조로를 김만일로로 변경하여 제주마와 함께하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주 초·중·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제주마에 대한 교육이 개설되고, 공마선 복원과 제주마와 관련된 신화, 민속 무속인 곳, 민요 등도 여러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제주마 개량을 통한 역동적인 경주마, 맛있는 고기를 생산하는 말, 안전한 승용마를 생산하는 방안, 그리고 한라산에서 자생할 제주마(꽃말=야생마) 방목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강만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박사: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의 말 산업과

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제주마 산업을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요,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제주마의 역사와 제주마 문화, 그리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발표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오늘 발표를 듣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소멸되고 있는 제주마 문화유산을 발굴,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거 제주마를 길렀던 '말테우리'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본다. 오늘날 제주가 전국 최초의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바탕에는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말테우리들의 생활사나 목축 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선 시대 제주마 관련 유물과 유적에 대한 조사 작업과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재 중산간 지대에 남아 있는 목장 경계 돌담인 잣성은 방치된 채 소멸되고 있는데, 최근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조선 시대 국마장의 존재를 증명하고 제주마문화의 상징적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잣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보호 노력이 절실하다.

고복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제주도는 올해 1월 2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제주산업의 6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 면적은 전국의 42%, 말 사육 두수는 전국의 67% 정도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말산업특구 지정 후 말 산업의 발전 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 사육되는 말의 특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말 산업 인프라 구축, 핵심 산업 선정 및 진흥 계획의 검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제주들불축제의 인기 행사인 말사랑 싸움놀이가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중지된 상황인데, 제주도 고유의 세시풍속을 활용한 대표적 향토 관광 자원이라면 정부 부처, 동물보호단체와 협의를 통해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강영종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말산업특구 지정 후 생산 부문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미비한 것 같다. 마사회 중심이 아닌 생산농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제주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구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미래사업 방향과 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입도 관광객 1천만 시대, 외국인 관광객 230만 명 시대를 맞아, 국제자유도시제주의 향후 미래성장 산업은 무엇인지,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제주형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과 지역 내 전문가 등을 통해 JDC 미래 신규사업에 대한 전략을 함께 논의해 보았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앞으로 말 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이뤄질 것이며, 현재 경마 중심의 말 산업에서 승마 및 연관 산업으로 점차 확대·변화될 것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관광과 문화, 치유 산업에 적합한 육성 전략이 요구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장기적 대안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제주도 말 산업을 발전시켜감에 있어 제주마의 역사를 기반으로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화 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하며, 제주마 역사와 제주마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산업과 연계해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말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말 산업 핵심 사업 선정 및 진흥 계획 검토 등 말 산업이 지역 소득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에 대한 말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제주도가 전통적인 동양식 승마의 메카로서 문화적 위상 확보, △엘리트 승마 위주에서 생활 레저 승마로 패러다임 전환, △말과 말 관련 산업의 문화 산업화를 위한 문화 정책 도입, △말 산업의 문화자본 확충을 위한 제반 제도 시행, △여성 고객과 30대 고객, 1인 가구를 겨냥한 말과 말 관련 산업의 문화가 가미된 디자인·감성·공감 마케팅의 적극 도입 △세계적인 제주도 말 축제 신설 등을 들 수 있음

사회

임승빈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발표

한범수 경기대학교 교수

장수형 퍼듀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토론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

최승담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국제관광대학원장

주현식 제주지역사업평가원 원장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리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팀장

최승담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국제관광대학원장: 제주 관광 수요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비축 토지 등을 활용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 중국 자본이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 향후 JDC의 투자 유치 후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영종도는 홍콩 니쁜의 중국 관광객 유입 관련 영업력과 미국 시저스의 막대한 자본과 경영력을 바탕으로 합작회사를 만들어 이미 한국의 카지노 사업에 진출 후 투자, 건설 중에 있다. 제주 여행의 단가가 많이 낮아진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소이며, 국민에게 해외여행 대체재의 역할을 하고 있어 관광 진흥 차원에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과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관광객 수만 늘어나는 것을 보며 박수만 칠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 그동안 제주도의 수요를 너무 평면적으로만 분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주현식 제주지역사업평가원장: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늦었지만 주요 인프라를 JDC를 통해 최근 건설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현재 산업부는 다른 부처와 중복되지 않게 제주 지역 산업을 특화하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기능성 물, 제주 맥주, 향장산업 등 많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자원 특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330억 원을 들여, 물 산업을 특화한 딸라소테라피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이스(MICE) 산업에도 160억 원을 들여 기업 인센티브 투어, 팀 빌딩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주 정보를 알리기 위한 특화 산업, 마이스 산업 인력 양성, PPL 제주 간접 광고 추진, 제주 신화를 바탕으로 한 엑스포, 제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관련 회의 유치, LOHAS 상품 개발 및 박람회 등이 필요하다. 말 산업 특화, 올레 산업 지원, 트레일 관련 국제기구, 협회 등을 유치하면서 뷰티, 향장에도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도 JDC 주요 사업과 발맞추어 적극적인 지역의 관련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항 관련 계획은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부터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JDC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핵심·전략 프로젝트들이 성공 가능하다. 금일 경관 주택지 조성과 같은 제안은 제주도의 경관 보전과 특화에 있어 중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복권기금으로 연간 800억 규모를 받고 있어서, 추가 복권기금 조성은 힘들 듯하다. 중앙에서 대규모 개발자금을 JDC를 통해 집행하고,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초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농업과 지역 주민 고려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과 의료 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중요한 축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지금이라도 수정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종합 계획상의 목표치가 수정되어야 하며, 목표인구 80만 명 이상이나 100만 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JDC가 국가적 외화 유출 방지 등에 많은 기여를 하기 바란다. 향후에도 도내 대학생 글로벌 아카데미, 해외 연수 및 장학사업 등 필수 분야에 많은 투자를 바라며,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JDC 주요 핵심 프로젝트 사업장과 공항, 도내 주요 지역들을 JDC 셔틀버스를 통해 연결한다면, 제주도의 교통시스템 개선과 지역 주민 불편 사항 개선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질문] <제주 위클리> 편집장: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 두 교수님의 제주형 미래 신사업으로서 농업 관광 산업 및 관련 식품 산업, 제주형 경관 주택, 제주 문화의 토탈 대표 브랜드 조성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하다. 주현식 원장님께 질문 드린다. 제주 지역 트레일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알려주실 수 있는가?

[답변] 주현식 제주지역사업평가원장: 2012년부터 한·중·일 3개국과 호주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구인 아시안 GTO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청의 수출 진흥과와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매년 관련 박람회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레일이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에 대한 해외 판로 등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오일장도 제주의 백화점 역할을 하는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화장품도 40여 기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 호남과도 연계 추진하고 있다.

[질문] 임춘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실장: 제주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건강과 장수산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JDC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범수 교수께 의견을 구한다.

[답변] 한범수 경기대학교 교수: 제주도니까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인구 100만 명을 바라봐야 하는데, 과연 예전과 같은 패턴의 개발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50~100년을 내다보는 개발 계획과 경관 계획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 경관을 바꿔나갈 때 항상 긍·부정적인 차원의 요소를 같이 고려하되, 이제는 미래 계획에 더 역점을 두고 판단(과거의 단순 보존은 지양하되, 미래를 위한 창의적 보전에 역점)할 필요가 있으며, JDC 역시 이러한 인식 전환과 도민들과 함께하는 개발 계획 수립(개발 이익 배분, 주민들이 바라는 투자 유치, 공동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승빈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앞으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제주 전역이 국립공원 같은 청정한 (최소한의 개발이 전제된) 명품 휴양지가 되는 방안과 JDC의 지혜가 필요하다. 금일 발표 및 토론자들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아이디어보다는 개발센터 핵심 역량을 집중할 사업 선택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국민에게 사랑받고, 도민의 칭찬을 받으면서 수익성 좋은 사업이란 찾기 어려우므로, JDC 사업의 확실한 명분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많은 중앙정부 주도 대형개발사업 위주에서 이제는 도민과 개발센터가 주체가 되어 제주 발전을 견인할 신규 사업을 찾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염려하듯이 제시된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이외에도, 투자 유치해놓은 기업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많은 아이디어보다는 개발센터 핵심 역량을 집중할 사업 선택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함
- 그동안의 수많은 중앙정부 주도 대형개발사업 위주에서 이제는 도민과 개발센터가 주체가 되어 제주 발전을 견인할 신규 사업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제시된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이외에도, 투자유치 해놓은 기업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행복한 제주평화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1만 2,656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2013. 1. 1. 기준). 지난 5년 동안('09-'13) 평균 20.5%(1,520명)의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거주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21.6%, 2,250명). 금번 세션 운영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 누구나 아름다운 제주에서 행복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

신의경 제주한라대학교 관광중국
어과 교수

발표

조성용 주체코 한국대사관 前 대사

토론

김영근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메리 서머스 제주 퓨리 대표

케네스 미클라우드 제주특별자치
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남수릉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

정리

송정희 The Jeju Weekly 발행인 ·
대표

조성용 주체코 한국대사관 前 대사: 도내 거주 외국인 거주민이 1만 2,000명을 넘는 지자체에서 이들 외국인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주도는 2014년 거주 외국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거주 외국인의 생활 불편 해소와 거주 외국인과의 지속적 소통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제주도가 외국인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거주 외국인에게 제주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일본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JET(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이다. 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제주도가 응용하면, 스포츠 교류, 외국어 프로그램, 통번역 업무, 출신국과의 교류 업무 등을 거주 외국인이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교류 등에 이바지하고, 제주와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제주의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제주도가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면, 도내 정부 외국인 지원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둘째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층적, 심층적으로 다양한 한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외국인들과의 문화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김영근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세계화, 글로벌화로 국가 간 인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개방과 합의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유치 확대를 지원하고, 유학생에게도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허용하는 등, 체류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대학 졸업 이후, 최장 2년 구직 기간을 부여하고, 전문 인력에게는 국내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체류 민원 처리 시스템, 전자 비자 발급 시스템(2013 도입)의 한정적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자민원통합센터’를 설립, 전자민원을 총괄, 집중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국내 창업과 관련해서,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 지원 정책을 표준화, 일원화할 계획이며,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을 마련,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단순 노동 인력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우수 전문 인력 중심의 고도화된 미래 지향적 이민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hikorea.go.kr 참고).

메리 서머스 제주퓨리 대표: 제주 퓨리(Jeju Furey) 외국인자선공동체는 2009년 당시 제주 거주 원어민 교사였던 나단 퓨리(Nathan Furey)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고, 한국인 미망인과 어린 두 아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처음 결성되었다. 당시 엄청난 병원비와, 어린 두 아이의 양육비에 보탬이 되고자 설립된 퓨리재단은 이후, 그 수혜 대상을 제주도 내 불우한 가정, 고아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프리스비 토너먼트, 비치발리볼, 배구대회, 야간 장기자랑 공연, 경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퓨리재단은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외국인 중심에서 연령, 배경,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하며, 지역 공동체와 외국인 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와서, 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와의 융합을 꾀하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며, 단순히 거주가 아닌, 의미 있는 삶과 행동, 공동체에 혜택을 주고자 한다. 특히, 제주퓨리가 특별한 것은 ‘공동체로의 환원’뿐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이런 뜻깊은 경험을 통해 공동체와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언어 친구: 제주 공동체에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자

케네스 미클라우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지난 5년간 제주도 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 거주 외국인 공동체, 과연 개인이 가진 재능은 무엇이며, 이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여 좀 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예술, 기술, 언어, 사회성 등 여러 가지 재능이 있겠지만, 거주 외국인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언어 친구(Language Friend) 통한 자원봉사이다. 언어친구 프로그램은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강습, 복지센터 후원 등 구체적 자원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참여자는 봉사 경험과 제주에 대한 배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혜자, 특히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아이들의 미래가 변할 수 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리더십 훈련,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도 긍정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친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거주민들이 재능과 시간을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남수릉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 나는 몽골 출신으로, 제주도 경영정보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유학생으로서 제주에 처음 오게 되었고, 제주도에 거주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주 사회에 중요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유학 생활을 하며, 2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는, 제주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것이다.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 공유와 봉사 활동을 하고, 제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없어 아쉽다는 점이다. 둘째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정보 센터가 있으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유학생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센터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질문] 다렌 사우스코트 제주위클리 편집장: 외국인 결혼 이민 이주자, 이주 노동자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더 키울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외국인 커뮤니티가 영어권자로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인 다수는 영어권 외국인이 아닌, 중국어권, 베트남어권이 아닌가?

[답변] 케네스 미클라우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제주도 소속 외국인자문위원회는 각각 언어권별로 대표자가 있고 언어권 별로 support group이 있지만, 실제로 현신적으로 이들을 위해 일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지금까지의 거주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 불편 감소, 외국인을 위한 생활 편의'에 머물러 있었음
- 외국인의 잠재력과 기여도를 최대한 커뮤니티에 끌어들이 상생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상호 윈-윈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임을 서로 인식하고 포용하고 소통해야 하는 시대에 맞춰 향후 정책은 외국인 기여 및 포용하여 미래 지향적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는 매년 외국인 유입 수가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 국제화센터 등이 설립되어야 함
-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과 아울러 상생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제주의 미래, 국제 자유 도시로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임

동중국해의 국제 해양 연구 협력

제주특별자치도

동중국해는 이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발전과 번영에 극히 중요한 해역이다. 이는 주변 3국이 세계로 향하는 교역의 통로이고, 중요한 수산 자원들이 부존·회유하는 해역이며, 태평양의 난류가 유입하고 태풍이 통과하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역이기도 하다. 특히, 기후 온난화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해양 조건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최근에는 그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동중국해의 경우 인접한 국가들 사이의 관할 해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 연구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중국해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연구협력의 실상을 개관하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야 할 연구 분야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

이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책임 연구원

발표 및 토론

로민 다우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前 장관·Bogor대학교 교수

이광훈 부경대학교 교수

전민중 대한석유공사 팀장

정석근 제주대학교 교수

정리

김창선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

로민 다우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前 장관·Bogor대학교 교수: 해양과 인접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15개국으로,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 개발,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등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환경 오염, 국제 분쟁, 불법 어획 등이 빈번하다. 해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잊은 채, 산업 발전 위주의 개발로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해양 시스템과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친환경 개발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자원 보존국이 이른바 '공여지의 비극'같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 경제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저탄소 경제 활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최대 지속 가능한 생산

통계(예를 들면, 총허용어획량(TAC))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구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 간의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

이광훈 부경대학교 교수: 동중국해는 지역적으로 한·중·일의 경계 수역이며, 풍부한 수산 자원과 천연 지하자원이 있는 지역이다. 최근 동중국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간 협력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된 동중국해 지형 특성과 지역 내 천연자원 개발 연구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동중국해의 가장 큰 특징은 쿠로시오 해류와 더불어 육지에서 유입된 유기 퇴적물 등으로 해저에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중국해는 한·중·일 3개국이 경계를 두고 분쟁이 있는 만큼 국제 협력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동중국해 국제과학포럼과 같이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시설 공유,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국제 협력 연구 사례로 일본의 오키나와 해구에 대한 한국지질공사(KIGAM)와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간의 2009년, 2010년의 협력 연구 등이 있다.

전민중 대한석유공사 팀장: 동중국해는 석유 자원이 다량 매장된 지역으로 중국의 많은 유전이 동중국해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연장 선상에 제주분지가 위치해 있어, 경제성 있는 유전이 제주 분지 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분지 내 석유자원 부존과 이에 대한 한·중·일 간의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

정석근 제주대학교 교수: 기후 변화로 동중국해의 어족 자원이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대한해협과 동해, 남해 지역의 수산 자원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온수성 어종인 쥐치 자원은 감소하고, 고등어, 대구, 청어와 같은 어종의 어획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쓰시마 난류가 발전한 만큼, 동해 지역의 한류가 발달하여 수산 자원의 분포가 크게 변화했다.

[질문] 김창성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과장: 동아시아 15개국 간의 세미나로 끝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 보전할 수 있는 ‘국제수산자원관리센터’와 같은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자원 관리와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답변] 이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제주포럼을 계기로 국제연구협력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기가 필요하다.

로민 다우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前 장관: 먼저 어획량 억제를 위한 국가별 쿼터를 정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국제협력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필요성에 동의한다.

[질문] 이중환 한중일협력사무국 사무처장: ‘한중일협력사무국’의 경우 외교, 역사 갈등, 영토 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수산 자원 관리 등 협력 연구 분야에 대해 긍정적이고 새로웠다. 영토 분쟁을 우회하면서 다국 간의 협력할 방안이 있는가?

[답변] 이광훈 부경대학교 교수: 15개국 간의 협력 연구를 하기 전에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연구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과학자들 간의 연구 협력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보이며, 글로벌 프로젝트와 같이 큰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국가 간 외교 분쟁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질문] 이경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담당 사무관: 동아시아는 생물자원의 보고이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인데, 무분별한 자원 방류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종자 보존 대책 등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로민 다우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前 장관: 생태계는 보존해야 한다. 인공적인 방법의 보존보다는 자연 그대로인 서식지 보존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종의 10%만 보존하더라도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동아시아 수산 자원, 천연 자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 보전할 수 있는 ‘국제수산자원관리센터’ 같은 국제 협력 기구를 만들어야 함
- 동아시아 지역 수산 자원 중 보존을 위한 국제중보존센터 필요

남·동중국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오늘날 남·동중국해는 이를 둘러싼 국가들, 즉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의 이해가 충돌하는 심각한 갈등의 현장이다. 새로운 유엔해양법이 1994년에 발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해역에서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저자원 개발이나 인공섬 등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근래에 격화되고, 최근에는 중국이 새로운 항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이 해역은 언제든 무력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되었다. 이에 남·동중국해 주변국의 서로 다른 이해와 주장들을 서로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갖는 것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이 해역의 환경과 자원을 공동의 번영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회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송 연웨이 대만 선예센대학교 교수

르 꺾이 꺾이 베트남 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해양국장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원

기디온 라흐만 영국파이낸셜 타임즈 선임 칼럼니스트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정리

최미경 이어도연구회 연구원

송 연웨이 대만 선예센대학교 교수: 지난 수년간 동중국해에서의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구상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마잉주 대만 총통은 동중국해 평화 구상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서울프로세스를 주창하여 다자간 평화 안보 체제를 제안하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긴장이 강화되면서 대만의 동중국해 평화 구상 제안에서 해양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지침에 상공까지 확대하여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중국해 평화 구상 제안은 평화적인 긴장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잉주 총통의 평화 구상의 구체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국가들은 대립 상황을 높이는 적대적 행동을 자제한다.

② 관련 국가들은 분쟁이 될 만한 사안은 일단 보류하고 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③ 관련 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④ 동중국해에서의 행동 지침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여야 한다.

⑤ 동중국해의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982년 UN 국제해양법 협약을 발효시키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이 협약을 발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해양법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르 꺾이 꺾이 베트남 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해양국장: 남중국해는 중요한 세계 무역로이며 하이드로 카본과 특히 가스의 잠재 매장량이 높은 곳이다. 이곳에서 바다와 자원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 세계 무역로인 남중국해의 영유권 및 관할권 갈등은 세계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보면 해양 경계 획정 및 도서 영유권에 대한 갈등과 관련 국가가 실효력을 강화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대치와 분쟁으로 악화될 위험이 커진다. 해적 행위와 같은 안보적 도전의 증가(2012년 전 세계에서 보고된 보고서를 보면, 297건의 실제적 혹은 시도된 해적 행위가 있었으며, 98건이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였다), 해양 테러 활동의 증가(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알 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은 폭발물을 선적한 선박을 이용하여 원유 탱크나 상선을 공격하려고 하며 이러한 유형이 해양 강도의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정과 항행의 안전을 위한 권고안을 위반한 해양 사고 등이 있다.

해양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유엔해양법과 국제해사기구의 규정과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의 평화로운 번영에 중요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중국해 주변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 중국,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해양 경계 획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대륙붕 연장을 위해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부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한·중 양국 각각의 육지 영토로부터 자연 연장된 대륙붕이 같기 때문에 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의 끝이 중첩된다. 다만 이 대륙붕 연장 신청의 심의 결과와 해양 경계

획정은 별개로 보며,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 연장 신청은 유엔해양법 제76조 1항과 3항에 부합한다.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한 정당한 심의를 위하여 유엔해양법을 토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해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잉주 대만 총통의 〈동중국해 평화 구상〉은 관련국들이 분쟁을 중단하고 동중국해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인데, 이는 관련 국가 간에 어느 정도 신뢰 구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한 일본은 센카쿠 섬들을 민간인들에게 다시 매도하고, 중국도 동중국해에 선포한 방공 식별 구역을 철회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논평을 듣고 싶다.

기디온 라흐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선임 칼럼니스트: 중국 경제가 일본보다 성장하면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국제 관계는 힘의 균형에 따른 자국의 이익 추구에 기반하고 있다. 협력 구상은 제의되고 있으나 실행력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을 발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보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원: 유엔해양법을 토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동아시아 관련 국가 간의 신뢰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법적 체제 내에서의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동중국해는 중국이 남해를 계속했던 바다이다. 현재 자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제 관계의 힘의 균형에 따라 아편전쟁 이전 상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이 번영하고 미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본다. 크게 보면 20년이 지나면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 정치를 주도할 정도로 변창해갈 것이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대립하였던 민족 역사가 개입되어 있으나, 현재 미국과 협력하여 해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해양 문명사적 관점에서 공동 번영의 모태였던 바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해양 갈등 문제는 안보 시각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며, 역사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송 연웨이 대만 선예센대학교 교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감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 관련 국가들이 해양 자원의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지방정부가 하면서 내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만의 동중국해 평화 구상을 동중국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 평화를 위한 제주포럼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르 꺾이 꺾이 베트남 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해양국장: 중국과 관련하여 얘기하자면 중국은 아시안 국가들과 협력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영유권 분쟁을 안고 있는데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베트남이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평화적인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양 이슈들을 다뤘는데, 역사적·법적 논란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관련 국가들의 자국의 이익에 치중된 과도한 주장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각국이 평화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국제사회의 해양 이익 추구에서 갈등이 야기되었을 경우, 평화적인 해결과 갈등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국가 간 행위 지침에 대한 협약이 필요
- 갈등의 해결 및 긴장 완화를 위한 해양법과 해양법재판소 같은 제도와 기구를 통한 갈등 해결을 추구하도록 동북아 국가 간 평화 협력 체제 구축 필요
- 국제 사회의 신뢰 구축 노력 필요
- 동중국해 평화 구상의 장점을 수용하는 협약의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경영 및 투자 유치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아시아 최고의 보물섬인 제주는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 투자, 교육, 환경 등 주요 분야에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의 글로벌적 홍보 방향 제시, 제주의 투자 환경 및 제도, 타지역의 투자 사례 비교, 글로벌 기업들의 제주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주 매력도 향상 방안 모색 및 지역과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진정한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마련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았다.

사회

이관열 강원대학교 교수

발표

앙드레 노툼브 (주)솔베이코리아 대표이사

김주남 (사)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

박경숙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고충석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정리

김관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과장

제주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비교와 시사점

앙드레 노툼브 (주)솔베이코리아 대표이사: 제주와 룩셈부르크의 공통점은 주변 인접 국가에서 휴양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는 공항, 항만 등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유럽 전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관광, 투자, 교육 환경 중요 분야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빠른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자유도시 비즈니스 및 투자 유치 전략

김주남 (사)국가브랜드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학적 이점 활용, 대외 개방 확대, 대외 신인도 제고, 고도의 R&D 환경 제공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의 지정학적 이점으로 아시아-유럽 공동 발전의 중심 지역, 물류 순환의 중심 지역,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지역, 아시아 시장 진출의 관문, 첨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비즈니스 중심 거점 가능성이 크다. 성공한 국제 사업 도시 사례로 싱가포르의 금융 산업, 국제 물류 시스템, 관광지 등이 최고급 수준이며, 두바이는 금융, 국제 무역, MICE 산업이 발달하여 중동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

허브형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및 R&D 센터 유치를 위한 주요 글로벌 기업 타겟팅, 제주국제자유도시 독자적 투자 유치 활동, 중앙정부의 차별화된 지원 제도 확보, 수요 맞춤형 서비스와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필요하다. 물류 허브 구축과 초국경 물류 권역을 구현하기 위한 동북아 물류 거점의 선점이 필요하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비즈니스 가치 사슬과 연계한 투자 유치 활동, 밸류 체인 맵(Value Chain Map)의 확립, 향토 산업 성장 동력화를 위한 집중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중심의 금융 서비스 기능 추가를 위한 국내 금융 기관 연계 국내 기업 투자 매칭펀드 조성, M&A 센터 협업 국내 유망 기업 자금 조달 등 복합적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MICE 산업 인프라 및 외국인 투자가 취약하여 제주의 랜드 마크, 국제적인 모토 확립과 국내외 공연기획사 유치, 고급 음식/식당의 국제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 가치 창조

박경숙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국제 자유 도시 투자 유치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과 자본이 오가는 장기적 플랜과 자본 유입이 용이한 환경을 위한 조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때 국제적인 투자자 및 사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들을 창조할 수 있고,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관광객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사업가들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다양한 목표들을 골라 중요도에 따라 선택된 몇 개의 목표에 집중하고 최대한 실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원적 홍보 활동을 통해 제주의 이미지 홍보와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글로벌 홍보 대행사와 공동으로 협업하여 외국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의 세계화와 외자 유치

고충석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모델은 제주형일 수밖에 없다. 제주의 여건과 제주 사람들의 가치관이 내포된 모델이 필요하며,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통해 제주 도민이 행복해야 한다. 대규모 중국 자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주의 산업 구조를 중심으로 자연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외자 유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중국인 관광과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들이 많은 상황에서, 외자 유치에 대한 조절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정치적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투자 이민 제도의 개선과 투자 진흥 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환매권 제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쇼핑 아울렛 조성이 필요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대형 면세점 허가권을 제주도가 가져올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시설, 지하수 함량 등 환경 수용 용량을 검토하고, 제주도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투자자에게 매매방식보다 장기 임대 방식도 고려할 시기이다.

제주에 제주환경보존관리비를 신설하고 제주를 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 이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질문] 정창기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중 규제 외에 제주 도민들의 글로벌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있는가?

[답변] 고충석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제주도 사람들은 중앙 선망 의식과 분리주의 의식이 강하다. 특별법 반대, 해군기지 반대 등에 대해 제주도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질문] 한우석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이나 머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고충석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중국 자본의 성격(선한 자본, 투기 자본)에 따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희생 지역 설정이 필요하다. 희생 지역은 다른 지역과 경계를 두고 조성하여야 하며, 제주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박경숙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전 세계 자본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중국이다. 투자에 대한 조건을 달고 투자유치를 하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앙드레 노툼브 (주)솔베이코리아 대표이사: 중국 자본에만 기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만 비교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제주도만의 실행 가능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관광이나 재미를 제공할 때 국제적인 기준인지 고민해야 하며, 국제 자유 도시를 위해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제주를 국제 자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복합적 투자 유치 활동이 필요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문화적 다양성 고려, 글로벌적 홍보 전략 필요
- 제주의 산업 구조를 중심으로 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외자 유치, 중국 자본 증가에 대한 제도적 조절 장치 마련, 제주의 환경 용량을 고려한 투자 유치 등, 제주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리더십 발휘가 중요한 시점임

제주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방향과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는 2002년 이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세계7대자연경관 지정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환경 브랜드를 구축하였고, 2013년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었다. 향후 제주가 관광객 2천만 시대,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명품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적 / 생태적 자원의 합리적 활용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 교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글로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중앙정부의 국정 기조와 연계된 제주의 글로벌 발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사회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
토론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리
윤원수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명품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주가 가진 가장 큰 장점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과제가 무엇인가?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제주는 세계 최대 관광객인 중국인과 세계인이 좋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복의 전설의 고향/ 바다와 청정 환경/ 거대한 섬/ 한라산과 곳곳의 오름과 분화구/ 남방의 이국적 요소와 제주도민의 강인한 생존과 발전의 역사적 전통/ 제주 카지노 호텔 8개 등이 포함된다. 제주의 과제로는 첫째, 제주의 3요소 바람·여자·돌에 문화의 옷을 입혀야 된다. 제주의 3요소로

이야기, 콘텐츠, 디자인, 패션, 문학, 미술, 사진 등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지향을 위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제주의 해양 문화는 곧 글로벌 지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제주의 도전 정신이 글로벌 시장 개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융합적 사고와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관광과 해양, 관광과 의료, 청정 환경의 관광 자원화, 해양 자원의 활용, 한라산의 등산로와 생태계의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인문지리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남방 문화의 요소를 대륙 문화와 연결하여 교류의 관광 자원화가 필요하다. 가령 제주의 바람과 말 문화를 몽골의 바람과 말과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내몽고자치구(인구 2,470만 명, 면적 110만여 km², 칭기즈칸, 18세기 천문학자 겸 수학자 명안도(明安圖) 등 역사 인물)와 몽골(인구 278만 명, 면적 156만 km²)과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은 점으로 된 문화 자원을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제주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12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해야 한다. 이제 양적인 관광객 수의 증대보다 질적 제고를 도모할 때이며, 고가 여행 상품 개발, 중국의 고소득 관광객 및 비즈니스 여행자 유치, 국제회의 산업 연계 효과에 집중하여야 한다. 둘째, 명품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 명품의 4대 조건으로는 본질적 가치에 충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하고, 언제든지 사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고, 값을 묻지 않을 정도로 품질이 좋아야 한다. 따라서 명품 관광 상품, 명품 기념품, 명품 서비스, 명품 제주로 승부해야 한다. 셋째, 제주의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고유성과 독특성을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한다. 넷째,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지금은 문화 다양성 시대이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제주 관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차별성과 독특성에 기반을 둔 관광의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 관광객에 대하여 변치 않는 친절과 신용으로 응대하고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안전의 담보, 안전 관리 매뉴얼의 현대화, 상황 대응 방법의 체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속 가능한 제주, 문화 관광 환경도 인류의 행복과 영원성을 보장하는 모델이 되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이를 적용되어야 한다. 여덟째, 돈의 흐름을 포착하고 이를 흡수하는 전략을 구체화한 복합 리조트의 조성, 기존 카지노 허가 호텔의 재배치, 클러스터화로 집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홉째, 수용 태세의 상향, 고품격화가 필요하다. 열 번째, 세계 표준을 적용하고 부단히 세계 표준을 창조하여

나가야 한다. 열한 번째, 제주의 지도자로부터 행정가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단계적으로라도 철학적, 역사적, 문학적 통찰과 예지를 갖추어나가고 그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제주의 순혈주의를 깨야 한다. 세계를 향한 ‘글로벌 제주 웰컴 소사이어티’로 나아가야 한다.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제주는 2002년 생물권 보전 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며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획득하고,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환경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라산, 곶자왈 같은 자연 지역, 중산간의 자연 초지, 바다 등 다양한 자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자산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2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유산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연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보전 관점에서 관리되는 지역을 국토 환경성 평가 결과로 보면 제주도의 경우 1등급 지역이 23.75%에 그치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참고: 서울 28%, 경기도 36.75%) 이는 최근의 과도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제주도는 자연자산 총량 관리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2등급 지역 중 곶자왈과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제도상 보전 지역화하거나, 그에 준해서 관리하려는 의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가 세계 환경 수도 조성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제주도에서는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로 세계 환경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WCC 결의 사항 이행을 위해서 최초로 채택된 제주선언문에 명기된 제주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 제주형 의제의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한 (가칭)세계환경수도 조성지원 특별법 제정, 곶자왈 보전 대책, 하능 분화구 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세계 환경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 ‘수도’는 ‘한 나라의 통치 기관이 있는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UNEP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가 환경 수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가 세계 유일의 환경 수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환경 수도 가운데 하나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가 세계 유일의 환경 수도가 되면 좋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는 차선책으로 복수의 세계 환경 수도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주가 세계 환경 수도가 되기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 부문으로 우선 제주가 왜 세계 환경 수도가 되고자 하는지 명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도민과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조성되어야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환경 수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잘 보전된 양호한 환경 자산과 같은 하드웨어와 함께, 세계적 환경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 환경 네트워크, 연구 및 교육 기능, 주민들의 참여 등 소프트웨어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 관점에서 제주의 자연 자산에 대한 우월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연 자산 총량 관리 개념을 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환경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곶자왈 지역의 생태·경관 보전 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와 패시브 건축물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세계 환경 수도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세계 환경 수도는 거창한 계획보다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통한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 생각하며, 이를 고려한 전략 사업 도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환경 수도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허브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지속 가능성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씽크 탱크(Think Tank)와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 연구, 교육 등의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국 또는 제주 사무소 유치, 제주에 있는 기존의 기관을 확대 발전시켜 글로벌 환경 논의의 허브로 육성(전략 수립, 연구, 교육 중심)하고, 이미 시도 중인 국내외 유력 인사로 구성된 글로벌 차원의 자문단을 확대·발전시켜 전략 수립 및 여론 조성, 예산 확보 등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지사라는 명칭에 걸맞은 기능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를 임명하여 그를 중심으로 환경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창조경제와 환경이 융합된 국가 아젠다를 바탕으로 세계 환경 수도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결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시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순기능 형태의 자유 지역이 아니라, 관광·휴양·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 등이 종합된 복합 기능 형태의 자유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 자연환경에 기초한 관광 산업 이외에 다각적인 국제 자유 도시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광 산업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산업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국제 자유 도시의 건설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의 역내적 관점에서 벗어나 중국을 배후지로 한 역외 국제금융센터설립, 또는 남해안 광역 벨트나 일본과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라는 새로운 국내의 협력 모델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형 제조업체가 없는 제주도의 경우, 인구 13억의 중국 시장을 배후지로 하여 상하이와 홍콩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금융 수요를 목표로 사업 추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 세계적인 국제 자유 도시가 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전략적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가지의 목적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도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 제도의 시범 적용이라는 시범도이다. 지금 드러나는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의 오류에서 비롯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도와 시범도에 대한 정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특별도를 근간으로 권한과 조직 등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 또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무 이양과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국제 자유 도시(International Free City) 설치 국가의 역사적 환경, 입지 조건, 경제 상황, 설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 자유 도시가 나타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입지 조건이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범도는 기본 개념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초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자치 제도의 시범 적용을 통해 긍정적 효과가 확보되면, 여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여타 시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시범도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치제도의 다양화 관점에서 접근하여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지역 특성과 더불어 국제 자유 도시의 추진에 적합한 권한과 조직 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지방 분권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양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내재화 작업이 현재보다는 체계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첫째, 제주도는 아직 때가 덜 묻은 아름다운 섬이다. 인구 60만 정도의 인문 환경은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직 백지 상태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미래의 제주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의 고민이 더 중요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의 활약 또한 기대된다. 둘째, 세계 평화의 섬이다. 제주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의 족적과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확충, 평화와 인류의 희망을 위한 활발한 평화 비즈니스 특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리적으로 제주도는 대륙과 대양을 향한 디딤돌이자 관문으로서 한·중·일 동북아권 만남의 장소로 최적지이다. 비행 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0만 도시가 5개, 500만 이상 도시가 13개에 이른다. 한국 방문 국제 비즈니스의 필수 경유지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라는 위기는 제주도의 기회이다. 'Carbon Free Island 제주'라는 세계적 명성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 국제 자유 도시로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교통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교통 인프라 구축 전략과 방향은 무엇인가?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아름다운 세계적 관광지에 걸맞은 제주도다운 교통은 첫째, 탄소

제로섬의 목표와 함께 교통사고 제로섬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사고 제로라는 비전의 실현은 제주도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며 훌륭한 관광 경쟁력이 될 것이다. 둘째, 도로가 아닌, 길을 가꾸어야 한다. 한라산과 깨끗한 하늘, 푸른 바다의 전망이 어우러지는 길이 명품이다. 제주의 모든 길을 올레길 가꾸듯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다. 무조건 빠른 도로보다는 잘 흐르며 여유 있는 교통 시스템이 제주를 살릴 것이다. 곧바른 일직선 도로보다는 휘어지는 선이 아름다운 길이 훨씬 제주에 어울리고 멋지다. 셋째, 환경 친화 교통과 건강 친화 교통으로 명품 하나를 더 추가하자. 바람의 힘으로 가는 자동차! 도전할 만한 삼다도 제주의 목표로 적합하다. 제주의 바람이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이 됨으로써 제주도를 전기 자동차 세상으로 만들 때 세계는 놀란다. 화석연료가 아닌 제주의 바람이 자동차 연료가 되는 것이다. 올레길은 이미 국민 건강과 기쁨을 주는 명품이 되었다. 마치 차가 없던 시절로 회귀한 듯한 교통 시스템이 더 어울릴 수 있다. 많이 걸어도 좋은 보행 교통과 어디서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공용 자전거(Public Bike)를 유명하게 만들고, 말이 끄는 마차 관광도 연계 되면 명품이 될 수 있다. 넷째,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주 항공 수요 조사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내로 진행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제주공항 개발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 검토되어야 할 대안 중 하나는, 현재의 제주공항 부지를 최첨단 지식 융복합 산업도시 등으로 고밀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개발 이익을 활용한 신공항 건설 대안이다. 다섯째,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륙 교통수단인 해저 고속철도의 건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저 고속철도 건설은 제주도만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다. 건설 후 제주도의 미래 발전 모델이 국가 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한다는 확신이 설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성장 발전 축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호남 축과 남해안 축을 고속철도로 제주도와 연계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나타나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박광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제주의 장점 극대화 방안

- 제주의 가치를 활용한 문화적 접근 필요
- 제주의 글로벌 지향을 위한 창의적 정신 필요
- 융합적 사고와 정책실현
- 해외시장 다변화 및 개척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세계 환경 수도 조성을 위한 방향

- 세계 유일의 환경 수도 추진, 차선택으로 복수의 환경 수도 추진 방향 설정
- 자연 자산 총량 관리 개념을 제주도 행정에 적극 반영
- 곳자왈 지역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추진과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 세계 환경 수도 조성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 필요
- 거창한 계획보다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통한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 사업 도출 필요
- 국내외 유력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 확대·발전으로 여론 형성, 예산 확보 등에 따른 자문 필요

이승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제주의 장점 극대화 방안

- 지역적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산업 개발로 실질적 국제 자유 도시 건설 지향
- 중국을 배후지로 한 역외 국제금융센터 설립 필요

세계적 국제 자유 도시가 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전략 방향

- 특별도와 시범도에 대한 정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 특별도를 근간으로 권한과 조직 정비
- 국제 자유 도시 추진에 적합한 권한과 조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방 분권 추진 필요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제주의 장점 극대화 방안

-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동아시아 중심지 역할 필요
- 제주는 지리적으로 한·중·일 동북아권의 중심지이며, 한국 방문 국제 비즈니스 필수 경유지 역할 필요
- Carbon Free Island 제주 적극 추진 필요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교통 관련 정책 우선순위

- 탄소 제로섬 목표와 교통사고 제로섬 목표 필요
- 제주의 환경과 부합된 교통시스템 구축 필요
-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 글로벌 허브 도약 필요
- 현재 제주공항 부지를 지식 융복합 산업도시 개발과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신공항 건설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연륙 교통수단인 해저 고속철도 건설 방안 검토 필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가능성과 미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이다. 제주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어떠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환자에게는 치료를 그리고 건강증진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함(wellness)을 제공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가능성을 제주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속에서 토론하였다.

사회

부원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처장

발표 및 토론

오은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대리

르네 마리 스테파노 미국의료관광협회 회장

지아 사오황 중국국제의료 및 헬스케어협회 회장

송인수 힐리언스 선마을 대표 이사

정리

유동소 JDC/의료사업처 대리

오은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대리: 제주도 의료관광의 관문로서의 미래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도내 건강(헬스케어) 인프라와의 동반 성장 가능성을 소개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치유', 즉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 및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치유'를 원하는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 의료관광의 '포털'로 기능함으로써 실현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의 레저스포츠, 헬스푸드, 자연힐링, 체험관광 등 이미 제주도가 가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 '건강'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협력체계(Jeju Healthcare Alliance)'를 구축하여 제주도 관광 인프라와 헬스케어타운 내 건강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 방문 후 건강해졌다면, 방문 후기를 제출해서 당첨될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시설 이용 할인권을 준다는 식이다. 이렇듯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가 가진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예방' 중심의 '치유' 산업의 포털로 기능할 때 그 잠재력이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르네 마리 스테파노 미국 의료관광협회 회장: 헬스케어의 세계화, 지역화와 관련하여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위한 '헬스케어'의 융·복합화를 제시한다. 의료관광은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화 흐름에 맞춰 많은 나라에서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강화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지역의 인프라와 제도, 환경 등을 상호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는 웰니스 산업에 대한 개방적인 지역 분위기와 차별화된 강점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많은 의료관광 산업의 관계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료관광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1982~2002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들과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제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 지리학적 아시아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의료 관광지로써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많은 의료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주헬스케어타운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지아 샤오황 중국국제의료 및 헬스케어협회 회장: 헬스&의료관광 분야에서 국가 간 윈-윈 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의료 관광객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중국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헬스&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기업 간 M&A를 통해 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헬스 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90% 이상의 아웃바운드 수요와 10%의 인바운드 수요를 감안할 때, 아웃바운드 수요에 대한 국가 간 파트너십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진출 지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고, 효과적인 마케팅 루트를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제주도를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윈-윈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송인수 힐리언스 선마을 대표이사: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자연치유형 헬스케어 단지로 조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치료(Treatment), 치유(Healing), 예방(Prevention), 헬스케어(Healthcare)이다.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병원이 들어오느냐가 문제다. 하드웨어적인 병원 건물을 도입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병원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헬스케어3.0시대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및 헬스케어 산업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힐링중심도시' 제주도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치유형 단지로 조성하고, 맞춤형 생활 습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의료관광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질문] 제주위클리 기자: 제주도의 의료관광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정책 및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오은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대리: 제주도의 헬스케어 산업은 현재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의료관광 수요의 핵심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노키타운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관광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마케팅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제주도 의료관광의 경쟁력은 자연환경과 기존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내 의료기관 및 관광사업자, 행정기관 등이 협력하여 노키타운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폭넓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유', 즉 예방 중심의 콘텐츠 강화 및 사업구조 구축이 필요함
- 국내 은퇴 의료인 유치를 통해 다른 지역 의료 인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키타운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문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 혹은 '사후 케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제주도 전체의 의료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